



발 간 사 _ 실수요자 시각의 인프라 연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건설산업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18.6%를 차지하고 200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역 내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물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 환경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프라 예산 축소 때문입니다. 정부의 인프라 예산 축소는 인프라가 적정 스톡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낮다는 근거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객관적인 실태조사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인프라 스톡에 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각, 양적·질적 인프라 현황, 투자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진단되어야 하지만, 중앙 정부의 국정 방향에 따라 인프라 관련 예산 등 정책이 좌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들이 현재의 인프라에 대해 정말 만족하는지, 얼마나 인프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설문조사를 통해 담았습니다. 또한, 인프라 재고의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성능과 안전이라는 질적 측면의 분석 또한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투자 상황이나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 과연 적절한지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종합적인 관점의 인프라 진단이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아닌 실수요자인 지역민의 시각으로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민들은 인프라를 삶의 질과 보다 맞닿아 있고 지역에 보다 밀착되어 있는 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성화 측면을 강조해 온 과거 방식의 시각이 변화해야 하며, 중앙 주도의 획일적 투자 방식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존의 top-down 방식이 아니라 bottom-up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역에서부터 프로젝트의 논의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프로젝트들이 빠르게 실현되면 지역민들이 느끼는 인프라 개선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발간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정치적 시각이 아닌 지역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인프라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인프라 관련 예산 등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대한건설협회 회장 유주현

발 간 사 _ 지역 발전,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높이는 연구 성과 기대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연구에 힘써 주신 이상호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연구는 지역별 인프라 실태를 진단하고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 과제와 인프라 재원 확보 방안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전국 모든 지역의 각종 인프라 시설을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연구자문단 운영, 인프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정책화를 위한 활동 등으로 연구 결과가 한층 내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인프라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기여한 바는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SOC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나듯, 최근 정부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인프라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시의 적절하고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인프라 예산의 축소는 그 영향이 비단 건설업계의 일감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 감소와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인식, 인프라의 노후화, 지역별 인프라 편차, 인프라 부족의 장기적인 영향 등을 세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한 이 연구 결과가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정부 예산과 관련되고 지역민의 삶과 직결되어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정부의 관심과 여력이 미치지 못하여 건설업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지만, 이 연구가 건설업계만의 사업으로 오해되거나 가치가 절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예산 운용에 연구 성과가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연구원과 건설업계는 풍부한 근거 자료와 정치한 논리를 개발하고, 정책 당국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가 지역 발전과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일진월보(日進月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박승준

소 개 글 _ 지역 인프라 실태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투자 필요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과 급감하는 SOC 예산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상반된 시각과 오해가 존재하는 가운데 급증하는 사회복지 예산과 줄어드는 인프라 예산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 시각은 인프라는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건설업계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복지와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이 아니라 콘크리트에 투자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매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프라에 대한 허상을 다양한 경로로 밝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한 논의는 거시경제적 맥락에서 복잡한 수치에 기반한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실제 일상생활 영역에서 절실한 인프라가 무엇인지, 그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반 국민들이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와 눈높이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 연구는 바로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처음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인프라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할 기회를 주신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님과 건설공제조합 박승준 이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16개 시도별로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몇 차례에 걸쳐 연구진과 지역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프로젝트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완공위주 집중투자' 정책의 폐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역의 인프라는 부족하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시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는 인프라 예산 확대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완공위주' 투자정책을 바꾸는 기초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많은 참여자들과 협업을 통해 수행했다는 것도 큰 성과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의 적극적 지원은 물론이고, 건설협회 시도회, 지역 연구원, 지자체 공무원, 지역 학계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온 경험과 네트워크는 향후의 연구와 정책 활동에서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8,500명이 넘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보고서에 담은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 인프라의 성능과 안전도는 보통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인프라 정책과 투자 수준은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프라 정책도 ‘국민 눈높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를 못 따라가는 인프라 정책과 투자는 삶의 질을 위협하고 지역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인프라 연구는 이번 보고서 발간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프라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원이 많더라도 인프라에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인프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해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상호

총괄자문단

권용복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김승기 국회수석전문위원

박영석 대한토목학회 회장

박종웅 前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

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지역자문단

부 산

정현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회장
 김광설 부산시 시설계획과 과장
 김명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부장
 임재문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조복래 미래건설포럼 사무총장
 김태하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장

대 구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
 이귀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광철 대구시청 도시재창조국장
 조재현 대구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
 이영재 경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신동진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현식 계명대학교 건축토목학부 교수
 이윤석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훈찬 (주)화성개발 대표이사
 박원길 양문건설(주) 대표이사
 정화섭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사무처장

인 천

이덕인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장
 고병욱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 본부장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실장
 김성우 인천발전연구원 연구기획본부 본부장
 기윤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신동명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 국장
 윤희경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임정빈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원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
 박승훈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사무처장

광 주

이권수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이 연 광주광역시 교통건설 국장
 백봉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국장
 김민종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
 이정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김시원 전남대학교 교수
 김흥식 호남대학교 교수(건축학회광주전남지회장)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김영주 (주)태호 대표이사
 김명기 국제건설(주) 대표이사
 문제춘 유성건설(주) 대표이사
 황인일 뉴삼원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김경군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사무처장

지역자문단

대 전

정성욱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
 신성호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국장
 이종범 대전광역시 건설도로과 과장
 권경영 대전광역시 건설부 부장
 백명흠 대전도시공사 사업이사
 문경원 대전대학교 교수
 전일표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감사
 윤동호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운영위원
 김용관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운영위원
 박재원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운영위원
 황경식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사무처장

울 산

김임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회장
 김지태 울산광역시청 하수관리과 과장
 김창현 울산광역시청 산업입지과 과장
 설광수 울산광역시청 상수도시설관리부 부장
 유형목 울산광역시청 종합건설본부 부장
 이근배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 과장
 박대만 울산도시공사 미래전략팀 과장
 송병기 (주)선일이엔씨 부설연구소 소장
 이종석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만규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상근부회장
 정정봉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사무처장

경 기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
 이현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최종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권영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규창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안용봉 경기도 도시정책과 과장
 박상일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
 조병현 경기도공사 도시재생 본부장
 류시균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영무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 연구위원
 김태황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
 김근영 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변용현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사무처장

강 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박재명 강원도 건설교통국 국장
 김명식 강원도 도로철도과 과장
 위흥섭 강원도 지역도시과 과장
 박길선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
 김종갑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장
 양인태 강원대학교 교수
 김동호 한라대학교 교수
 박상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정섭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부회장
 박원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부회장
 최형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사무처장



지역자문단

충 북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회장
조천희 (주)한양종합건설 대표
이동윤 (주)유광건설 대표
김연준 충청북도청 균형발전과과장
강종근 충청북도청 도로과 팀장
이 호 충청북도청 유기농산과 팀장
최광성 충청북도청 치수방재과 팀장
황재훈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권태호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장경장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사무처장

충남·세종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회장
강일권 충청남도 건설정책과장
임옥순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수석전문위원
도순구 충남개발공사 관리이사
김주진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찬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윤리위원장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운영위원
송광석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운영위원
방정혁 대한건설협회 충남세종시회 사무처장

전 북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회장
한완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 위원장
김천환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국장
이희영 전라북도 교통물류 도로과장
송기항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과 과장
이승태 군산대학교 교수
황규남 전북대학교 교수
남궁문 원광대학교 교수
이광준 서남대학교 조교수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권태연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사무처장

전 남

김영구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김정선 전라남도청 건설도시국 국장
양근석 전라남도청 해양수산국 국장
전정철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
고화빈 전남개발공사 부장(지역개발사업부)
정봉현 전남대학교 교수
조창근 조선대학교 교수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윤창열 천지건설(주) 대표이사
조충환 덕흥건설(주) 대표이사
최순범 (주)남양종합건설 대표이사
조일환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사무처장

지역자문단

경 북

배인호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
 양정배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
 김호섭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
 신승훈 경상북도개발공사 개발사업처장
 이정호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권영봉 영남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이윤석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경구 대구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이종운 덕재건설(주) 대표이사
 정주환 (주)우신종합건설 대표이사
 송진향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사무처장

경 남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회장
 하승철 경상남도 재난건설안전본부장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장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류순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
 최태만 경남개발공사 상임이사
 문태현 국립경상대학교 교수
 최진한 해강건설(주) 대표이사(現)
 경상남도 건설산업발전위원
 서정재 정호종합건설(유) 대표이사(現)
 경상남도 건설산업발전위원
 조광수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사무처장

제 주

이시복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김창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과장
 임종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
 양세창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동규 한국수자원공사 제주사업단장
 박진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미래투자처장
 정승훈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이동욱 제주대학교 교수
 고용보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감사
 고성기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운영위원
 송창중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운영위원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사무처장

※ 총괄 및 지역 자문단의 직위는 자문회의 개최 시점의 직위임.



참여연구진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영환 연구본부장
박용석 산업정책연구실장
이승우 주택도시연구실장
이홍일 경영금융연구실장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
김영덕 연구위원
김정주 연구위원
박수진 연구위원
손태홍 연구위원
유위성 연구위원
허윤경 연구위원
김윤주 부연구위원
나경연 부연구위원
박철한 부연구위원
박희대 부연구위원
엄근용 부연구위원
이광표 부연구위원
이지혜 부연구위원
전영준 부연구위원
최수영 부연구위원
최은정 부연구위원
김소연 연구원
이가진 연구원
홍슬기 연구원

BDI 부산발전연구원
BUSAN DEVELOPMENT INSTITUTE

이동현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상국 연구위원

DGI 대구경북연구원 (대구)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곽종무 선임연구위원
권용석 부연구위원
정성훈 부연구위원
김기철 연구원
현준용 연구원

R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한국도로학회 (인천)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진우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gjeri 광주전남연구원 (광주)

양철수 책임연구위원
임형섭 선임연구위원
정하욱 선임연구위원
민인철 책임연구위원
박현주 전문연구원
임영길 도시교통기술연구원 원장(비상임)
오상목 스페이스이오건축사사무소 대표(비상임)
이경재 (주)날리지바인 대표이사(비상임)

참여연구진



정경석 책임연구위원

이범규 선임연구위원

염인섭 책임연구위원

지남석 연구위원

안영웅 위촉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팀장

김문연 선임연구위원

이주영 연구위원

김승길 부연구위원

강지희 위촉연구원

김민지 위촉연구원

심준석 위촉연구원

정미선 위촉연구원

대한교통학회(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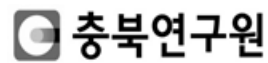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전교석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박사



노승만 선임연구위원

한영한 연구위원



원광희 수석연구위원

김덕준 연구위원

설영훈 연구위원

전가영 남부분원 전문연구원

홍세기 위촉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

이관률 연구위원

오혜정 연구위원

김원철 책임연구원

김지훈 연구위원



참여연구진



김상엽 연구위원

임승현 연구위원

이대성 전문연구원

김수용 전문연구원



양철수 책임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원

정하욱 선임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원

문창현 책임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원

박동원 연구위원

박현주 전문연구원

윤 판 (주)보강건설이앤지 이사(비상임)

오상목 스페이스이오건축사사무소대표(비상임)

이경재 (주)날리지바인 대표이사(비상임)



곽종무 선임연구원

권용석 부연구원

정성훈 부연구원

김기철 연구원

현준용 연구원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연구위원

조진형 전문연구원

김혜신 전문연구원

이정희 전문연구원

참여연구진



이성용 연구위원

손상훈 책임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

오은석 위촉연구위원

양정윤 위촉연구위원



차 례

제1장 서울특별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지역발전과 인프라	3
3.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4
4. 서울시 인프라 실태 분석	5
5.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7
6. 설문조사 및 분석	9
7. 서울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11
8. 정책과제와 제언	14
제2장 부산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7
1. 연구 개요	17
2. 지역 인프라 현황 및 실태	19
3.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 사례	22
4. 지역주민 설문조사 분석	23
5.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핵심 프로젝트	26
6.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28
별첨 1.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31
별첨 2. 주요 신규 및 성능 개선 인프라 프로젝트	42
제3장 대구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47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47
2. 지역발전과 인프라	49
3.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인프라와 지역발전 사이의 관계	54
4. 대구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및 분석	55
5. 지역 인프라 투자현황 진단	62
6. 지역 인프라 현황 및 투자수요에 대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66
7. 대구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결과 및 정책 개선 과제	72
8. 대구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제	76

제4장 인천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79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79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80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81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84
5. 인천시민 설문조사	85
6.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86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87
별첨 1. 인프라 투자 방향과 핵심사업	89
별첨 2. 주요 핵심 사업	94
제5장 광주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03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103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104
3. 지역 인프라 실태진단	105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09
5. 지역민 설문조사 및 인프라 투자 추진 방향 설정	111
6.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114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116
별첨 1. 주요 핵심 사업 예시	118
제6장 대전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21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121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122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124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29
5. 지역민 설문조사	135
6. 지역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138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141



별첨 1. 핵심 프로젝트	143
제7장 울산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5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1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152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154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58
5. 울산시민 설문조사	162
6.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163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165
별첨 1. 시설물별 핵심사업	167
제8장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71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171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172
3. 지역 인프라 실태진단	173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76
5. 경기도 주민 설문조사	178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179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180
별첨 1. 시설물별 핵심사업	182
제9장 강원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95
1. 연구의 배경	195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196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198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200
5. 설문조사	203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204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206

별첨 1. 시설물별 핵심사업	208
제10장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2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1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213
3. 충청북도 인프라 실태 진단	214
4.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219
5.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설문조사)	223
6. 인프라 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	225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227
별첨 1. 시설물별 주요 사업[신규/노후]	228
제11장 충청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237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237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238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240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245
5. 지역민 설문조사 결과	250
6.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253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256
별첨 1. 사업조사 샘플	258
제12장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263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263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264
3.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265
4.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267
5. 지역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272
6. 전북 도민 설문조사를 통한 투자수요 분석	273
7.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275



8. 정책과제 및 시사점	280
별첨 1. 1차 선정사업 리스트	283
별첨 2. 사업조사 샘플	291
제13장 전라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293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293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294
3. 지역 인프라 실태진단	295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300
5. 지역민 설문조사 및 인프라 투자 추진 방향 설정	302
6.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306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309
별첨 1. 주요 핵심 사업 예시	311
제14장 경상북도 인프라 실태 진단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323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23
2. 지역발전과 인프라	325
3.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인프라와 지역발전 사이의 관계	331
4. 경북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및 분석	332
5. 지역 인프라 투자현황 진단	340
6. 지역 인프라 현황 및 투자수요에 대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345
7. 경북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결과 및 정책 개선 과제	350
8. 경북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제	355
제15장 경상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35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7
2. 지역 발전과 인프라	358
3. 지역 인프라 실태분석	360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362
5. 설문조사 분석	363

6.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366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370
별첨 1. 시물별 신규 핵심 프로젝트	372
별첨 2. 시설물별 노후 인프라 개선 핵심 프로젝트	376
제16장 제주특별자치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383
1.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383
2. 제주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384
3. 해외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례	385
4. 제주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386
5. 제주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389
6. 제주지역 투자 수요 분석	392
7. 제주지역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와 정책 과제	395
8. 결론	400
부록 1. 설문지	403
부록 2. 세미나 발표자료	413



표 차례

표 1-1	서울시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노후화 현황	6
표 1-2	서울시 공공건축물 및 문화시설 노후화 현황	7
표 1-3	서울시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 성능수준, 노후도, 투자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10
표 1-4	서울시 핵심인프라 사업	13
표 1-5	서울시 미래 교통 수요 대응 사업	14
표 2-1	부산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27
표 3-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47
표 3-2	연구보고서 구조 및 주요 내용	48
표 3-3	대구시 산업별 생산액 비중 (2016년도 기준)	50
표 3-4	대구시 제조업 생산구성 비중 변화 추이	50
표 3-5	인프라 실태 진단 결과	57
표 3-6	대구시 유통시설 현황	59
표 3-7	대구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59
표 3-8	7대 광역시 도시공원 현황 비교	60
표 3-9	대구시의 중점 추진 분야 및 과제	61
표 3-10	대구시 지출 항목별 예산 변화 추이(2008~17년)	64
표 3-11	2015~17년 대구 재정운용 기본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	66
표 3-12	설문 샘플 구성 및 분포	67
표 3-13	설문에 대한 항목 내용	67
표 3-14	대구시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결과(종합)	73
표 3-15	대구시 인프라 투자사업군 1(도시생활 인프라, 물류인프라)	74
표 3-16	대구시 인프라 투자사업군 2(산업인프라,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75
표 4-1	인천시 핵심 사업 투자 기본방향	86
표 4-2	시설 유형별 핵심사업 건수 및 총사업비	86
표 6-1	대전시 인프라 사업 총괄 현황	131
표 6-2	환경분야 주요 인프라 부문별 예산 편성 추이	132
표 6-3	중기 SOC 예산의 부문별 재정 계획	133
표 6-4	도로교통분야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계획	133

표 6-5	20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 사회복지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134
표 6-6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137
표 6-7	본 연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요	140
표 7-1	울산시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투자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163
표 7-2	울산시 인프라 분야별 핵심사업	164
표 8-1	경기도 노후화 시설	175
표 8-2	경기도 인프라 관련 과제의 투자 지향점	177
표 8-3	경기도 인프라 주요 현안 및 투자 방향	179
표 8-4	경기도 검토 사업과 핵심사업	180
표 9-1	교통시설 연도별 투자계획	201
표 9-2	물관리시설 연도별 투자계획	201
표 9-3	교육시설 연도별 투자계획	202
표 9-4	설문조사 질문과 응답방식	203
표 9-5	시설물별 평가 결과 요약	203
표 9-6	강원도 시설물 핵심 사업 현황	205
표 10-1	지방자치단체 및 총복지역 세출 예산 현황	220
표 10-2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현황	220
표 10-3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및 결산 비교	221
표 10-4	충북 인프라 관련 정부 공약	221
표 10-5	충북 주요 시설물 설문결과 비교	223
표 10-6	충북 신규 및 노후 인프라 사업 총괄 집계	226
표 11-1	도시 및 주택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47
표 11-2	환경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247
표 11-3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SOC 세부항목별 투자 계획	248
표 11-4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분야별 인프라 투자 계획	248
표 11-5	20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 사회복지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250
표 11-6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252



표 13-1	전남 농공단지 현황	315
표 13-2	전남 농공단지 노후화 현황	316
표 13-3	전남지역 2018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318
표 14-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323
표 14-2	연구보고서 구조 및 주요 내용	324
표 14-3	경상북도 vs 전국 경제성장률 비교	325
표 14-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전국 도간 경제성장률 순위 변화	325
표 14-5	구미시 주력 수출품목 수출액 변화	326
표 14-6	포항시 수출입액 연도별 변화	326
표 14-7	전국 시/도 역내 주택 중 노후주택 비중 비교	330
표 14-8	인프라 실태 진단 결과	333
표 14-9	경북도 유통시설 현황	336
표 14-10	전국 시·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 비교(2014년 기준)	337
표 14-11	경북지역 상수관로 경년별 현황(2015년 기준)	337
표 14-12	경북도의 중점 추진 분야 및 과제	339
표 14-13	경북지역 지출 항목별 예산 변화 추이(2008~17년)	341
표 14-14	2015~017년 경북 재정운용 기본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	344
표 14-15	설문 샘플 구성 및 분포	345
표 14-16	설문 항목 내용	345
표 14-17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결과(종합)	351
표 14-18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사업군 1(주민생활 인프라, 물류인프라)	352
표 14-19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사업군 2(산업인프라,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353
표 15-1	경남 시설 확충 및 개선 투자비 전망	363
표 15-2	인프라 시설물 응답 결과	364
표 15-3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교통시설)	367
표 15-4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물관리시설)	367
표 15-5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주거/교육시설)	368
표 15-6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산업/경제시설)	368
표 15-7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기타시설)	369
표 15-8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	369

표 15-9	신규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369
표 15-10	노후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370
표 16-1	설문조사의 개요	392
표 16-2	제주도 인프라 투자 분석 결과	395
표 16-3	핵심 노후 인프라 사업	398
표 16-4	핵심 신규 인프라 사업	400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보고서의 구성	2
그림 1-2	지역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3
그림 1-3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4
그림 1-4	서울시 신규 인프라 사업 우선순위	10
그림 1-5	서울시 노후 인프라 사업 우선순위	11
그림 1-6	서울시 인프라 투자의 기본 방향	12
그림 2-1	연구의 구성	18
그림 2-2	부산시 인프라 시설물 중요도-성능수준 비교 결과	24
그림 2-3	부산시 인프라 시설물 중요도-안전수준 비교 결과	25
그림 2-4	부산시 인프라 시설물 중요도-투자수준 비교 결과	26
그림 2-5	부산시 인프라 투자 성장률(%)과 총생산 성장률(%) 비교	29
그림 3-1	연구의 추진 개요	48
그림 3-2	경주/포항 지진	53
그림 3-3	전국 시/도 내진성능 확보율	53
그림 3-4	대구 지역 현실에 대한 진단 결과 종합	54
그림 3-5	인프라 실태 진단 프로세스	56
그림 3-6	체육시설 개수 전국 시도 비교(2016년도 말 기준)	60
그림 3-7	2017년 전국 시도별 세출 예산 규모	62
그림 3-8	2017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62
그림 3-9	전국 시/도 1인당 인프라 예산 금액 비교(최근 10년 평균)	63
그림 3-10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수행 절차	72
그림 3-11	대구시 지자체 인프라 투자수요 요약	73
그림 3-12	대구시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 가중치 도출 방법	74
그림 4-1	연구보고서의 구성	80
그림 4-1	주민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인프라	81
그림 4-2	지역별1인당 SOC 예산 변화	84
그림 4-3	세부시설물의 항목별 평가 점수	85
그림 5-1	연구 진행 프로세스	104
그림 5-2	인프라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105

그림 5-3	광주시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노후화 전망	106
그림 5-4	광주시 시특법 대상 3종 시설물(左) 및 건축물(右)의 노후화 전망	107
그림 5-5	폭설로 인한 포트홀 긴급 복구 현장(左), 폭우로 인한 광주천 장애인 사망사고 현장(右)	107
그림 5-6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109
그림 5-7	광주시의 열악한 보행 인프라 현황	111
그림 5-8	지역주민의 비용 부담 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112
그림 5-9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IDI)를 이용한 우선순위 산정 과정	113
그림 5-10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를 이용한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	113
그림 5-11	광주시 인프라 투자 방향	114
그림 5-12	광주시 핵심 사업 요약	114
그림 5-13	광주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연평균)	118
그림 6-1	인프라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124
그림 6-2	대전시 인프라 예산 편성 추이	130
그림 6-3	대전시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	130
그림 6-4	대전시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136
그림 6-5	대전시 인프라시설의 충족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의 사유	137
그림 6-6	대전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138
그림 6-7	인프라 투자 축소의 문제점	138
그림 6-8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139
그림 6-9	대전시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연평균)	143
그림 7-1	연구보고서의 체계	152
그림 7-2	지역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153
그림 7-3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153
그림 7-4	울산시 SOC관련 세출 현황	159
그림 7-5	울산시 SOC관련 예산지출 계획	159
그림 7-6	울산시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매트릭스	163
그림 7-7	울산시 신규 인프라 확충사업 도출 매트릭스	164
그림 8-1	연구보고서의 구성	172
그림 8-2	주민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인프라	173



그림 8-3	수도권 교통축별 소요 시간(출퇴근 평균)	174
그림 8-4	경기도 연령별 통근통학 분포	174
그림 8-5	지역별 1인당SOC 예산 변화	176
그림 8-6	인프라 시설별 중요도/만족도/노후도/투자수요 응답 결과	178
그림 9-1	연구보고서의 체계	196
그림 9-2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197
그림 9-3	인프라와 삶의 질과의 관계	197
그림 9-4	강원도 인프라 투자 방향	204
그림 10-1	연구보고서의 구성	212
그림 10-2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213
그림 10-3	인프라와 삶의 질과의 관계	214
그림 10-4	주요 시설물의 성능수준-중요도	224
그림 10-5	주요 시설물의 노후도 및 안전도-중요도	224
그림 10-6	충북 시설물별 투자규모 비율	225
그림 11-1	인프라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239
그림 11-2	충남 인프라 예산 편성 추이	245
그림 11-3	충남 예산 편성 추이	246
그림 11-4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전체 세출 대비 비중 추이	249
그림 11-5	충남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250
그림 11-6	충남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의 사유	253
그림 11-7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253
그림 11-8	인프라 투자 축소의 문제점	253
그림 11-9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254
그림 11-10	충남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연평균)	258
그림 11-11	천안역 개선사업 사업비 투입 계획	259
그림 12-1	전북 SOC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비중 추이 (2008~15년, 세출 기준)	272
그림 12-2	5년 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 현황(2012~16년)	273
그림 12-3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설 유형 설문결과	274
그림 13-1	연구 진행 프로세스	294

그림 13-2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295
그림 13-3	전남의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의 노후화 전망	296
그림 13-4	전남의 시특법 대상 3종 시설물(左) 및 건축물(右)의 노후화 전망	297
그림 13-5	전국 주거용 건축물 노후도	297
그림 13-6	폭우로 인한 담양 도로 침수 현장	298
그림 13-7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300
그림 13-8	지역 주민의 인프라 성능 평가	302
그림 13-9	지역 주민의 인프라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 평가	302
그림 13-10	지역 주민의 인프라 수요(필요성) 평가	303
그림 13-11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304
그림 13-12	인프라 수요 종합 지수(IDI)를 이용한 우선순위 산정 과정	304
그림 13-13	IDI(Infrastructure Demand Index)를 이용한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	305
그림 13-14	전남 인프라 투자 방향	306
그림 13-15	전남 핵심 사업 요약	306
그림 13-16	전남 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연평균)	311
그림 13-17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절차	314
그림 14-1	연구의 추진 개요	324
그림 14-2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성장경로 내 단계	326
그림 14-3	경북지역 인구구조 변화 모습	327
그림 14-4	경북 청년인구(15-29세) 전입-전출 연도별 추이	328
그림 14-5	경북 전체 인구 vs 청년 인구 유출 정도 비교	328
그림 14-6	경주/포항 지진	330
그림 14-7	인프라 실태 진단 프로세스	333
그림 14-8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2016년도 기준)	335
그림 14-9	2017년 전국 시도별 세출 예산 규모	340
그림 14-10	2017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비교	340
그림 14-11	전국 시/도 면적 대비 '수송 및 교통' 예산 비교(최근 10년 평균)	342



그림 14-12 전국 시/도 경제활동 인구 대비 '수송 및 교통' 예산 비교 (최근 10년 평균)	342
그림 14-13 전국 시/도 인구 대비 '주택' 예산 비교(최근 10년 평균)	343
그림 14-14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수행 절차	350
그림 14-15 경북지역 지자체 인프라 투자수요 요약	351
그림 14-16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 가중치 도출 방법	352
그림 15-1 연구 보고서의 체계	358
그림 15-2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359
그림 15-3 인프라와 삶의 질과의 관계	360
그림 15-4 중요도-성능수준 분석 결과	365
그림 15-5 중요도-안전도 분석 결과	365
그림 15-6 인프라 투자 기본 방향	366
그림 16-1 주요 시설물의 노후도-성능수준	393
그림 16-2 주요 시설물의 노후도-투자수준	394
그림 16-3 인프라 투자의 방향	397

제1장 서울특별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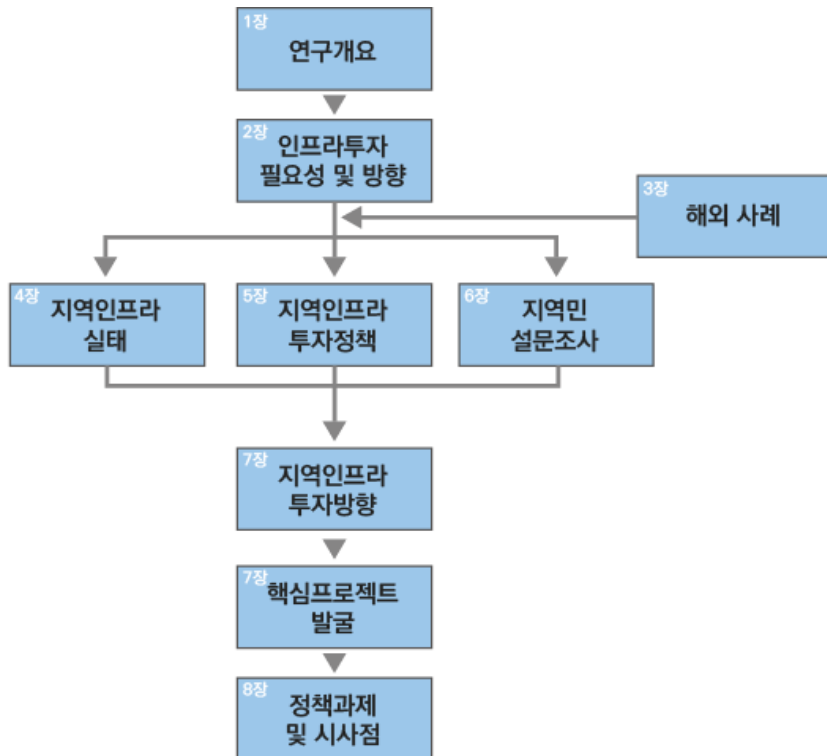
- 정부는 국내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향후 SOC 예산을 감소하는 방향의 계획을 발표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을 2017년도의 22.1조원보다 20%나 감소한 17.7조원으로 계획하였으며, 국회에서 19.0조원(전년 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함.
 - 국토계수당 도로밀도(OECD 국가 중 최하위), 세계은행이 평가한 Global Rankings 2016의 인프라 점수(20위), 교통혼잡비용(GDP 대비 2.13%) 등으로 판단했을 때 국내 SOC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 본 연구는 서울시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음.
 - 첫째, 서울시 지역의 일반 현황을 분석하고,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지역경제성장과 주민 삶의 질과의 관계를 통해 제시함.
 - 둘째, 해외 주요 인프라 투자정책과 프로젝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1) 본 보고서는 『서울시 인프라 투자 방향 연구(2013)』,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2015)』 등 2차례에 걸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수행한 ‘서울시 인프라’ 관련 연구결과에 최근의 변동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임.

- 셋째, 서울시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조사하고, 서울시 주요 인프라 정책 진단을 통해 인프라와 관련한 주요 정책적 동향을 분석함.
- 넷째, 지역 주민의 인프라 시설 수요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557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섯째, 앞서 분석된 인프라 실태조사, 정책 동향, 설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음.
- 여섯째, 서울시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그림 1-1

연구보고서의
구성



2. 지역발전과 인프라

- 사회경제 동향 분석 결과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GRDP 성장률은 낮으며, 산업구조상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서울시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책임져야 할 고령인구 수는 2016년 16.7명에서 2045년에는 57.4명으로 세 배 이상 가증될 것으로 전망됨.
 - 서울시 GRDP 규모는 경기도에 이어 전국 2번째 규모이나, 성장률은 2%로 전국 평균(2.8%)에 비해 낮음.
 - 2015년 서울시 주요 산업별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17.1%, 사업서비스업이 1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의 발전 수준은 그 지역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의 질로 평가될 수 있음.
 - 지역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경제시설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63.7%가 서울의 경제 성장과 인프라 시설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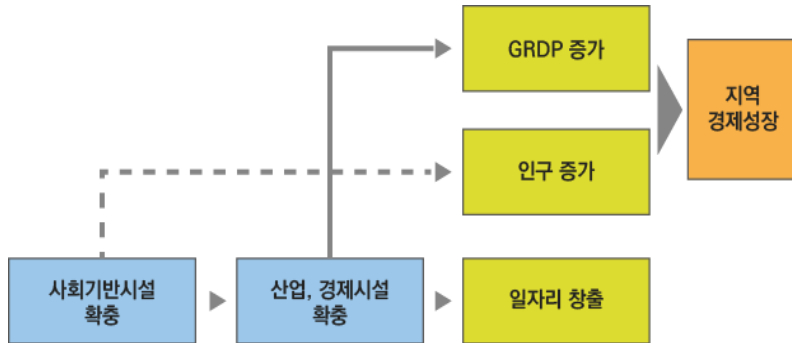


그림 1-2

지역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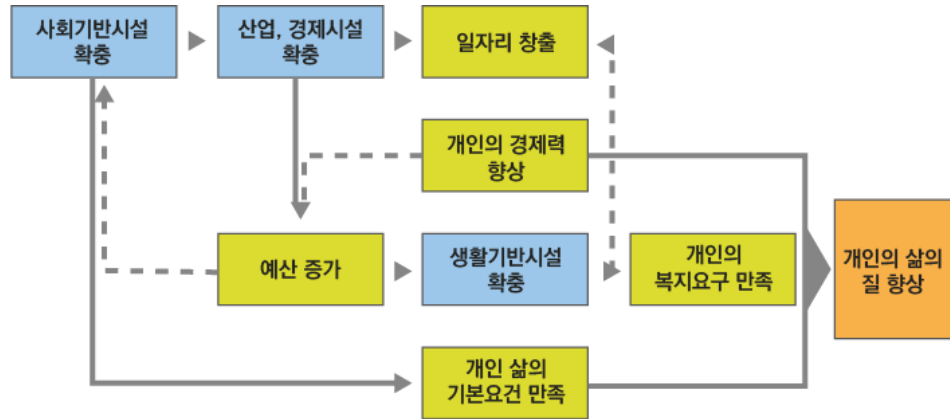
- 개인은 삶의 기본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요구 만족 등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은 인프라 시설 확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또한, 설문조사 결과 68.5%의 응답자가 주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응답함.

1.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그림 1-3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3.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의 비중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독일은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이러한 주요 선진국들의 SOC 투자 증가세는 최근 SOC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해외 선진 국가 혹은 도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화된 인프라의 성능 개선 및 신규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한 투자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를 양적 측면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확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도시쇠퇴 현상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이를 차단하고 지역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지역의 현실 및 잠재력에 부합하는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투자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한편, 투자 시기도 중요한데 도시 쇠퇴가 지나치게 진행되기 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 쇠퇴의 흐름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이미 지역 내의 잠재력이 대부분 소실된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
- 지역별 인프라의 노후화와 인구 변동 등에 대비한 필요 인프라 투자 부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적·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다음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인프라 사업 발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시와 포트머스(Portsmouth)시 터널 프로젝트
 - 미국 워싱턴 D.C. 퍼플 라인(Purple Line) 프로젝트
 - 프랑스 파리 마세나(Zac Massena)지역 및 파리 바티뇰(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사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
 - 일본 동경의 도시재생사업 등

4. 서울시 인프라 실태 분석

- 서울시 인프라 실태 분석은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노후화 실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인프라 시설은 크게 교통시설,물관리시설, 생활 인프라 시설로 구분되며, 총 10개 세부 시설물 유형으로 이루어짐.
- 서울시 교통시설 관련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도로시설: 2016년 기준 서울시 도로 총연장 길이는 108,780km, 인구당 도로연장은 0.83km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분석됨. 도로의 대부분은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된 상태로, 도로 파손의 주된 원인인 교통량이 일반국도의

1. --- 서울특별시

5배 수준임. 포장도로 상태지수인 SPI(Seoul Pavement Index) 지수가 6 이하인 노후 포장도로가 2009년 23.3%에서 2015년에는 34.1%로 증가

- 도로 교량 및 터널: 도로 교량이 629개, 도로 터널은 65개로 집계됨. 2016년 기준으로 서울시 사용연수 20년 이상 도로 교량은 383개소로 60.9%를 차지하며, 40년 이상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도로 교량은 총 83개소로 13.2%를 차지함.
- 지하철: 2016년 기준 서울시 지하철은 총 9개(1~9호선) 노선 335.2km가 운행 중에 있음. 1~4호선 구간의 263개 시설물 중 30년 이상의 노후 시설물이 224개로 전체 시설물의 85%를 차지함. 대부분 1992년 도시철도 안전기준 제정 이전 준공된 시설물은 재난대피시설, 각종 설비시설에 미달되는 상태임.

표 1-1

서울시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노후화 현황

구분	전체	노후화 정도	
		20년 이상	40년 이상
도로교량(개)	629	383(60.9%)	83(13.2%)
도로터널(개)	65	32(49.2%)	3(4.6%)

- 서울시 물관리시설 관련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수도: 2015년 기준 서울시 수도관 총연장은 13,697km이며, 급수보급률 100%, 유수율 95.1%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음. 하지만 서울시 상수도 시설 대부분은 시설사용연수가 21~30년에 해당되어 10년 이내 30년 초과 시설물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하수도: 2015년 기준 서울시 하수관로 보급률 및 설치율은 100%임. 서울시 내 하수관로 전체 연장은 10,616km, 사용연수 20년 이상의 관로는 7,888km로 전체 연장의 75%가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통해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함.
- 서울시 생활 인프라시설 관련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공공 건축물: 민간 건축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 건축물, 지하도 상가로 분류하여 살펴봄. 2015년 기준 서울시 내 공공 건축물 311개소 중 경과연수 30년 초과 노후 시설물은 20개소로 6.4%이며, 상태등급을 분석한 결과 B등급이 전체 시설물 중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C등급도 4.2%로 나타남.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 제고 및 성능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함.

- 문화시설: 2017년 기준 서울시 인구를 고려한 문화시설 공급은 백만 명당 37.22개소로 평균 51.82개소보다 낮은 수준이며, 17개 시도 중 12위로 조사됨. 365개의 문화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문화시설 수는 117개소로 약 32.1%로 집계됨.
- 의료시설: 서울시 내 의료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총 17,142개소, 병상 수는 총 86,800개에 달함. 마포구의 경우는 보유 병상 수가 722개(0.8%)로 서울시 내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됨.
- 공원: 2016년 기준 서울시 내 공원 중 도시공원은 2,181개소로 전체 공원의 77%가 해당됨. 자치구 중 금천구가 54개소로 공원을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파악함. 2017년 기준 서울시 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531개소로 전체 정원은 15,539인, 2017년 기준 현원은 14,574인으로 정원 대비 약 94% 수준임. 25개 자치구 중 3개 구를 제외하고 정원 대비 포화율이 90% 이상임. 또한,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관련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가 다수로 조사되어 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

구분	현황			노후화 정도	위험도	
	전체	1종	2종	20년 이상	C등급	D-E등급
공공 건축물	311	23	288	43(13.8%)	13(4.2%)	-
문화시설	365	-		117(32.1%)		-

표 1-2

서울시
공공건축물 및
문화시설 노후화
현황

5.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 2017년 서울시 도로건설 예산은 2011년 대비 30% 이상 감소하면서, 도로율은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다핵 기능 강화에 따른 중심지간 연계 강화 투자 방안 미미
 -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은 보행자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의 소규모 사업 지원을

1.

서울특별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있음. 향후 다핵도시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중심지간 연계 강화 방안 및 중장기적 투자 방안 모색이 절실함.

- 한편 지난 2013~16년 동안 서울시의 철도 관련 예산은 평균 3,300억원 수준으로 축소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음.
 - 신분당선 연장, 서남권과 동남권 연계 광역급행철도 신설 등 광역철도 여건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 미미하며,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1~4호선에 대한 재투자가 시급한 실정임.
- 2011년 이후 안전과 관련한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수시설 관리, 하수관로 종합정비·보수보강 예산은 2011년 이후 확대되는 양상임.
 -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보수보강 등 지속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 하수관로의 노후화를 고려하면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 성능개선을 통한 관리비용의 축소 등 투자 효율성 방안 모색이 요구됨.
- 서울시 공공 건축물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은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 위주여서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경쟁력 향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나,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다수 차지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임.
 - 도시재생 관련 다수의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사업규모가 작고 사업기간은 길어서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공원·녹지 예산의 축소로 생활인프라 개선이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여전함.
 - 공원·녹지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로 생활권 공원 면적이 여전히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함. 생활 인프라 개선이 체감되지 못하고 있음.

6. 설문조사 및 분석

- 본 연구의 설문은 서울시민이 체감하는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 본 설문조사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온·오프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총 577명이 설문에 응답함.
 - 조사 대상 19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중요도,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방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함.
- 설문 결과 인프라 시설의 중요도에 비해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가 낮게 나타나, 모든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신규와 노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중요도: 19개 주요 시설물 중 지하철에 대한 중요도가 4.23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공원/녹지시설(4.09), 의료시설 및 교육시설(4.06), 주거시설(4.02), 안전시설 및 주차장(4.00) 등도 4.0 이상의 평가를 받음. 하지만 터널에 대한 중요도는 3.33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성능수준: 지하철에 대한 성능수준이 3.69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주차장(2.89), 재해방지시설(3.05), 관광시설(3.01), 전통시장(3.12)은 성능수준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게 평가됨.
 - 노후도 및 안전도: 지하철에 대한 안전도는 3.43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도는 3.01로 조사된 시설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방향: 주요 시설물의 투자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주차장이 3.89로 투자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지하철(3.86), 의료시설(3.86), 공원/녹지시설(3.85), 안전시설 및 문화/복지/체육시설(3.82)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1.

서울특별시

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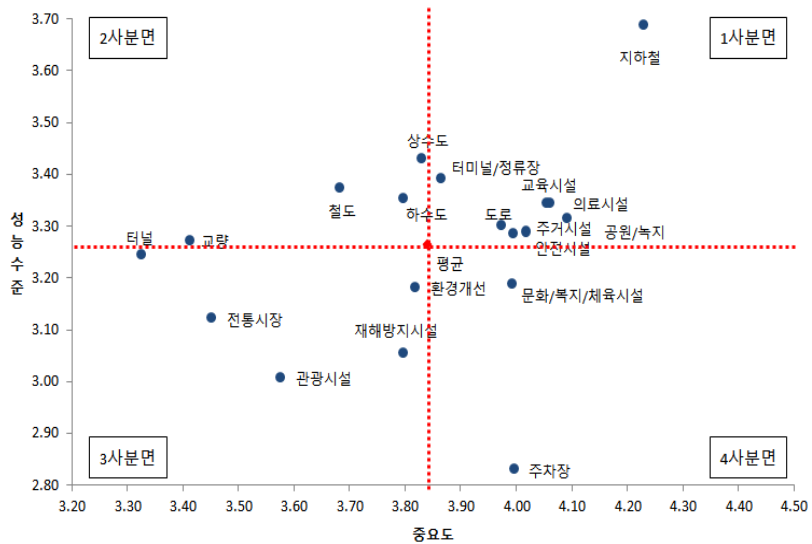
서울시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 성능수준, 노후도, 투자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구분	평균	도로	터널	교량	지하철	철도	터미널/정류장
중요도	3.84	3.97	3.33	3.41	4.23	3.68	3.87
성능수준	3.29	3.30	3.24	3.27	3.69	3.37	3.39
노후도	3.26	3.32	3.18	3.20	3.43	3.31	3.33
투자방향	3.67	3.68	3.34	3.34	3.86	3.49	3.54
구분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환경개선 시설	재해방지 시설	주거시설	교육시설
중요도	4.00	3.83	3.80	3.82	3.80	4.02	4.06
성능수준	2.83	3.43	3.35	3.18	3.05	3.29	3.34
노후도	3.19	3.27	3.26	3.14	3.11	3.22	3.36
투자방향	3.89	3.66	3.62	3.64	3.76	3.76	3.75
구분	전통시장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	공원/녹지	관광시설	안전시설	
중요도	3.45	3.99	4.06	4.09	3.58	4.00	
성능수준	3.12	3.19	3.34	3.31	3.01	3.29	
노후도	3.01	3.33	3.35	3.38	3.20	3.38	
투자방향	3.50	3.82	3.86	3.85	3.47	3.82	

- 서울시민이 평가한 인프라 시설 수요 우선순위는 신규 인프라 사업과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그림 1-4

서울시 신규 인프라 사업 우선순위



• 신규 인프라 사업 수요: 수요가 가장 높은 그룹(그림 4사분면)은 주차장, 문

화/복지/체육시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로, 주거시설, 안전시설, 터미널/정류장,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원/녹지, 지하철 그룹(그림 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수요: 수요가 가장 높은 그룹(그림 우 4사분면)은 주거시설, 주차장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로, 터미널/정류장,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 안전시설, 교육시설, 공원/녹지, 지하철 그룹(그림 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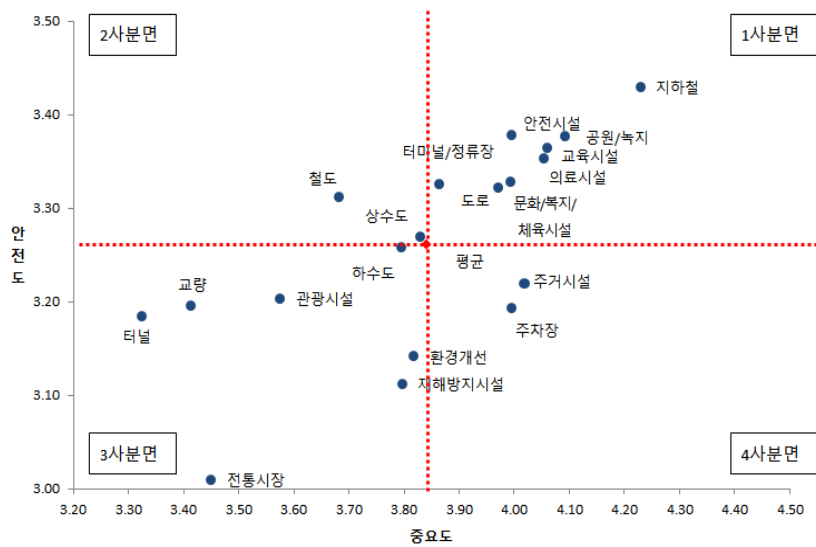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 노후
인프라 사업
우선순위

7. 서울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

- 서울시 인프라 투자는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하는 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 트랙 전략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5가지 세부 방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접근 : 과거와 같은 단순한 건설물량 확대나 불요불급한 땀질식 건설투자는 지양해야 할 것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의 균형 : 양적 확충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프라 재고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한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함.

1.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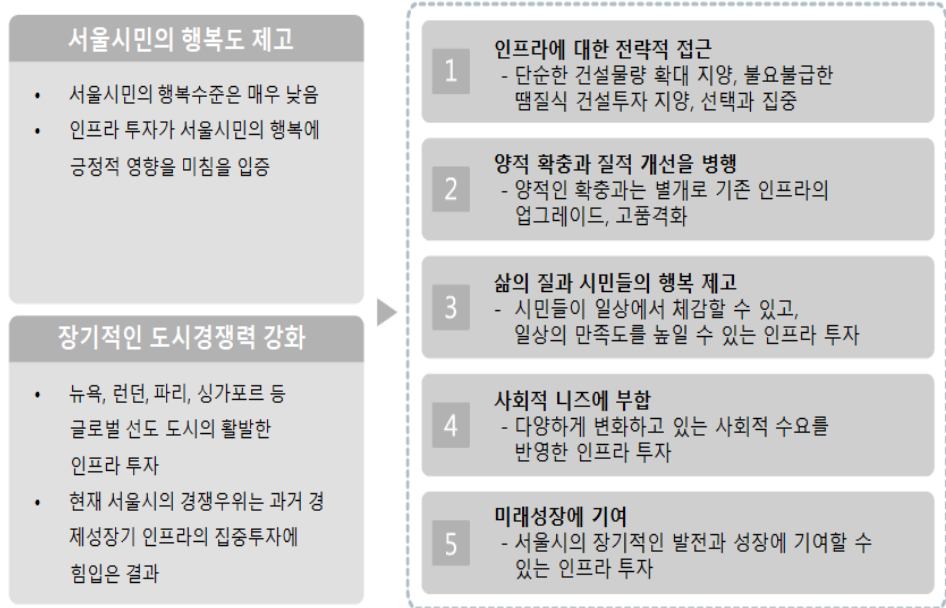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 시민의 삶의 질 제고 : 서울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일상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사회적 요구 수용 :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수요와 기술을 반영한 인프라 투자가 요구됨.
- 미래 성장 기여 :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그림 1-6

서울시 인프라 투자의 기본 방향



-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발굴은 실태, 정책, 전문가 의견, 설문 결과 등을 종합하여 상향식(Bottom-Up)으로 신규 사업과 개선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함.
 - 신규 인프라 사업은 인프라 과부족 실태조사,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민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물별 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제시
 -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인프라 노후화 및 안전도 조사, 관련 정책방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도출한 후, 설문조사를 고려하여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시설물별로 제시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서울시 핵심 프로젝트 중 신규 인프라는 생활밀착형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 기존 인프라는 안전과 성능 개선을 중요 요소로 하여 선정함.

-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핵심 사업으로, 전시컨벤션, 국제업무 기능 강화로 도시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업무 공간 육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 「2030 서울플랜」에서 광역 중심으로 격상되어, 향후 수도권 동북부의 일자리·문화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임.
- 양재 R&CD 혁신지구 조성 : 4차 산업혁명 대두에 따른 혁신형 R&D에 대한 전략적 집중 대응 공간이면서, 중소기업의 연구 공간과 대기업 신성장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기업 상생 방안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임.
- 마곡 MICE 복합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 마곡산업단지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최상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임.

구분	사업개소	총 사업비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조 3,067억원
	잠실 스포츠·MICE 조성사업	2조 4,918억원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약 2,800억원
	도로 인프라 개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등)	7,419억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5,244억원
	동북권 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약 451억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약 4,200억원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정비	약 527억원
양재 R&CD 혁신지구 조성		5,012억원
마곡 MICE 복합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융합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646억원
	강소기업 연구공간 제공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2,241억원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	-

표 1-4

서울시
핵심인프라 사업

- 미래 교통수요를 반영한 주요 사업 : 철도와 도로가 주요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기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급행철도 및 간선도로 정비 및 자율주행차 등에 대비한 도로 종합 성능개선사업(도로포장 등), 혼잡 지하철 역사 성능개

1.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표 1-5

서울시 미래 교통
수요 대응 사업

선사업(피난안전성 제고 등)을 선정하여 제시함.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철도	광역·간선철도 정비(신분당선 강남-용산 등)	17,085
	경전철추진(동북선, 면목선 등)	77,632
	급행화 및 대심도(2호선 남부급행철도)	44,886
	연결선(9호선 공항철도)	280
도로	주간선도로정비(경인고속도로 지하화)	197,087
	연결로 정비 및 단절구간 정비	-
	도로 성능 개선	4,500

- 인프라 노후화 대비 사업 :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도로함몰 우선정비등), 지하철 성능개선사업(지하철 1~4호선)
-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충사업 : 도로율이 낮은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도로 개선(확충) 등 생활밀착형 도로정비, 학교시설의 복합화(학교 내 편의 및 문화시설 구성으로 지역복지시설 확보), 그린스쿨(안전확보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등

8. 정책과제 및 제안

- SOC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공급되고 유지 및 관리되어야하므로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SOC 재정 투자가 필수임.
 - 국가 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교통 및 물류 부문의 투자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과 매칭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인프라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임.
 - 인프라 예산의 급격한 감축은 지역 필수시설을 포함한 신규 인프라 사업추진에 부정적 연쇄효과를 미치게 됨.
 -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인프라 예

산 책정·배분이 반드시 필요함.

- 서울시는 현재 후 인프라 성능개선 조례' 제정으로 노후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 대응 정책 기반은 조성하였으나,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근본 대책은 미흡한 상황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 일환으로 노후 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RTO(Rehabilitate Transfer Operate) 및 RTL(Rehabilitate Transfer Lease)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들은 중소기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향후 시설물 성능개선 사업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사업을 단편적인 보수보강에서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종합정비사업으로 발주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에 있어 강소건설기업의 성장은 지역경제의 성장모델로 타 건설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내 강소건설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모델 구축 및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토지, 환경 등 입지규제 뿐만 아니라 인허가, 세제 등 다양한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서울대도시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자원 확보 등 서울대도시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서울대도시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과 인접 시와 연계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1.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 개요

- 정부는 국내 건설 SOC(이하 인프라) 스톡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향후 예산을 감소하는 방향의 계획을 발표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018년 인프라 투자 예산을 2017년의 22.1조원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줄인 데 이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국토계수당 도로 밀도(OECD 국가 중 최하위 기록), 세계은행이 평가한 Global Rankings 2016의 인프라 점수(20위), 교통혼잡비용(GDP 대비 2.13%)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성장이 절실함.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지역의 인프라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 진단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 지역 내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련 투자 정책을 종합 검토하고, 시민의 인프라 수요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핵심 인프라 사업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분석함.
 - 현 부산시의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투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부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전략 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는 부산시의 인프라 실태를 조사하고 인프라 투자 정책 및 계획을 진단하기에 향후 지역경제 성장 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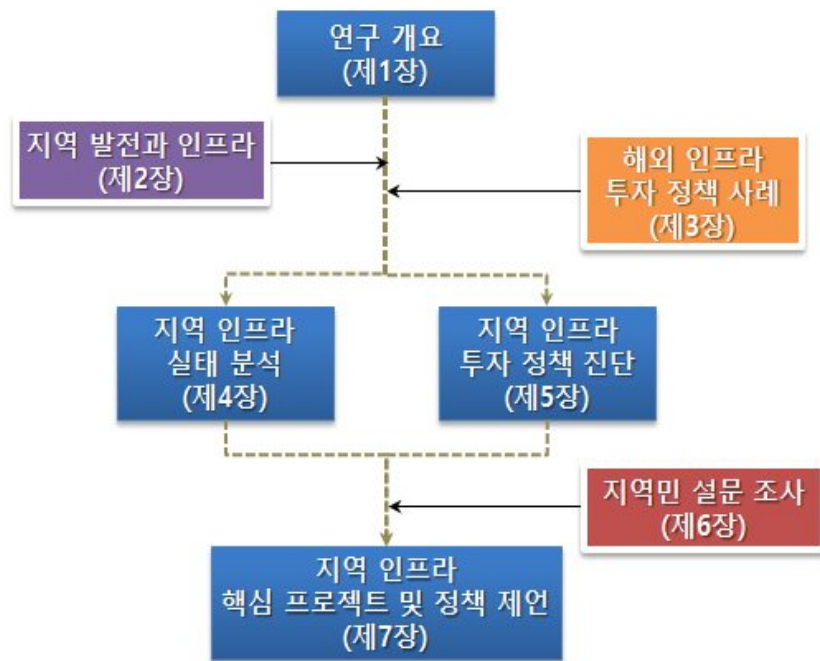
2. 부산광역시

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 인프라 성장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준비,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의 안전성 확보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및 방향(2장), 해외 사례(3장), 지역 인프라 실태(4장),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5장), 지역민 설문조사(6장),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과 핵심사업 발굴 및 정책제언(7장)으로 구성됨.

그림 2-1

연구의 구성



2. 지역 인프라 현황 및 실태

○ 교통시설

- 부산지역 내 도로 총연장은 2016년 기준 3,330km이며, 등급별로는 고속도로 5개 노선 54km, 일반국도 5개 노선 101km, 지방도 3개 노선 30km, 광역시도 629개 노선 828km, 군도 47개 노선 151km, 구도 2,308개 노선 2,166km 임. 부산지역의 1인당 도로 연장이 0.88m로 타 시·도보다 낮은 실정임.
 - 도로 포장률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전국 평균 92.4%, 인천 96.06% 등에 비해 부산광역시는 98.2%로 다소 높으나, 노후화에 의한 성능 저하에 대한 진단은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량은 총 154개소, 총연장 58,017.5m이며, 터널은 총 22개소, 총연장 38,010m임. 20년 이상 노후교량은 1종은 26개소, 2종은 32개소로 전체의 약 80% 수준임. 또한 안전등급은 B등급 이하의 1·2종 교량이 123개소로 전체 중 약 80% 정도임.
- 도시철도는 1985년에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도시철도 총 4개 노선, 총 정거장 149개, 총 노선연장 167.18km임.
 - 도시철도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 ‘하단~녹산선’, ‘강서선’, ‘정관선’, ‘송도선’, ‘기장선’, ‘C-bay~Park선’, ‘신정선’ 구축 계획을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7년 6월에 확정 및 승인을 받은 상황임.
- 항만의 경우 진해시 명동 ‘신명남단/우도/연도/가덕도 남단/생도/오륙도/ 광안대로 남측 육지 끝단’을 항계로 수면적 229km², 해안선 202km 규모임.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항만(Hub-Port) 조성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강서구 가덕도 북안, 창원시 진해구 용원·웅동·제덕만 일원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교통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노후화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부산권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신규 도로 건설 추진이나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집행된 도로 사업 계획 및 착수가 시급한 실정임.

2.

부산광역시

○ 물관리시설

- 상수도관로는 총 약 8,513km이며 전체 중 생활용수관이 97.2%, 공업용수관이 2.7%, 온천수관이 0.1%를 차지함.
 - 용도별 현황은 급수관이 51.60%로 절반 이상이고, 이어 배수관 41.5%, 송수관 5.9%, 도수관 1.01%, 취수관 0.03%순으로 조사됨.
- 15년 이상은 전체의 54.9%로 절반 이상이며, 정밀조사를 통한 구조적 상태를 등급별로 파악하여 개/보수 및 교체 등을 진행해야 함. 노후관로에 대한 투자 계획 부족은 지반 침하(싱크홀) 현상 등 여러 가지 사고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직접적 관련이 있음.
- 하수관로는 보급률이 60.8%로 타 지자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특히 8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시민의 생명과 관계성이 높은 하수도 개선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16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체의 약 93%로 매우 높아 구조적 상태 파악을 통한 개·보수 및 교체가 시급함. 이는 타 시설물 개선 사업에 비해 우선적 투자와 보강이 절실한 시설물로 향후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 방안 수립이 절실한 실정임.
- 물관리시설 중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노후화된 상하수도의 정비 사업과 향후 단기적 신규 사업 계획이 신속히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주거 및 교육시설

- 초중고/특수학교의 시설물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총 308개소로 공립 301개소, 사립 6개소, 국립 1개소 등임. 중학교는 총 174개소로 공립 137개소, 사립 37개소, 국립 0개소임. 고등학교는 총 146개소로 공립 64개소, 사립 78개소, 국립 4개소. 특수학교는 총 15개소로 공립 8개소, 사립 7개소, 국립 0개소로 조사됨.
- 최근 급증하는 지진 등 재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시설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성능 개선 사업과 내진설계 보강 등 대응형 관리와 인프라 투자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은 총 217개소 중 인정 197개소, 미인정 20개소이며 유형별로는 상가형 128개소, 골목형 83개소, 혼합형 6개소로 조사되었음. 노후화 예방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인프라 사업 추진이 절실함.

○ 산업 및 경제시설

- 1984년 신평·장림 일반 산업단지를 최초로 2017년 3월까지 20개소, 총 2,768만㎡의 산업단지를 확충하였음. 현재 14개소 1,400만㎡를 건설 중이며 7개소 1,116만㎡를 더 조성하기 위하여 입지 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 중임.
 - 동부산권은 ‘센텀시티’, ‘회동석대첨단산업단지’, ‘센텀2지구’ 등 융·복합 첨단 도시를 건설하고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개발로 아시아 의료허브 도시를 조성하여 인근에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부산 관광단지와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서부산권은 낙후된 공업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상 스마트밸리 건설’, ‘국제물류 중심지’, ‘친수·친환경 에코델타시티’, ‘과학연구단지’ 등 전략산업 위주의 대규모 단지 조성 추진
 -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4개 단지, 1,400만㎡이고, 향후 조성 계획이 된 산업단지는 7개 단지로 1,116만㎡ 규모임.
- 노후화된 공업지역(산업단지) 중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기본구상 수립), 사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 등 재정비 사업도 진행 중임.

○ 기타 시설(문화/복지/관광시설 등)

- 문화시설은 부산시립미술관 등 총 32개소의 갤러리와 부산과학체험관 등 18개의 전시 공간, 가온아트홀 등 총 37개소의 공연장, 롯데시네마 대영 등 총 23개의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체육시설 중 경기장은 종합운동장,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영도사격장이 있으며 경기장별 성능 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공원시설은 총 1,001개소이며, 어린이공원이 44.2%(4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공원 32.6%, 근린공원 16.7% 순으로 나타남. 향후 시민의 삶의 질 제

2.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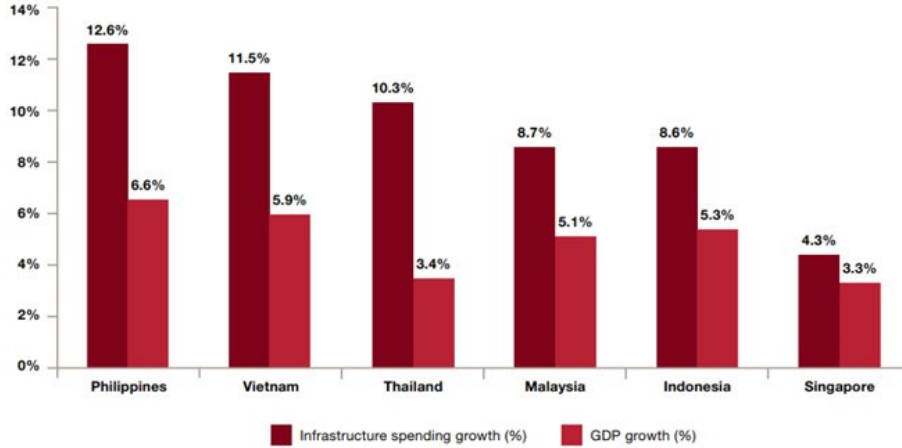
고를 위한 인프라 확대 필요

- 구별 공원 현황은 강서구가 25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장군 213개소, 북구 79개소 순

3.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 사례

- 주요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국내와는 반대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인프라 투자의 비중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독일의 경우 2014년에 인프라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6년 인프라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인프라 투자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 및 인프라 개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총생산 성장률 대비 인프라 투자 성장률이 1~6.9% 정도 높은 수준
 - 2017년 Oxford Economics의 World Bank Data 분석에 의하면, 개발도상국(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총생산 성장률(GRDP)보다 인프라 투자 성장률이 3.3~6.9%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인프라 경쟁력 5위 수준인 싱가포르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투자 성장률이 1%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필리핀 6%, 베트남 5.6%, 태국 6.9%, 말레이시아 3.6%, 인도네시아 3.3%, 싱가포르 1%[PwC 내부 자료(Capital Projects and Infra-structure : Mega Trends and SMART Cities), 2018년]

-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인프라 투자 성장률이 총생산 성장률보다 2~3% 정도 높아질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 규모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자료 : PwC 내부자료, 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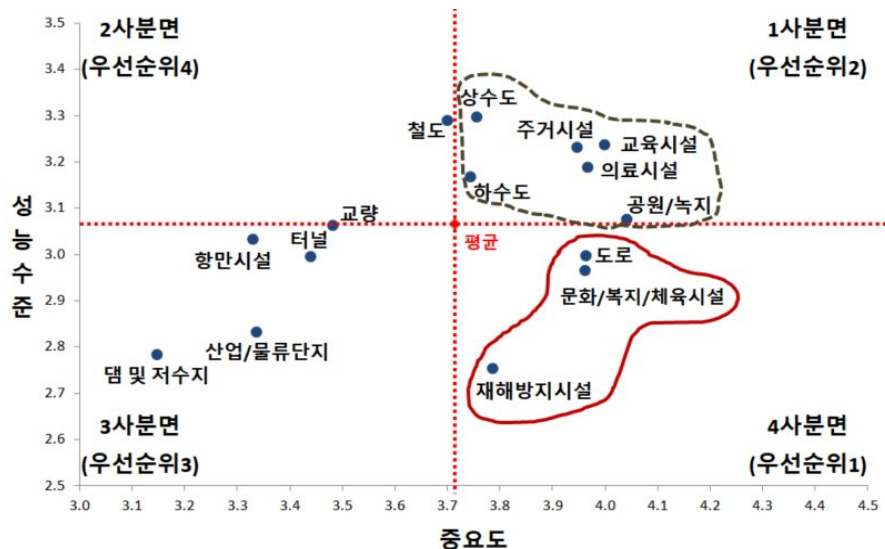
4. 지역주민 설문조사 분석

- 총 552명의 부산시민에게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 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2~3월 동안 설문을 실시하였음.
 - 남성 293명(53.1%), 여성 259명(46.9%), 연령별은 20대 8.9%, 30대 25.9%, 40대 34.1%, 50대 20.8%, 60대 10.3%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또한, 인프라 투자 정책 평가, 자원 확보 방안, 시설물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설문도 함께 실시하였음.
 - ※ 지역주민은 비전문가로, 인식 및 의견 측정에 유용한 5점 척도를 활용
-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투자 수준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시설물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공원/녹지시설이 최대 5점 중 4.04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댐 및 저수지는 3.15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성능 수준의 경우 상수도시설이 3.30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재해방지시설(2.75)은 보통(3.00) 이하로서 성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노후도 및 안전도에 대한 의견은 철도시설의 경우 3.32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안전도는 2.97로서, 조사된 시설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와 '성능 수준'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순위1: 중요도는 높으나 성능수준이 낮아 신규 인프라 투자가 시급한 시설물로 도로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재해방지시설이 있음.
 - 우선순위2: 중요도와 성능수준이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그룹에는 상하수도, 공원/녹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거시설이 속함.
 - 우선순위3: 중요도와 성능수준이 평균값보다 낮은 해당 그룹의 시설물로 항만시설, 터널, 댐 및 저수지, 산업/물류단지, 교량시설이 조사됨.
 - 우선순위4: 상대적으로 성능수준이 중요도보다 높은 그룹으로 투자 확대의 시급성이 4순위에 해당하는 시설물로는 철도시설이 있음.

그림 2-2

부산시 인프라
시설물
중요도-성능수준
비교 결과



-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와 안전 수준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순위1(4사분면): 중요도는 높으나 안전도가 취약한 시설물로 노후 인프

- 라 투자자가 가장 시급한 시설물로 재해방지시설, 하수도, 도로시설이 있음.
- 우선순위2(1사분면): 중요도와 안전도가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그룹으로 공원/녹지,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상수도가 있음.
- 우선순위3(3사분면): 중요도와 안전도가 모두 평균값보다 낮은 그룹으로 항만시설, 댐 및 저수지, 산업/물류단지, 터널이 이 그룹에 속함.
- 우선순위4(2사분면): 상대적으로 안전도 수준이 중요도보다 높은 그룹의 시설물 유형으로 철도시설이 이 그룹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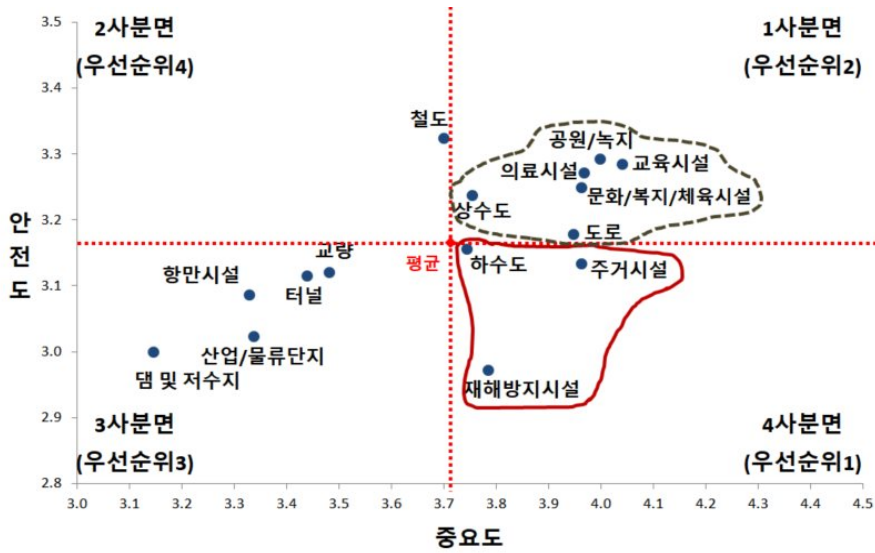


그림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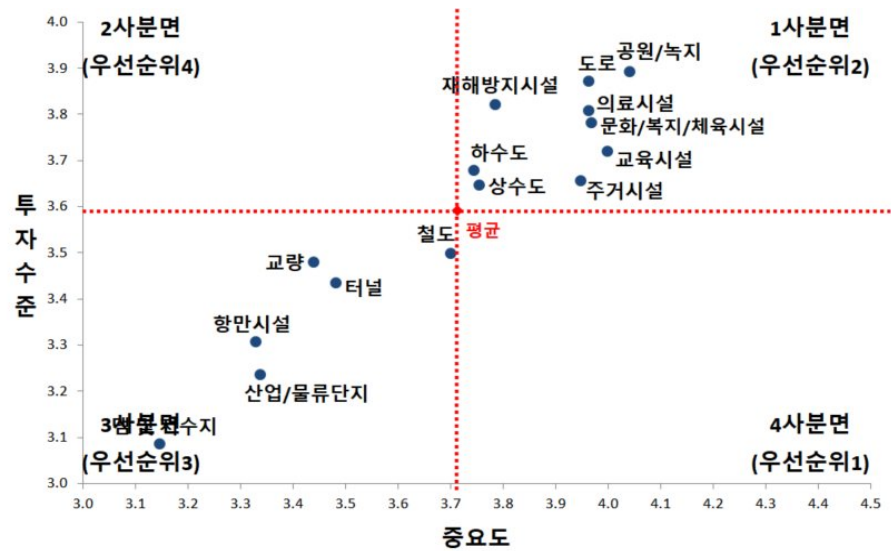
부산시 인프라
시설물
중요도-안전수준
비교 결과

-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와 투자 수준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우선순위1(4사분면): 중요도는 높으나 투자 수준이 낮기에 향후 투자가 시급한 시설물로, 설문조사에서는 도출되지 않아 지역주민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우선순위2(1사분면): 중요도와 투자 수준이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그룹으로, 의료시설, 공원/녹지, 문화/복지/체육시설, 재해방지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상수도, 하수도, 주거시설이 이 그룹에 속함.
- 우선순위3(3사분면): 중요도와 투자 수준이 모두 평균값보다 낮은 그룹으로 댐 및 저수지, 항만시설, 터널, 교량, 철도가 이 그룹에 속함.
- 우선순위4(2사분면): 현 투자 수준이 중요도보다 높은 그룹으로 분석 결과가 이 그룹에 속한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그림 2-4
부산시 인프라
시설물
중요도-투자수준
비교 결과



-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민의 삶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요도, 안전성, 투자에 대한 시급성 기초조사 결과는 부산시의 인프라 자원 확대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음.
- 부산시 인프라 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는 ‘보통이다’는 의견이 약 60% 수준이고, 자원 확보 방안은 중앙정부 또는 상위 기관의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절반 수준(48.9%)으로 조사되었음. 향후 인프라 운영 재원의 일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면 분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5.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및 핵심 프로젝트

-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다복동 사업’,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북항 재개발 사업’,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 사업’,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 ‘에코델타시티 사업’,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등과 2018년 이후 착공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약 3조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 재원이 더 필요한 실정임.
 - 부산 지역 인프라 투자의 주요 공공 재원은 국비와 시비로 충원되고 있음.

하지만 국비 및 시비의 최근 평균 재원 규모는 4조원 미만으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계획된 프로젝트의 총사업비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 재원으로 부산지역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 재원 조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유인 방안이 절실한 실정임.
- 2018년 착공이 계획된 교통시설, 물관리시설, 산업 및 경제시설, 주거 및 교육시설,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121개 사업, 17.5조원의 투자 소요가 필요함. 부산지역 인프라 실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트렌드, 부산 지역 인프라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를 단·중·장기 사업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7장> 참조).

구분	단기 핵심사업		중기 핵심사업		장기 핵심사업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교통시설	13	7.52조원	6	1.53조원	9	0.16조원
문화/관광/체육시설	2	0.26조원	7	0.52조원	8	0.1조원
물관리시설	9	1.2조원	11	1.23조원	7	1.31조원
산업/경제시설	4	4.2조원	9	1.72조원	10	0.35조원
주거/교육시설	6	0.45조원	15	0.46조원	5	0.05조원

표 2-1
부산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 ※ 교통시설 : 도로, 터널, 교량, 항만, 지하철, 도시철도, 공항, 터미널/주차장 등
- ※ 물관리시설 : 상하수도, 환경개선사업, 재해방지, 댐 및 저수지 등
- ※ 산업 및 경제시설 : 산업단지, 물류시설, 전통시장 등
- ※ 주거 및 교육시설 : 주거단지(도시재생), 교육(학교, 도서관 등)시설 등
- ※ 문화/관광/체육시설 : 의료시설, 공원/녹지, 안전시설 등

- 지역민 수요와 정책 계획을 바탕으로 종합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칭) 포괄적 도시재생 하수도사업’이 포함됨. 부산지역의 하수관로 노후화가 가장 심하고, 보급률이 전국 평균 수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향후 3,000km의 하수도 설치 사업이 필요함.
- 환경부의 2015년 하수도 통계를 살펴보면, 하수관로 보급률의 경우 전국 평균은 79.9%인 반면 부산지역은 60.4%로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수도사업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실정임.

2. 부산광역시

- 2010년 이후 부산지역에서 완료된 하수관로 사업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km당 9.5억원의 공사비가 추정되어 전국 평균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약 2.8조원 이상의 인프라 투자 재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 2017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인프라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활용하면, (가칭)포괄적 도시재생 하수도 사업에 의해 약 4만 1,700 명의 일자리 추가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부산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인프라 확충’, ‘인프라 노후화 대비 유지 보수’, ‘재해·재난에 안전한 인프라 구축’, ‘인프라 사각지역 해소’, ‘글로벌 해양 산업도시로 도약’, ‘도시재생 및 광역 도시화’ 방향에 따라 핵심 인프라 사업을 단·중·장기적으로 분류하여 시설물별/행정구역별 배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됨.
- 교통시설의 경우 사업 건수 및 투자 규모가 서부산(강서구 등)에 집중되어, 향후 노후화 대응 및 지역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균등 투자가 필요함.
 - 문화/관광/체육시설의 경우 동부산(기장군 등) 중심으로 투자 계획이 집중되어 구도심의 복지성 인프라 투자 계획 및 프로젝트 발굴이 중요함.
 - 물관리시설의 경우 원도심 중심으로 투자 계획이 집중되어 있어, 인프라 사업 추가 발굴을 확대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과 안전성 제고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산업/경제시설의 경우 사업 건수는 부산지역에 고루 계획되어 있지만, 대규모 산업단지 사업은 서부산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음.
 - 주거/교육시설의 경우 서부산(강서구)과 동부산(기장군) 중심으로 투자 계획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구도심에 집중된 주거시설의 분산을 고려한 계획임.

6.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2018년 중앙정부의 SOC 총예산(17.7조원) 중 부산 지역에 배분되는 평균 비중은 약 7.1%로 평균 1.26조원 수준임. 그리고 부산시 전체 예산 규모 중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예산의 평균 비중은 16.7%이며, 평균 총 가용재원은 3.38조원으로 조사됨.
- ‘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의 비중은

11조 9,991억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비중이 6.6%(0.79조원), 수송 및 교통 예산 비중은 10.1%(1.21조원)임.

- 지역경제 경쟁력 및 시민의 삶의 질/안전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성능개선(노후화 예방) 사업에 재원 배분을 늘려 긍정적 파급효과를 향상시켜야 함.
-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우도 총생산 성장률 대비 인프라 투자 성장률이 높은 추세로 부산시의 경우 총체적 검토가 필요함.
 - 2010~15년 부산시 인프라 투자 평균 성장률은 약 2%, 총생산 성장률은 4.6%로 최근 국토 및 도시개발 트렌드와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2008~2017년 동안 부산시 총생산 성장률(GRDP)은 인프라 투자 성장률보다 평균 4~5%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이는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의 절실함을 시사하고, 투자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수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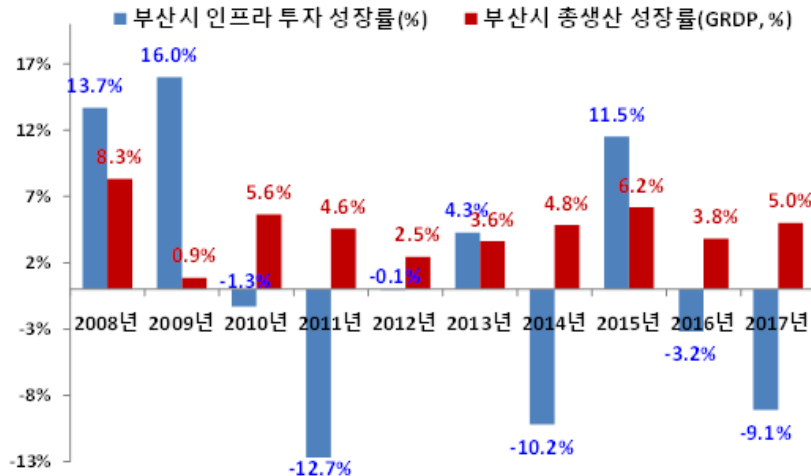


그림 2-5

부산시 인프라 투자 성장률(%)과 총생산 성장률(%) 비교

- 중앙정부 및 상위 지자체의 인프라 재원 지원 한계를 극복하면서 부산시의 인프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6대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의 인프라(SOC) 지원 재원의 적정 증가 수준 유지
 - 국토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 재원 성장률(%)을 국가총생산 성장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역별 현실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

2.

부산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인프라 투자 자원 확대
 -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²⁾는 2003년 56.3%에서 2017년 51.1%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지자체 예산 중 인프라 부문에 대한 배분 확대로 균등의 원칙보다 지역민의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우선적 투자 필요
 - 지자체의 지역 인프라 개발의 필요 자원은 장기자금 형태로 소요되므로 지방채의 발행을 효율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는바,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방채 발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방안 모색
 - 공적 자원의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프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프라 사업 기획 및 발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인프라 노후화 대응은 지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능 보강사업의 지속적 발굴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함. 이는 도시계획의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연속적인 투자 자원 지원 방안 마련
 - 유동 인구, 고령화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도시의 재생사업 활성화, 지자체의 자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함.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TIF³⁾) 도입 검토 등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공공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함.
- 인프라 관리 체계 구축 후 실행력 강화
 - 서울, 대구, 전남을 비롯하여 부산시에서도 2017년 11월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 촉진 조례가 제정되었음. 조례 제정 후 실질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성능 개선이 가능한 현실적 실행력 확보가 필수

2)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자체수입/지자체 예산 규모×100%.

3) TIF는 특정 지역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공 재원을 그 지역이 개발되었을 경우 발생하게 될 미래 세수의 증가분을 활용하여 조달하는 방법임.

별첨 1. 진행 중인 인프라 프로젝트 현황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사업

구분	내용
규모	1,477,907㎡(447천평)(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릉리 일원)
사업비	3,512억원
추진 현황	2017년 : 1단계 산업단지 분양, 산단 보상 완료 및 공정률 60% 이상 2018년 : 산단 1단계 준공 2019년 : 산단 2단계 준공
사업 기간	2010~19년
기대 효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선 의·과학 연구시설을 집적한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방사선 의·과학산업을 선도해 나갈 중심지로 기대
사업 단지	

-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 Fab시설 및 연구시설 구축으로 파워반도체 업체 육성 및 유치


2.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

구분	내용
규모	도시철도 7개 노선 82km
사업비	3조 8,061억원
추진 현황	하단~녹산선, 강서선, 정관선, 송도선, 기장선, C-bay~Park선, 신정선 건설을 담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최근 국토부로부터 확정·승인 받음(2017.6.16.)
노선별 사업 규모	하단~녹산 : 경량전철(14.4km) 대저~명지오션시티 노선 : 노면전차(21.3km) 월평리~좌천리 노선 : 노면전차(12.8km) 자갈치역~장림삼거리 노선 : 노면전차(7.3km) 안평역~일광지구 노선 : 경량전철(7.1km) 중앙동~부산시민공원 노선 : 노면전차(9.1km) 노포역~월평리 노선 : 경량전철(10km)
기대 효과	부산 전역이 거미줄 철도망을 갖추게 되어 도시철도 수송 분담률이 현재 17.6%에서 23.5%로 증가 부산 전역에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현재 15%에서 27%로 확대
사업 노선	 <p>부산 신설 도시철도 구축망 계획</p> <p>The map displays the proposed urban rail network in Busan, South Korea. It features several key lines: the Haddan-Noksan Line (green), Gyangseo Line (red), Jeonggwan Line (orange), Songdo Line (purple), Gijang Line (yellow), C-bay~Park Line (blue), and Shinjeong Line (dark green). Stations are marked with circles, and some lines are labeled as '노면전차' (light rail) or '경량전철' (light rail). The map also shows existing lines like the Busan Subway and Busan Inland Sea Expressway.</p>

-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노선중심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변경됨.

○ 부산신항 개발사업

구분	내용
규모(위치)	45선석(강서구 가덕도 북안, 창원시 진해구 용원·웅동·제덕만 일원)
사업비	16조 6,823억원(국비 : 74,551억원, 민자 : 92,272억원)
추진 현황	정부투자: 안벽 5선석, 소형선부두 0.6km, 방파제 3.89km, 호안 35.341km, 도로 29.325km, 철도 53.118km, 부지조성 및 준설 1식 민간투자: 컨테이너 36선석, 다목적부두 등 4선석, 소형선부두 0.6km, 도로 15.26km, 유류중계기지 1식, 수리조선단지 1개소
사업 기간	1995~20년(26년)
기대 효과	동북아 환적허브항만 도시
사업 구간	

- 부산시 항만(계류시설) 중 경과년수 20년 이상인 시설물은 1종 5개소, 2종 15개소로 조사됨.
 - 부산시 항만(계류시설)의 안전진단 실시 시설물 중 A등급은 2.7%에 불과하고, B등급은 89.2%로 조사됨.
- 부산항 신항은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항만(Hub-Port) 조성을 위한 항만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개발 중
 - 부산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항 건설기간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 45선석 중 23선석을 조기 완공·개장하여 현재 운영 중

2.
부산광역시

○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 사업

구 분	내 용
면적(위치)	3,662,725㎡(기장군 기장읍 대변·시랑리 일원)
사업비	4조원(공공 : 1.2조원, 민간 : 2.8조원)
추진 현황	1, 2단계 사업 완료 후 3단계 추진 중(테마파크 수목이식공사 착공)
사업 기간	2006~19년
기대 효과	부산의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산업과 시너지효과로 산업의 재창출
사업 위치	

- 개발 목표, 배경, 방향

- 목표 : 사계절 체류형 명품 복합해양레저도시
- 배경 : 새로운 관광 니즈 대응, 국제적 관광거점 조성, 부산발전 10대 비전 사업
- 방향 : 테마파크를 통한 꿈과 이상의 실현 공간,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한 고품격 Wellness Resort

○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사업

구 분	내 용
면적(위치)	33km ²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 일원)
사업비	11조원
추진 현황	서낙동강 서벌(1단계): 부산시 자체 개발(33km ²), 우선사업 시행구간 착공 서낙동강 동편(2단계): 국가정책사업 추진 중
사업 기간	2008~20년
기대 효과	부산경제 중흥의 기틀 마련과 동남 광역경제권 재도약 기반 조성 고용유발효과: 전국 87만 6천명, 동남권 61만 7천명 생산유발효과: 전국 78조원, 동남권 53조원
사업 구간	

- 개발 방향

- 목표 : 항만배후 미래형 국제산업물류도시
- 유치 기능 : 복합물류단지, 광역산업단지, 지식창조도시 조성
- 기반 인프라 : 신항만(30선석), 국제공항, TSR/TCR 터미널 등

2.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 에코델타시티 사업

구 분	내 용
규모	66만㎡(산업용지 36만㎡)(강서구 명지·대저2·강동동 일원)
사업비	5조 4,336억원
추진 현황	1단계 1공구 조성공사 공정률 62% 진행 중 1단계 2공구 조성공사 공정률 66.6% 진행 중 1단계 3공구 조성공사 공정률 65% 진행 중 2단계 1공구 조성공사 공정률 39% 진행 중 2단계 3공구 조성공사 착공(2017년 8월)
사업 기간	2015~18년(사업기간 변경 예정 : 2015~23년)
기대 효과	인구 약 7만 5천명 수용, 주택 약 3만 세대 공급
사업 조감도	

- 친수 환경 중심의 문화/레저 특화구역 지정 예정으로 향후 수변 문화/레저의 거점으로 구축 추진 중
 - K-water(80%), 부산도시공사(20%) 분담

○ 부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 분	내 용
규모	516,062㎡(4개 위치)
사업비	1,153억원
추진 현황	베리베리 굿 봉산마을 복덕방(우리동네 살리기형) : 2018년 착수 안녕한 천하마을(주거지원형) : 2018년 착수 구포이음(중심시가지형) : 2018년 착수 래추고(來追古)! 플러싱(일반근린형) : 계획 중
사업 기간	2018~21년
기대 효과	활환경개선/주거재생사업 및 마을 일자리 재생/마을공동체 재생 인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및 마을 자생력 향상 소상공인 소득 증대 기대
사업 권역별 위치	

- 기존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6개 구(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금정구, 동래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를 대상으로 3개 권역(32개동)을 추가하여 사업 권역 확대
 - 봉래산 권역(8.4km) 7개 동, 황령산 권역(6.3km) 11개 동, 금정산 권역(12.7km) 14개 동

2.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 분	내 용
규모	10,444천㎡(3개 권역, 9개 사업구역)
사업비	1,500억원
추진 현황	영주·초량 구역 : 완료 아미·감천 구역 : 완료 범일·범천 구역 : 완료 좌천·수정·주례 구역 : 완료 충무 구역 : 완료 가야·개금 구역 : 60% 대신·학장 구역 : 계획 중
사업 기간	2011~20년
기대 효과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권역별 위치도	<p>주례(2014) 가야·개금(2016) 범일·범천(2013) 좌천·수정(2014) 대신(2018) 영주·초량(2011) 보수(2017) 아미·감천(2012) 충무(2015)</p> <p> 주례-개금구역 가야구역 범일-범천구역 수정-좌천구역 초량-영주구역 보수구역 대신구역 아미-감천구역 충무구역 </p>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 간 50조원의 투자로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부산시는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총 4곳이 선정됨.
- 2018년 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안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

○ 만덕~센텀 대심도도로 건설

구 분	내 용
규모	9.6km
사업비	7,832억원
추진 현황	2018년 12월 착공 예정
사업 기간	2018년 10월 : 실시설계 2018년 12월 : 공사 착공 2023년 12월 : 준공
기대 효과	현재 40분대 소요 시간을 10분대로 단축 내부순환도로 연결성 확보

사업 위치



- 공공/민자 협력 사업으로, 만덕대로와 총렬대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동/서 부산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2.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 김해신공항~해운대 대심도 지하 고속도로

구 분	내 용
규모	22.8km
사업비	2조 188억원
추진 현황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기간	2018~20년 :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2021~26년 : 공사 준공
기대 효과	김해신공항 접근성 확보 80분에서 30분으로 유동 인구 확보 및 지역 활성화 제고
사업 위치	

- 국토연구원 등 관련 5개 기관의 사업 타당성에 긍정적 의견을 확보하여 기본 계획 수립 등 2018년 추진
- 국토교통부는 2018년 상반기 KDI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김해신공항

구 분	내 용
규모	3,000,0000m ²
사업비	5조 9,600억원
추진 현황	기본계획 수립 중(2017~18년)
사업 기간	2018~20년 : 기본 및 실시설계 2021~26년 : 공사 착공 2026년~ : 개항
기대 효과	여객처리능력 : 1,733만명/년에서 3,800만명/년 운항 횟수 : 15만 2,000회/년에서 29만회/년
사업 위치	

-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대신 김해국제공항에 새로운 활주로의 신설 결정, 사업을 김해신공항으로 명명함.
- 2016년에 1,490만명을 돌파해 2015년의 1,238만명 대비 20.3%의 성장세를 보임.

2.
부산광역시

별첨 2. 주요 신규 및 성능 개선 인프라 프로젝트

- 교통시설: 도로, 터널, 교량, 항만, 도시철도, 철도, 공항, 주차장 등
- 28개 사업, 15조 1,357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계획(예정) 공사비
1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	251
2	김해신공항 개발사업	39,000
3	식만~사상간(대저대교) 도로 건설	3,956
4	북항 마리나 건설	500
5	북항재개발2단계(자성대 부두) 개발	14,907
6	감천항 항만_물류 기능 확보를 기반시설 확충	100
7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5,417
8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10,477
9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18,917
10	부전역 복합환승역 개발_(대통령 공약)	4,604
11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고속국도(송정IC_동김해JCT)	8,251
12	만덕~센텀 대심도 건설사업(민:75%)	7,832
13	김해신공항~해운대 지하고속도로	20,188
14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780
15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	1,799
16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개발	1,600
17	대변항 다기능어항	981
18	도시철도 강서선(트램) 건설	5,241
19	남구지역 도시 재생 위한 트램	4,966
20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277
21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	31
22	중앙버스전용차로 2차 사업(2단계)	260
23	중앙버스전용차로 2차 사업(3단계)	210
24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269
25	그린주차사업	16
26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130
27	미음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380
28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 회차로 연결사업	17
계		151,357

- 물관리시설: 상수도, 하수도, 환경개선시설, 재해방지, 댐 및 저수지 등
 - 27개 사업, 3조 8,449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계획(예정) 공사비
1	동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337
2	동부산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로 설치	230
3	하수관로 신설(동삼·청학동 일원)	304
4	하수관로 신설(사상구 제척지 일원)	228
5	도심대형재래시장 하수관로설치(국제·부평시장)사업	161
6	(가칭) 포괄적 도시재생 하수관로 설치사업(1단계)	9873
7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90
8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194
9	고향의 강 조성 및 하천 정비사업	155
10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90
11	하수관로 확충(양정동일원)사업	330
12	남항수제선(방재호안) 정비사업	460
13	해운대처리구역 송정이송관로 설치사업	101
14	하수관로확충(미포·청사포 일원)사업	271
15	하수관로 확충(보덕포 일원)	220
16	하수관로 확충(동천수계 일원)	279
17	(가칭) 포괄적 도시재생 하수관로 설치사업(2단계)	9,873
18	남항수제선(방재호안) 정비	458
19	광안리해수욕장 비점오염저감 사업	83
20	감천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150
21	수영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사업	45
22	상수원보호구역 관로정비 및 신설	112
23	하수관로 정비(전포·범천·문현분구, BTL)사업	891
24	하수관로 정비(중앙·초량·범천분구, BTL)사업	825
25	하수관로 정비(중앙·초량·범천분구, BTL)	825
26	하수관로 정비(전포·범천·문현분구, BTL)	891
27	(가칭) 포괄적 도시재생 하수관로 설치사업(3단계)	9,873
계		38,449

2. 부산광역시

- 산업 및 경제시설: 산업단지, 물류시설, 전통시장 등
- 22개 사업, 2조 3,221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계획(예정) 공사비
1	세계적인 「부산극지타운」 조성사업	1,627
2	제2쇄빙선 및 연구조사선 전용부두 조성사업	1,510
3	STEM빌리지 조성(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 컨트롤 타워) 대통령 공약사업(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 혁신센터, 해양슈퍼컴퓨팅 전문센터, 해양빅데이터센터 건립)	342
4	정부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	709
5	금곡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606
6	해양플랜트인력개발센터(ODC) 건립사업	200
7	One-Stop 공동물류센터 조성	1,976
8	신항 LNG병커링 기지 조성	6,006
9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6,000
10	해운대 거점 마리나사업	836
11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277
12	수산식품클러스터 Head Tower 조성	1,097
13	농업기술센터	200
14	원전 부품·설비 통합인증센터 건립	129
15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건립사업	195
16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27
17	패션비즈센터 구축사업	300
18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1,729
19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구(우암부두) 조성사업	277
20	미래해양자원 응용기술 실용화센터 설립	130
21	해상낚시 복합타운 조성사업	605
22	영도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19
23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	51
	계	26,602

- 주거 및 교육시설: 학교, 교육시설, 주차장 등
 - 26개 사업, 1조 33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계획(예정) 공사비
1	시청앞 행복주택 건립	2,949
2	아미4 행복주택 사업	825
3	학교내진보강사업	152
4	부산교육청 청사 증축	68
5	부산도서관	474
6	부전도서관	451
7	(가칭)명지1초 신설사업	226
8	(가칭)명지2중 신설사업	265
9	(가칭)명지3중 신설사업	266
10	(가칭)명지4초 신설사업	275
11	(가칭)명지5초 신설사업	278
12	(가칭)센텀2초 신설사업	331
13	(가칭)연포2초 신설사업	285
14	(가칭)온천2초 신설사업	437
15	(가칭)일광1초 신설사업	236
16	(가칭)일광2초 신설사업	175
17	(가칭)일광중 신설사업	237
18	(가칭)한빛중 신설사업	68
19	명호초 증설사업	847
20	다목적강당 증개축	277
21	국회도서관 부산관	429
22	모라중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61
23	명지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198
24	(가칭)일광1유 신설사업	90
25	(가칭)일광2유 신설사업	65
26	(가칭)한빛중 신설사업	68
계		10,033

2. 부산광역시

2.

부산광역시

○ 문화/복지/체육시설: 복지, 의료, 공원 및 녹지, 관광, 안전시설 등
 - 17개 사업, 8,794억원

(단위: 억원)

사업명		계획(예정) 공사비
1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2,500
2	중부소방서 재건축	105
3	북항 재개발사업 친수공원 조성	820
4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건립	122
5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산업 육성센터 건립	137
6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2,000
7	육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1,030
8	명지지구 바이오열병합발전소 건설	800
9	고리1호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331
10	부산국제금융센터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200
11	부산 탁구체육관 건립	40
12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108
13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195
14	야구장 증설사업	11
15	서부산 수상레포츠센터 건립	150
16	순직선원 위령탑 이전	50
17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195
계		402

제3장 대구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단기적인 반등세를 보였으나,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심화, 노동시장 양분화/경직화, 수출시장에서 신흥국들과의 가격/기술경쟁력 격차 축소 등 누적된 문제로 인해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

연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7년
평균 경제성장률	10.47%	8.77%	7.13%	4.67%	3.12%

자료: 통계청 자료 가공

- 이러한 국내 현실 속에서 대구광역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중부경제권 핵심도시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점차 상실
 - 과거 고도성장기에 섬유산업을 토대로 국내 수출 1위의 경제도시로 부상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서해안 경제권과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부-울경 제권의 태동으로 대구시의 위상이 점차 약화
-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① 대구지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 ② 지역 주민들의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인, ③ 지역 내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모색/발굴하는 연구를 수행

표 3-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3.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 참고로 본 연구에서의 인프라란 사회기반시설을 넘어 “지역에서 생활/활동하는 주민/기업의 활동성을 규정짓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물적 시설의 총체”를 의미

그림 3-1

연구의 추진 개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포함)	① ②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인프라 현황에 대한 진단 프레임 구성 및 진단 의뢰	③ ④ ←	지역 인프라 현황에 대한 진단 및 지역 공무원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제출
대구광역시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의뢰 및 내용 검토	⑤ ⑥ ←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부여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⑦ ↔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연구보고서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2

연구보고서 구조 및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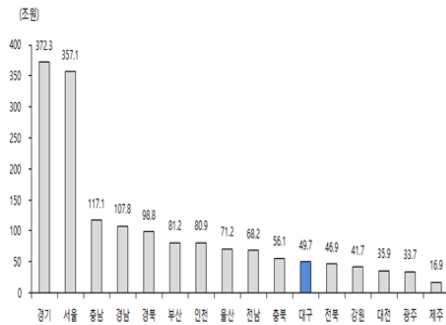
장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론, 기대효과 설명
제2장	대구지역 역내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여건 일반, ② 산업구조, ③ 고용/임금/역내 고용구조, ④ 인문·사회 지표, ⑤ 지방재정 현황, ⑥ 기타의 6개 부문으로 나눠 대구광역시의 역내 상황을 진단 위 일반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모습을 진단 최근 쇠퇴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위기적 모습을 ① 높아지는 지역 소멸 가능성, ②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③ 가속화되고 있는 고립·주변부화라는 3가지로 압축정리 대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
제3장	해외에서 적절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 쇠퇴 억제 또는 지역 발전을 이룬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제4장	가용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개별 시설물에 대한 인프라 투자방향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가 처한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인프라의 유형을 ① 물류 인프라, ② 산업기반 인프라, ③ 환경·재난 대응 인프라, ④ 도시생활 인프라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인프라의 과부족 정도를 진단
제5장	대구 인프라 투자 현황에 대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인프라 예산을 중심으로 투자 과부족 정도를 진단
제6장	대구 시민의 역내 인프라 상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7장	대구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결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류 인프라, ② 산업기반 인프라, ③ 환경·재난 대응 인프라, ④ 도시생활 인프라의 4개 영역에서의 사업제시
제8장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8개 과제를 제시

2. 지역발전과 인프라

1) 경제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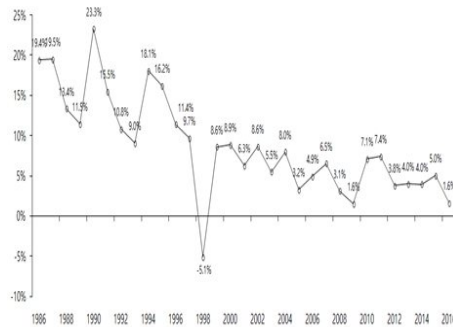
- 2016년도 기준 대구광역시의 지역총생산(GRDP)은 49.7조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동년도 기준 GRDP 성장률은 1.6%로 전국 최하위 수준

<전국 시/도 GRDP 비교(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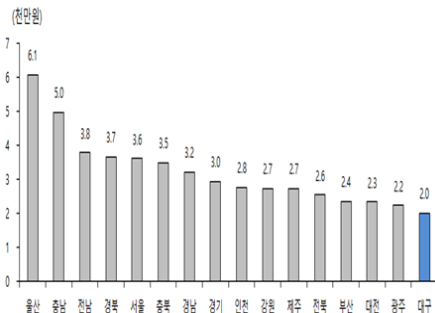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GRDP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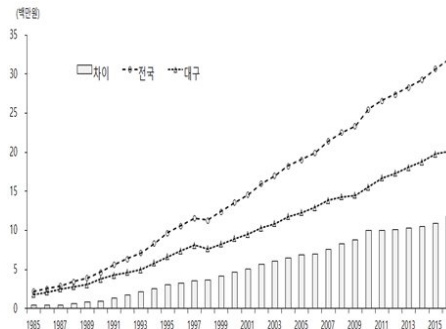
- 특히 대구광역시 1인당 GRDP는 2016년도 기준 2천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대구광역시와 전국 평균 1인당 GRDP의 차이는 벌어지는 추세

<전국 시/도 1인당 GRDP 비교 (2016년도 기준)>



자료: 통계청

<대구 vs 전국 1인당 GRDP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3.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2) 산업구조

- 대구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중심이고, 역내 제조업종은 기계운송장비/비금속 및 금속/섬유산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형성

표 3-3

대구시 산업별
생산액 비중
(2016년도 기준)

구분	전국(A)	대구(B)	차이(A-B)
제조업	29.2%	21.9%	-7.3%p
서비스업(주1)	59.9%	70.4%	10.6%p
건설업	5.8%	6.2%	0.5%p
기타(주2)	5%	1.2%	-3.7%p

주1: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 출판 등 정보서비스업, 문화·기타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공공 행정 일체 포함

주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농림어업, 광업 포함

자료: 통계청 자료 가공

표 3-4

대구시 제조업
생산구성 비중
변화 추이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6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전국 제조업	108.4	-	165.5	-	234.7	-	352.3	-	433.8	-
대구 제조업(주)	4.1	3.8	5.0	3.0	6.1	2.6	8.1	2.3	10.0	2.3
음식료품 및 담배	0.1	3.3	0.2	3.4	0.3	4.2	0.3	3.3	0.4	4.0
섬유 및 가죽제품	1.3	30.7	1.7	33.8	1.0	15.8	1.3	16.2	1.4	14.1
목재, 종이, 인쇄, 복제	0.3	7.3	0.3	5.4	0.3	5.4	0.4	5.1	0.4	4.2
석탄, 석유, 화학제품	0.2	5.9	0.4	7.2	0.6	9.5	0.7	8.7	0.9	9.1
비금속광물, 금속제품	0.7	15.9	0.8	15.4	1.4	22.5	2.0	24.3	2.4	24.4
전기, 전자, 정밀기기	0.3	6.2	0.4	7.3	0.9	15.6	1.1	13.4	1.2	11.7
기계 운송장비, 기타 제품	1.3	30.7	1.4	27.5	1.7	27.1	2.3	29.0	3.3	32.5

주: 전국 제조업 생산액 대비 비중, 단위는 각각 조원, %

자료: 통계청

- 특히 세계 경기불황,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대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구미와 포항 등 역내 거점 생산도시들도 급속히 쇠퇴하는 모습

<대구시 주력산업 성장단계별 비중>

업종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섬유	00	750	250
자동차부품	273	667	60
일반기계	279	639	82
디스플레이	56	722	222
철강	185	704	111
가전	200	700	100
무선통신기기	214	714	72
전산업 평균	215	663	122

자료: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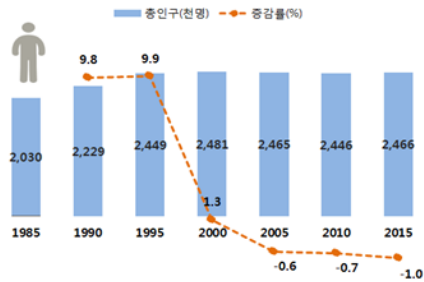
지역	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대구	달서	210	8,659
	달성	166	5,927
경북	경산	106	4,313
	경주	218	7,962
	영천	46	3,478
울산	울주	131	5,208
	북구	158	9,869

자료: 한국은행

3)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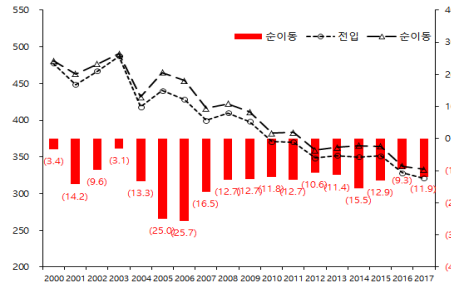
- 대구시의 인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고용여건 악화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도 심화

<대구시 총인구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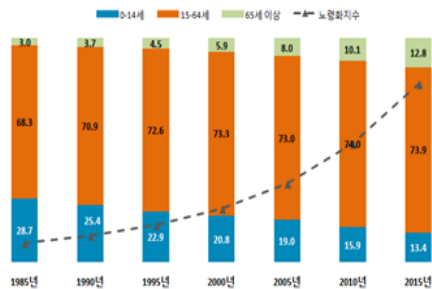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0년 이후 대구시 인구(천명) 전입/전출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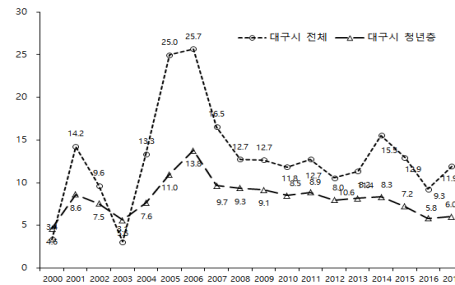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구시 인구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2000년 이후 대구시 인구(천명) 유출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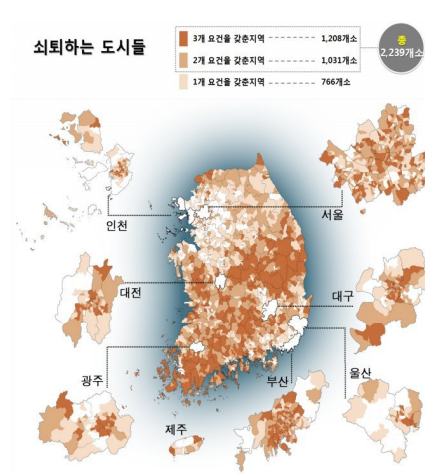
4) 지역쇠퇴

- 대구경북연구원(2016)에 따르면 대구시 내 재활성화가 필요한 '쇠퇴지역'은 전체 139개 읍/면/동 중 105개(75.5%)로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쇠퇴가 진행
 - 특히 중구와 서구, 남구에서 쇠퇴 경향이 뚜렷하며, 역내 대표 산업단지인 성서1차, 검단, 염색, 서대구공단, 제3공단 등은 조성 후 40년 이상이 경과,

노후화가 심각

- 또한 대구시민들의 소득/주거 빈곤 정도 역시 타 시도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지역쇠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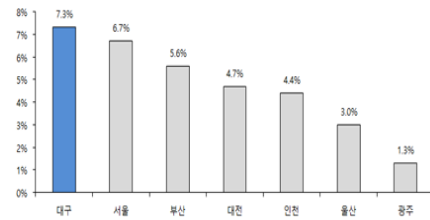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대구시 vs 전국 빈곤지표 비교>

구분	대구(A)	전국(B)	차이(A-B)
국민연금가입자비율	34.5%	41.2%	-6.7%p
기초생활수급자비율	3.8%	2.6%	1.2%p

자료: 대구경북연구원(21016)

<전국 광역도 주거빈곤율 변화>



자료: 뉴스1, "[국감브리핑] 대구 주거빈곤율 7.3%... 대도시 중 최악", 2017.10.18. 내용 참조

5) 기타

- 최근 대구와 가까운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중형급 지진이 발생했으며, 향후에도 대경지역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대구와 경북은 전국 시/도 중 지진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 반면 국내에서 건물에 내진설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고, 적용대상 역시 3층 이상/총 면적 500m²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됨으로써, 중형급 이상 지진 발생 시 상당수의 건물에서 큰 피해가 예상
 - 대구시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0곳 가운데 7곳은 내진설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



그림 3-2
경주/포항 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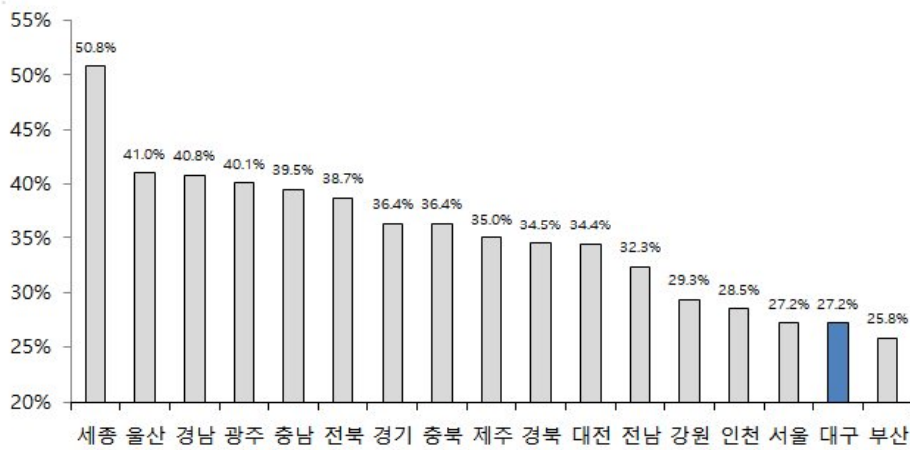


그림 3-3
전국 시/도
내진성능 확보율

자료: 배재현, 「우리나라 지진대응 관련 주요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17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의 데이터 가공

6) 지역 현실에 대한 진단 결과 종합

- 대구시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고용창출→주민 유출 억제) + 주민 생활안전 확보”라는 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수단의 하나가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프라 투자”
 - 인프라 투자가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사실
 - 또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심화되어 온 도시공동화 현상과 관련해,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핵심 조치가 바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도심 기능 복원/활성화

3.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그림 3-4

대구 지역 현실에
대한 진단 결과
종합

- ① [경기 침체 지속] 대구광역시 1인당 GRDP는 지난 20년간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
- ②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역내 산업기반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중심이고 제조기반 역시 저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소득 및 고용창출에 한계
- ③ [열악한 고용환경과 인구유출] 전국 시/도 중 실업률이 상위인 반면, 임금수준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고용환경이 극히 열악하며, 이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작용
- ④ [지역 쇠퇴 및 빈곤 가속화] 젊은 인구 유출로 역내 혁신역량이 점차 소실되고 있고, 동시에 주거/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인프라의 노후화가 심해짐으로써 지역쇠퇴 및 빈곤화가 가속화
- ⑤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대구시는 전국 대도시 중 지진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지역쇠퇴”, “중부경제권 중핵도시로서의 기능 약화”

대구광역시 중부경제권 중핵도시로서의 기능복원을 위한 효율적 인프라 투자 방안
모색 필요

3.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인프라와 지역발전 사이의 관계

- 최근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들도 인프라 투자 및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문제에 정책적 대응을 활발히 진행 중임.
 -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낙후된 도심재개발, 고속도로 등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할 방침
 - 일본도 2013년 ‘국토 강인화(強忍化) 계획’에 이어 2016년 ‘21세기 인프라 정비사업’ 등에서 노후 인프라 정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임.
-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국내와는 반대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의 비중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독일은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다음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인프라 사업 발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시와 포트머스(Portsmouth)시 터널 프로젝트
- 미국 워싱턴 D.C. 퍼플 라인(Purple Line) 프로젝트
- 프랑스 파리 마세나(Zac Massena) 재개발 사업
- 프랑스 파리 바티뇰(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사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

4. 대구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및 분석

1) 방법론

-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대구시의 일반 현황 및 위기적 모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① 대구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② 위기 원인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③ 지역 인프라 투자의 목표 도출 및 ④ 인프라 투자목표에 따른 인프라 유형 분류 그리고 ⑤ 동 분류에 기초한 인프라 현황 진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음.

- 위기원인과 대응전략, 인프라 투자 목표의 내용 설정은 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진의 1차적 진단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진의 피드백이라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음.

- 대구시 인프라 실태 진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다수의 목표와 수단이 연계된 문제에 있어, 목표와 수단의 중요성 평가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기법임.

3.

대구광역시

- AHP 방법론은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Saaty 교수가 1980년 자신의 논문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제안한 것으로, ① 다수의 목표, 다수의 평가기준, 다수의 의사결정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계층화해, ② 상위 계층에 있는 요소들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방식에 의해 각 요소들의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측정한 뒤, ③ 이를 토대로 모든 요소들의 종합점수를 계산해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의사결정방법론임.
- AHP 기법은 현재 60여 개 국, 2만여 개 정부·기관에서 이용할 정도로 일반화된 의사결정방법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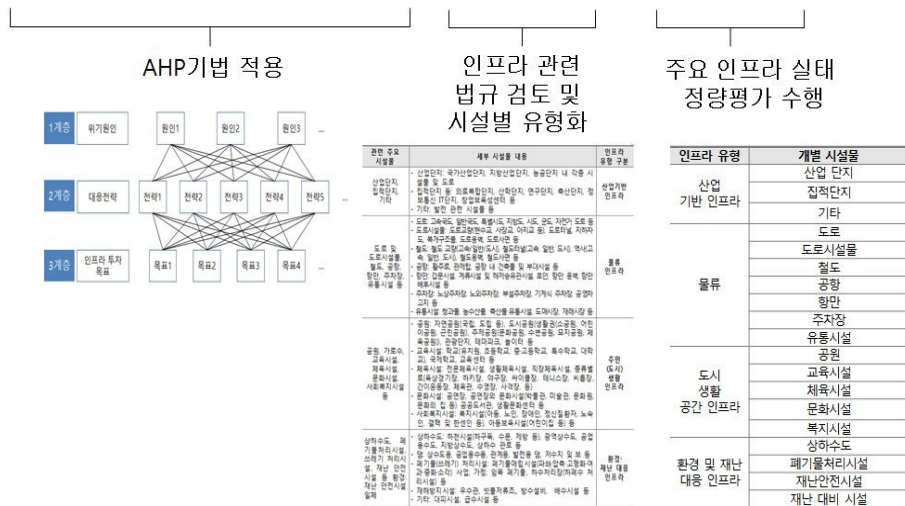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① [1단계] 위기원인 ▶ [2단계] 대응전략 ▶ [3단계] 인프라 투자전략 목표라는 계층구조를 설정하고, ② 각각의 단계에서 설정된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진들 간 반복적 검토과정을 거쳤음.
- 검토과정에서 수직적 논리일관성과 각 계층의 구성요소 간 ‘수평적 상호배타성’, ‘차원적 동질성’, ‘현상에 대한 포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대구시의 인프라 실태 진단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인프라 실태 진단 대상

위기 원인 → 원인해소 방안 → 투자 목표 → 인프라 유형 분류 → 인프라 현황 진단

그림 3-5

인프라 실태 진단 프로세스



2) 실태 진단 결과

(매우 충분: 5점, 충분: 4점, 보통: 3점, 부족: 2점, 매우 부족: 1점)

인프라 유형	개별 시설물	평가 기준별 점수			종합 평가
		양적 충분	질적 충분	선제적 확충	
물류	도로	3	2	2	보통
	도로시설물	3	2	2	부족
	주차공간	1	2	1	부족
	공항	1	1	1	매우 부족
	도시철도	2	3	2	보통
산업 기반 인프라	산업 단지	4	1	3	보통
	유통 기반 시설	2	2	2	부족
	기업 지원 시설	3	2	2	보통
	기타 산업 기반 시설	2	1	1	보통
환경 및 재난 대응 인프라	상수도	4	2	3	보통
	하수도	3	1	2	부족
	폐기물처리 시설	2	1	2	부족
	재난 대비 시설	5	3	3	충분
도시 생활 공간 인프라	주택	2	2	2	부족
	공원	1	2	2	부족
	교육시설	3	2	3	보통
	체육시설	1	2	2	부족
	각종 문화시설	2	2	2	부족
	복지시설	1	3	2	부족

표 3-5

인프라 실태 진단 결과

- 정량적 검토 결과 총 11개 유형의 인프라가 ‘부족’ 또는 ‘매우 부족’으로 판정
 - 물류: 도로시설물, 주차공간, 공항
 - 산업기반: 유통 기반 시설
 - 환경 및 재난대응: 하수도, 폐기물처리 시설
 - 도시생활공간: 주택, 공원, 체육시설, 각종 문화시설, 복지시설

① 도로시설물 부족 및 공항 수용능력 한계

- 지역 면적과 인구를 고려할 경우 대구시의 도로는 타 광역시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대구시는 국토면적당 도로면적과 도로 면적 모두 전국 여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며, 자동차당 도로 연장은 2.48(km/천 대)에 불과해 다른 도시의 교통수요와 비교 시 도로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구시의 교통 혼잡비가 최근 10년 내 연평균 4.39%로 증가하여 7대 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인 도로 환경이 악화 되어 온 것으로 판단됨.

3.

대구광역시

- 또한, 대구시는 등록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대구시의 2016년 기준 등록 차량대수는 1,130,811대인 반면, 주차면수는 996,083m²로, 134,728개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등록차량 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구와 경북지역의 유일한 관문공항인 대구국제공항은 조만간 수용능력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저가항공 유치 및 커류 타임 축소, 항공 물류수요 증가 등으로 이용객수와 화물 수송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 대구국제공항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⁴⁾

② 산업기반 인프라의 노후도 개선 시급

- 대구시 내 산업단지 중 상당부분이 1960~7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산업단지 내 녹지 및 도로용지, 주차장, 물품 적재 공간 등의 공용공간이 부족하며, 입주업체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의 부족·노후화 정도가 매우 심각함.⁵⁾
 - 또한 대구염색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오염으로 거주 주민들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음.⁶⁾

③ 유통시설의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투자 필요

- 대구에 입지한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은 총 194개소로, 전통시장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수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구시 등록시장 109개 중 20년 이상 된 전통시장이 40개(36.5%)에 달하며, 이들 시장에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투자 부족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가능성이 상존함.

4) TBC, “대구공항 곧 포화, 신규 취항 불가”, 2017.3.28. 내용 참조

5) 조혜영 외, 「대구시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방안」, 기획연구 2014-01,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p.29 이하 참조

6) 영남일보, “다시 불붙은 염색공단 이전”, 2014.4.4. 내용 참조

• 2016년 한 해에만 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4천7백억원에 이릅니다.

구분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전문점	등록시장	기타	계
개수	9	5	19	3	143	15	194

자료: 대구광역시, 「2017 시정현황」, 2017.에서 인용

표 3-6

대구시 유통시설
현황

연도	화재	사망	부상	인명피해(건)	재산피해액(천원)	재산피해액(천원)/건
2016	6	0	3	3	47,227,795	7,871,299
2015	4	0	0	0	1,879	470
2014	4	0	0	0	60,243	15,061
2013	6	0	0	0	11,631	1,939

자료: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데이터 가공

표 3-7

대구시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④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개선 및 노후 하수관로 현대화 시급

- 대구시 내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 1개소, ‘소각장’ 2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개소, ‘폐기물 에너지 화 시설’ 1개소로 총 6개소이며, 대구시 내 일부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대구시 하수관로의 총 연장길이는 5,809km로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노후 하수관로는 71.9%(약 4,178km)에 육박하며, 중대 결함으로 긴급 교체·보수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도 40km에 달함.
 - 그런데 이러한 대구시의 노후 하수관 비중은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노후 관로는 최근 지역 곳곳에서의 지반 함몰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⑤ 그 외 도시공원, 공공체육시설, 문화기반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문제

- 대구시 도시공원 확보율은 광역시 중 최하 수준으로, 7대 대도시 중 가장 낮음.
 - 대구 중구와 도시공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전남 강진(133.5㎡)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차이는 333.7배
 - 공원 부족현상이 심각함에도 장기미집행 공원은 48개소, 11.2㎢에 이릅니다.

3.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표 3-8

7대 광역시
도시공원 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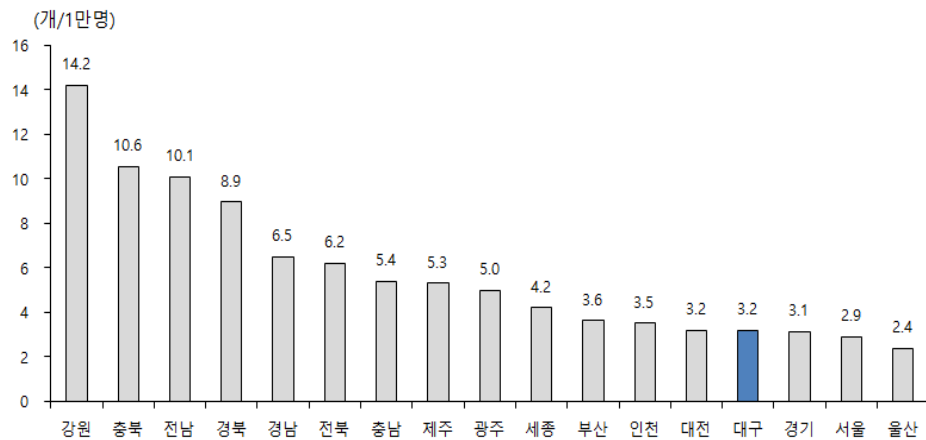
구분	시설수		면적		1인당 면적	
	개소	순위	면적(m ²)	순위	면적(m ²)	순위
서울	2,127	1	137,036,724	1	8.0	4
부산	1,001	3	62,410,285	2	5.7	6
대구	769	4	24,831,432	6	4.9	7
인천	1,155	2	44,156,886	3	11.3	1
광주	629	5	20,684,839	7	6.2	5
대전	590	6	25,200,640	5	8.6	3
울산	579	7	36,656,219	4	9.1	2

자료 : 통계청 자료 가공

- 대구시 내 공공체육시설로 분류·관리되는 시설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총 개수는 782개소(2016년도말 기준)로, 1인당 체육 시설 면적의 크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도 말 기준 인구 1만 명당 체육시설 수는 3.2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 4위권이며, 인구 1인당 체육시설 면적 수는 1.6m²으로 여타 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3-6

체육시설 개수
전국 시·도 비교
(2016년도 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16년 말 기준)」, 발간자료, 2017. 및 통계청 시·도 인구데이터 가공

- 2016년 기준 대구시 내 각종 문화기반시설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화기반 시설이 절대적인 양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분치 않음이 확인됨.
- 인구 백만 명 당 시설물의 수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대구시의 문화기반

시설 수는 여타 지방 광역시와 비교해서는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수준이나, 광역도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도서관 등 일부 문화시설에서 지역 인구대비 좌석 수, 연면적 등의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이 확인됨.

- 노인복지시설은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며, 특히 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는 현저히 더 적은 것으로 파악됨.
-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중점 추진 분야 및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인프라 부족 및 노후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유형	분야	추진 과제
도시	주택	도시재생을 통한 노후 주택의 개량
	복지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공원	정주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에 맞춰 공원 공급 확대
환경/재해	하수도	노후화된 하수시설의 조속한 교체
	소방	지진, 폭염 등 신규 재해/ 재난의 증가에 따른 대응체계 강화
물류	공항	공항확장 및 공항까지의 접근성 개선
	철도	도로 교통 정체 및 시설물 노후에 대비한 철도 운송부담률 증가
	도로시설물	주민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을 중심으로 개선·보강
산업	첨단산업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형 산업으로의 구조개편

표 3-9

대구시의 중점
추진 분야 및
과제

3.

대구광역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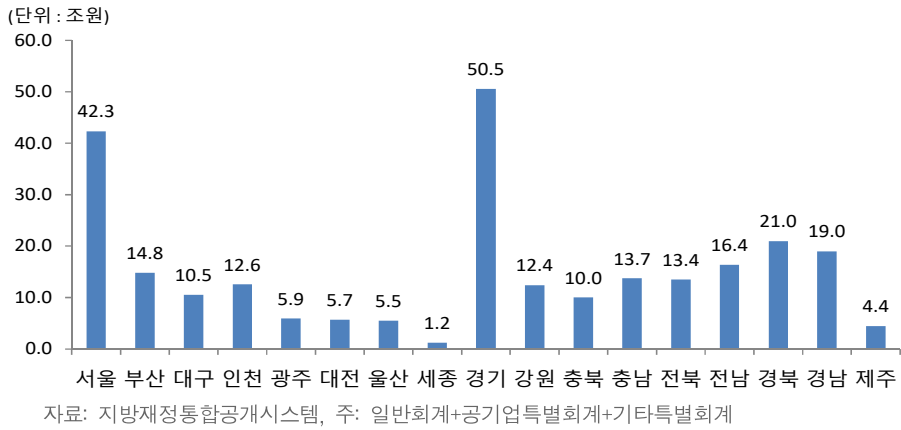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5. 지역 인프라 투자현황 진단

- 2017년 대구시의 예산 지출 규모는 10.5조원으로, 8개 광역 및 특별시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 인천 다음으로 큰 네 번째로 큰 규모로 중간 정도 수준임.

그림 3-7

2017년 전국 시도별 세출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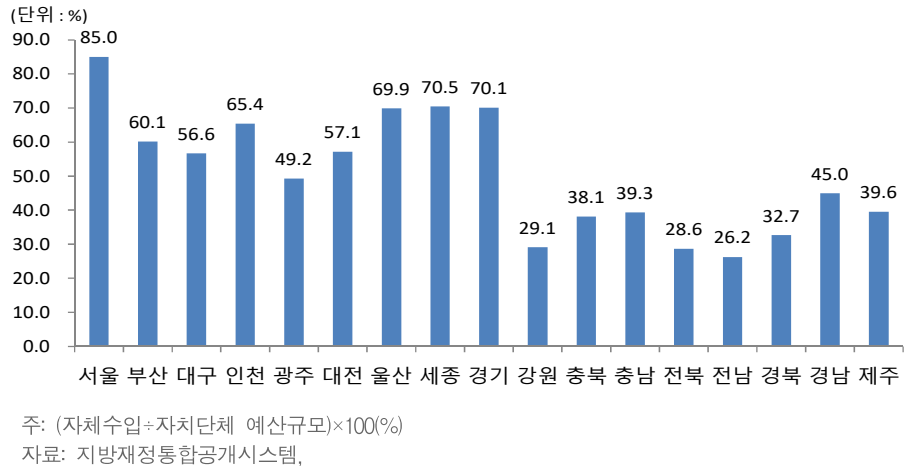


- 2008년 5.9조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2017년 10.5조원 수준으로 증가함.

- 대구시의 2017년 예산은 2008년도에 비해서 77.3% 증가하였음.
- 예전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이 되었지만, 광역 및 특별시를 기준으로 볼 때 광주 다음으로 낮은 편으로 다른 특별 및 광역시에 비해서 인프라 투자여력이 큰 편이 아님.

그림 3-8

2017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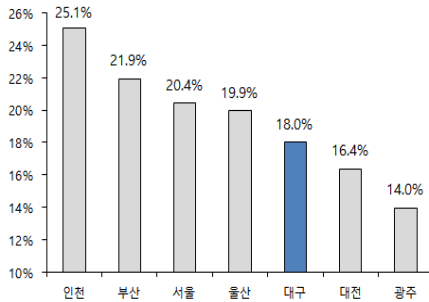
- 대구시 전체 예산 중 인프라 예산은 전국 광역시 중·하위권

-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대구시의 총 세출예산 중 인프라 예산의 평균 비중은

18% 정도로 7개 광역시 중 하위 3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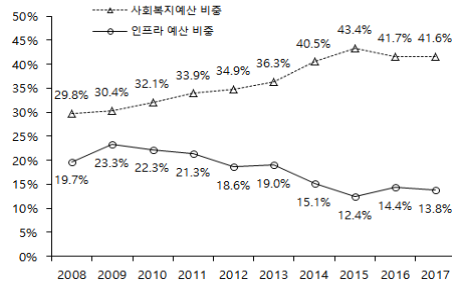
- 인프라 예산 비중은 2009년에 23.3%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는 13.8%를 기록
- 최근 10년 내 지역 인구 1인당 인프라 평균 예산금액은 전국 시도 중 최 하위권

<전국 광역시 총 예산 대비 인프라 예산 비중 비교(10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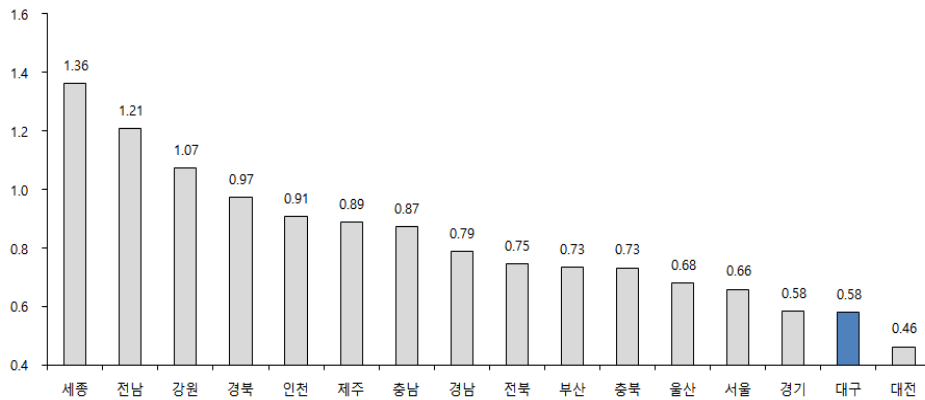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대구광역시 인프라/사회복지예산 비중 변동 추이>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백만원/천명)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통계청 자료 통합 가공

그림 3-9

전국 시/도 1인당
인프라 예산 금액
비교
(최근 10년 평균)

- 대구시의 예산을 5가지 지출 항목으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의 급격한 증가, 둘째 SOC 예산 위축을 들 수 있음.
- 대구시의 2017년 예산은 2008년도에 비해 77.3% 증가함

3.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2008년 1.8조원이었는데 매년 0.2~0.5조원 증액, 2017년에는 4.4조원을 기록함.
 - 2013~15년 사이에는 매년 0.5조원씩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2017년 4.4조원은 2008년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08년 27.5%에서 2015년 40.5%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최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SOC 예산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등락이 큰 편임.
 - 또한, 2008년 1.2조원 규모였던 예산은 2017년 1.4조원을 기록했는데, 다른 항목이 2008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데 비해 SOC 예산은 그만큼 증가하지는 못했음.
 - SOC 예산은 2008년 1.2조원에서 2011년 1.6조원으로 3년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 건설 사업을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이후 SOC 예산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11년 1.6조원에서 2015년 1.1조원까지 위축됨.
 - 이후 2016년 1.5조원, 2017년 1.4조원을 각각 기록함.

단위 : 조 원

표 3-10

대구시 지출
항목별 예산 변화
추이(2008~17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5.9	6.6	7.2	7.4	7.7	8.3	8.7	9.2	10.1	10.5
행정 교육 안전 등	1.8	1.9	2.1	2.1	2.2	2.2	2.4	2.5	2.9	2.7
사회복지 및 보건	1.8	2.0	2.3	2.5	2.7	3.0	3.5	4.0	4.2	4.4
농업 및 산업 등	0.3	0.3	0.4	0.4	0.4	0.4	0.4	0.4	0.4	0.4
SOC	1.2	1.5	1.6	1.6	1.4	1.6	1.3	1.1	1.5	1.4
과학 기술 및 기타	0.8	0.8	0.8	0.9	0.9	1.1	1.1	1.2	1.2	1.5

주: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2008년 이후 대략 10년간 항목별 예산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구 지역의 지출 변화는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의 증가, 둘째 SOC 예산과 농업 및 산업 등 예산의 정체를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10년 간 대구는 복지 부문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 예산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이로 인한 자원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는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산업의 잠재력과 혁신역량이 점차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지난 10년 대구의 지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예산이 및 다른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SOC 예산은 정체한 모습을 보였으며, 인구를 감안한 1인당 SOC 수준도 하락하였음.
 - 침체한 인프라 투자는 지역 내 노후 지역의 쇠퇴의 가속화와 맞물려 도심 내 활기를 저해하였으며, 주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15년 이후 SOC 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동안 복지 및 재정안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최근 들어서 경제적 활력을 위해서 SOC 예산의 활용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물론, 최근 3년간 SOC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향후 증가하고 있는 도심 내 교통 수요와 혁신도시와 연계성 강화 및 공항이 전과 관련해 SOC 재원 중 교통 및 수송 예산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최근 쇠퇴한 도시 지역을 개발하고, 산업 단지 경쟁력 확보하는, 가운데 신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재원 투자 계획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대구광역시

표 3-11

2015~17년 대구
재정운용 기본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자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육성 지원으로 창조경제 기반조성 - 시민안전 및 행복사업 확대, 시민소통 강화 -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주민숙원 SOC사업 투자확대 - 지방채 지속 감축 등 건전재정 기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대구 만들기 - 누구나 살고싶은 아름다운 대구 만들기 -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품격 있는 대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자동차, 의료, 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분야 확대 - 문화예술활동 및 인프라 등 순수문화 지속 확대에 중점 투자
주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 융합기술 고도화 기반 조성, 노후공단 재생,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 야구장 및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국제뮤지컬 오페라 축제 - 신암,평리 재정비사업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 도시철도 1호선 서편 하양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선도 및 국가첨단의료 허브 구축 - 지식산업센터 건립, 구테크비즈센터 및 연구원, 건립 - 생활밀착형 도로건설 및 광역교통망 구축(시내버스 재정지원, 관음~칠곡 도로확장 등) - 특화된 도시경관 조성 - 2030도시관리계획,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하늘열차 주변경관 개선, 꽃거리 가로수 - 뮤지컬.오페라.게임축제(50), 공연문화도시 조성,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첨단운전자지원 플랫폼 구축 - 신재생 에너지 융, 복합 지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 첨단의료 허브 구축, 메디시티 역량강화, 첨단 임상 센터 등 - 친환경 무상급식, 영재학교 지원, 대표 도선건립 - 주택 매입 임대사업,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
건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공단, 도시철도 연장 -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 및 의료 센터 - 광역 교통망 개선 - 경관 조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자동차 관련 산업 단지 및 인프라 지원, 신재생 에너지 - 의료단지 지원 등

자료: 대구시청 각 연도별 통합재정개요 자료 요약

6. 지역 인프라 현황 및 투자수요에 대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주)리서치뱅크에 의뢰해 2018년 2월 22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
 -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거주인구수에 비례한 층화표본추출법의 형태로 표본 프레임 구성 후 전화/방문조사의 형태로 응답결과를 수집(총 559명)

구분	응답자 수(명)	비중 (%)	지역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체	559	100	응답자수(명)	18	78	44	35	98	100	130	56
성별	남자	309	55.3	비중(%)	32	14.0	7.9	6.3	17.5	17.9	23.3
	여자	250	44.7	인프라 유형	설문조사지 내 제시된 대표 시설물						
연령별	20대	45	8.1	물류 인프라	- 도로, 터널, 교량, 항만, 철도, 터미널, 주차장 등						
	30대	176	31.5	산업 기반 인프라	- 산업/물류 단지, 발전소 등						
	40대	217	38.8	환경, 재난 대응 인프라	- 환경개선시설, 안전시설, 재해방지시설, 댐, 저수지 등						
	50대	101	18.1	도시 생활 인프라	- 공원/녹지, 관광시설, 문화/체육/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60대	20	3.6								

표 3-12
설문 샘플 구성
및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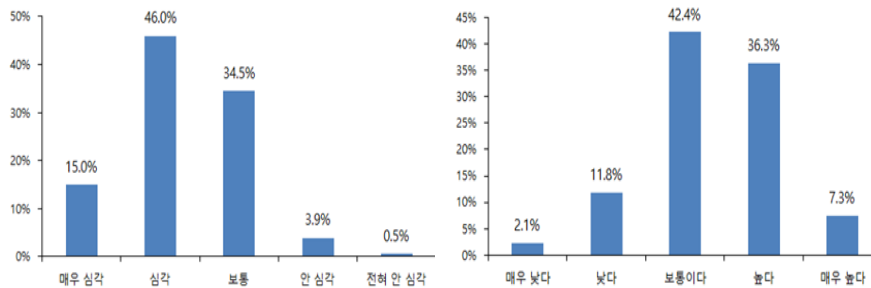
설문 항목 내용 구분	조사 목적
지역여건에 대한 인식	- 대구시가 직면하고 있는 쇠퇴 경향 및 재난 발생가능성 등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 확인
지역발전과 관련한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지역 경쟁력 향상, 주민의 삶의 질 등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인프라가 가진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 확인
거주지역에 설치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대구시에 설치된 인프라의 성능, 용량, 편의성, 노후화 정도에 대한 인식만족도 확인
지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인프라 투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 대구시가 직면하고 있는 쇠퇴정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인 - 대구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인식 확인 -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확인

표 3-13
설문에 대한 항목
내용

2) 지역여건에 대한 인식

- [지역 쇠퇴경향의 심각성] 응답자들 중 61%가 현재 대구의 쇠퇴 경향이 심각하다고 응답
 - [지역소멸 가능성의 심각성] 응답자들 중 61%가 현재 대구시가 인구감소, 고실업, 산업기반 축소 등으로 인한 쇠퇴 경향이 심각하다고 응답
 - [지방 중소도시화 가능성의 심각성] 응답자들 중 43.6%의 응답자가 향후 대구시가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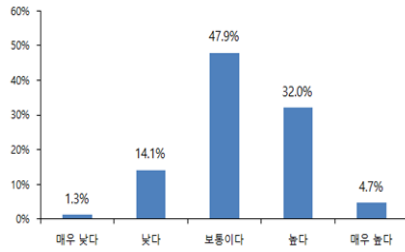
<대구시의 쇠퇴 경향에 대한 우려 정도 -61%가 '심각'> <지방중소도시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정도 -43.6%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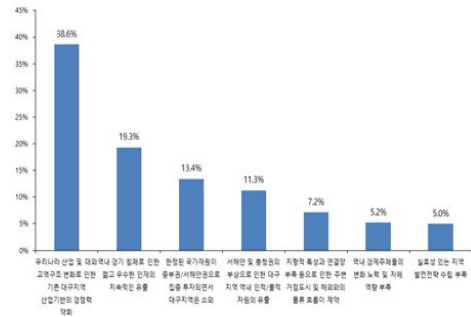
3. 대구광역시

-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응답자들 중 36.7%의 응답자가 대구 내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대구의 위기 징후] 현재 대구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징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대구시 산업기반의 경쟁력 약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역내 경기침체로 인한 인재 유출”,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의 소외”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정도 -36.7%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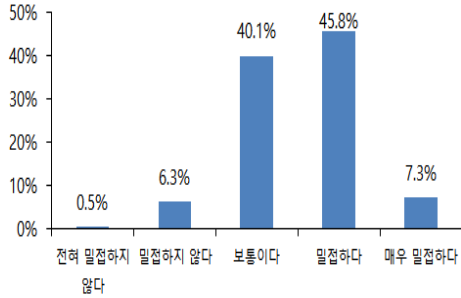
<대구시가 경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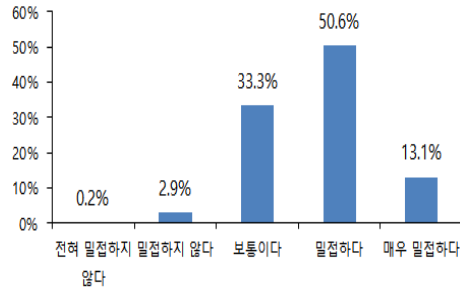
3)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지역 경쟁력 향상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지역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역내 인프라와 지역 경쟁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응답
- [주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3.7%가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

<지역 경쟁력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53.1%가 '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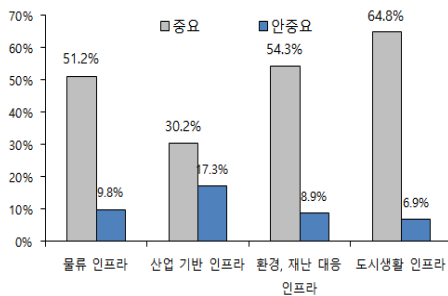


<주민 삶의 질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63.7%가 '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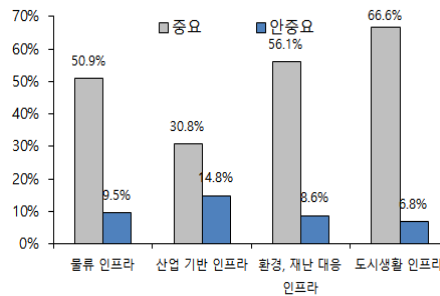


- [지역 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각 인프라 유형별 중요성] 앞 장에서 제시된 4개 인프라 유형(물류-산업-재난 대응-도시생활)에 대응되는 대구시 내 대표적인 시설물 들을 제시한 뒤, 이들 각 인프라 유형과 지역 경쟁력 사이의 관련성을 질문한 결과,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대구 시민들은 “도시생활 인프라 > 환경, 재난대응 인프라 > 물류 인프라 > 산업 기반 인프라”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
 - 특히 모든 인프라 유형에 대해 중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중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중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인프라 유형별 중요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인프라 유형별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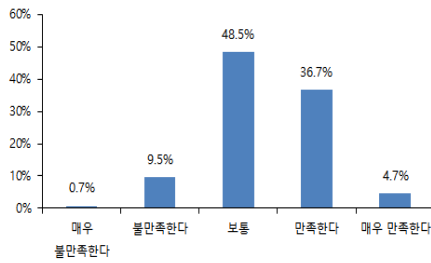
4) 역내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 [역내 인프라의 성능에 대한 인식]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역내 인프라가 가진 기능, 편의성 등 전반적인 성능에 대해 응답자들의 41.3% 정도가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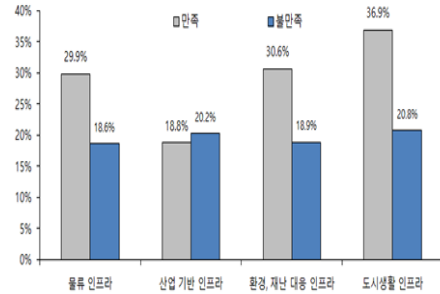
하고 있으나, 10.2%는 불만족

- 인프라 유형별 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산업기반 인프라에 대한 상대적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성능 - 응답자의 10.2%가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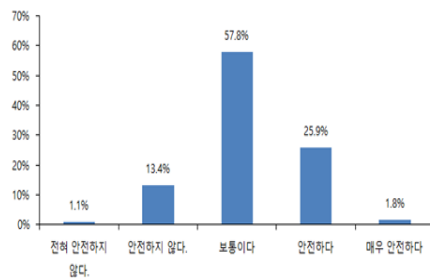
<인프라 유형별 성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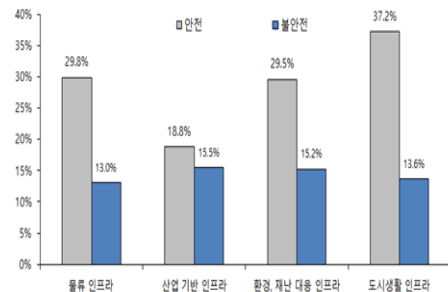
- [역내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역내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안전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의 27.7%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반면, 14.5%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 각 인프라 유형의 노후화(안전성) 정도에 대해 “안전”(“안전” 또는 “매우 안전”)의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과 “불안전”(“안전하지 않음” 또는 “전혀 안전하지 않음”)의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모든 인프라 유형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 인프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안전성 - 응답자의 14.5%가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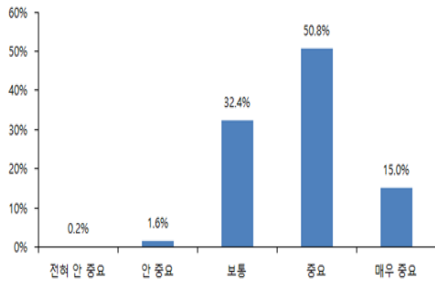
<인프라 유형별 안전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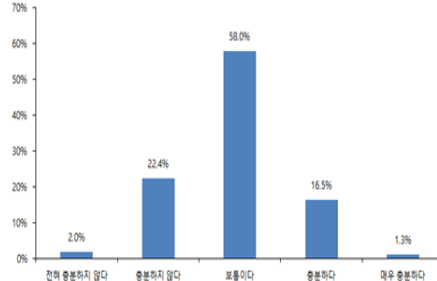
5) 역내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 [역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응답자들의 65.8%가 현재 대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중요하다고 응답
- [역내 인프라 투자의 충분성] 현재 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 수준의 충분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의 24.3%가 “불충분”, “매우 불충분”으로 응답

<지역 쇠퇴 억제 관련 인프라 투자 중요성 - 응답자의 65.8%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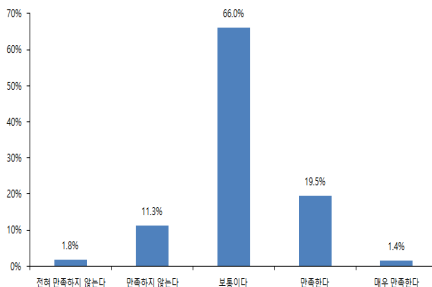


<역내 인프라 투자 충분성- 응답자의 24.3%가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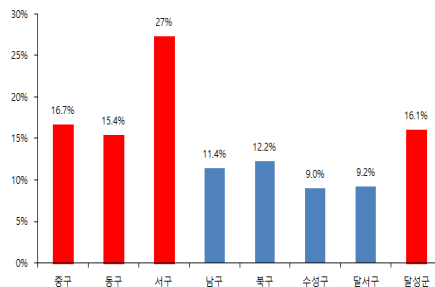


- [역내 인프라 투자 정책의 적정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대구지역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20.9%가 “매우 만족”, “만족”으로 응답한 반면, “불만족”,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13.1%로 나타나,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도는 크지 않으나, 일부 지역(특히 서구)에서는 불만도가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존재

<역내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만족도>



<지역별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불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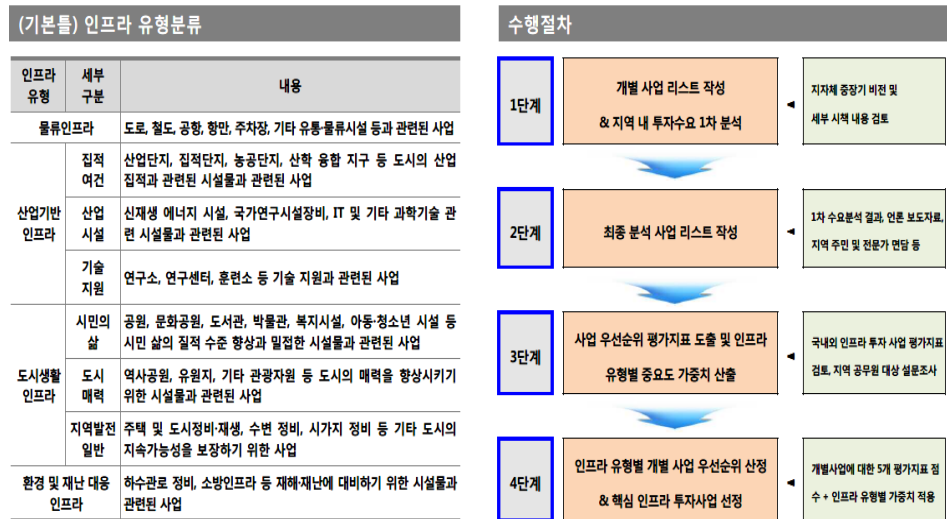
7. 대구 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결과 및 정책 개선 과제

1) 개요

- 대구시의 현실에 비춰 반드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이 본 연구의 수행목적
 - 대구시 인프라 현황에 대한 진단 결과에서 쇠퇴 흐름 억제를 위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역 내 정주환경 차원에서 기본적인 시설인 인프라의 신규 확충 뿐 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에 대한 개선 필요성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산업여건 차원에서도 지역소득 창출 및 기업체 유치 등을 위해서 물류 인프라 확충 및 하수처리시설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

그림 3-10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수행 절차



2) 지역 내 인프라 투자수요 1차 분석

- 「대구 시정계획」, 「대구비전 2030」,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대구 시 산하 8개 구군의 중장기 발전전략」 등에 명시된 사업들 중 인프라 관련 사업들의 개수를 토대로 인프라 투자수요에 대해 1차 투자수요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음.

구분	인프라 투자수요(총괄)				
	물류	산업기반	환경·재난대응	도시생활	소계
대구 시정계획(지방선거 공약 포함)	10%	20%	30%	40%	100%
대구비전 2030	18.2%	36.4%	9.1%	36.4%	100%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3.7%	37%	13%	46.3%	100%
구/군(8개)별 중장기 발전전략	8.1%	27.9%	20.9%	43%	100%
평균	10%	30.3%	18.2%	41.4%	100%

표 3-14

대구시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결과(중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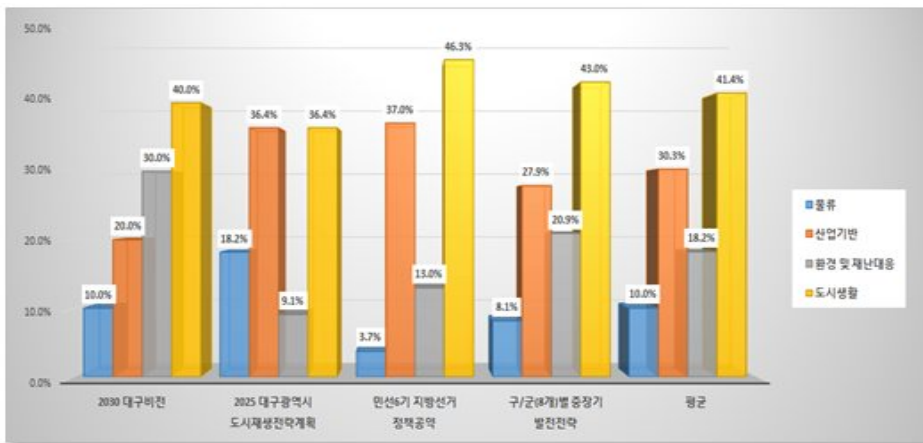


그림 3-11

대구시 지자체 인프라 투자수요 요약

3)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 및 가중치 도출

- 대구시 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투자수요의 발굴과 관련해 객관적이면서도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를 아래와 같은 순서를 통해 설정함.
 - 인프라 투자사업 관련 각국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평가지표 사례분석을 토대로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5개)를 도출
 - 평가지표(5개)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점(5점 척도)을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정
 - 설문조사 결과를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5개)별 가중치 부여를 통해 개별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산정

3.

대구광역시

3.

대구광역시

그림 3-12

대구시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 가중치 도출 방법

1) 우선순위 평가지표(5개) 도출

▪ 인프라 투자사업 관련 각국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평가지표 사례분석을 토대로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5개)을 도출

항목	평가지표 비교				평가지표(안)				
	한국	일본	영국	독일	관련성	시급성	광범위성	연계성	실현가능성
정책성(일관성, 정합성)	○	○			●			●	
실행 가능성	○	○					●		●
경제성(BC)	○	○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환경성(환경영향평가)	○	○	○	○	●				●
지역적 파급효과	○	○					●	●	
안전성		○	○				●		●
접근성			○				●		●
통합 연계성			○					●	
공간영향평가				○	●				●
기술적 난이도		○			●				●

2) 우선순위 평가지표(5개)별 가중치 산정(설문조사 방식 채택)

▪ 평가지표(5개)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정(5점 척도)을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정

세부 기준	배점	평가(배점 부여)방식
1 인프라 투자 목표와의 직접적 관련성	1-5	- 해당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제4차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2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시급성	1-5	- 지역 발전, 지역 간 격차 축소, 지역주민 안전 확보, 지역 쇠퇴속도 완화 등의 관점에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3 투자효과의 광범위성	1-5	- 투자 규모에 비해 주민 복지 향상,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경제적/비경제적 효과가 큰 경우에 높은 점수 부여
4 범국가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1-5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범 국가 발전전략에 해당 인프라 투자가 부합할 경우 높은 점수 부여
5 예산제약 등을 고려한 정책적 실현가능성	1-5	- 중앙정부, 정치권, 지역주민의 니즈 등을 고려할 때 빠르게 사업수립 및 실행이 가능할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배점 계	5-25	

▪ 설문조사 결과를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5개)별 가중치 부여를 통해 개별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산정

인프라 유형 구분	인프라 투자 목표와의 직접적 관련성	지역 현실을 고려한 시급성	투자 효과의 광범위성	범국가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한 정책적 실현 가능성	합계 점수
도시생활 인프라	시민의 삶	3.34	3.16	3.39	3.02	3.46
	도시 매력	3.18	3.23	3.46	3.11	3.14
	지역발전 일반	3.88	3.66	3.54	3.48	3.20
물류 인프라		3.79	3.68	3.56	3.23	3.00
산업기반 인프라	집적 여건	3.96	3.70	3.63	3.70	3.16
	산업 시설	3.96	3.84	3.90	3.63	3.27
	기술 지원	4.11	3.79	3.80	3.79	3.21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3.20	3.36	3.07	3.18	3.04

4) 핵심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산출 결과

- 산정된 가중치를 토대로 37개 인프라 투자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투자사업군은 크게 도시생활 인프라, 물류인프라, 산업인프라,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로 구분

표 3-15

대구시 인프라 투자사업군 1 (도시생활 인프라, 물류인프라)

인프라 유형 구분		핵심 인프라 투자 사업
도시생활 부문	시민의 삶	1.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2. 실버 안심도시 3. 청소년 미래설계 지원강화 4.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추진(대통령공약)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6. 도시정원 조성 7. 문화 랜드마크 조성 8. 시민 문화광장 조성 9. 대구 역사문화 복원
	도시 매력	1. 우수 도시경관 관광 명소화 2. 시민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
	지역 발전	1. 국제적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재건축, 재개발 등) 3. 6대 정주권 특화발전 4. 천연가스(LNG) 융복합형 청정에너지단지 조성 5. 성서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물류 인프라		1. 복합환승센터 및 서대구 역세권 개발 2.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3. 엑스코선 건설 4. 통합신공항 연결 인프라 조성

인프라 유형 구분		핵심 인프라 투자 사업
산업기반 인프라	집적여건	1. 인공지능 로봇 팩토리 사업 2. 스마트 이동체 R&BD 단지 조성 3. 글로벌 의료기술 산업화 선도 4. 금호낙동 창의인재벨트 구축
	산업시설	1.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구현 2. 스마트이동체 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3. 스마트워터 글로벌 허브 구축 4. 020 서비스 플랫폼연구소 설립 5.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성공적 조성 6. 미래 예측시스템 구축 7. 4D 프린팅 스마트혁신센터 구축
	기술지원	1. 지능형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융합 시범도시 2. 스마트 에너지생산도시 조성 3. 한국가스공사 지역상생 협력사업 추진 4. 국가인공지능 연구원 설립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1. 도시외곽 소방수요 증가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

표 3-16

대구시 인프라
투자사업군 2
(산업인프라,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 또한 이들 사업 외에 지역 현실에 비춰 추진이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아래 6
가지를 발굴

부문	신규사업 목록
물류 인프라	1. 교량 성능보강 사업
	2.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종합 방재 사업
	3. 노후 도로 및 관련 구조물 유지보수 사업
산업기반 인프라	4. 노후산업단지 정비/재생
도시생활 인프라	5.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
	6. 빈집 정비사업

- 이들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16개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3.

대구광역시

부문	핵심사업 및 신규사업(추가 발굴) 목록
도시생활 부문	1. 노인복지시설 확충(신규 건립)
	2. 노후택지개발지구(지산/범물/칠곡/성서/상인/시지/서대구 일대 등) 리모델링
	3. 서대구/염색/제3공단 주변 주거낙후지역 재생
	4.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 시행
환경재난 부문	5. 서대구 주변 공단 오·폐수 처리장 정비 및 확충
	6.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7. 동부소방서 이전
물류 부문	8. 서대구 KTX 역사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9. 통합신공항 건설
	10. 광역철도 건설(구미-대구-경산)
	11. 도시철도 연장(1호선/3호선)
산업기반 부문	12. 엑스코선 건설
	13. 미래형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신규 (추가발굴)	14.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15. 노후 교량 성능보강
	16. 노후학교시설 정비

8. 대구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제

- 중앙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부문의 투자확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의 핵심적 사안
 - 정부의 SOC 예산 축소는 지자체의 SOC 사업을 위축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불가피
 -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자원조달을 위해서는 SOC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기본 가정들에 대한 정기적 개선 필요
 - 경제성분석 기간의 결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 설문 대상의 범위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또는 검증 절차가 부재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이 미달되는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상향식 투자 의사결정 방식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투자재원 확대
 - 지역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 지원 확대
 - 지역 인프라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효율화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
 - 민간투자 대상 사업,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민간투자 목표예산 사전배분 절차 도입 및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사전에 꾸준히 고시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 중앙정부의「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제정(안)과 관련해서 관련 법 이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조달의 실효성 확보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시설안전 특별회계」설치 검토
 -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사업에 민자 사업 활성화 유도
 -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 사업에 지자체 예산의 우선 배정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주적 투자재원 마련
 -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TIF) 도입 검토: 노후도심지와 같이 공공이 지원이 없으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
 -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도입 검토: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이 대량의 임대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과도한 토지구제 완화
 - 전국 대도시권 중 대구권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넓으며, 이는 역내 투자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

- 가령 최근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달성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47.3%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생활 인프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
- 또한 이러한 토지구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2020년 8월부터 본격화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과 관련해 향후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토지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 따라서 역내 토지구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역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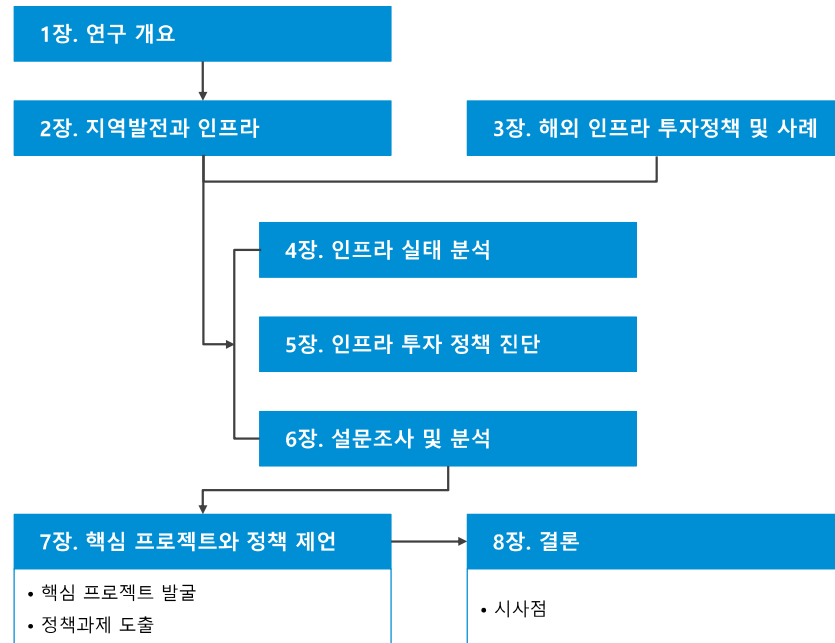
-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공사비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 계약목적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적정 수준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 광역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앞 다퉈 제정·운영 중(17개 광역 지자체 외에 고양시 등 기초 지자체 40여 곳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 조례 제정)

제4장 인천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의 22.1조원보다 20% 축소된 17.7조원으로 제출함. 이후 국회는 19.0조원(전년 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 계획
 - SOC 투자의 과도한 축소는 경제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재투자과 개량투자 수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인천시민이 체감하는 인프라 투자수요를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방향 제시
- 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도로학회 및 인천발전연구원과 협력하여 인프라 실태 파악, 투자수요 진단, 핵심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수행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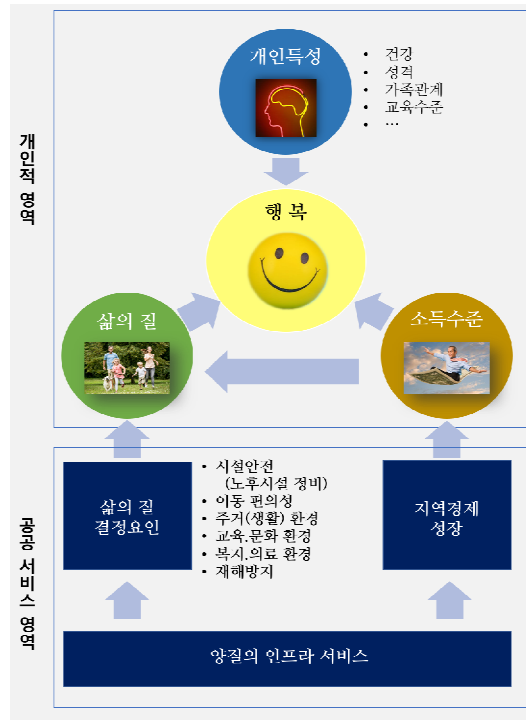
-UN의 세계행복보고서(2014~2016년)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55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2014년)에서 인천시의 행복수준은 17개 광역단체 중 15위. 인천시민의 행복도는 매우 낮은 수준

- 인천시의 1인당 GRDP는 2,420만원으로 전국 평균(2,94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1999년 이후 평균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됨.
- 인천시의 고용률은 61.5%로 전국(60.7%)보다 높으나, 실업률이 4.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인천시의 생활환경(대기, 환경, 폐수, 소음 등) 수준은 매우 열악함.
- 타 지역보다 월등히 긴 통근·통학 시간(특히, 인천시와 서울 간)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음.

-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모형을 바탕으로 한 추정 결과, 인천시는 지역내 총생산(GRDP) 증가율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프라 자본 투입 증가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그림 4-2

주민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인프라



- 설문조사 결과, 인천시민은 삶의 질 결정요소들 중 ‘시설물 안전(노후시설물 정비)’ 부문에서 만족도 최저
 - 노후인프라 개량과 안전도 향상 등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증진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교통·물류 부문

- 인천시의 자동차당 도로연장은 2.05(km/천대),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67(km/√면적·인구)로 7대 도시 중 최하위
- 인천시의 GDP 대비 교통혼잡비용은 3.94%, 인구 1인당 교통혼잡비용은 104만원으로 7대 도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지하철을 이용한 인천시와 수도권 간 통행량 증가율은 2010년부터 2015년 까

4.

인천광역시

지 연평균 7.8%에 달해 광역 지하철 체계 확충이 시급

- 인천시의 지하철/철도 수단 부담률은 8.0%로 부산시 다음으로 높지만, 인당 철도연장 및 정거장 수는 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매우 혼잡
- 인천시 주차장 확보율은 7개 주요 도시 중 6위,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67.9%

○ 산업·경제시설 부문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부평 및 주안지구), 인천기계산업단지, 인천일반산업단지는 준공인가일 이후 40년 이상 경과
-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만 배후 물류지역의 추가적인 용량 증설 필요

○ 환경시설 부문

- 대형 구경 상수관로의 노후화 심각,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수관로 비율은 구경 500mm의 경우 33%, 600~1,000mm의 경우 31%, 1,000mm 이상의 경우 28%
- 인천시 누수율은 6.4%로서, 7대 주요 도시와 비교하였을 때 광주 10.1%, 울산 6.9%에 이어 세 번째
- 인천시 하수관로 총 4,928km 중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노후 하수관로는 61.5%(약 3,082km)
- 내진설계 대상 하수처리시설 92개소 가운데 내진설계 적용 시설은 14개소에 불과

○ 교육·복지시설 부문

- 원도심 기능 저하에 따라 원도심 내부의 학교시설 노후화와 학생 수 감소 지속(중구, 서구, 연수구 등은 신규 택지개발사업으로 학교 및 학급 수가 증가한 반면, 원도심 지역은 800개 학급이 감소)

- 내진설계 대상 병원시설 146개소 중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35개소
- 문화·관광·체육시설 부문
 - 다양한 천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집객력이 미흡
 - 문화·체육 공간 및 레저시설의 군·구별 격차로 인해 문화 혜택의 불균형 존재
- 도시 및 생활환경 부문
 - 인천시 공원 조성률은 30.47%로 서울의 80.72% 및 대도시 평균 46.6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풍수해 위험지구(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계양구 12개소, 남동구 11개소 지역에 대한 재해방지 투자 필요
 -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주거 형태와 주택의 노후도 격차 심각
- 노후 및 안전 부문
 - 인천시 내 차량 소통상태 분석 결과, 시내 간선도로망에 대하여 선제적인 확장 및 개량이 필요
 - 인천시 교량(고가도로 포함) 중 2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은 98개소 (46%),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교량은 30개소(12%)
 - 내진설계 대상 공공 건축물 413개소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249개소 (60.3%)

4.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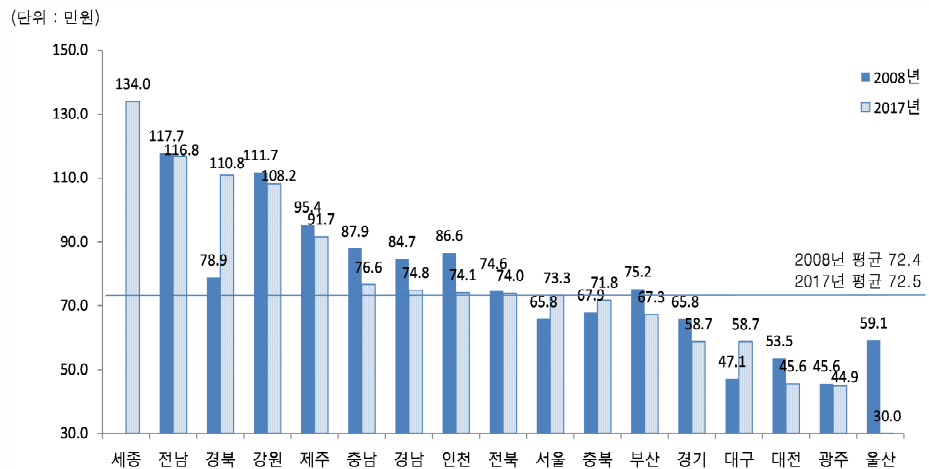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인천시 인프라 예산 분석

- 인천시 전체 예산은 2008년 7조 5,785억원에서 2017년에는 12조 5,595억원 수준으로 증가. 하지만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은 2009년 32.93%에서 2017년 17.25%까지 감소
- 2017년 인천시 1인당 SOC 예산은 74.1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으나, 최근 10년 간 대폭 감소

그림 4-3

지역별 1인당 SOC 예산 변화



2) 인천시 인프라 정책방향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람 중심의 국제·문화·관광도시”라는 인천의 미래 비전 제시
 - 도시·주택 : 주민참여를 통한 맞춤형 원도심 사업 추진
 - 안전·환경 : 누구나 공감하고 우리가 지켜가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산업·경제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산업진흥과 경제 활성화
 - 문화·관광 : 인천 고유의 문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
 - 교통·물류 :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체계를 갖춘 세계적인 해양도시

5. 인천시민 설문조사

-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체감 만족도와 노후시설 안전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종합적으로 인프라 투자는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
 - 특히 ‘공원/녹지’, ‘문화/복지/체육시설’, ‘지하철’, ‘환경시설’, ‘방재시설’의 투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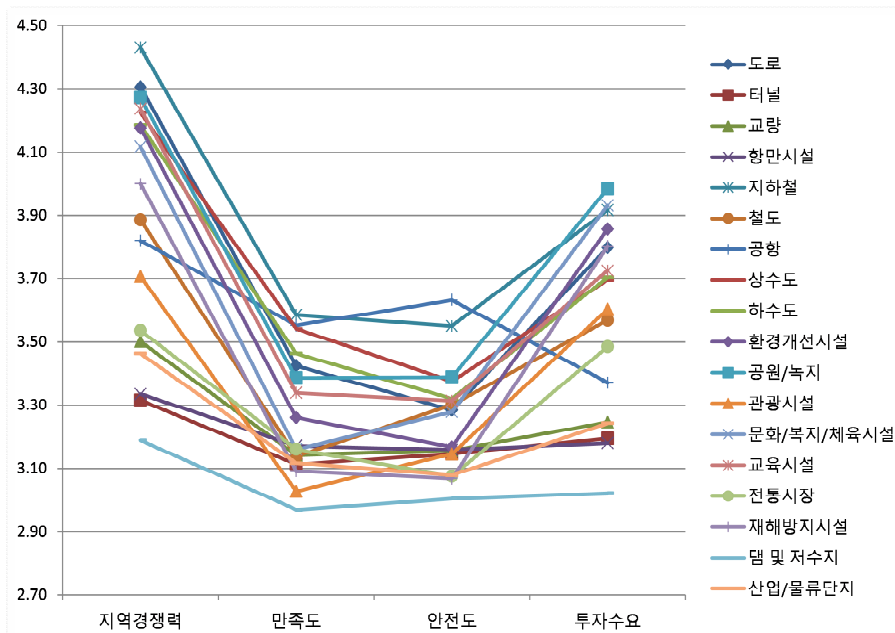


그림 4-4

세부시설물의
항목별 평가 점수

- 한편,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2.78/5.00으로,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응답
 - 인천시의 인프라 시설 투자와 관련된 제반 정책 만족도는 2.92/5.00으로,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냄.
- 공공기관 및 국군·미군 반환지의 활용 방안에는 ‘공원 및 녹지’, ‘문화시설(도서관 및 공연장)’, ‘체육시설’ 순으로 응답
-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자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 확충을 통한 사업 추진 선호

4.

인천광역시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 인프라 실태 진단, 정책 검토, 주민설문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천시의 핵심사업 투자 기본방향 도출

표 4-1

인천시 핵심 사업
투자 기본방향

부문별	인프라 투자 방향
교통·물류 (4)	지역간(지역 내) 접근 및 이동 활성화를 위한 광역 도로·철도망 구축
	통일 대비 남북간 도로망 연계 및 수도권 서남권 지역 광역철도망 확충
	지역간(지역 내) 철도 연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노후 교량 및 항만의 개량 및 내진보강
산업/경제 (3)	노후 산업·물류 단지 개량 및 정비 통한 생산성 증대
	준설토 투기장을 활용한 해양산업 기능 강화
	교통·물류 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주변 노후 단지 정비
환경 (3)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 개량
	노후 상·하수도관 개량 및 정비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도시 (4)	도심기능 회복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도시경관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위한 특성화 시장 개발
	노후 공공 건축물 개량 및 내진 보강

- 위와 같이 도출된 인프라 투자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사업 중에서 부문별로 핵심사업 발굴([별첨 1. 인프라 투자방향과 핵심사업] 참조)

(단위 : 건, 조원)

표 4-2

시설 유형별
핵심사업 건수 및
총사업비

시설 유형	사업 건수	총 사업비
교통·물류	38	37.23 + α
산업 및 경제시설	1	미정
환경시설	7	0.37 + β
도시 정비 및 재생	13	0.03 + γ
노후 시설	12	0.77 + δ
계	71	38.40 + ε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함.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의 측정을 통한(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함.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 및 주민요구 대응 능력 제고도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 발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 민간투자 추진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꾸준한 규모로 적정 수준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 대상 발굴과 추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

리 조직 확보

- 인천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인프라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주무부처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함(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과 같은 맞춤 지원 프로그램).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보호·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천시 관리권 강화
 -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해 중심 유지준설의 수행 주체에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인천항만공사 외에 인천시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함.
 - 원활한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천시의 항만구역 공유수면 매립 권한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1. 인프라 투자 방향과 핵심사업

○ 도로 부문

투자방향	프로젝트명
교통혼잡축 교통체계 개선, 지역 내 접근 및 이동 활성화를 위한 광역 간선도로망 확충	서창~장수간 고속도로
	문학~검단간 고속화도로
	노오지JCT 서울방면 연결로 설치
	능안삼거리~유동삼거리 지하도로 개설
	서부간선도로와 수변로 연결도로(지하도로)
	동소정사거리~신복사거리 지하도로
인천국제공항(영종)과의 연계성 강화	영종~청라간 도로(제3연륙교)
	강화~서울간 고속도로
지역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	제2외곽순환도로
도시 내 접근성 및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로 확장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인주대로(능안삼거리~용일사거리) 확장
	원당대로~금곡교차로간 도로 확장
	도화C~문학IC간 혼잡도로
	고산후로(원당지구북측~검단로) 확장
	장제로(임학사거리~굴현역) 확장
통일 대비 선제적 남북 연계축 도로기반 마련	영종~강화간 도로
	동서평화고속도로

4.

인천광역시

○ 철도 부문

투자방향	프로젝트명
지역간 철도 연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수인선 복선전철
	인천~강릉 동서간선철도 사업
	원종~홍대 연계 민자경전철 사업
지역 내 철도 연계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동성 강화	제2공항철도
	인천신항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인천발 경부선 KTX 연계 통한 수도권 서남권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인천발 KTX 직결사업
도시철도 연장노선 확충 통한 지역주민 철도 서비스 개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광명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김포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인천도시철도 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 주차장 부문

투자방향	프로젝트명
주차시설 확대 통한 지역주민 주차난 해소	쌈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원, 간선도로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건설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시범사업
	간선도로 지하주차장 조성 시범사업
환승주차장 확충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환승주차장 확충

○ 산업·경제시설 부문

투자방향	프로젝트명
해양연구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준설토 투기장 산업단지 조성사업

○ 환경시설 부문

투자방향	프로젝트명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도 공급	용유배수지 건설
	무의배수지 건설
대체매립지시설 조성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대비 대체매립지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상습침수지역 하수관로의 통수능 부족관로 개량, 빗물펌프장 신설 등을 통해 침수 피해 최소화	기존 펌프장 증설(가좌, 용현, 백운)
	가좌 인천교매립지 중간펌프장 신설
	간이 펌프장 신설(굴포)
	빗물 펌프장 신설(굴포, 승기, 남향)

○ 도시정비 및 재생 부문

투자방향	프로젝트명
주민 생활편의 증진/ 노후 및 낙후 기반시설의 개선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지역중심의 동네 만들기 시범 사업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시경관 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사업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주민자생을 위한 맞춤형 개선사업
	만석복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철길마을)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프로젝트	
지역적 장소성 부여 및 낙후 가로환경 개선	배다리우각로근대문화길 조성사업
주민휴식공간 확충	인천 고유의 특화공원 조성사업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를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원도심 지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지역문화 공간 조성	원도심 지역 학교 유휴공간의 지역주민 공유화

4.

인천광역시

○ 노후시설 개량 부문

프로젝트	주요 내용	규모 및 대상	기대효과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및 성능개선사업	-노후 상수관로 정비 -미교체 노후 상수관로 정비	-노후 상수관로 관로교체 : 748.7km, 관로갱생 : 83.2km -고도 정수처리시설 2개소 -가압장 및 배수지 개량 : 48개소 -내진보강 필요 수도시설	-지반침하 예방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 -식수 안전성 제고를 통한 시민 건강 확보
노후 하수도 시설 정비 및 성능개선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지반침하 지역 우선 정비 -구조적 이상에 대한 종합 정비 -통수능 부족관거 증설 -최소유속 부족관거 개량 -노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노후 하수관 및 배수지역 정비 : 배수지 28개소 개량 -노후 펌프장 증설 3개소 -하수처리시설 개량 : 3개소 -내진보강 필요 하수처리 시설	-지반침하 예방 -침수피해 저감 -침수 대응능력 제고 -하수처리량 및 하수처리율 제고
노후 산업단지 정비사업	-노후 산업단지 보수 및 증설 -기반시설 확충, 주변 지역과 연계 정비	-경과년도 30년 초과된 노후 산업단지 3개소	-노후 산업단지로 인한 인명피해 감소 -노후시설 보강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
간선도로 정비 및 확장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제2경인고속도로, 인주대로 등 6개 구간 확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22.6km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 : 10.45km -5개 간선도로 확장 : 18.33km	-인천시 도시공간 구조 변화 및 대규모 개발계획에 의해 변화하는 교통수요에 대응 -도시 내 원활한 교통소통
교량 성능보강사업	-노후화에 따른 단차 발생,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교량 정비 -노후 교량의 내진 보강	-D·E등급을 판정받은 교량은 없음. -준공 30년 이상 노후 교량 22개소 -안전등급 C등급 교량 10개소 -준공 30년 이상, 안전등급 C등급 교량 4개소	-교량 주행안전율 제고 -교량의 안전성 제고
노후 철도/지하철 역사 성능개선사업	-노후 역사 개량 및 증설 -승강장 및 내부 계단 폭원 확충 -역사 내 소방시설 확충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인천역, 동암역 개량 필요	-철도/지하철역 이용객 이용편의 용이 -노후화로 인한 각종 철도 사고 예방 -피난 안전성 제고 -재해 피해 최소화

프로젝트	주요 내용	규모 및 대상	기대효과
노후 철도/지하철 역사 성능개선사업	-노후 역사 개량 및 증설 -승강장 및 내부 계단 폭원 확충 -역사 내 소방시설 확충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인천역, 동암역 개량 필요	-철도/지하철역 이용객 이용편의 용이 -노후화로 인한 각종 철도 사고 예방 -피난 안전성 제고 -재해 피해 최소화
항만 노후 배수갑문 개량 및 내진보강사업	-노후 배수갑문 개량	-인천항 8개 갑문 중 40년 이상 노후화된 6개 배수갑문 개량 필요 -내진보강 필요 갑문	-항만 안전성 제고
항만 수심 증설	-저수심 항로의 수심 증설	-북항~내항 5.4km, 내항~팔미도 13.0km 준설 및 개량 필요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성 제고
전통시장 개선 및 종합방재사업	-전통시장 기피 경향 해소 및 시민 이용률 향상 -시장별 맞춤형 종합방재 사업 -내화 성능 향상,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전통시장 21개소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기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 제고 -영세상인 재산권 보호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 성능개선사업	-노후 공공청사 및 다중이용시설 개량 -건물 내진 보강	-안전등급 D등급 판정 받은 공공청사 1개소, 공연시설 1개소 -내진보강 필요 공공 건축물 및 병원시설	-이용객이 많은 건축물의 안전성 제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	-노후 학교시설 증축 또는 개축 등 시설 개선	-안전등급 C등급 판정 받은 7개 학교 -내진보강 필요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안전성 제고

4.

인천광역시

별첨 2. 주요 핵심사업

○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

구분	내용
규모	19.1km
사업 구간	인천~안산
사업비	1조 6,921억원
추진 현황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 구간 중 인천~안산 구간만이 사업시행 미확정 - 2018년 3월 국토교통부는 인천~안산 구간을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
사업 기간	2017~미정
기대 효과	수도권 순환 통행 확대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대체로로서의 역할 수행

사업 노선



- 사업 추진 현황

- 2007년 대우건설이 민자사업 추진 의향
- 2011년 대우건설 사업 포기 이후, 재정사업 전환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0.78로 사업 추진 백지화
- 2016년 포스코건설 민자사업 추진 의향 후, 사업 추진 미진
- 2018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검토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상부구조)

구분	내용
규모	10.45km
사업 구간	인천 기점 ~ 서인천IC
사업비	4,000억원
추진 현황	- 2015년 경인고속도로 이관협약 (인천시-국토교통부) - 2016년 경인고속도로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수립 착수 - 2016년 12월 경인고속도로 상부 활용방안 및 선도사업 계획 수립
사업 기간	2017 ~ 미정
기대 효과	- 통행료 폐지로 인한 지역주민 부담 완화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인고속도로 지정체 완화



- 사업 추진 내용
 -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의 10차로 도로를 2024년까지 4~6차로로 줄이고 교차로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
- 경인고속도로 상부 활용방안
 - 중대형 화물차량(2.5t 이상) 우회
 - 기점~도화IC(왕복 4차로), 도화IC~서인천IC(왕복 6차로)
 - 상부공원 : 중앙부 배치
 - 옹벽 철거, 진출입 램프 3개소 우선 추진
 - 기점 공원화사업(1.3km)

4.

인천광역시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하부구조)

구분	내용
규모	11.66km
사업 구간	서인천IC ~ 신월IC
사업비	8,000억원
추진 현황	- 2020년 착공 계획 - 2025년 개통 계획
사업 기간	2019 ~ 25년
기대 효과	- 경인고속도로의 용량 추가 확보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 통행 속도 향상 - 고속간선 기능 강화로 사회·경제적 교통비용 감소

사업 노선



- 하부도로 사업 내용

- 설계속도 100km/h, 차로 수 : 왕복 6차로 (단선병설터널)
- 영업소 2개소(인천, 부천), 유출입 시설 4개소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구분	내용
규모	10.6km
사업구간	서구 석남동 ~ 청라국제도시역
사업비	1조 2,381억원
추진 현황	- 2018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계획 - 2020년 기본 및 실시 설계 계획 - 2021년 공사 착공 - 2026년 준공 및 개통 계획
사업 기간	2018 ~ 26년
기대 효과	-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활성화와 인천지역 균형발전 - 청라국제도시의 서울 강남권간 접근성 제고
사업 노선	

-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활성화와 인천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노선(정거장 6개소)
 - 2018년 기본계획 승인·고시
 - 2020년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 2021년 상반기 공사 착공
 - 2026년 하반기 개통 계획

4.
인천광역시

4.

인천광역시

○ 준설토 투기장 산업단지 조성사업(북인천 복합단지)

구분	내용
규모	825,338㎡
위치	경인아라뱃길 서해쪽 입구 남측 서구 로봇랜드로 인근
사업비	미정(인천경제청 :2,255억원에 단지 매입)
추진 현황	- 2018년 1월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북인천 복합단지 준설토 투기장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추진
사업 기간	미정
기대 효과	- 해양산업의 선도지역으로 해양연구 기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인천 포구의 정체성 확보

사업 노선



○ 용유·무의 배수지 건설

구분	내용
규모	용유배수지 : 11,000m ³ , 무의배수지 : 1,500m ³
위치	인천시 용유도 / 무의도(도서지역)
사업비	용유배수지 : 128.4억원, 무의배수지 : 98.1억원
추진 현황	- 2016년 7월 배수지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7년 9월 배수지 건설사업 착수 - 2020년 말 사업 완료 계획
사업 기간	2015~20년
기대 효과	- 직결급수지역인 용유도 및 무의도 급수구역의 안정적인 수도 공급 - 용유도 및 무의도의 2,764세대, 4,730여 명에 공급



- 사업 내역

- 용유배수지 신설 : Q=11,000m³
- 송수관로 D200, L=2,570m
- 배수관로 D250, L=1,563m
- 무의배수지 신설 : Q=1,500m³
- 송수관로 D200~D300, L=4,407m
- 배수관로 D100~D300, L=7,201m / 가압장(배수) 1개소
- 일부 고지대 급수를 위한 가압장 1개소 설치 계획 수립

4.

인천광역시

○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사업(가재울마을)

구분	내용
규모	82,222.8㎡
위치	가좌동 354번지 일원
사업비	3,515백만원(국 380백만원/시 2,821.5백만원/구 313.5백만원)
추진 현황	실시계획 중
사업 기간	2014 ~ 19년
기대 효과	- 노후 및 낙후 기반시설의 개선 - 주민 교류 증진

사업 지역



- 사업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공동체 형성
- 사업지 : 가좌동 가재울마을
- 공동이용시설 건립, 도로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등

○ 남동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구분	내용
규모	179,626㎡(남동산업단지 총면적 : 9,574,000㎡)
사업 지역	인천 남동산업단지
사업비	2,200억원
추진 현황	-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으로 선정 - 2018년 남동산단 재생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 - 2020년 착공 계획, 2026년 준공 계획
사업 기간	2017~26년
기대 효과	남동산업단지의 기능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노선	

- 사업 현황

-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근로정주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 지식문화산업 입지를 유도해 기존 산업단지의 이미지 개선 및 지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계획지구 북측 인접 산업단지의 첨단산업을 연계해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유도
- 일부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통한 구조고도화 방식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

제5장 광주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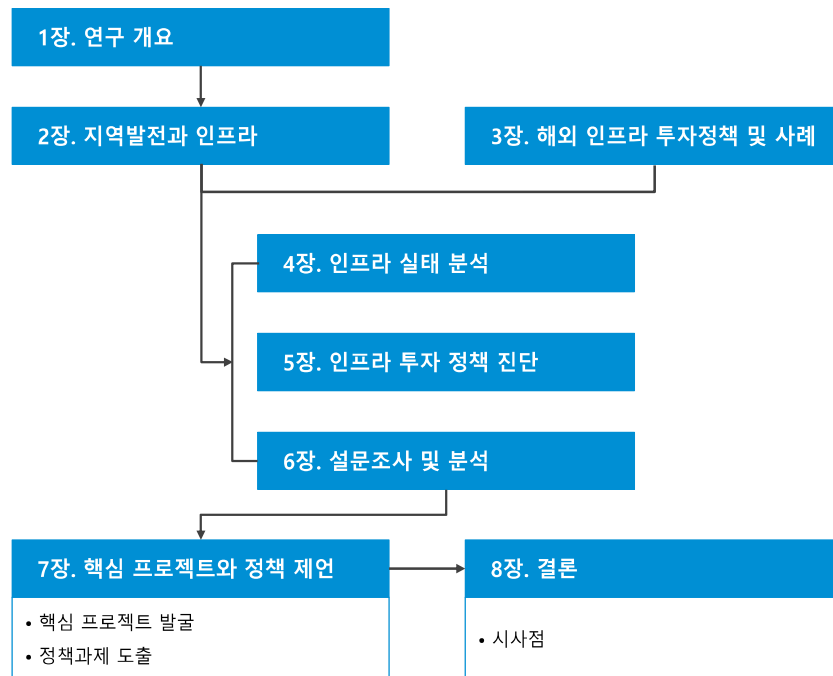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의 22.1조원보다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계획, 국회에서는 동 예산을 19.0조원(전년 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히 축소
- 광주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제시
 - 지역의 노후 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과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핵심 인프라 투자 발굴 및 개선 방향 도출
 - 최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및 노후 인프라 대응 움직임에 발맞추어 광주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개선 유도
 - 인프라 투자 및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진
- 본 과제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통해 인프라 실태 파악, 투자 수요 진단, 투자 방향,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 수행

5.

광주광역시

그림 5-1
연구 진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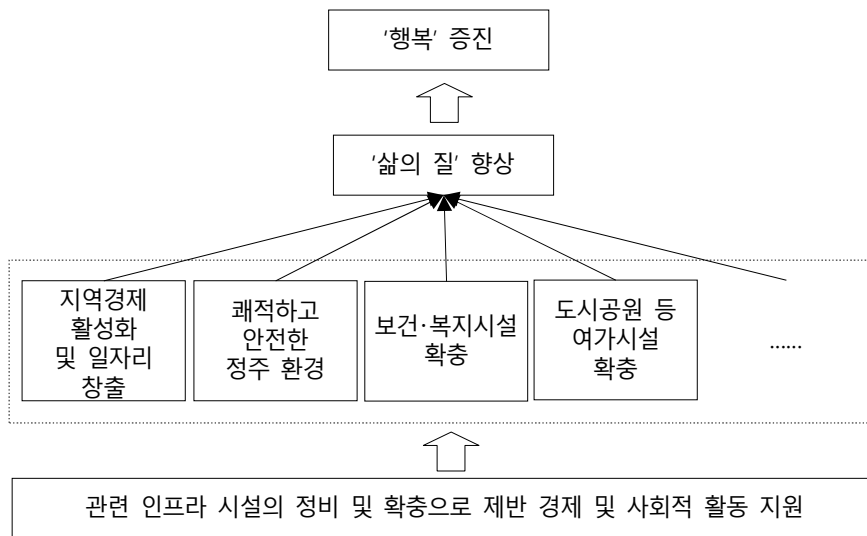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 광주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2,159만원으로 대구와 더불어 전국 최하위 수준
 - 경제활동인구비율은 60.7%(전국 평균 63.5%), 고용률은 58.8%(전국 평균 61.2%)로 고용 지표도 전국 평균을 하회
 - 2017년 기준,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40.7%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임. 재정자주도⁷⁾ 역시 61.5%로 타 광역시에 비해 열악(6대 광역시 평균 63.4%)
-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생활기반 시설, 충분한 문화·여가활동의 지원,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필요

7)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임. 재정자주도가 클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음. (자체수입+자주재원)/지자체 예산 규모×100%.

그림 5-2

인프라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 광주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지역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553명 응답)
 - 62.6%(48.5% 밀접, 14.1% 매우 밀접)는 인프라 투자가 지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응답함. 밀접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불과
 - 52.3%(44.7% 밀접, 7.6% 매우 밀접)는 인프라 투자가 지역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응답함. 반면에 밀접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불과함.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시설물 안전등급

- 「시특법」상 시설물의 안전등급⁸⁾ 실태

- C등급 : 조속한 보수·보강 이행 필요, D등급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이 요구, E등급 : 사용 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시설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나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

8)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로 분류됨. 1종 시설물은 2종에 비해 규모가 큰 시설물임[1종 시설물 예시: (연장 기준) 교량 및 터널 500미터 이상, 방파제 1,000미터 이상, (면적 기준) 건축물 5만 제곱미터 이상], 3종 시설물 중 대부분 시설물은 도로시설, 삭도, 레도, 유원시설, 대형토목공사장으로 분류되며, 건축물은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으로 분류됨. 3종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었으나 2018년 1월 「시특법」 체계로 편입됨.

-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 시설물이 총 199개소에 달함.
 - 1종 11개소(7.0%)
 - 2종 75개소(3.4%)
 - 3종(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13개소(4.4%)(C등급 103개소, D등급 8개소, E등급 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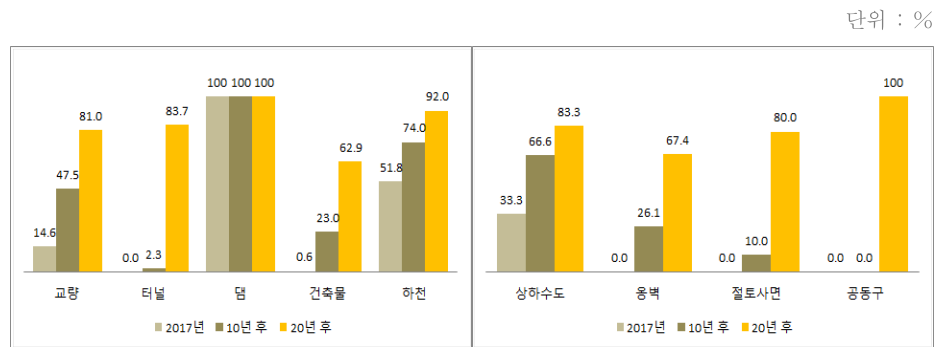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역 안전등급⁹⁾ 현황에 따르면 교통 및 안전시설 확충이 요구됨.
 - 교통, 범죄, 감염병 부문이 하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함. 또한 안전사고도 3등급으로 좋지 않음.

○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

- 모든 시설물에서 노후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 30년 이상 노후화 시설물의 비중이 10년 후인 2027년에는 교량 47.5%, 댐 100%, 건축물 23%, 하천 74%, 상하수도 66.6%, 옹벽 26.1%, 절토사면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5-3

광주시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노후화
전망



- 특정관리대상시설(3종) : 3종 시설물은 향후 10년 후에 75% 이상, 20년 후에는 90% 이상, 3종 건축물은 향후 10년 후에 85% 이상, 20년 후에는 약 95% 이상의 건축물이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됨.

9) 지역 안전등급은 1등급이 가장 안전한 수준임. 행정안전부에서 상대등급(1~5등급)으로 부여함.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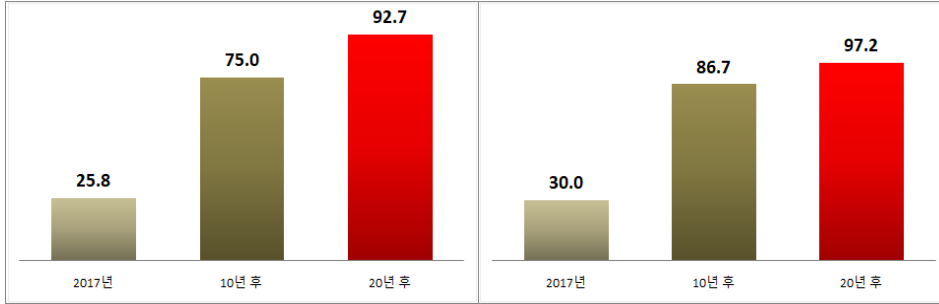


그림 5-4

광주시 시특법 대상 3종 시설물(左) 및 건축물(右)의 노후화 전망



자료 : 남도일보, 2018.1.18.

자료 : 남도일보, 2017.8.22.

그림 5-5

폭설로 인한 포트홀 긴급 복구 현장(左), 폭우로 인한 광주천 장애인 사망사고 현장(右)

○ 교통 인프라

- 신도시의 증가와 도심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핵심 생활권과 주요 부도심 간 간선도로의 비효율 및 생활권 평균 주행속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교통난 증대
 - 2015년 평균 주행속도는 도심부 32.97km/h, 외곽지역 52.63km/h로 도심부와 외곽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남. 2013년 대비 도심부, 외곽지역 모두 주행속도 및 여행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광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 지역 간의 생산유발시설 연계를 위해 사람 중심·환경 중심 교통 인프라 구축 필요

○ 정주 환경

- 도심 기능의 쇠퇴와 공동화에 따른 지역상권 쇠퇴가 발생. 구도심 지역 부근에 공·폐가 증가 추세
 - 향후 아파트의 노후화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2017년 기준

5.

광주광역시

20년 이상 주택 비중은 44.6%에 달함.

- 자치구 중 원도심 지역인 동구와 남구의 인구 감소로 노후 건축물 비율은 지속 증가 추세

○ 생활 인프라

- 광주 지역의 상수도 유수율은 85.9%로 서울 등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누수율은 10.44%로서 높은 상황 →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급수난 및 누수 피해 지속
 - 질 좋은 수도물을 각 가정에서 전달하기 위해 노후관 교체가 필요
 - 인구 십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3.8개로서 전국 평균인 5.0개보다 낮은 상황.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전국 평균보다 미흡
 - 1인당 도시공원 공급면적은 6.2㎡로서 서울(8.0㎡), 인천(11.3㎡), 대전(8.6㎡), 울산(8.6㎡) 등 주요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

○ 산업 단지

- 9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나, 이 중 5개 단지가 1990년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로서 안전사고, 환경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
 - 산업단지의 인프라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화, 문화·복지·편의시설 부족
 - 산업단지 고도화 모델 및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문화재생·문화요소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반의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사업 범위 확대 필요

○ 방재 인프라

- 광주시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은 총 1,017동이며, 내진 적용 비율은 61.3%에 불과함.
 - 내진 비율이 낮은 시설물로는 도로시설물 67.5%, 건축물 51.1%, 수도시설 28.0% 순으로 분석됨.
 - 지방하천 33개소의 개수율은 89.2%에 불과함.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광주광역시 인프라 예산 분석

- 세출규모 4조 5,139억원 중 사회복지가 36.9%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일반공공행정 13.2%, 수송 및 교통 9.6%, 환경보호 7.2%, 교육이 7.1%를 차지
 - 전체 예산에서 인프라(도로·교통·환경·공원·주택·주택관리)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7.3%에서 2016년 23.4%로 급격히 축소
 -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2011년 29.8%에서 2016년 35.5%로 대폭 확대
 - 광주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인당 1,766원으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음.



그림 5-6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 광주는 다른 광역시에 비하여 인프라 예산 비중도 절대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도 미약
 - 중앙정부로부터의 사회 인프라 및 SOC 투자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도로, 철도, 하천, 생활 시설물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 감소

2) 광주광역시의 인프라 정책 방향

- 광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재정 수요는 연평균 4.4%의 성장세가 전망됨.
 - 사회복지 분야에 31.4%, 수송·교통 분야에 17.2%, 일반행정 분야에 12.7%

5. 광주광역시

등으로 재원 배분

- 하지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소요되는 2조 579억원 이외에 실질적인 인프라(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투자는 오히려 축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미미한 증가 예상
- 핵심 교통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였거나 지연 또는 표류 중이며, 각종 도시정비사업도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완료 시점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
 - 대표적으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2002년 노선 기본계획 수립 후 15년 이상 착공 지연
- 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증대 필요
 - 산업기반 확충으로 세수기반을 확보하고, 중앙에 의존하는 이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 특히, 원도심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개선,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산업단지 내 공동물류센터 조성,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 광주의 생활 인프라(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는 타 광역시 대비 열악하며,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 영위를 위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보급률 향상 방안이 시급
 - 예를 들어 주차장 확보 비율은 98.9%로 국가 최저기준에도 미달함(국가 최저기준 100%). 도시공원도 지역민 1인당 공원면적이 5.8㎡로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함(국가 최저기준 1인당 9㎡).
 -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경우 시내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 반면, 도시철도의 분담률은 2014년 기준으로 2.8%에 불과한 실정
 - 차량 중심의 운영 체계, 불법 주차, 전신주 등 보행 교통에 불리한 보행 환경에 다년간 노출됨.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폭원 2.0m 미만의 보행도로가 65.6% (346.4km), 보도 미설치 구간이 7.6%(40.1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7

광주시의 열악한
보행 인프라 현황



자료 : 광주전남연구원.

- 지역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확대 및 안전 인프라 예산 확보 필요
 - 광주권 거점도시들을 연결하는 철도시설의 부재로 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실정임. 친환경 교통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광주 근교지역의 광역 생활권·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필요
 -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 확충 필요
 - 교통 체계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유도
 -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설계 및 보강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 필요

5. 지역민 설문조사 및 인프라 투자 추진 방향 설정

- 광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553명),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체감하는 만족도와 안전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프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함.
 - 인프라 성능 : 100점 만점으로 56.1점
 - 인프라 안전 수준 : 100점 만점으로 54.1점
 - 인프라 투자 수준 : 100점 만점으로 46.8점에 불과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도
 -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 사고 등)에 대한 안전도는 100점 만점으로 53.5점에 불과하며,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에 대한 안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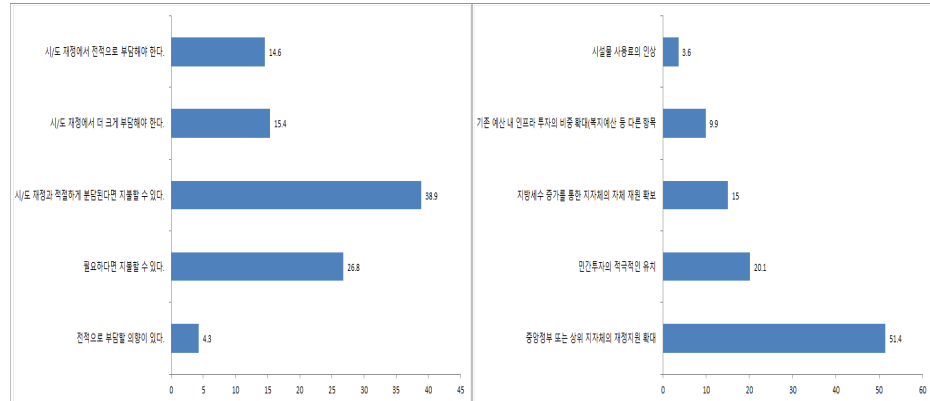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그림 5-8
지역주민의 비용 부담 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도 역시 100점 만점으로 52.8점에 불과



-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 시/도 재정과 개인 부담이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8.9%로 가장 높음.
-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1.4%로 가장 높음.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2순위인 20.1%로 나타남.

- 노후 인프라 조례 제정 시 기대효과

- 노후 인프라 조례 제정과 지역경제 성장 간 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될 것이다(도움 + 매우 도움)라는 인식이 62.1%로 나타남.
- 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3.0%에 불과

-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IDI : Infrastructure Demand Index) 산정 결과

-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IDI)가 큰 시설물은 안전 수준(‘Safety’), 삶의 질(‘Life’), 지역민의 수요(‘Demand’)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상대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 시설물로 해석됨.



그림 5-9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IDI)를
이용한 우선순위
산정 과정

-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 시설물은 재해방지시설, 주차장, 도로, 주거 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 상수도, 공원/녹지 순으로 도출됨.
- 상대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인프라 시설물은 댐 및 저수지, 발전소, 향만시설, 터널, 공항 순으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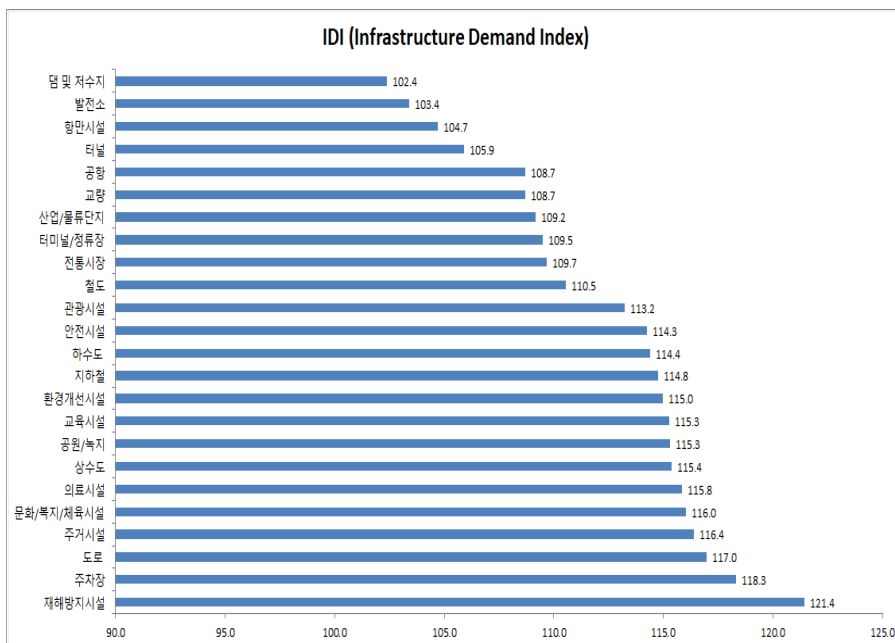


그림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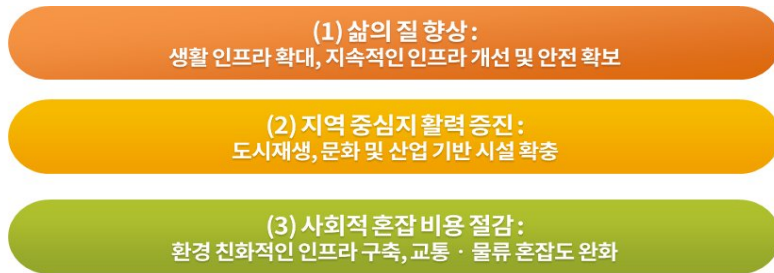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를
이용한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

6.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 사업 발굴

- 광주시 인프라 실태 진단, 인프라 투자 정책,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출된 인프라 투자 관련 추진 목표 및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음.

그림 5-11

광주시 인프라 투자 방향



광주 지역민의 ‘안전 확보’ 및 ‘삶의 질 증진’ 과 ‘일자리 창출’

- 광주시 인프라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중에서 부문별 핵심 사업 발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8. 사업별 리스트 참조).

그림 5-12

광주시 핵심 사업 요약

<p>01</p> <p>삶의 질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생활권 주변 지역민을 위한 녹색 공간 확충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 보행 인프라의 지속적 개선 및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상숲 조성 • 도심 소공원 조성 • 주민친화형 건강숲길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인프라 확충 • 생활교통형 개선사업 • 보행인프라개선 및 확충
<p>02</p> <p>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문화전당 도시재생시범사업 •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기반시설 확충 • 광주광역시 공-폐가 도시재생 추진 •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심 기능증진과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속 추진 •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 • 구도심지역 근현대 건축물 보존 및 자원화 • 광주 폴리활성화 • 문화예술 스마트 시티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폐가 활용 문화 민박촌 조성 •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기 사업 추진 • 동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업종 고도화에 따른 공간재편 • 산업단지의 공간리뉴얼 및 기반시설 확충 • 업종 고도화를 위한 혁신역량강화 •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p>03</p> <p>사회적 혼잡 비용 절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 광주-전남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 광주-대구 달빛 내륙철도 건설 • 물류시설 확충 및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 •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 광주-나주(빛가람혁신도시)간 광역철도 • 화순-나주(빛가람혁신도시)간 철도 • 광주역-광주송정역 복선전철화 • 광주역 지하 대합실 플랫폼, 주차장 등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 빛그린 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 하남신단 재생사업에 따른 물류인프라 확충 • 물류시설 기능개선 • 하남역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 활성화

1) 주요 추진 사업 총 30건, 총 5조 1,800억원 규모

- 사업 구상 단계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비 규모 산정에서 제외

○ 삶의 질

- 중점 사업 3건, 주요 추진 사업 6건, 투자 규모 170억원

중점 사업	No.	주요 추진 사업
도심생활권 주변 지역민을 위한 녹색공간 확충	1	명상숲 조성사업
	2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
	3	주민친화형 건강숲길 조성
광주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이용효율 제고	4	자전거 인프라 확충
광주시 보행 인프라의 지속적 개선 및 확충	5	생활교통형 개선사업 검토기준 설정
	6	보행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 중점 사업 4건, 주요 추진 사업 13건, 투자 규모 1,330억원

중점 사업	No.	주요 추진 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도시재생시범사업	1	원도심 기능증진과 회복을 위한 도심재생 추진
	2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속 추진
	3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 조성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기반시설 확충	4	구도심 지역 근현대 건축물 보존 및 자원화
	5	광주 폴리 활성화
	6	문화예술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광주광역시 공·폐가 도시재생 추진	7	공·폐가 활용 문화 민박촌 조성
	8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기 사업 추진
	9	등지내몰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10	업종 고도화에 따른 공간 재편
	11	산업단지의 공간리뉴얼 및 기반시설 확충
	12	업종 고도화를 위한 혁신 역량강화
	13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 사회적 혼잡 비용 절감

- 중점 사업 5건, 주요 추진 사업 11건, 투자 규모 5조 300억원

중점 사업	No.	주요 추진 사업
지하철2호선 조기 착공	1	지하철 2호선 조기 착공
광주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2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3	광주~나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친환경 철도망 조기 구축 및 확대	4	화순~나주(혁신도시)간 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사업	5	광주역~광주송정역간 복선전철화
	6	광주역 지하에 대합실 플랫폼, 지하주차장 등 조성
물류시설 확충	7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8	빛그린 산업단지 공동물류센터 조성
	9	하남산단 재생사업에 따른 물류인프라 확충
	10	물류시설 기능 개선
	11	하남역 컨테이너 야적장(Container Yard, CY) 활성화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과 주민 요구의 대응능력 제고 필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지속 추진 필요
 -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효율화 필요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

의·조정하고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검토

-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신뢰 구축을 통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자 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 필요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유형의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필요(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실질적인 시공 참여 유도 등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공사 분할 발주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 보호·육성 정책 운영 필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행 체계 및 안정적 자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등 조례 내용의 실효성 제고

- 광주 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경제적 파급효과
 - 인프라 투자 규모 추정 : 5조 1,800억원(5년 동안 연평균 1조 400억원 규모)

5.

광주광역시

5. 광주광역시

그림 5-13

광주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연평균)

(GRDP)
경제성장률 증가
3.3%p

일자리 창출
2만 3,000명


가계소득 증가
5,000억 원

- 기술자: 6,900명(30%), 기능인: 1만 6,100명(70%)
- 청년층: 1,200명(5%)

민간소비 증가
3,500억 원

- 자기권역(광주): 1만 7,500명(76%)
- 타권역(광주 이외): 5,500명(24%)

별첨 1. 주요 핵심 사업 예시

<p>프로젝트 예시 보행 인프라의 지속적 개선 및 확충</p>		
<p>현황 및 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중심의 운영체계, 불법주차, 전주등 보행교통에 불리한 보행환경에 다년간 노출됨. • 주요 간선도로 보도폭원현황 조사결과, 전체 노선 연장중 폭원이 2.0m 이상인 구간이 26.82%인 141.62km로 나타남. • 휠체어 통행이 어려운 구간인 2.0m 미만은 346.38km, 보도 미설치 구간은 40.05km안 것으로 조사되었음. 	<p>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자전거 등의 친환경교통수단과의 연계 활성화 • 보행자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교통망 확충으로 보행권 확보 	
<p>추진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단위, 생활권 등 지구단위중심의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 보행자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생활교통형 보행환경 정비체계 구축 		
<p>주요 사업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교통형 개선사업 검토기준 설정 - 생활교통형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적정 판단 및 지침 선정 -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약자 배려, 보행위험요소 제거, 지구특성별 환경 및 경관조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역내 생활교통형 개선사업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노후되고 파손된 보행자도로를 개선하고 이와 연계한 보행길 조성 등을 통한 보행인프라 확충 - 부적합 보도폭원, 보도의 단절, 보도턱의 회복을 통한 자전거 및 보행교통 연속성 제고 - 차량통행, 불법주정차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계획 - 녹도설치(남문로, 회재로) - 생활교통형 보행환경 정비(흑석동, 봉선동, 소태동, 일곡동, 풍암동) - 보행길 조성사업(상무지구) - 보행길 조성사업(상무지구 공원 연결길, 풍영정 천 산책길) - 푸른길 단절구간 정비(보행데크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프로젝트 예시

산업단지 노후화 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

현황 및 실태

- 하남일반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 오산, 안청, 도전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1981.1월에 착공하여 1991.3월에 준공함
- 전체면적은 5,944천㎡이며, 가동업체수 990개, 종사자수 25,144명임(2017년 9월말 기준)
- 산업단지의 노후화 및 경쟁력 저하에 따른 산업단지 신활력 여건 조성 필요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 4차산업 선도 산업단지 육성
- 주변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성장의 거점
-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행복한 복합산업거점

추진 체계

- 하남산업단지 재생사업추진단 구성
- 광주광역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유관기관, 입주기업, 주민들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함 : 추진협의회 구성(하남산업단지 재생사업 실무추진팀, 근로환경 개선사업 실무추진팀 구성)

주요 사업 내용

- **업종 고도화에 따른 공간재편**
 - 휴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 휴폐업 부지(민간부지)를 활용하여 융복합집적지 조성
 - 신성장 유망업종의 유치를 위한 공간재편
- **산업단지의 공간리뉴얼 및 기반시설 확충**
 - 교통체계의 정비 및 확충
 - 산업단지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가로 경관 개선
- **업종 고도화를 위한 혁신역량 강화**
 - 성장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내 연구소 설치
 - 신성장 유망업종의 고도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설 도입
-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
 - 근로자 건강센터, 문화복지시설 등 안전·편의 시설 확충
 - 근로자 기숙사 및 복합된 근로자 주거지원시설 건립을 통하여 정주지원 및 복지 및 편의기능 확충

프로젝트 예시

물류시설 확충 및 개선: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현황 및 실태

- 거래량 대비 시설 협소 : 유사한 거래실적이 있는 타 광역시 비교부지면적 협소
- 시설의 노후화 및 도매시장 거래량 증가에 따른 처리한계 발생
- 시설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침범, 주차면 감소(464 → 429면)
- 주차장 부족으로 화물터미널 130면 임대사용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 종합 물류기능 수행 및 수요 대응력 강화, 중소 소매업체·유통업체 등 연계 강화
-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 기회 확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시설 현대화로 하역비 등 유통비용 절감



추진 체계

- 시설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 해소 및 기존상권 유지를 위한 재건축 검토

주요 사업 내용

- 위치: 現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일원(일반상업지역)
- 규모: 기존 도매시장 부지 56,206㎡(재건축)
- 확장부지: 21,000㎡, 광주 북구 동문대로 238-8 일원(준주거지역, 국유지 사유지 혼재)
- 사업비: 850억원(부지 매입비 490억원, 시설 재건축비 360억원)
- 재원조달방안: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제6장 대전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의 22.1조원보다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계획했고, 국회에서는 동 예산을 19.0조원(전년 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히 축소
- 대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제시
 - 지역의 노후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과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핵심 인프라 투자 발굴 및 개선방향 도출
 - 최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및 노후인프라 대응 움직임에 발맞추어 대전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개선 유도
 - 인프라 투자 및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촉진
- 본 연구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전세종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통해 인프라 실태 파악, 투자수요 진단, 투자 방향,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
 - 대전의 사회, 경제 현황과 인프라 수요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인프라 수요 분석
 - 부문별 인프라 실태 진단 : 주요 인프라 시설별(도로 및 철도, 상·하수도, 주택, 산업단지, 문화·관광·체육시설 등) 실태 및 문제점 분석

6.

대전광역시

- 대전시 인프라 정책에 대한 진단 : 인프라 투자정책 현황 및 부문별 인프라 사업 현황 진단, 중장기 인프라 투자전망
- 대전시민의 인프라 수요 진단 : 인프라의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에 대한 영향도, 인프라 노후화 및 성능 평가, 향후 인프라 공급의 우선순위 등
- 향후 인프라 투자방향 및 부문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정책) : 산업·경제, 교통·물류, 환경·안전, 주거·교육·관광 등
- 인프라 투자정책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 대전시는 최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활과 지역경제성장과 직결된 인프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 대전지역 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010년까지 10년 간 0.8%의 지속적 성장세에서 2012년부터 본격 둔화¹⁰⁾
 -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속 증가, 그러나 실제 증감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¹¹⁾
 - 대전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위축, 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그러나, 첨단 제조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¹²⁾
 -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음. 사업체 수 감소로 일자리 여건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함.¹³⁾
 - 타 지역에 비해 연구개발 투자는 높은 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낮아, 실질 연구개발의 성과는 크지 않은 상황

- 인구 감소 및 경제성장세 둔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확대 필요성 증대 예상
- 높은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경제성장세의 기여는 낮아 산업화를 위한 산업·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관심 증대

10) 2014년에서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대전시의 순 인구감소는 4만 85명.

11)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3.7%로서 전국 평균 4.0% 하회. 6대광역시 중 4번째.

12) 최근 7년 간(2011년~17년) 대전지역 서비스업의 연평균 GRDP 대비 비중은 76.0%. 전체 지역내총생산액 대비 서비스업의 연평균 비중은 59.1%.

13) 최근 10년 간 경제활동참가율 60.0%(전국 평균 62.0%), 고용률 58.9%(전국 평균 60.8%) 구인배수(신규 구인인원/신규 구직건수) 변화 : 2007~11년 연평균 0.42 → 2012~16년 0.42

- 대전의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에 대비하는 지역 안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
 - 대전지역은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자연재해 발생 건수가 가장 적고, 피해금액으로도 2007~2016년까지 대구 다음으로 적은 피해 발생
 - 그러나, 대전의 경우 원자력시설 및 각종 연구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낮은 수준
 - 사회적 재난(화재¹⁴), 교통사고¹⁵), 범죄, 안전사고¹⁶)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지속
 - 특히, 대전의 동구, 중구 등 지역은 도시 노후화로 인해 안전등급이 낮은 지역(화재, 교통, 안전사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4등급)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여전히 7대 특별·광역시에 비해 낮은 상황(2017년 재정자립도 57.1%, 재정자주도 74.3%).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대 특별·광역시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¹⁷)

- 지속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성 및 높은 사회적 재난 피해 등을 감안 시, 방재 시설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 필요
- 도시의 노후화 증가로 인하여 각종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피해 우려
- 낮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1인당 지방세 부담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산업·경제분야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생활기반시설, 충분한 문화·여가 활동의 지원,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필요¹⁸)

14) 대전지역 5년 간 연평균 화재발생건수는 1,300여 건,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건수로도 7대 특별·광역시 중 부산, 울산 다음으로 높은 수준

15)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음(※대전 11.63건, 전국 10.13건).

16) 대전지역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낮은 수준.

17) 대전 1,080천원, 7대 특별·광역시 평균 1,37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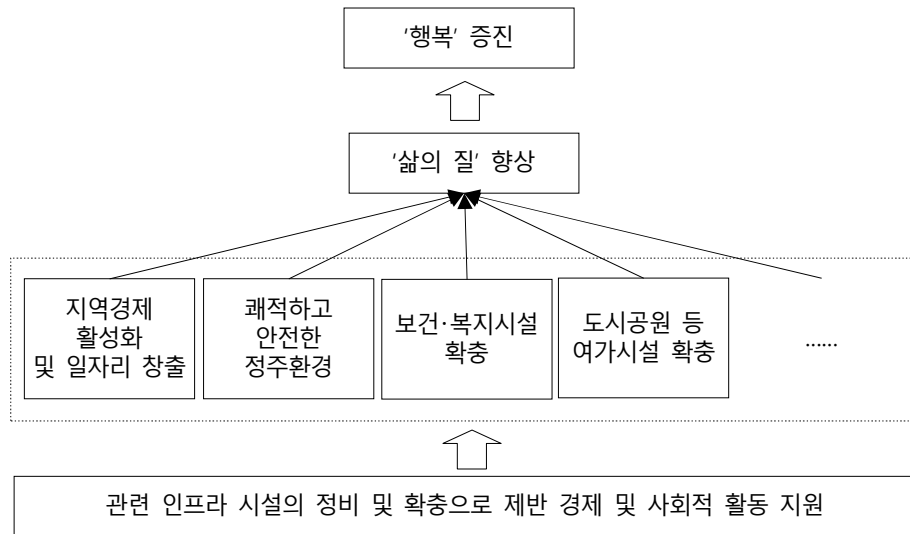
18) 2017년 대전시 사회조사 결과, 향후 대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공원·녹지(21.9%), 국공립 어린이집(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6.

대전광역시

그림 6-1

인프라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 대전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지역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558명 응답)
 - 인프라 투자가 대전 지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전시민들은 3.77점(5점만점)으로 평가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
 - 또한,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쟁력 향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3.55점으로 평가해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인프라 투자 수준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식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도로 및 교통

- 대전의 도로율은 30.8%로서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그러나, 도심 생활권 도로의 평균 주행속도는 전국 최저. 연간 교통혼잡비용은 1조 2,869억원으로 추정
 - 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도로율은 타 특별·광역시보다 높은 30.8%를 기록(2015년 기준) 19)
 - 그러나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로 인하여 대전 시내 18개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는 '16년 기준 시속 22.6km/h임.

19) 서울 22.4%, 광주 24.9%, 대구 23.5%, 부산 21.7%, 울산 17.6% 등.

- 가장 큰 원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오고 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자동차 중심 교통 여건 조성 때문
- 광역시가 관리하는 교량²⁰⁾, 터널²¹⁾ 등 도로시설물의 40.0%가 20년 이상되었고, 30년 이상된 시설물도 14.6%
- 이에 따라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유지관리비 비용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²²⁾되고 있음.

- 대전시의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와 대전도시철도 1호선이 전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세종 광역 BRT 등 착수 지연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축소되고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는 지속적 하락²³⁾

- 대전지역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필요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
- 대전지역 내 대중교통수단의 활용 확대를 위한 도시철도 및 철도시설 확충 필요

○ 산업·경제

- 대전시에 있는 산업단지로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덕특구 등이 있음. 대전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40년이 가까이 된 상황
 - 대덕연구개발특구(3, 4단지), 대전산업단지(1, 2단지)가 사용연수 20년 이상으로 노후 산업단지로 분류됨.
 - 대전산단은 조성된 지 40년 가까이 됨에 따라 노후화 심각. 2009년 9월,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었지만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
 - 대전지역 산업단지의 총 등록업체 수는 1,380개, 가동업체는 1,264개이며, 가동률은 99.0%
- 대전시 전통시장은 총 41개이며, 점포 수는 총 7,977개로 나타남. 30년 이상된 전통시장이 전체의 53.7% 차지. 특히, 40년 이상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개설 연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3개(7.3%),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8개

20) 대전광역시가 관리하는 교량 200개 중 45.5%인 91개소가 20년 이상, 30년 이상도 18.0% 차지

21) 대전광역시 내 42개 터널 중 30.9%가 20년 이상된 터널이고, 30년 이상도 2개가 있음.

22) 포장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2013년 6,606백만원에서 2016년 38,055백만원의 급등.

23) 대중교통 이용객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하철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 3.32점 → 2017년 3.25점(2017년 사회조사 결과).

(19.5%),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8개(19.5%),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9개(22.0%), 40년 이상이 13개(31.7%)로 가장 많음.

- 2017년 전통시장 30개소의 화재 안전등급평가 결과 C등급 이하가 16개소로 나타남. D등급도 5개소임.²⁴⁾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필요함. 특히, 조성된 지 40년이 된 대전산업단지 재생 조속 추진 필요
- 전체 산업단지 가동률이 100%에 가까운바, 신규 산업단지 우선적 공급
- 전통시장의 종합적 방재사업 추진 필요

○ 환경 및 안전

- 대전 상수도의 경년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97.4km에서 2017년에는 1,258.0km로 560.6km 증가
 - 경년관 비율은 2011년 16.4%에서 2017년 31.7%로 급증
 - 사용연수별로 보면, 21~25년 647.8km(16.7%), 26~30년 378.8km(9.8%), 30년 이상 261.3km(6.7%)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관로 유지관리 예산은 전체 상수도 예산의 17.4%에 불과²⁵⁾
- 하수도 시설은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전체의 64.4%를 차지하여 노후화 심각
 - 총연장 3,567km 중 2016년도 기준 사용연수별 하수관로 현황은 10년 미만 418km(11.7%), 10년 이상 20년 미만 853km(23.9%), 20년 이상 2,296km(64.4%)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관로 정비 예산은 미미한 증가세만 보이고 있는 상황²⁶⁾
- 대전시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총 26개소로 동구 1개소, 서구 8개소, 유성구 17개소가 분포되어 있으며, 중구, 대덕구의 경우 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음.
 - 2017년 기준 사용연수 40년 이상 저수지는 대전시에 10개소이며, 용량은

24) 최근 8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6건 중, 전기적 결함이 4건.

25) 예산 투입 현황 : 2010년 15,577백만원 → 2013년 14,672백만원 → 2015년 17,510백만원 → 2016년 25,635백만원 → 2017년 22,734백만원.

26) 불량관로 정비 예산 투입 현황 : 2011년 21,914백만원 → 2013년 29,080백만원 → 2015년 28,533백만원.

17만 1,000m³으로 나타남

• 2017년 대전시 저수지의 53.8%가 준공 후 50년 이상 지나서 내구연한을 초과²⁷⁾

- 소방시설(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소방서가 12개소로 가장 많고, 10년 미만이 7개소, 30년 이상 40년 미만 5개소 등임.
- 2015년 말 기준으로 대전시의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16.64천m²로서 전국 평균인 18.23천m²에 비해 부족한 실정

- 상·하수도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 방치 시 향후 노후화는 더욱 심각 예상. 우선 정비가 필요한 구간부터 조치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우수저감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한 대응 필요

○ 문화 및 경제

- 2016년 기준으로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는 8대 특별·광역시 중 세종, 광주 다음으로 높으나, 전국 평균인 5.14개소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대전지역의 도서관은 모두 24개소로서 연면적은 73천m²로서 8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세종, 울산, 광주 다음으로 적게 보유한 상황
 - 문화시설 중 공공 공연장은 2015년 현재 29개소, 민간 공연장은 30개소로서 민간의 성장세에 비해 공공 공연장은 저조한 증가세
 - 또한 미술관은 5개소, 문예회관은 3개소로 최근 6년 간 증가 없음.
-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 수는 112.52개소로서 전국 평균 규모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공 체육시설의 증가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민간 체육 시설이 큰 역할을 담당

- 도서관, 공공 공연장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공공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시설의 확충 필요

27) 일반적으로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50년으로 축조(저수지 노후화 현황과 대응방안, 배민식).

○ 주거 및 생활

- 대전시내 학교시설 중 30년 이상 건물 수는 300개동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
 - 대전시 학교시설 안전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665동(43.1%), B등급 809동(52.5%), C등급 67동(4.3%), D등급 1동(0.1%) 등임.
 - 대전시 학생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2,488건으로 2010년(1,723건) 대비 약 44% 증가한 추세²⁸⁾
- 대전시 내 공동주택 중 3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전체 885동 중 184동으로서 16.7% 차지
 - 대전시 내의 주택 중 20년 이상 주택이 전체 주택의 51.5%를 차지. 30년 이상 주택도 13.1%에 달하는 실정으로 향후 주택의 노후화가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됨.²⁹⁾
 - 대전시의 빈집은 2만 6,000호로서 전체 주택의 5.6%를 차지. 전국 평균 6.5%보다는 낮으나, 7대 특별·광역시 중에서 부산 다음으로 많은 상황
- 대전시 내 주요 생활 편의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부족 문제도 지속
 - 경로당이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부분(96.7%)을 차지. 복지관 등 타 시설은 절대 부족
 -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도 6대 광역시 평균 수준

- 학교시설 중 안전평가에서 C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학교시설에 대해 우선적 조치 필요
- 주택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
- 주거 유형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

○ 시설물 노후화

- 대전시 내에 소재한 건축물 중 연면적 기준으로는 81.7%(24만 6,838㎡), 건물 수 기준으로는 64.7%(8만 1,459개동)가 20년 이상된 건축물임.

28) 2017년 사회지표 조사 결과, 학교시설의 개보수 필요에 대한 의견은 2013년 16.87%에서 2017년 20.6%로 증가

29)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주택은 43.8%로, 대전의 경우 7대 특별·광역시 중 최고치임.

- 특히, 지역별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차이(연면적 기준)*를 보이는데, 중구 지역 78.1%, 동구지역 76.2%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임.³⁰⁾
- 1·2종 시설물 중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68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3.2%에 불과한 데다 전국 평균인 4.0%를 하회함. 그러나, 2030년 기준으로 추정된 30년 이상 지난 1·2종 시설물은 787개소로서 전체의 37.2%에 이를 전망(전국 36.9%)
- 또한, 대전 지역 내 소규모 취약시설(옹벽, 육교, 전통시장, 지하도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점검시설 313개 시설 중 103개 시설이 미흡 혹은 불량 판정(32.9%)을 받음. 이는 7대 특별·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높음.
- 반면, 후속조치 대상 시설 중 2016. 9월 기준으로 95.8%가 미 조치된 상황으로 대응이 미흡

-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대응 필요
- 특히, 1·2종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 향후 늘어나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대응책 마련 필요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총괄 현황

- 대전의 인프라 예산 편성은 지속적으로 축소. 지난 7년 동안 ‘수송 및 교통’예산은 연평균 0.7%p씩 증가에 불과.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은 연평균 7.4%p씩 감소
-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중 최근 수자원, 산업단지 등 예산의 감소세가 뚜렷. 이는 대전시가 추구하는 ‘과학기반 경제도시’과는 거리가 먼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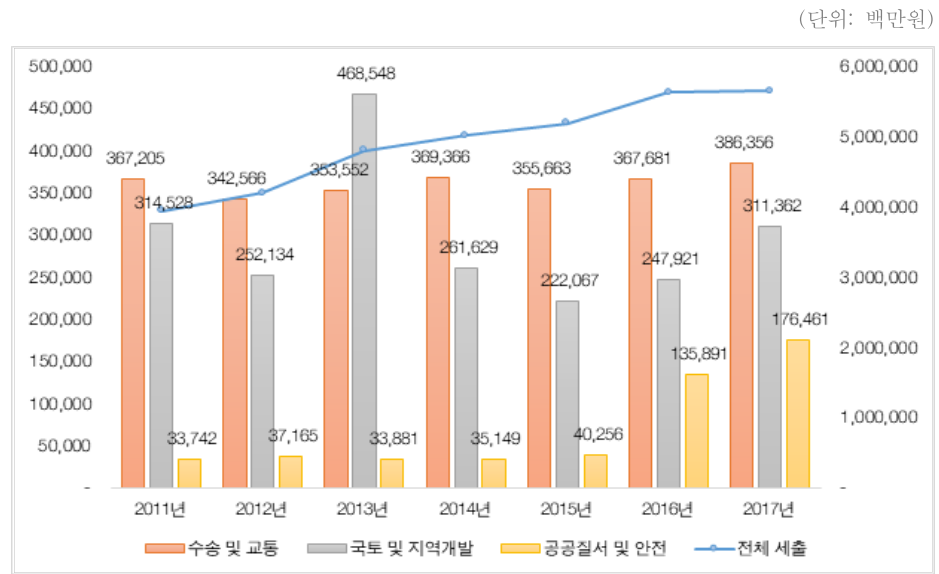
30) 반면, 유성구는 32.3%, 서구 및 대덕구는 각각 64.2%, 65.1%.

6.

대전광역시

그림 6-2

대전시 인프라 예산 편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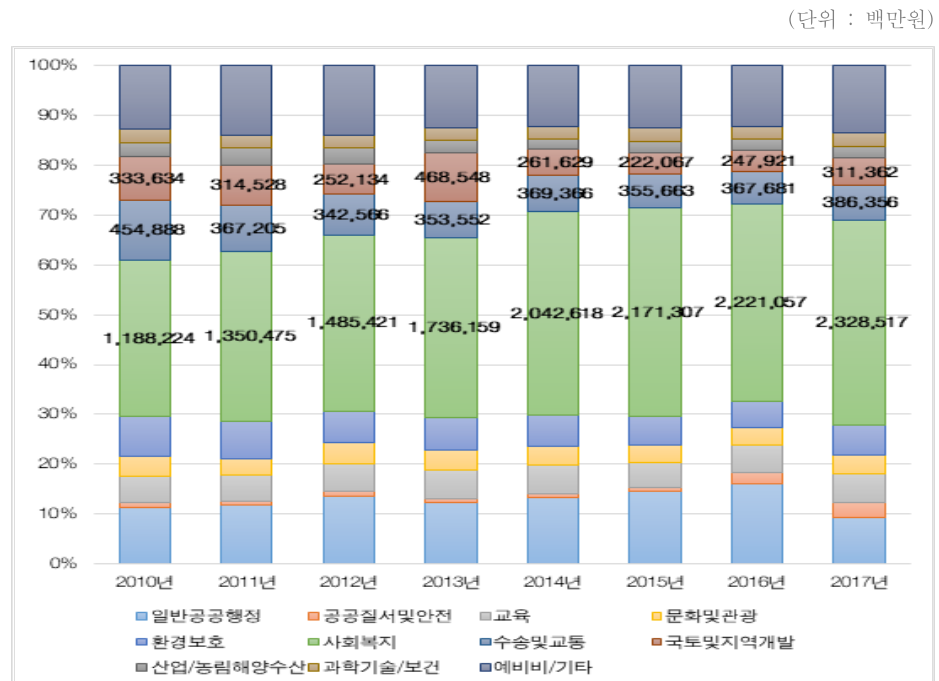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 365

- 이러한 인프라 예산의 축소편성은 사회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그림 6-3

대전시 기능별 세출 예산 추이



자료 : 지방재정 365

2) 부문별 인프라 투자 현황

- 현재 추진 중인 대전지역 내 인프라 사업은 37개사업, 사업비 1조 1,616억원 규모

(단위 : 개, 백만원)

분야	사업 수	사업비	비고
도로기반 시설 확충	15	642,577	
하수시설 정비	6	157,982	
녹색 생활환경 조성	5	70,365	
문화 및 공공시설 확충	13	290,700	

표 6-1

대전시 인프라
사업 총괄 현황

자료 : 2018년 대전시 업무계획.

- 주요 도로 및 교통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 특히, 유지관리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신규 도로건설 예산 감소 뚜렷
 - 신규 도로건설 예산은 2014년 375억원에서 2018년 111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상황³¹⁾
 - 이는 도로관리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³²⁾
 - 현재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시설 97개소 중 내진성능을 만족하는 49개 시설을 제외하고, 내진보강을 실시한 도로시설물은 교량 3건에 불과³³⁾
 - 이와 같은 상황에도 2018년 내진보강 관련 예산은 2개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만 반영
- 산업단지의 경우, 노후산단 재생사업 관련 예산을 2016년부터 본격 반영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아 조속한 노후산단 재생이 어려운 상황³⁴⁾
- 축소하던 원도심 활성화 관련 예산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예산을 최근 확대 편성. 그러나, 2014년 이전 수준에 불과
 - 2018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28억원을 편성했으나 2014년의 139억원에

31) 도로건설 예산 편성 추이 : 2014년 375억원 → 2016년 284억원 → 2018년 111억원
 32) 도로관리 예산 편성 추이 : 2014년 109억원 → 2016년 160억원 → 2018년 311억원
 33) 내진보강 필요 도로시설물 현황 : 교량 44개소, 지하차도 1개소
 34) 산업단지 관련 예산 편성 추이 : 2014년 2억원 → 2016년 21억원 → 2018년 19억원

6. 대전광역시

비해 낮은 수준

- 주거환경개선 예산도 2016년 50억원까지 축소되었다가 2017년 108억원, 2018년 243억원으로 확대. 그러나, 2014년의 191억원 수준
- 공원·녹지 관련 예산은 2018년 크게 확대 편성. 대규모 도시공원(도시 숲) 조성 등에 따른 것임.
 - 중촌시민고원, 장동문화공원, 효동근린공원 등 사업비가 1,100억원 수준. 기존 공원의 재생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은 미흡
- 대전의 3대 하천정비와 관련된 예산 편성이 축소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신동천 등 하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 우려

(단위: 억원)

표 6-2
환경분야 주요
인프라 부문별
예산 편성 추이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생태하천조성사업	62	77	77	85	21
지방하천/소하천관리	87	113	80	48	91
계	149	190	157	133	112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대전광역시 재정공시.

-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대전시의 보수 대상 구간은 총연장 161km로서 약 2,000억원이 소요 예정³⁵⁾
- 현재 상수관로 경년관은 1,258km에 달하고 있으나, 2018년 예산에 편성된 노후 상수관 정비 구간은 13.4km에 불과 ⇒ 향후 노후화 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급
 - 2018년 관련 예산은 노후관 개량공사 66억, 블록구축정비사업 24억, 상수도 정비공사 26억 등 116억원 편성

3) 중기 인프라 투자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투자는 전체 예산 대비 각각 10.7%, 6.7% 비중 전망

35) 긴급구간 52km 774억원 소요 예정. 일반구간 109km 1,284억원 소요 예정.

-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연평균 17.0%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이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에 대한 예산 반영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
-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연평균 25.0%씩 감소시킬 예정

(단위 : 십억원, %)

구분	증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 및 교통	436	528	645	779	816	3204	10.7
도로	120	140	190	207	381	1,039	3.5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59	124	223	340	216	962	3.2
국토 및 지역개발	256	263	232	231	218	1,201	4.0
수자원	529	405	483	411	167	1,996	6.7
지역 및 도시	24	26	24	16	16	106	0.4
산업단지	479	347	409	376	150	1,761	5.9

자료 : 대전광역시 2018~22년 증기지방재정계획

- 4차 산업혁명특별시 육성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나,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데까지 다양한 난제들이 많은바, 투자 계획의 실행력 부족 우려
- 도로 관련 예산도 신규보다는 기존 도로의 완공, 그리고 사업 착수가 지연 중인 사업 위주로 편성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	비고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2010~19	971억원	1.0km
용운주공2단지 주변도로 개설	2018~21	150억원	0.43km
서대전IC~두계3가 확장	2017~22	553억원	5.54km
대도주유소~신탄진변전소간 도로 확장	2020~24	90억원	760m
백골1길 확장	2015~19	77억원	650m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 개설	2019~23	827억원	2.4km
시도안~세동간 광역도로 개설	2017~20	50억원	1.9km
용수골~남간정사 도로 개설	2018~23	300억원	450m
경부고속도로 회덕 IC 연결도로	2018~23	721억원	840m
도안대로	2015~19	884억원	1.9km
신갈마로 지중화사업	2016~18	73억원	-
관내 도로포장 정비사업	2018~22	201억원	

자료 : 대전광역시 2018~22년 증기지방재정계획.

표 6-3

증기 SOC 예산의
부문별 재정 계획

표 6-4

도로교통분야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계획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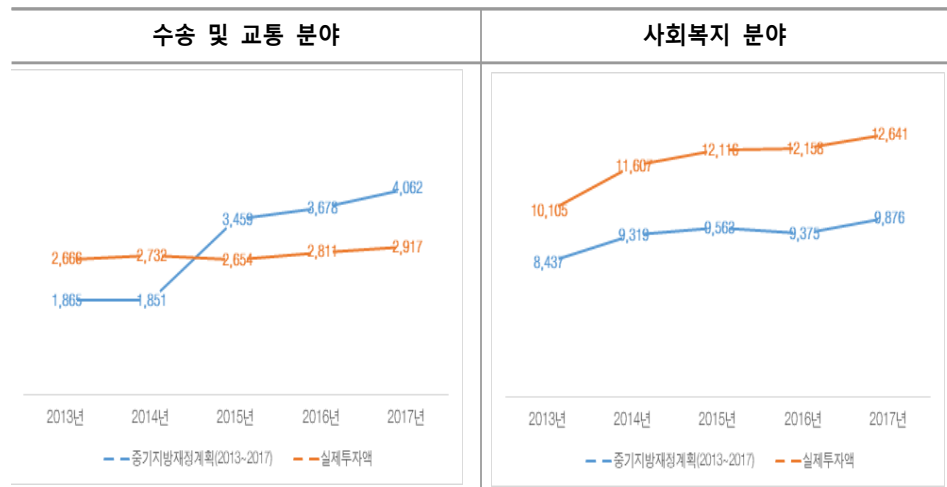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4) 인프라 투자 정책의 문제점

- 사회복지 투자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지역 발전 저해 우려
 - 2011년에서 2017년까지 7년 간 국토 및 지역개발 지출은 연평균 2.8%씩 감소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지출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7.2%씩 감소
 - 반면, 2011~2017년까지 7년 간 사회복지 예산은 연평균 9.0%씩 증가
- 인프라 정책 부재로 당초 인프라 투자 예산도 실행력이 부재하여 의도한 인프라 투자 목표 달성 미흡
 -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입된 수송 및 교통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투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축소 실행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확대 편성

표 6-5

20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
사회복지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년도 예산서.

- 인프라 분야 투자의 일관성 저하로 인프라 사업들의 공기 지연³⁶⁾ 및 사업 지연³⁷⁾ 발생. 조기 안전 확보 미흡
 - 2013~17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핵심 도로 인프라 투자사업들이 시행되지 못

36) '대도주유소~신탄진변전소간 도로 확장'사업은 당초 공사기간이 2015~2018년이었으나, 현재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0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 예정, 동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착수 연기).

37) '천동지하차도~천동차도간 확장 공사'는 당초 2015년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18년 중 준공 예정, '가오동길 확장사업',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사업' 등도 1년 이상 공기 연장.

하였거나 공기가 늦어짐.

- 도로사업뿐만 아니라 여타 부문의 인프라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지연
 - ‘중촌근린공원’과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016년 준공예정이었으나, 각각 2018년, 2019년으로 미루어진 상황
 -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당초 2020년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추진 상황상 2023년 이후 준공 예정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도 당초 2017년까지 31개소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2017년 국비 확보를 계기로 본격 추진 예정)
- 각종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 계획 대비 사업완료 시점이 지속적으로 늦어져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 사업 종료 시점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
 - 학하지구 도시개발 사업 : 당초 2006~20년→ 2006~022년(2년 연장)
 - 구봉지구 도시개발 사업 : 당초 2010~17년→ 2010~22년(5년 연장)
 - 평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 당초 2007~18년→ 2007~21년(3년 연장)

5. 지역민 설문조사

-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558명),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만족도와 안전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프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
- 인프라 성능 및 인프라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의 평가를 하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프라 성능 :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 그러나, 지역간 격차가 커 대덕구는 2.91점으로 보통이하 평가
 - 인프라 안전 수준 : 5점 만점에 3.10점으로 보통 정도로 평가
- 그러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동구(2.88점), 대덕구(2.79점)에서는 보통 이하로 평가
- 시설별로도 발전소, 산업물류단지, 재해방지시설, 전통시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도를 낮게 평가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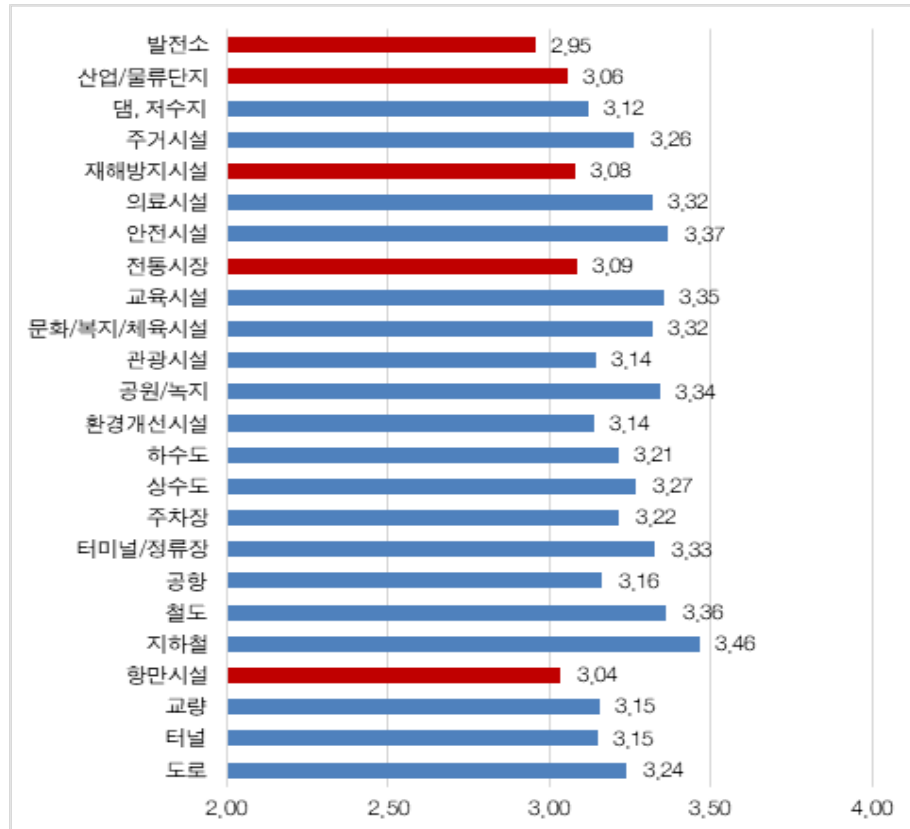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6.

대전광역시

그림 6-4

대전시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 대전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 인프라 투자 수준 : 5점 만점에 2.88점에 불과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도
 -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 사고 등)에 대한 안전도는 5점 만점에 3.13점으로 보통 평가,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에 대한 안전도 역시 5점 만점에 3.16점으로 보통 평가

-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 시/도 재정과 개인 부담이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6.9%로 가장 높음.
 -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3.4%로 가장 높음.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2순위인 19.2%로 나타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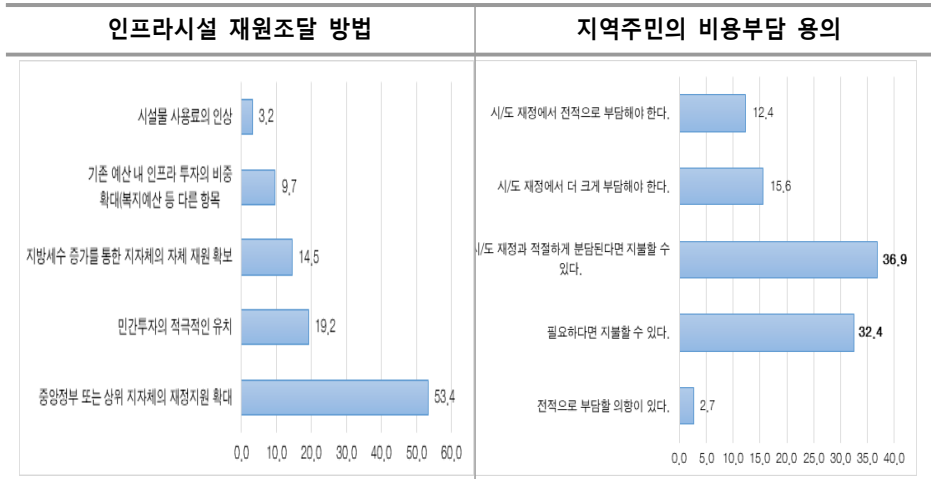


표 6-6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용의 및 자원조달 방법 평가

- 타 지역에 비해 대전지역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 (부족하다 22.2%, 충분하다 19.2% 등).
 - 부족하다는 인식의 가장 큰 원인은 ‘각종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협 및 편의성 저하’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협 및 편성 저하’가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 등 지역경제의 위축’ 27.4%,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 22.6%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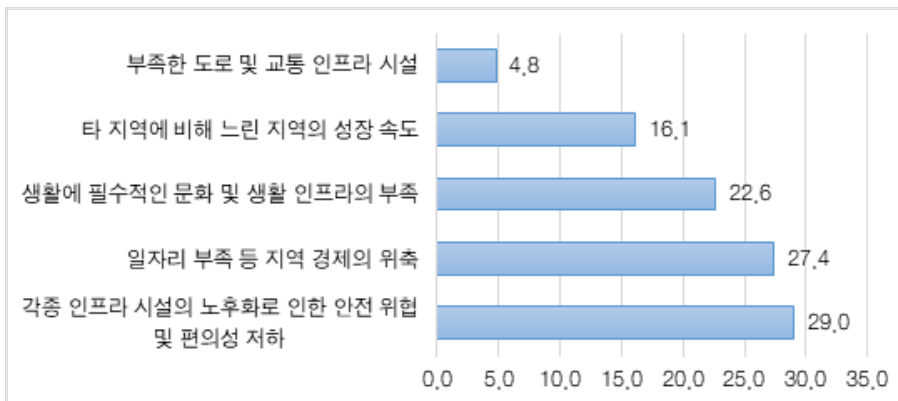


그림 6-5

대전시 인프라시설의 충족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의 사유

- 대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해 ‘도로, 도시철도

6.

대전광역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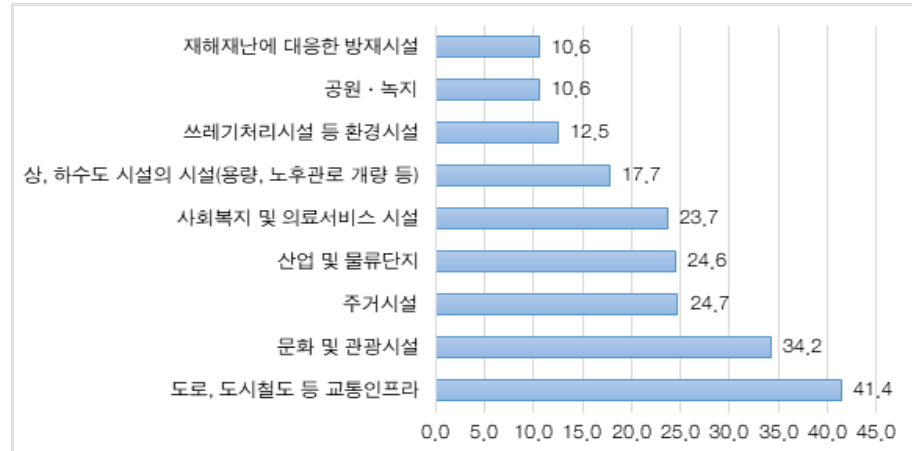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등 교통인프라'가 41.4%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시설' 34.2%, '주거시설' 24.7%, '산업 및 물류단지' 24.6%,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 23.7% 순

그림 6-6

대전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6.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 대전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저하는 단기적으로 지역민 불편 및 부담 증가, 지역생산 및 고용에의 악영향 등을 유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경쟁력 저하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그림 6-7

인프라 투자 축소의 문제점



- 대전의 인프라 실태진단, 인프라 투자정책,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출된 인프라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인프라 전략이 요구됨.
- 둘째, 대전시가 향후 발전모델로 지향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반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
- 셋째,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
- 넷째, 지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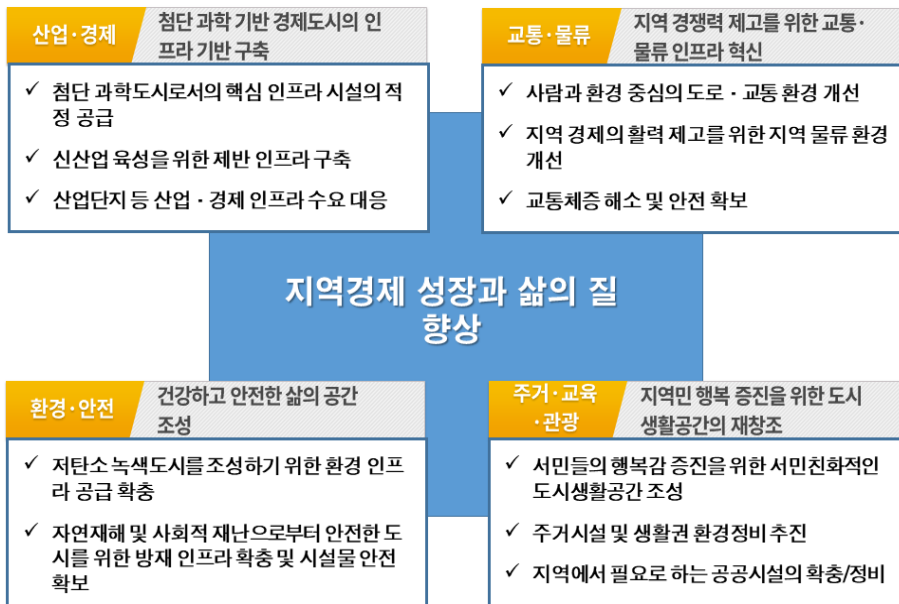


그림 6-8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음. 총 프로젝트 수는 35개 프로젝트이며, 총 금액은 7조 6,107억원 규모임.
- 산업 및 경제분야,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프로젝트’ 등 19개, 1조 9,344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조기 착수’ 등 4개, 2조 3,903억원
- 환경 및 안전분야, ‘도시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 등 4개 사업 4,155억원 (노후 상수관로 개선 사업 및 도시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은 제외)
- 주거 및 도시분야,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설립’ 등 9개, 3조 7,561억원

6.

대전광역시

6.

대전광역시

표 6-7

본 연구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요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산업 · 경제	유전자의약산업 진흥센터 건립	2017~21	500	
	로보틱 실버타운 시범단지 조성		3,000	
	바이오 농업치유센터 조성		400	
	국방 ICT 첨단산업 육성		1,021	
	융복합 콘텐츠 미니클러스터		900	
	미래 핵심소재산업 융합플랫폼		1,400	
	IoT기반 첨단센서 산업 육성		1,014	
	대덕특구 융합 공동연구 활성화		681	
	연구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54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센터 건립		480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터 융합센터 구축		1,000	
	AI 특화 SW산업 융합캠퍼스		500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단		-	
	신기술 Test-Bed 융복합 콤플렉스		1,000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최적화 도시 인프라 구축		1,480	
	4차 산업혁명 체험·전시관	2018~20	244	
	IoT기반 스마트 빌리지	2017~21	940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2017~19	100	
	메이커 문화 플랫폼 구축	미정	366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3,778
소계			9,936	
교통 · 물류	대전 외관순환도로 교통망 구축	2018~22	11,197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2014~25	6,407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조기 착수	2016~21	2,107	
	유성광역복합센터 건립	2013~20	4,192	
소계			500	
환경 · 안전	하수시설 개량 및 건설사업	2017~20	2,334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	2018~	-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보강사업	2018~	-	
	고도정수처리시설 조기 도입	2018~21/ 2023~26	1,821	
소계			2,724	
주거 · 도시 · 문화	라온바이오융합의학연구원 설립	2019~23	5,361	
	대전의료원 설립	2018~21	1,315	
	국립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미정	416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조기 활용	미정	800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19~21	954	
	대전역세권 개발	2018~25	16,958	
	신탄진 차량 정비창 이설사업	2018~20	380	
	중앙로 프로젝트	2018~20	360	
	맑은 물 재생센터 조성	2-21~25	11,017	
소계			38,583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특히 조건부 보조금(Matching Fund)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반납 사례 최소화 필요
- 지자체 스스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과 주민요구의 대응능력 제고 필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지속 추진 필요
 -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효율화 필요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하고 계약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검토
 - 도시재생 사업 추진 활성화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운용 필요
 - ※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도시재생법」에 의거 특별회계(기금) 운영 중
 - ※ 이 외에도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가능
-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신뢰구축을 통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자 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 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 필요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유형의 민자사업활성화 필요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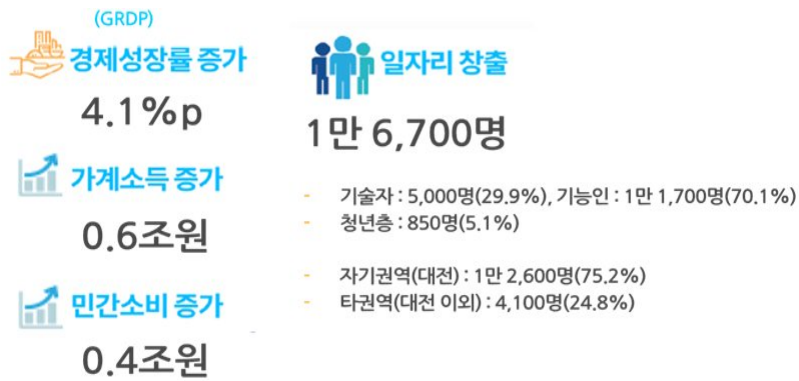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 노후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개량·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필요(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설치 검토

-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전의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약 11.4%를 차지.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수는 약 6만 2천여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8.0%를 차지하는 지역경제 중추 산업
 - 최근 대전 건설기업의 경우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역대 발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이중고(二重苦) 현상 만연

- 대전 건설기업은 타 광역시의 업체보다 역대 발주공사 의존도가 높은 수준(36.0%)이나, 최근 7년 평균 역대 공사 수주 비중은 34.7%에 불과
 - 수주물량 감소와 함께 대전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기업이 해당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 등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 공사 분할 발주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운영 필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 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 필요,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행체계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등 조례 내용의 실효성 제고

- 대전 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경제적 파급효과
 - 현 인프라 프로젝트 중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들의 추진으로 1년에 1만 6,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 예상
 -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1년에 4.1%p 증대 효과 발생 예상



주 :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2017), 2014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정.

그림 6-9

대전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연평균)

별첨 1. 핵심 프로젝트

1) 산업경제 :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프로젝트

○ 사업추진 배경

-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는 것을 대전시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이에 따라 2017년 12월,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비전」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전시는 2017년 7월,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음.
-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과 관련한 인프라 시설 수요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산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행정 건축물 수요와 기업들의 집적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수요가 대표적임.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있어서는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스마트시티 실증화

6.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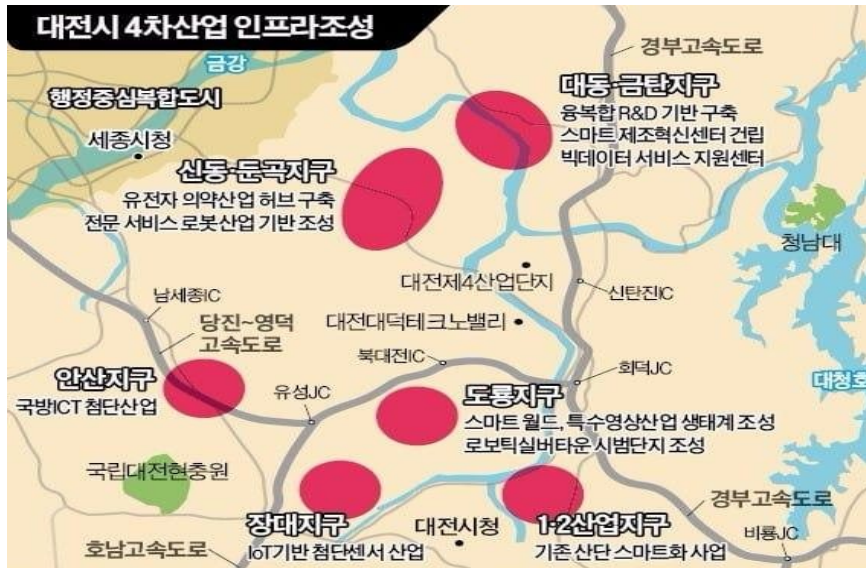
단지 조성' 등이 제시됨.

- 대전시를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대전시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산업'으로서 지속적인 국가 재정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둘째,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큰 산업단지 등 사업기반 시설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재정적 한계와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의 창의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대 전략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형 신산업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실증화 구현
24개 과제 (안)	① 대학(청년) 혁신 창업 Start-up 타운 조성 ② 기술 아이디어 융합 네트워크 구축 ③ 4차 산업혁명 국제 박람회 개최 ④ 시 기반 맞춤형 인재 양성 연결 시스템 마련 ⑤ 스마트 지방행정 서비스 4.0 추진 ⑥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조성	① 바이오 의약산업 허브 구축 ② 국방 ICT 첨단 산업 육성 ③ 융복합 콘텐츠 미니 클러스터 조성 ④ 미래 핵심소재산업 융합 플랫폼 구축 ⑤ IoT 기반 첨단센서 산업 육성 ⑥ IoT 기반 에너지 공유 거래시장 선점	① 대덕특구 융합 공동연구 활성화 ② 연구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건립 ③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센터 건립 ④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융합 센터 구축 ⑤ AI 특화 SW산업 융합캠퍼스 조성 ⑥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① 신기술 테스트베드 융복합 콤플렉스 조성 ② 스마트에너지 최적화 도시 인프라 구축 ③ 4차산업혁명 전시·체험관 운영 ④ IoT 기반 스마트 빌리지 조성 ⑤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⑥ 메이커 문화플랫폼 조성

○ 사업내용

-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비전'의 24개 과제 중에서 인프라와 관련한 개별 사업은 총 19개 사업들로서 전체 사업비 1조 4,566억원(산업단지 조성비 민자 1조 1,666억원 미포함) 규모임.



자료 : 한국경제신문, 2017.5.23.

-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비전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 관련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는 바이오의약산업 허브 구축, 국방 ICT 첨단산업 육성, 특수영상과 융복합 콘텐츠산업 조성, 사물인터넷(IoT) 기반 첨단센서 산업 육성 등의 인프라 사업이 예정됨.
 - 지원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대덕특구 융합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센터 건립,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융합센터 구축, AI 특화 SW산업 융합캠퍼스 조성,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
 - 실증화 구현을 위해서는 신기술 테스트베드 융·복합 콤플렉스 조성, 친환경 에너지제로시티 시범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체험·전시관 운영, IoT 기반 스마트 빌리지 조성,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메이커 문화플랫폼 조성 등을 추진함.

6.

대전광역시

6.

대전광역시

(단위 : 억원)

	사업명	사업비	위치	비고
1	유전자약산업 진흥센터 건립	500	둔곡	
2	라온바이오 융합의학원 설립	2,000	신동	
3	바이오 농업치유센터 조성	400	대동·금탄	
4	국방 ICT 첨단산업 육성	1,021	안산	
5	융복합 콘텐츠 미니클러스터	900	도룡	
6	미래 핵심소재산업 융합플랫폼	1,400	대동·금탄	
7	IoT기반 첨단센서 산업 육성	1,014	장대	
8	대덕특구 융합 공동연구 활성화	681	대덕특구	
9	연구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540	대덕특구	
1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센터 건립	480	대덕특구	
11	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터 융합센터 구축	1,000	둔곡	
12	AI 특화 SW산업 융합캠퍼스 조성	500	둔곡	
13	4차 산업혁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	대동·금탄	
14	신기술 Test-Bed 융복합 콤플렉스 조성	1,000	대동·금탄	
15	친환경 스마트에너지 최적화 도시 인프라 구축	1,480	대전시 일원	
16	4차 산업혁명 체험 전시관 운영	244	도룡	
17	IoT기반 스마트 빌리지	940	도룡	
18	스마트 스트리트 조성	100	도룡	
19	메이커 문화플랫폼 구축	366	충남도청사 부지	
	계			

-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추진 과제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조 8,000억원임. 국비가 9,584억원이며, 나머지는 시비 및 민자사업을 통하여 조달한다는 계획임.



자료 : 대전시.

○ 사업추진 방향

- 사업의 특성상 국비의 안정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국비 조달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정부의 대전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 유도 필요
- 사업별로는 2023년까지 가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조기에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지원 인프라의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
- 대전시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연관 사업 발굴 및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 및 토론회 개최로 사업 추진에 대한 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기대 효과

-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도시로서 연구, 실증, 산업화를 연계한 4차 산업혁명의 선점으로 지역경제 성장 도모
- 4차 산업혁명의 성공모델 창출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먹거리 확보
- 의료, 환경, 복지, 안전 등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2) 주거·도시 문화 :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추진 배경

- 대전역 인근 원도심은 충남도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음. 대전시는 이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

6.

대전광역시

해 촉진지구 지정을 비롯해 새로운 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있음.

- ‘대전역세권지구’는 대전지역 8개 재정비촉진지구 중 하나로 2007년 지정. 대상지역은 동구 삼성동, 소제동, 신안동, 정동, 원동, 대동 일원의 88만 7,000 m²임.
- 대전시는 촉진계획을 수립하며 ‘대전역 주변 낙후지역을 미래형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천명. 계획이 출발할 당시 둔산권 개발과 서남부 개발로 소외된 동구와 중구의 지역민들은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였음.
- 그러나, 대전역세권 개발의 핵심으로 초고층 상업시설이 꼽히는데, 수많은 유동인구가 역세권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민자 유치가 번번이 불발되며 사업이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
- 대전역세권 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철도 관련 인프라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대전시가 국립철도박물관을 대전에 건립하기 위해 유치전에 나섰다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음.
 - 이에 따라 대전역세권지구 개발은 2025년으로 목표연도가 연기된 상태임.

○ 사업 내용

- 대전역세권 개발은 크게 3가지로 예정되어 있음. 대전역 복합 2구역 개발사업과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 확보, 철도박물관 유치 및 관사촌 복원사업 등임.
- 대전역 복합 2구역 개발사업은 1조 4,900억원 규모로 대전역 동광장에 민자 유치를 통하여 지역균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53층 규모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하는 것임.
-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 확보는 560억원의 기부채납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부지 면적 1만 5,000m² 촉진계획에 따른 부지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기반시설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진행할 예정

- 철도박물관 유치 및 관사촌 복원사업은 동구 신안동 일원 60,000㎡에 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철도 문화유산인 철도 관사촌 일부 40여 동을 복원하는 사업임.



자료 : 대전시.

- 2019년까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될 6개 사업에 약 1조 6,958억원을 선도적으로 집중 투자하여 대전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으로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아직 미흡

- ①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 : 1조 4,900억원(민자 유치) / 2015.6 ~19.12
 - 대전역 동광장에 민자유치로 53층 규모 랜드마크를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추진
 - 현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 상반기 결정(대전시) 후 민자유치 공모(철도공사)
- ②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 확보 : 560억원(기부채납)
 - 부지 면적 : 15,000㎡ /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부지 확보(560억원, 철도공사)
 - (계획) 공공시설 및 대전~세종간 BRT 기종점 / 기반(도로)시설 국·시비 지원
- ③ 철도박물관 유치 및 관사촌 복원사업 추진
 - 동구 신안동 일원 60,000㎡ / 지리적 입지 등 상대적으로 유리, 지가 부담
 - 철도 문화유산인 철도 관사촌 일부 복원사업 / 40여 동 / 복원화 계획 수립

6. 대전광역시

6.

대전광역시



-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53층 초고층 랜드마크를 짓는 복합2구역 이외에 복합1구역도 사업 여건이 안 돼 어려운 상황에 있는바, 이에 대한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이행이 요구됨.

○ 기대 효과

- 대전역세권 개발은 원도심 개발에 있어 핵심 사업으로서 대전역의 개발을 통하여 동서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제7장 울산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2018년 SOC 예산은 2017년 22.1조원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 계획
 - 201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25조원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SOC 투자 축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SOC 투자의 과도한 축소는 경제성장 기반 약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 안전 위협과 복지 수준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울산지역도 SOC 예산 축소와 인프라 노후화 가속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울산광역시의 인프라 실태조사와 관련 정책 진단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 지역 내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수행
 - 시민들의 인프라 수요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핵심 인프라 사업 분석
 - 울산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전략과 정책방향 제시
-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울산발전연구원은 공동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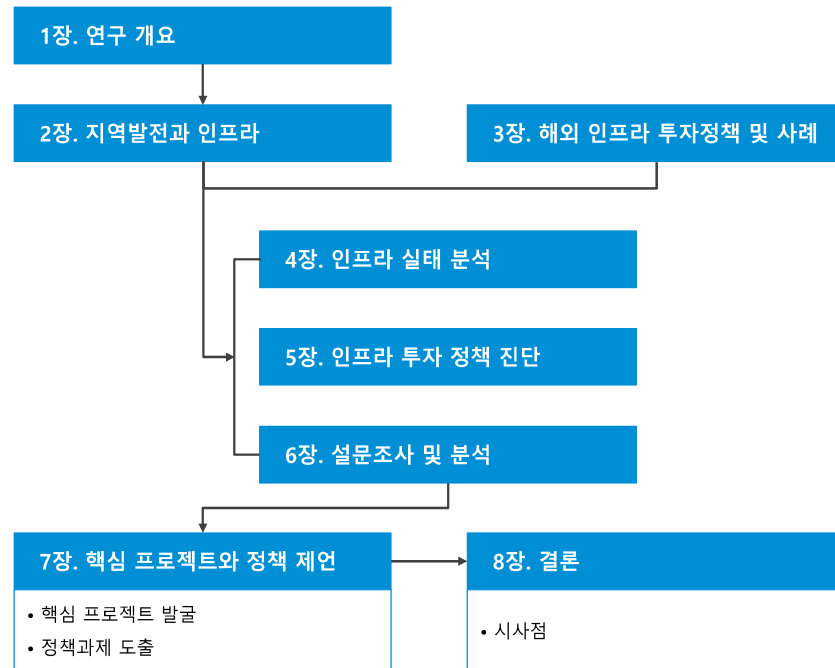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으로 울산광역시의 인프라 실태조사, 투자 수요, 핵심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본 연구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2장), 해외 사례(3장), 울산광역시의 인프라 실태(4장), 울산 인프라 투자정책(5장), 울산시민 설문조사(6장), 울산 인프라 투자 방향과 핵심사업(7장), 정책제언 및 시사점(8장)으로 구성됨.

그림 7-1

연구보고서의
체계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 (인구) 2016년 기준 울산광역시의 인구성장률은 0.42%로, 전국 평균인 0.45%와 비슷한 수준이나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

- 울산광역시의 노령화지수는 2016년 기준 66.1로 전국 평균인 98.6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노령화 추이는 지속될 전망이다.

- (지역경제) 2016년 울산광역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1.2조원이며, 기초가격 기준으로 건설업은 약 5.2%(2조 8,458억원)를 차지함.

- 건설업은 제조업(63.1%)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울산광역시 내

GRDP의 기여도가 높은 경제활동임.

- (지역발전)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산업 및 경제시설 등이 있으며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산업 및 경제시설 유치의 근간이 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유인함.
 - 지역내총생산(GRDP)의 증가는 인구 증가와 맞물려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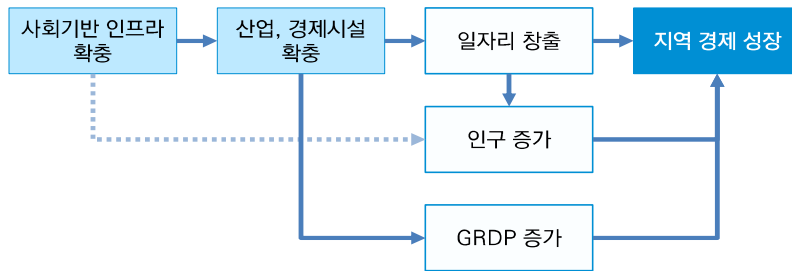


그림 7-2

지역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 (삶의 질) 개인의 삶의 질은 기본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요구 만족 등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인프라 시설 확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 교통, 상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등은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인프라 시설물임.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증가 및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됨. 또한 문화, 체육, 의료 시설 등은 개인의 복지 요구를 만족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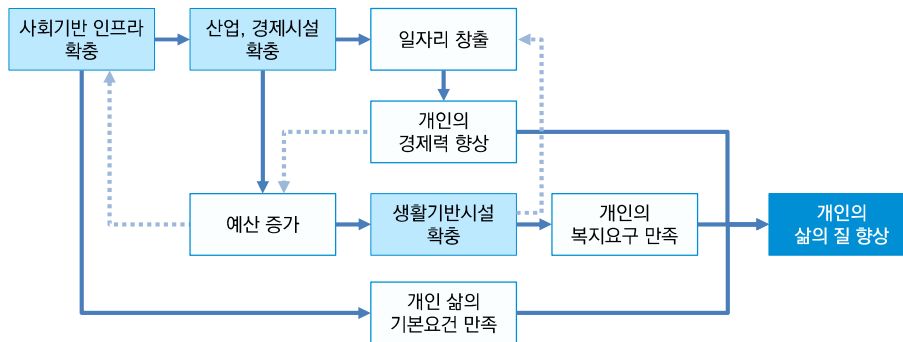


그림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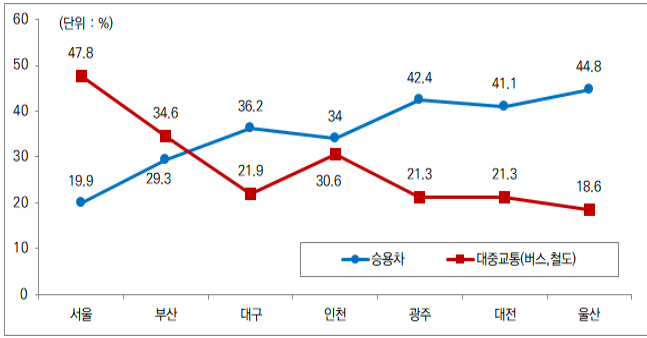
삶의 질과
인프라의 관계

7.

울산광역시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교통시설

구분	주요 내용
도로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의 도로연장은 3,442km(미포장 연장 233km, 미개설 연장 888km)이며,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은 1.9로 7대 특별광역시 평균 2.2보다 낮음. · 전체 도로의 포장률은 96.9%로 7대 특별광역시 평균 93.6%보다 양호하나, 4차로 이상의 포장도로 비율은 29.4%로 7대 특별광역시 중 서울(23.7%) 다음으로 가장 낮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0년 간 광역시도 포장 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이후 보수 건수 연평균 20.1%, 보수연장 연평균 3.2%, 보수예산 연평균 9.6% 증가를 보임. · 포장도로 연장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후화로 도로 파손 및 결함 증가가 예상되며, 사전적인 유지보수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함.
도로 교량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내 도로교량 수는 637개소(고속도로 144개소, 일반국도 116개소, 지방도 3개소, 광역시도 109개소, 구군도 265개소)가 존재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종 도로교량 중 20년 이상 노후 교량은 49개(울산 전체 교량의 35.8%), 40년 이상 노후된 교량 6개소(4.3%)가 존재함. · 10년 경과 시 울산 내 20년 이상 노후 교량은 97개소(약 67.9%)로 급증할 예정임. · 도로교량 중 보수 및 보강이 필요(B등급 또는 보통등급 이하)한 교량은 116개소(B등급 98개소, C등급 6개소, E등급 1개소, 보통 11개소)가 존재함. · 도로교량 유지관리 대상과 보수 건수/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진설계 미적용 도로교량은 47개소임.
철도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내 철도역사는 8개(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7개)가 존재하며, 남북 축 방향으로만 74.5km가 구축되어 있음. · 도시철도의 부재로 울산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버스+철도)은 18.6%로 7대 특별광역시 중 최하 수준임.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중심 교통 체계로 인해 교통혼잡비용 증가율은 10년 간 연평균 5.1%로 가장 높아 대체 교통수단 및 교통망 공급을 통한 개선이 시급함.
	특이사항 없음.

○ 물관리시설

구분		주요 내용
상수도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의 일반상수도 보급률은 99.0%(전국 97.3%), 급수보급률은 99.4%(전국 98.8%)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됨. · 울산 유수율은 2016년 90.1%, 2017년 88.5%로 전국 84.3%보다 낮고, 누수율은 6.7%(전국 10.9%)로 양호함. · 사연댐 수위조절로 인한 주요 상수원 적정수위 확보 어려움, 낙동강 하굿둑 개방으로 인한 안정적 원수 공급 어려움으로 안정적 원수 공급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의 상수관로 총연장은 3,152km이며,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관로는 1,141km(약 36.2%)로 전국 평균인 32.3%보다 높은 수준임.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내용연수(30년)를 초과한 경년관은 송수관 23km, 배수관 101km, 급수관 128km이며, 10년 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수도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하수관로의 총연장은 4,129km로 2006년 대비 46.7% 증가하였고, 보급률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80.4%로 전국 79.9%보다 높음. · 2017년 현재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언양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설치공사, 서생 온곡 소규모 하수도설치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UIS 지하매설물자료 기준 하수관로의 총연장은 3,458km이며, 사용연수 20년 이상 관로는 1,788km(51.7%)로 파악됨. · 관종별로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는 합류관(85km), 우수관(922km), 오수관(623km), 기타(157km) 순임. · 5년 후 사용연수 20년 이상인 관로는 5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침수저감시설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에는 배수펌프장 11개, 배수장 12개, 우수저류지 8개 등의 도시방재시설이 있으며,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총 21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임.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수펌프장은 모두 남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신정, 야음 2개소임. · 집중호우 및 하천 범람 시 피해저감 목적의 배수장 12개소 중 20년 이상 시설은 중구 3개소, 북구 2개소, 울주군 1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하천 홍수 대비 시설인 저류장 8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은 중구 3개소, 북구 2개소, 울주군 1개소가 있음.

○ 주거 및 교육시설

구분		주요 내용
교육 시설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내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시설은 총 246개교(유치원 6개, 초등학교 117개, 중학교 63개, 고등학교 56개, 특수학교 4개)이며, 시설물 수는 1,022개 등이 존재함. · 초등학교 시설물은 500개 동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리적으로는 울주군 범서읍과 북구에 학교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최근 교육시설 안전문제 대두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도 증가 추세임.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내 2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물은 전체의 40.7%에 해당하는 415동이며, 연평균 29.2동씩 증가하고 있음. · 안전평가 기준 D등급 시설은 없으며, C등급 시설은 25동(2.5%)으로 양호함. · 울산 내 폐교는 1990년대 11개소, 2010년 이후 10개소이며, 폐교 중 활용 건수가 17건(80.9%)로 자체 활용도가 높음.
주거 시설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의 주거시설은 총 361,273호로, 아파트 256,003호(70.9%), 단독주택 66,662호(18.4%), 다세대주택 24,836호(6.9%), 연립주택 7,575호(2.1%), 비주거용건물 내 주택 6,197호(1.7%)로 구성됨. · 주택보급률은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107.3%임.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은 39,699호로 약 11.0%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노후 주거시설 비율 약 16.8%보다 낮음. · 주거시설 종류별로는 단독주택(57.9%, 39,699호), 아파트(29.8%, 11,826호)의 노후 비율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중구 17.4%, 남구 11.7%, 동구 9.7%, 울주군 9.5%, 북구 5.4% 순임.
도시 재생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모두 13개소로, 경제기반형 1개소, 근린재생중심시가지 2개소, 근린재생 일반 10개소이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은 3개소임. · 울산은 시 차원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없이 구·군별 도시재생지원센터 4개소만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울산 내 도시재생 관련 정책 및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산업 및 경제시설

구분		주요 내용
전통 시장 등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의 전통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56개소(전통시장 53개소, 농수산물 유통시설 3개소)임. · 시장경영진흥원(2012)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평가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력 보통 이상'인 B, C 등급이 27개소(67.5%)이며, '경쟁력 낮음'인 D, E 등급이 13개소(32.5%)로 조사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은 전체의 73.2%인 41개소(전통시장 40개소, 농수산물 유통시설 1개소)임. · 중소기업청(2015) 전통시장 화재발생 현황 조사 결과, 울산 전통시장의 소화기 불량 및 미설치율은 63.2%로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동확산 소화장치 미설치율 74.6%,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25%, 소방차 및 소방대 진입로 미확보 15% 등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산업 단지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산업단지는 총 27개소(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21개소, 농공단지 4개소)임. · 현재 조성이 진행 중(분양, 조성, 보상, 준비 등)인 일반산업단지는 총 10개소로, 공영개발 5개소, 민간개발 4개소가 조성 중에 있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의 일반 산업단지는 지정 경과년수가 모두 20년 이내로 양호하나, 석유화학단지 지하배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 석유화학단지 지하배관 중 화학관의 35%(527km), 가스관의 55.9%(330km), 송유관의 45.6%(78km)가 20년 이상 경과하였음. · 석유화학, 정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 석유화학단지 제조업체들의 43.1%는 20년 이상 노후 업체로, 미포국가산단 업체의 50%(69개사), 온산국가산단 업체의 30%(31개사)가 이에 해당됨.

○ 기타 시설

구분		주요 내용
문화 시설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광역시의 문화시설은 총 40개소로, 인구 백만 명당 문화시설 비율이 34.3개로, 7대 특별·광역시 중 광주, 서울, 대전 다음인 4번째에 해당됨. · 7대 특별·광역시 중 미술관이 없는 지역은 울산이 유일함(현재 건립 중인 울산시립미술관 2020년 준공 예정).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문화시설은 7개소(17.5%)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4개소), 박물관(1개소), 문예회관(1개소), 지방문화원(1개소) 등임. · 28년 경과한 울산남부도서관은 시설 노후화로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이며, 48년 경과한 남구문화원은 시설개선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임. · 문화원, 문화의집의 경우 설립 및 운영, 유지관리의 법적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자원 확보가 어려움.
체육 시설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내 체육시설은 11개소로, 인구 1만 명당 개소 수는 4.7로 서울(2.8)을 제외한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음. · 그러나 대규모 체육시설 공급이 많아 인구 1만 명당 면적(48)은 인천(51) 다음으로 높음. · 현재 제2실내종합체육관, 울주종합체육공원 건립이 추진 중에 있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의 체육시설은 2000년 이후 신축한 시설이 대부분이며, 20년 이상 노후 시설은 중하체육관(40년), 울주군민 체육관(24년)임. · 중하체육관은 2010년 시설개선사업, 2015년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마쳤으며, 울주군민 체육관은 2009년 시설 개선, 2016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가 확보되었음.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울산광역시 인프라 투자 현황 및 계획

- 울산광역시의 인프라 관련 예산(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2011년 이후 증가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음.
 - 2012년 울산시의 세출 규모가 1조 9,353억원에서 2016년 2조 5,968억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SOC 관련 항목의 증가율은 이보다 낮은 양상을 보임.

- 공공질서·안전 : 492억(2012년) → 1,214억원(2016년), 연평균 25.3%
- 수송 및 교통 : 3,102억(2012년) → 3,373억원(2016년), 연평균 2.1%
- 국토·지역개발 : 983억(2012년) → 1,726억원(2016년), 연평균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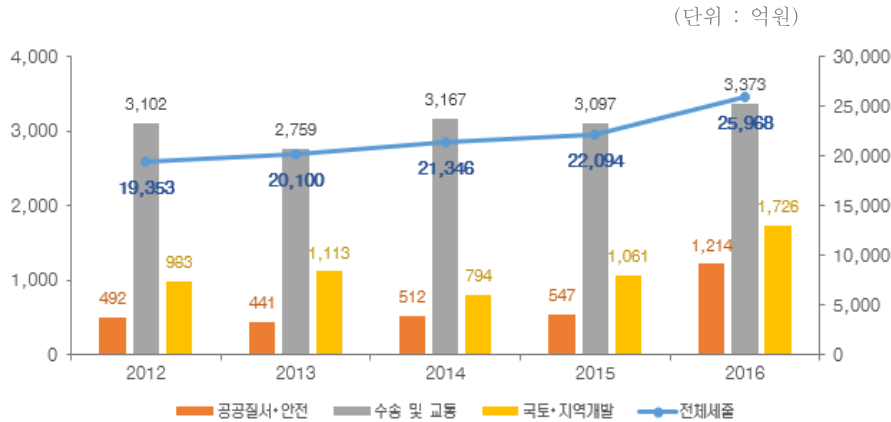


그림 7-4

울산시 SOC관련
세출 현황

- 2017년 울산시 예산 규모는 3조 8,947억원(계획)이며, 2021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해 2021년 4조 2,592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공공질서·안전 : 3,052억(2017년) → 3,769억원(2021년), 연평균 5.4%
- 수송 및 교통 : 4,249억(2017년) → 5,080억원(2021년), 연평균 4.6%
- 국토·지역개발 : 2,289억(2017년) → 2,728억원(2021년), 연평균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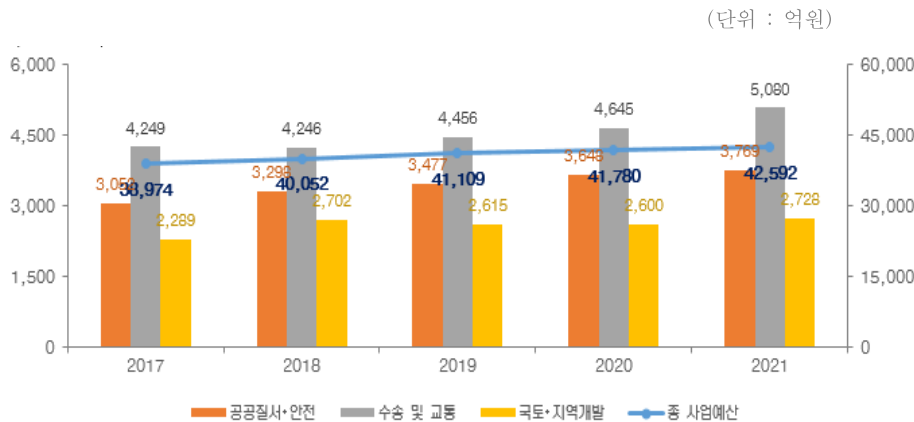


그림 7-5

울산시 SOC관련
예산지출 계획

7.

울산광역시

2) 시설물 인프라 주요 이슈

- 인프라 실태 및 투자정책과 연계한 시설물별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음.

○ 교통시설

- 도로연장과 교량 증가, 지속적인 노후화 진행으로 장래 유지·보수 예산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장기적 관점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이에 기반한 보수비용 예측, 예산 수립이 필요함.

- 또한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로 및 교량 성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및 교량관리시스템(BMS)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교통혼잡비용 증가 등 도시부도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로망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도로망 구조상 순환축, 동서축 확충을 통해 혼잡 해소 및 생활 권역간 연계 개선이 필요함.

○ 물관리시설

- 상수관로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향후 경년관 증가 및 누수사고 발생 등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획된 시설개량, 안정화, 물수요 관리 투자계획의 안정적 추진 및 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잦은 지진 발생으로 인프라의 재난 대응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상수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하며, 안정적 원수 공급 확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하수도 시설 역시 상수도 시설과 마찬가지로 노후 하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하며, 기후변화(집중강우 증가, 강우시 월류에 따른 오염 증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주거 및 교육시설

- 최근 지진 등 자연재해로 학교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16년 실시했던 원스톱 점검의 주기적 활성화를 통한 시설 개보수 추진이 필요함.
- 학교 신·이설 및 통폐합으로 인해 폐교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사업과 폐교 부지를 연계한 개발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거시설의 경우, 울산 중구·남구의 원도심 지역 단독주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함.
- 울산시는 시 차원의 도시재생 정책방향 확립을 위해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 및 경제시설

- 전통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노후화로 화재위험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노후시설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 강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 예산을 지속 확충해야 함.
- 산업단지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한 석유화학단지의 개선이 시급하므로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석유화학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며,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야 함.

○ 기타 시설

- 문화시설의 경우 노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및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 울산의 부족한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시설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인 체육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

한 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5. 울산시민 설문조사

- 울산광역시민이 체감하는 주요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 성능수준 : 인프라 품질, 용량,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
 - 중요도 : 인프라와 지역 경쟁력 향상 간의 상관관계
 - 노후도 및 안전도 : 안전하다/안전하지 못하다 인식 수준
 - 투자 필요성 : 각 인프라에 대한 향후 투자 필요성

- 울산광역시 내 주요 인프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 및 성능수준에 비해 노후도·안전도가 부족하며, 따라서 투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한 시민들은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도로시설 등이 지역 경쟁력 향상과 밀접한 인프라라고 평가하였음.
 - 성능수준이 우수한 인프라는 주거시설, 교육시설, 상수도시설 등이며, 성능수준이 낮은 인프라는 침수저감시설, 철도, 문화·체육시설로 조사됨.
 - 노후도 및 안전도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이 가장 양호하고, 침수저감시설, 산업단지가 낮은 평가를 받음.
 - 투자 필요성은 침수저감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 도로시설, 주거시설 등에서 높게 나타남.

구분	교통시설			물관리시설		
	도로	교량	철도	상수도	하수도	침수저감
중요도	4.02	3.44 ▼	3.72	3.78	3.76	3.86
성능수준	2.99	3.01	2.73	3.11	3.04	2.57 ▼
노후도	3.11	3.02	3.12	3.12	3.09	2.83 ▼
투자방향	3.81	3.42	3.63	3.68	3.63	3.99 ▲
구분	주거 및 교육시설		경제시설		기타시설	전체 평균
	주거	교육	전통시장	산업단지	문화/체육	
중요도	3.97	4.08 ▲	3.50	3.48	4.07	3.79
성능수준	3.12 ▲	3.11	3.10	3.06	2.87	2.97
노후도	3.07	3.19	2.99	2.94	3.25 ▲	3.07
투자방향	3.73	3.87	3.48	3.39 ▼	3.97	3.69

표 7-1

울산시 인프라 시설물의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투자 방향에 대한 설문 결과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울산시민 설문조사

- 인프라 실태조사와 정책진단 결과, 설문조사 등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 검토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본방향 도출
 -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그림 7-6

울산시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매트릭스

7.

울산광역시

7.

울산광역시

그림 7-7

울산시 신규
인프라 확충사업
도출 매트릭스

• 신규 인프라 확충사업



- 울산의 지역 경쟁력 향상 및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투자 우선 기본방향에 따라 도출
 - 교통, 물관리, 주거 및 교육, 산업 및 경제시설 등의 분야에서 55개 사업(4조 4,000억원 규모) 도출

(단위 : 개, 억원)

표 7-2

울산시 인프라
분야별 핵심사업

구 분	사업 개소	총사업비
합계	55	44,587
교통시설	22	16,014
물관리시설	8	4,739
주거 및 교육시설	5	5,778
산업 및 경제시설	16	17,217
기타 시설	4	838

- 교통시설 분야는 22개 사업, 약 1조 6,014억원 규모
 - 노후 인프라 사업은 포장도로(광역시도, 구·군도) 및 도로교량 보수
 - 주요 신규 인프라 사업은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국도 7호선 개설 및 국도 확장사업 등
- 물관리시설 분야는 8개 사업, 약 4,739억원 규모
 - 노후 인프라 사업은 노후 상하수 시설 개량 및 정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 주요 신규 인프라 사업은 상하수 시설 확충 및 안정화,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 주거 및 교육시설 분야는 5개 사업, 약 5,778억원 규모
 - 노후 인프라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
 - 신규 인프라 사업은 교육시설 신·이설사업
- 산업 및 경제시설 분야는 16개 사업, 약 1조 7,217억원 규모
 - 노후 인프라 사업은 국가산단의 노후 지하배관 관련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 신규 인프라 사업은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및 공영/민간 산업단지 조성
- 기타 시설 분야는 4개 사업 약 838억원 규모
 - 노후 인프라 사업은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 신규 인프라 사업은 체육관 및 도서관 건립 사업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 노력 필요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 및 주민요구 대응 능력 제고도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 발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도 검토해

7.

울산광역시

불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간투자사업 추진 대상 선정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적정 규모의 지속적인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 대상 발굴과 추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리 조직 확보
 - 울산광역시의 인프라 투자 대상 발굴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함(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울산광역시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과 같은 맞춤 지원 프로그램).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보호·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 공사비 정상화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이 필요함.
 - 적정 수준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근거 없는 기초금액 삭감 금지, 부당하게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 내용 외 발주자가 추가사항 수행을 지시한 경우 발생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 등

별첨 1. 시설물별 핵심사업

○ 교통시설

- 총 1조 6,014억원 규모 22개 사업 선정
-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2개, 신규 확충사업 20개

(단위 : 억원)

부문별	주요 사업	사업비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포장도로 보수(광역시도, 구군도)	1,017.1
	도로교량 보수(국도 시내, 국지도 69호선, 광역시도 20m 이상)	172.2
신규 인프라 확충사업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건설	8,700.0
	국도7호선(청량~옥동)개설	687.4
	국도7호선(농소~외동) 도로개설	1,116.0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삼일교~장현교차로) 개설	153.0
	연양파출소~서부리(대1-24) 도로확장	309.3
	웅촌면사무소~춘해대학 도로확장	237.0
	신선로(중1-65) 도로개설	339.8
	대전터널~선바위교(중1-237)간 도로개설	388.0
	덕하시장~석유화학단지(중1-107)간 도로개설	130.0
	길천산단~지화마을(중1-141)간 도로개설	90.1
	삼남방기리(중1-155) 도로개설	79.5
	청량중학교(중1-47) 도로개설	25.0
	달천현대아이파크~천곡천(중1-121)간 도로개설	44.4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대2-28) 도로확장	229.0
	동서2축(구영~길천) 도로개설	251.6
	국도14호선(청량~범서) 노선변경	1,451.0
	국도14호선(다운~경주시계) 확장	250.0
	임항 교통시설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도심순환(대로3-15호선) 도로개설	185.0
	국도14호선~국도31호선 연결도로계획(온양C~진하C)	75.5
	국도14호선~국도31호선 연결도로계획(온양~나사리)	83.7
소계	16,014.6억원	

7.

울산광역시

7.

울산광역시

○ 물관리시설

- 총 4,739억원 규모 8개 사업 선정
-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3개, 신규 확충사업 5개

(단위 : 억원)

부문별	주요 사업	사업비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시설개량계획(천상·회야정수장, 노후관로 개량, 설비교체, 블록시스템 정비)	1,203.3
	노후하수관로(중구, 남구 간선관로) 정비공사2차	190.0
	재해위험지역 정비	763.8
신규 인프라 확충사업	시설확충계획(배수관로, 가압장)	126.9
	시설안정화계획(복선화관로, 연계관로)	1,832.3
	물수요관리계획(절수기기 설치)	16.5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	513.6
	농소처리구역 지선관로 부설사업	93.0
소계		4,739.4

○ 주거 및 교육시설

- 총 5,778억원 규모 5개 사업 선정
-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4개, 신규 확충사업 1개

(단위 : 억원)

부문별	주요 사업	사업비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군계일학학성(중구)	200.0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삼호동우리, 사람과철새를품다(남구)	200.0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화봉꿈마루길(북구)	100.0
	교육환경개선사업	2,732.4
신규 인프라 확충사업	교육시설 신·이설사업	2,545.9
소계		5,778.3

○ 산업 및 경제시설

- 총 1조 7,217억원 규모 16개 사업 선정
-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3개, 신규 확충사업 13개

(단위 : 억원)

부문별	주요 사업	사업비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국가산단 지하배관 관리센터	290.0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진단 및 개보수 사업	40.0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592.9
신규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산학융합지구 조성)	65.0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산업단지 안전사고 ZERO생활권 조성)	26.2
	공영 산업단지 조성 - 울산테크노	3,736.0
	공영 산업단지 조성 - 울산 High Tech Valley(1단계)	538.0
	공영 산업단지 조성 - 길천2차(2단계)	1,646.0
	공영 산업단지 조성 - 이화	1,020.0
	공영 산업단지 조성 - 에너지융합	2,790.0
	공영 산업단지 조성 - (가칭)장현도시 첨단산업단지	1,313.0
	민간 산업단지 조성 - KCC울산	2,352.0
	민간 산업단지 조성 - 방기	347.0
	민간 산업단지 조성 - GW	1,403.3
	민간 산업단지 조성 - 작동	110.0
	민간 산업단지 조성 - 모바일테크밸리	947.8
소계		17,217.2

○ 기타시설

- 총 838억원 규모 4개 사업 선정
- 노후인프라 개선사업 1개, 신규 확충사업 3개

(단위 : 억원)

부문별	주요 사업	사업비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체육인프라 구축)	32.0
신규 인프라 확충사업	제2실내체육관 건립	336.1
	중구대표도서관 건립	300.0
	중구실내체육관 건립	170.0
소계		838.1

7.

울산광역시

제8장 경기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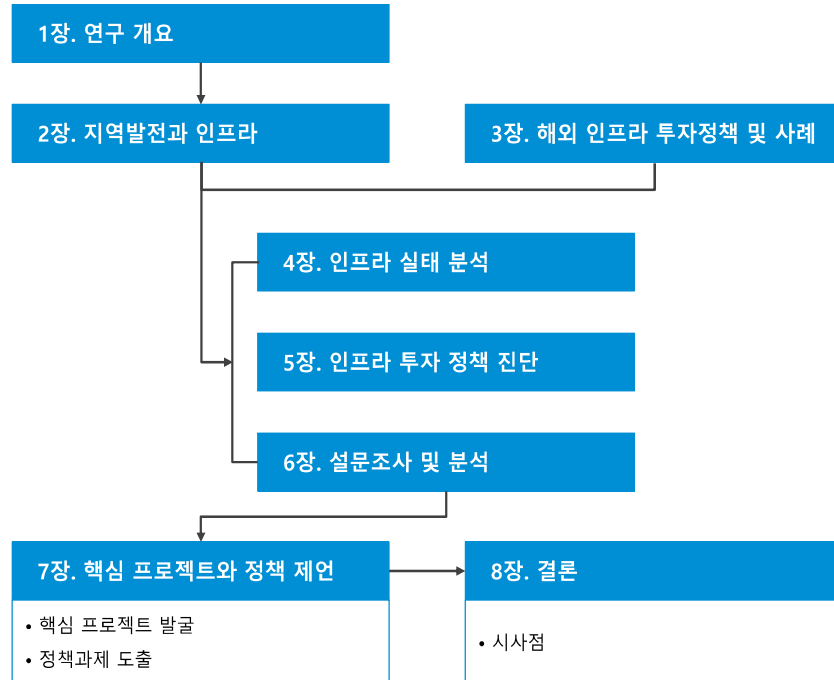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 22.1조원보다 20% 축소된 17.7조원으로 제출, 국회는 19.0조원(전년 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였으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 계획
 - SOC 투자의 과도한 축소는 경제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로 재투자과 개량투자 수요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주민이 체감하는 인프라 투자수요를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교통학회 및 경기연구원과 협력하여 인프라 실태 파악, 투자수요 진단, 핵심 투자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8.

경기도

그림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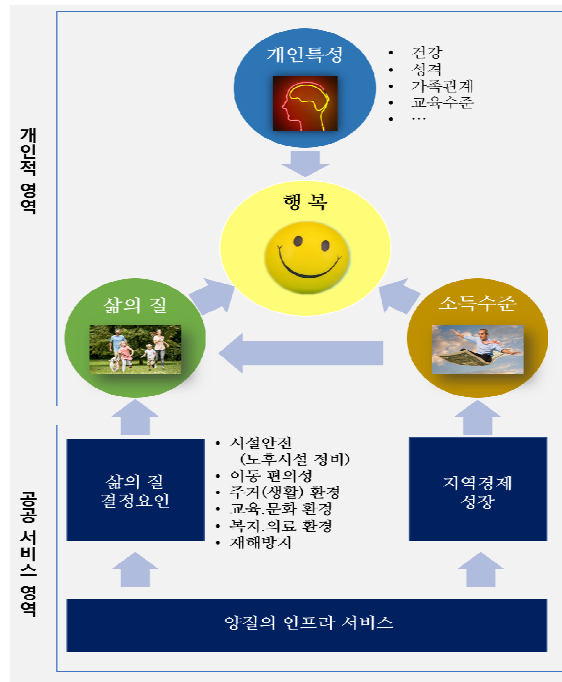
연구보고서의
구성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 UN의 세계행복보고서(2014~2016년)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55위이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2014년)에서 경기도민의 행복수준은 17개 광역단체 중 14위로 평가됨. 경기도민의 행복도는 매우 낮은 수준임.
-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경기도는 지역 내총생산(GRDP) 증가율을 더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프라 자본 투입 증가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경기도의 1인당 GRDP는 29.5백만원으로 전국 평균(31.9백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1995년 이후 평균과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됨.
 - 평균 실업률은 3.9%로 전국(3.7%)보다 높은 편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은 10.5%(평균 9.8%)로 17개 광역단체 중 3번째로 높음.
 - 국회예산정책처, KDI, 현대경제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은 수도권에 높은 규제, 지가 상승,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경기도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그림 8-2

주민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인프라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주민은 삶의 질 결정 요소들 중 ‘시설물 안전(노후 시설물 정비)’ 부문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노후인프라 개량과 안전도 향상 등 새로운 인프라 투자 전략이 경기도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수준 증진을 위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지역간 불균형 심화

-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산업 및 경제시설(지역 내 사업체) 수 비교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의 차이는 20배, 1인당 GRDP 차이는 3배
- 도로시설 수준은 연천군, 철도 및 지하철 접근성은 경기 남동부가 열악
- 교육시설(학급당 또는 학교당 인원)에서도 지역 간 높은 편차 존재

8.

경기도

8.

경기도

• 경기 남부 도시들(오산시,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김포시)에서 과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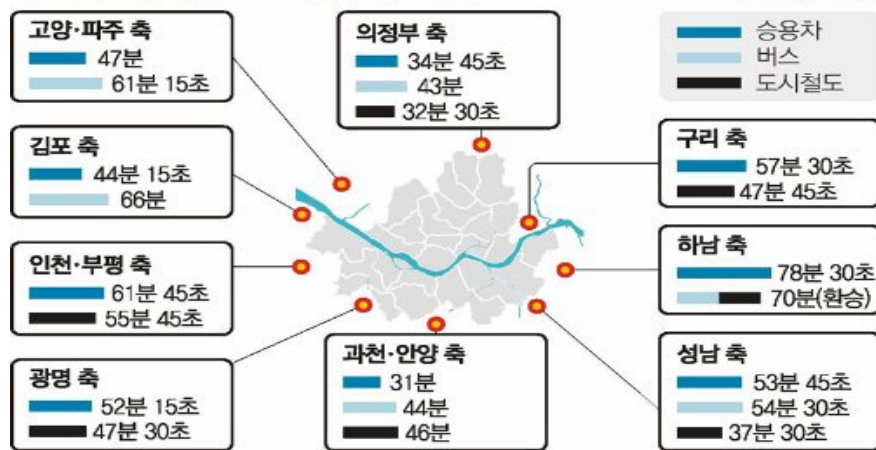
- 문화·관광·체육시설은 파주시와 가평군, 그리고 경기 남부에서는 김포시, 의왕시, 구리시가 열악

○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 시급

- 경기도민의 평균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72.4분(왕복 기준)으로 전국 평균인 61.8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서울과 타 시·도 통근·통학자의 비율이 42.2%나 되며, 이들의 평균 통근·통학 시간은 166분(왕복 기준)에 이릅니다.

그림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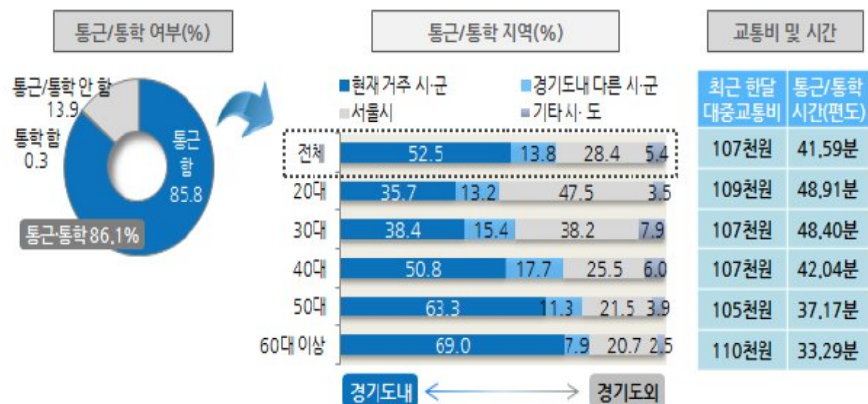
수도권 교통축별
소요 시간
(출퇴근 평균)



자료 : 교통안전공단.

그림 8-4

경기도 연령별
통근·통학 분포



○ 시설물의 노후화

- 경기도 노후시설 진단 결과,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개량 및 재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

프로젝트	주요 내용
노후 하수도시설 정비 및 성능개선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 ·지반침하 지역 우선정비 ·구조적 이상에 대한 종합 정비 ·통수능 부족 관거 증설 ·최소유속 부속관거 개량 ·노후 하수처리장 개량 및 증설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및 성능개선사업	·교체 후 내용년수 25년 경과 상수관로 정비 ·미교체 노후 상수관로 정비
침수저감시설 확충사업	·노후 우수관로 유지관리 ·빗물처리시설 신/증설 ·노후 빗물펌프장 용량 확대 및 노후화 개선
주민 밀착형 생활도로 정비사업	·생활도로의 정비 ·불량 비탈길 및 노후계단 정비 사업 등 ·포트홀 발생 도로 정비
터널 성능개량사업	·노후화에 따른 침하,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터널 정비
교량 성능개량사업	·노후화에 따른 단차발생,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교량 정비 ·노후 교량의 내진보강
노후 및 혼잡 철도/지하철 역사 성능개선사업	·노후 역사 개량 및 증설 ·승강장 및 내부 계단 폭원 확충 ·역사 내 소방시설 확충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철도/지하철 내진보강/노후개선 사업	·노후시설 개량사업 ·내진보강 사업
도로 종합 성능개선사업	·저등급 구간 종합 정비 ·평탄성 불량 다발 구간 정비 등
노후 산업단지 정비사업	·노후 산업단지 보수 및 증설 ·기반시설 확충, 주변 지역과 연계 정비
그린스쿨(안전+건강) 사업	·노후 학교시설 보수 및 신축 ·구조물 보수 및 내진성능 보강 ·친환경 실내외 환경 개선
노인복지시설 개선사업	·노인복지시설 : 경로당,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치매센터 ·노인친화 복지시설 개량 및 확충
주거환경(공동주택) 개선사업	·(활성단층 관통지역 내)아파트단지 내진보강
도시공원 개선사업	·안전 위해 가능성 있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정비 실시 ·도시 미관 훼손 공원에 대한 정비 실시
전통시장 개선 및 종합방재사업	·시장별 맞춤형 종합방재사업 ·내화성능 향상, 소방차 진입 곤란 도로정비

표 8-1

경기도 노후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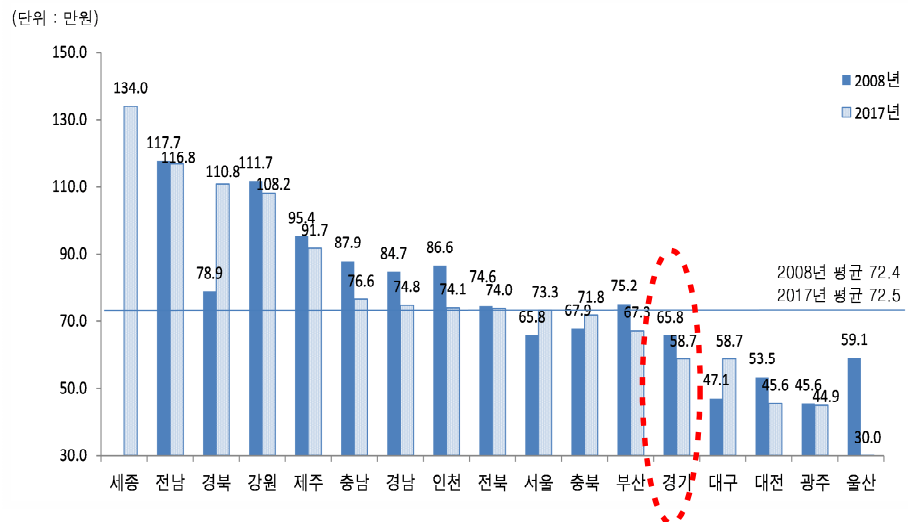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경기도 인프라 예산 분석

- 경기도 총예산 규모는 16개 시·도 중 가장 크지만, 1인당 SOC 예산은 도 지역 중 최하위 수준
 - 2017년 경기도 1인당 SOC 예산은 58.7만원으로 16개 시·도 평균인 72.5만 원을 하회함.
-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10년 33조 6,983억원에서 2017년 50조 5,498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은 2008년 23.6%에서 2017년 14.9%까지 감소
 - 향후에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인프라 부문 투자 비중은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8-5

지역별 1인당
SOC 예산 변화



- 경기도 전체 예산은 2010년 33조 6,983억원에서 2017년 50조 5,498억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예산 비중은 2008년 23.6%에서 2017년 14.9%까지 감소
 - 향후에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인프라 부문 투자 비중은 다른 부분에 비해 낮은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2) 경기도 정책방향과 인프라

- 「경기도 종합계획 2012-2020」은 경기도의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중심의 성장전략, 광역 인프라 혁신, 복지·문화·교육·환경의 혁신이 결합된 구조를 지향
- 「2018년 경기도 도정업무계획」의 5개 현안 중 4대 현안(일자리, 생명과 안전, 경기도민 행복, 균형발전을 통한 통일미래 대비)에서 인프라 확충 및 개선이 기본적인 필요조건

구분	현안	과제
인프라 확충 필수 과제	일자리, 경제발전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 생태계 구축
	경기도민 행복	저출산과 주거소외 해결하는 주거복지
		도심 속 힐링공간 조성
	경기북부 개발 및 균형발전	북부지역 산업기반 조성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인프라 개선 필요 과제	생명과 안전	선제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소방력 강화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가속	
경기도민 행복	타깃형 복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인프라 정비 필요 과제	일자리, 경제발전	공유와 협력, 상생의 따뜻한 경제 시스템 구현
		문화·농정·환경 미래산업 선도 육성
	생명과 안전	ICT 기반 첨단 안전관리 체계 구축
	경기도민 행복	보육과 의료 서비스의 공공책임 강화
		따뜻하고 열린 평생교육 실현
	경기북부 개발 및 균형발전	통일 미래도시 경기북부 개발
경기북부 체류형 관광 활성화		

표 8-2

경기도 인프라
관련 과제의 투자
지향점

- 경기도의 노후 인프라 정책들은 산단 및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정비를 통한 선제적 안전 대응 및 방재 대응력 강화 등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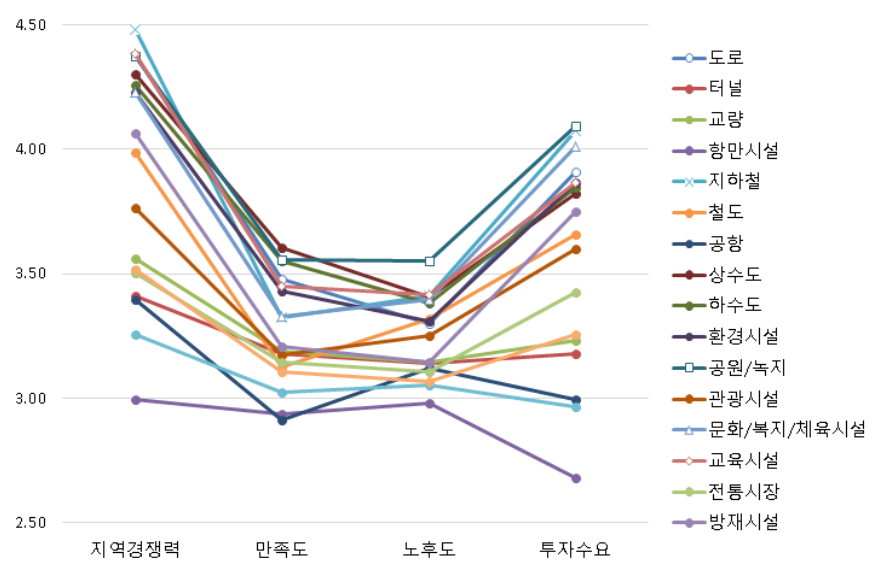
8.

경기도

5. 경기도 주민 설문조사

-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체감 만족도와 노후시설 안전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으며, 인프라 투자는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
 - 특히 도로, 지하철, 문화/복지/체육시설, 교육시설의 투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8-6
인프라 시설별
중요도/만족도/노
후도/투자수요
응답 결과



- 한편, 인프라 시설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2.83/5.00으로,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응답
 - 경기도의 인프라 시설 투자와 관련된 제반 정책 만족도에 대하여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 공공기관 및 국군 및 미군 반환지의 활용 방안에는 ‘공원 및 녹지’,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연장)’, ‘주택 공급’ 순으로 응답
-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재정 확충을 통한 사업 추진을 선호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 인프라 실태 진단, 정책 검토, 주민설문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경기도의 주요 인프라 현안 및 투자방향 도출

주요 현안	인프라 투자 방향
하나의 경기도, 이동성의 확보	철도망 연계성 강화
	대중교통망 확충
	경기도 내 광역교통망 공급 지연사업 추진
	경기 동부 교통망 확충
친환경 발전 기반 확대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다양한 문화·레저 인프라 저변 확대
NEXT 경기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자족형 도시개발(테크노밸리, 첨단 산단)
	국가산업단지 노후화 해결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과 도시재생 연계
	친환경 녹색 미래사업 육성
생활 재해·재난 뇌관 해결	노후 상수도관 개량
	상·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재건축(뉴빌딩 사업)
경기도 속의 오지 개선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망 확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이전 지역연계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SOC 투자·육성
	용수공급시설 확충
선제적 방재·안전 확충	정수시설 고도화(오염원 다양화에 따른 수질 개선)
	기준 미달 도로망 확포장 및 개량

표 8-3

경기도 인프라
주요 현안 및
투자 방향

- 위와 같이 도출된 인프라 투자방향에 부합되는 사업 중에서 부문별로 핵심사업 발굴(별첨 1. '시설물별 핵심사업' 참조)

8.

경기도

8.

경기도

표 8-4

경기도 검토
사업과 핵심사업

구분	시설유형	사업 건수(건)	총사업비(조원)
전체	교통물류	131	100.1
	산업 및 경제 시설	13	24.9
	환경시설	24	1.5
	교육·의료·복지	2	41.1
	문화·관광·체육시설	3	6.0
	도시 및 생활환경	23	22.5
	계	196	196.1 + α
핵심 사업 (선정 결과)	교통물류	61	56.5
	산업 및 경제 시설	10	24.9
	환경시설	13	1.4
	교육·의료·복지	1	1.1
	문화·관광·체육시설	2	6.0
	도시 및 생활환경	13	22.4
	계	100	112.3 + β

주1. 사업 건수는 시설 유형에 따라 사업군과 개별 사업이 혼재되어 있음.
주2. 선제적 방재 및 안전 확충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사업은 각 시설 유형에 들어가 있음.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의 측정을 통한(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함.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 노력 필요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및 주민요구 대응능력 제고도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이한양 노력을 지속적

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 발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사업인 민간투자사업의 정상화 필요
- 민간투자 추진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꾸준한 규모로 적정 수준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 대상 발굴과 추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리 조직 확보
- 경기도와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인프라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주무 부처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함(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과 같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보호·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8. --- 경기도

별첨 1. 시설물별 핵심사업

1) 인프라 투자 방향과 핵심사업

주요 현안	인프라 투자방향	사업군	프로젝트명
하나의 경기도, 이동성의 확보			
	철도망 연계성 강화	서울↔경기 철도망 연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 B,C • 신안산선 • 도봉산~옥정 보선전철 •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 • 별내선, 진접선 연결사업 • 수서~광주선 • 과천~서울동남권 동서철도(과천위례선) • SRT 의정부 연장 • 수색~서울~시흥간 수도권 고속철도
	경기동부 교통망 확충	경기동부 고속도로망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세종 고속도로
	대중교통망 확충	경기도 도시 내 이동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호선 판교 연장 • 성남1호선(확장 및 개량) • 성남2호선(확장 및 개량)
		경기 광역권 이동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곡~소사선 • 월곶~판교선 • 인천~김포~고양간 광역철도망 구축 • 하남~양평 고속도로
	경기도 내 광역교통망 공급 지연사업 추진	광역철도망 공급 확충 지연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 B,C • 수원발 KTX 직결사업 • 인천발 KTX 직결사업 • 경원선 2복선화 • 중앙선 2복선화 • 중앙선 복선전철
		민간자본 투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평택 민자고속도로
친환경 발전 기반 확대			
	환경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경기도 내 친환경 시설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마을 조성 • 경기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도립 광역도시공원 조성

주요 현안	인프라 투자방향	사업군	프로젝트명	
		신환경 에너지 생산 인프라 조성	• 도시농업공원 조성	
			• 그린 비즈니스센터 설치	
		다양한 문화·레저 인프라 저변 확대	지역 특성화 관광/산업자원 개발	• 광역 업 사이클 플라자 구축
			• 경기만 수상태양광벨트 조성	
		도립공원 활성화	• 수리산 도립공원 활성화	
			• 휴양림, 수목원, 공원의 정비	
		녹지 관광시설 정비 및 개선화	• 휴양림, 수목원, 공원의 정비	

NEXT 경기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

자족형 도시개발(테크노밸리, 첨단 산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시너지효과 확산	• 경기도 친환경/미래/소프트웨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국가산업단지 노후화 해결	노후단지 녹색성장	• 노후산업단지 녹색산업단지로 리모델링
		• 경기도 생태산업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과 도시재생 연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및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녹색성장 추진 활성화	• 그린에너지 및 친환경 R&D단지, 그린카 R&D단지 조성
		• 스마트그리드 연구단지 및 시범도시 조성
		• 산림 바이오메스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녹색미래산업 육성 활성화	친환경산업 미래산업 육성, 활성화	• 황해경제자유구역
		• 노후 산업단지 개량 및 산업단지 조성
		• 테크노밸리 조성
	에너지·자원 순환산업 육성	• 경기도 자원순환 산업단지 조성

생활 재해·재난 뇌관 해결

노후 상수도관 개량	노후주택 상수도관 정비	•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정비
상하수관로 정비	상하수도 정비 및 개선	• 하수관로 정비사업

8.

경기도

8.

경기도

주요 현안	인프라 투자방향	사업군	프로젝트명
	하수처리장 재건축(뉴빌딩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 하수처리시설 확충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 신기술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하수찌꺼기 처리효율 개선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 찌꺼기처리 및 에너지 자립화
경기도 속의 오지 개선			
	수도권 외곽 지역의 교통망 확보	접경지역 및 경기북부 지역 내 이동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경춘국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연계	군 이전부지의 활용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
		DMZ 생태환경 연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민족평화생태공원 조성 • 야생동물리조트 조성
		남북 분단 간접체험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평리 전투호국평화공원 조성 • 남북철도 연결 복원
		남북, 다문화 교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하구 벨트, 남북경제협력 지구 및 다문화 가정 특구 조성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SOC 투자·육성	GTX 교통 거점 중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균형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국제화 및 통일 교육기관 설립 및 교육시설 설립/보강
	용수공급시설 확충	급수취약지역 내 수도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농어촌 지역 내 생활용수시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보급 농어촌에 생활용수 개발
선제적 방재·안전 확충			
	정수시설 고도화(오염원 다양화에 따른 수질 개선)	고도정수처리시설 상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
	기준 미달 도로망 확포장 및 개량	도로 구조 개선에 따른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훈련도로 및 국지도 지방도 개선사업

2) 주요 핵심사업

○ GTX-B, C

구 분	내 용
규모	94.5km
사업비	8조 9,055억원
추진 현황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A노선 일부 추진 중
사업 기간	A노선 삼성~동탄 : 2014~2021 A노선 운정(파주)~삼성 : 2015~2023 B, C노선 : 미정
기대 효과	광역교통망 확충, 경기도 내 이동성 확보, 대중교통망 확충
사업 노선	

- GTX-B(송도~청량리)
 - 규모 : 48.7km
 - 사업비 : 5조 8,319억원
 - 중앙선 2복선화(청량리~망우)사업과 연계 고려중
 - 청량리~마석 구간 연장 고려
 -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2016.12)

- GTX-C(의정부~금정)
 - 규모 : 45.8km
 - 사업비 : 3조 736억원
 - 양주신도시~의정부, 금정~수원 구간 연장 고려 중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미흡
 - SRT 의정부 연장 시 SRT와 연계 고려 중
 - 양주~의정부, 금정~수원 구간 기존 경원선, 경부선 철로 활용 계획
 - 타당성 재조사 착수(2016.2)

○ 인천~강릉 동서간선철도 사업(수도권 구간 월곶~판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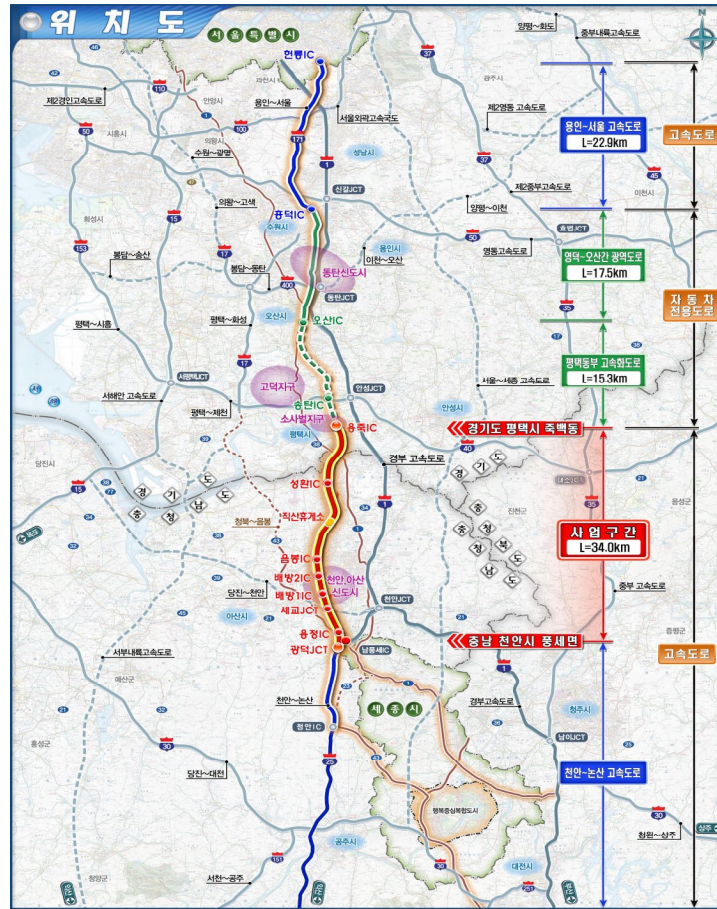
구분	내용
규모	243.6km(수도권 구간 약 38.6km)
사업구간	인천~강릉(수도권 구간 월곶~판교)
사업비	8조 9,933억원(수도권 구간 사업비 2조 3,178억원)
추진 현황	송도~월곶 / 성남~여주 구간 개통 완료 원주~강릉 구간 공사 완료 월곶~판교, 여주~서원주 구간 기본계획 수립 중
사업 기간	1995~2024
기대 효과	인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 내 주파, 지역경제 활성화 강원권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제고
사업 노선	

- 2015년 11월 월곶~판교 철도사업 타당성재조사 통과
 - 월곶~판교 구간은 38.6km 연장으로 총사업비 2조 3,178억원 추정
 - 2019년 착공계획
 - 2024년 개통 목표
- 여주~서원주 구간(20.9km)은 2021년 개통 예정

○ 천안~평택 고속도로

구분	내용
규모	34km
사업비	1조원
추진 현황	기초 검토 후 미추진 중
사업 기간	미정
기대 효과	경부축 교통량 분산 및 정체 완화

사업 노선



- 사업구간 :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 사업배경 : 광역 간선도로망 및 세종시 연결 구축 필요성,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 및 개발사업 추진

8. 경기도

○ 이천 설봉공원(밀레니엄파크)

구분	내용
규모	1,640,000㎡
사업비	1,182억원
추진 현황	타당성 조사 진행 중
사업 기간	2017~2025
기대 효과	친환경 경기 제고, 도민 친환경 복지 증진

사업지



○ 주요 휴양림, 수목원, 공원정비 진행 중 사업들

- 이천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
 - 사업면적 : 504,000㎡
 - 사업비 : 276억원
 - 추진현황 : 구간 부문 공사 진행 중
- 여주시 황학산 수목원 특성화 사업
 - 사업면적 : 272,000㎡
 - 사업비 : 29억원
 - 추진현황 : 온실공사 진행 중
-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활성화 사업
 - 사업면적 : 집단시설지구 73,000㎡, 공원시설 89,671㎡
 - 사업비 : 783억원
 - 추진현황 : 보상 및 공사 진행 중

○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양주, 구리/남양주)

구분	내용
규모	847,232㎡
사업비	4,346억원
추진 현황	계획 중(양주시, 구리/남양주시)
사업 기간	양주 테크노밸리 : 2019~25년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 2019~26년
기대 효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 SOC 투자/육성

- 양주 테크노밸리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
- 사업지 규모 : 555,232㎡
- 섬유/패션, 전기/전자 분야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혼용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진행
- 조성 시 2만 3,007명의 일자리, 1조 8,759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 창출 기대

-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 사업지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 퇴계원면
- 사업지 규모 : 292,000㎡
- IT산업 유치 예정
- 첨단산업 집적지로서 성장 기대
- 조성 시 1만 2,820명 일자리, 1조 7,717억원의 직접적 경제효과 창출 기대

○ 노후 상·하수도 시설 정비

구분	내용
규모	58,964세대(노후 상수도 교체), 58개소 1,279.6km
사업비	2,553.8억원
대상지역	경기도 시군 일원
추진 현황	착공 및 추진 중
사업 기간	2013~20년
기대 효과	상하수도 관련 시설 확충, 하수관로 정비

8.

경기도

○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개량

구분	내용
규모	하수처리장 81개 시설
사업비	7,740억원
대상지역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추진 현황	착공 및 추진 중
사업 기간	2013~20년
기대 효과	하수처리율 제고, 처리구역 확대 및 처리장 신/증설

○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구분	내용
규모	152.22km ²
사업비	미정
추진 현황	세부 사업별 상이
사업 기간	2012~25년
기대 효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이전 군부지 활용

- 쿠니 에어레인저 반환공여구역(평화구역 및 레저용지)
- 캠프 콜번(대학교)
- 성남골프코스(골프시설 존치)
- 캠프 케이시(외국인전용 국가산단, 국내 대학 및 외국 대학, 연구단지, 평화기념공원)
- 캠프 호비(골프장, 세계문화타운, 승마공원)
- 캠프 캐슬(산업단지 및 배후 주거시설)
- 캠프 모빌(유통 상업시설 및 공원)
- 짐볼스 훈련장(골프장 및 기타 체육시설 조성)
- 캠프 레드클라우드(대학교 및 연구단지)
- 캠프 에세이온(경기도 제2 교육청 및 레포츠 공원)
- 캠프 카일(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 캠프 라과디아(도로, 체육공원)
- 캠프 홀잉워터(공원)
- 캠프 스탠리(4년제 대학)
- 캠프 잭슨(예술공원)

- 건트레이닝 에리어(지방 산업단지, 생태공원, 바이오가스 플랜트, 축산타운 및 첨단 R&D 단지)
- 불스아이#1(남북 경제협력지)
- 캠프 게리오웬(주거시설 및 수변공원)
- 캠프 자이언트(대학교)
- 캠프 스탠튼(대학교 및 연구시설)
- 에드워드(대학교 및 연구시설)
- 캠프 하우스(문화공원)
- 캠프 그리브스(남북 및 국제교류단지)
- 캠프 님블(수변녹지 및 복합용지)
- 캠프 시어즈(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SBS 뉴스

미군 떠났는데 못 돌려받는 기지... 죽어가는 동두천
서쌍교 기자/ 입력 2018.04.01. 21:00

<앵커>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경기 북부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는 연속보도, 오늘(1일)은 동두천시로 가보겠습니다. 미군 병력 대부분은 평택으로 이동했지만 부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동두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쌍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두천시 보산역 인근의 외국인 관광특구입니다. 전형적인 기지촌 경제 구역으로 미군부대 캠프 케이시와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발길이 끊겨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지만 대낮인데도 사람들의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았고 문을 열었다더라도 손님이 없습니다. 동두천 대표 관광특구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한때 400~500개에 이르던 업소도 15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8.

경기도

[이영수(62)/관광특구 업소 대표 : 월, 화, 수, 목은 완전히 손님이 하나도 없다시피 하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1/3, 1/4 수준입니다.]

상가가 침체된 건 캠프에 주둔하던 미 2사단 2만명의 병력이 평택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포병부대 3,000여 명만 잔류하면서 2016년에 예정됐던 부지 반환은 2020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기업 생산기지나 대학·연구단지를 유치하려던 개발 계획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안보문제로 이전을 연기해야 한다면 시점이라도 특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종갑/시민대책위원장 : 우리 시민은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이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캠프 케이시 이전 지연에 따른 손실 규모를 조사한 결과 매년 5,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캠프 케이시는 여의도 면적 5배의 규모로 개발 기대는 매우 높은 곳입니다.

[소성규/대진대학교 교수 : 독립적인 행정 관청을 만들어서 미군 공여지 개발을 국가 주도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피해가 많고 개발 규모도 큰 만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오노영)

서쌍교 기자 twinpeak@sbs.co.kr

○ 정수처리시설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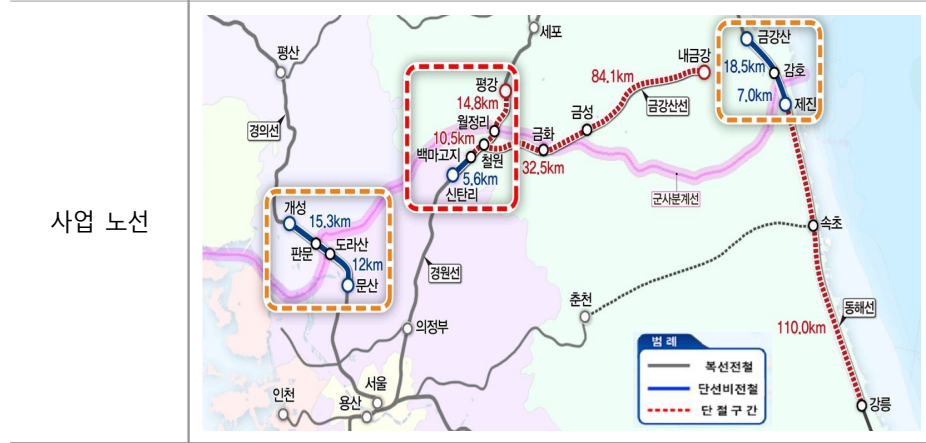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사업지역	북정, 용인, 안산, 군포
사업비	1,413억원
추진 현황	추진 중
사업 기간	설치사업 : 2017~19년
기대 효과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안산시, 군포시 지역의 상수도 수질 관련 기준 충족

※ 정수처리시설 고도화 시범사업

- 설치 지역 : 광주2, 연성
- 사업기간 : 2013~18년
- 수혜지역 :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산시
- 사업비 : 539억원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 복원

구분	내용
규모	9.3km
사업비	1,290억원 추산
추진 현황	기공식 개최 이후 북한과의 관계 악화로 중단, 2018년 이후 정치 상황 변화와 경제협력 확대시 재추진 필요성 증가 가능
사업 기간	미정
기대 효과	남/북 간 상호 신뢰 구축, 남북교류 확대,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



표, 그림 출처 :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공사 착공 / 보도자료 / 2015.8.

- 사업구간 : 백마고지역~월정리역 간
- 구간연장 : 서울~원산 223.7km 중 남측 구간 9.3km
- 통일 대한민국 시대의 준비
 - 남북철도 중 경원선이 가장 시급성이 높은 사업
- DMZ 및 북측구간 연결을 위한 남북 간 협의 진행 가능
- 안보와 안전, 자연 및 문화 환경 등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동력의 기반

제9장 강원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2018년 SOC 예산은 2017년 22.1조원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 계획
 - 201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25조원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SOC 투자 축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SOC 투자의 과도한 축소는 경제성장 기반 약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안전 위협과 복지 수준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강원 지역도 SOC 예산 축소와 인프라 노후화 가속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와 관련 정책 진단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 지역 내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실시
 - 도민의 인프라 수요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핵심 인프라 사업 분석
 - 강원도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전략과 정책 방향의 제시
-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강원연구원은 공동으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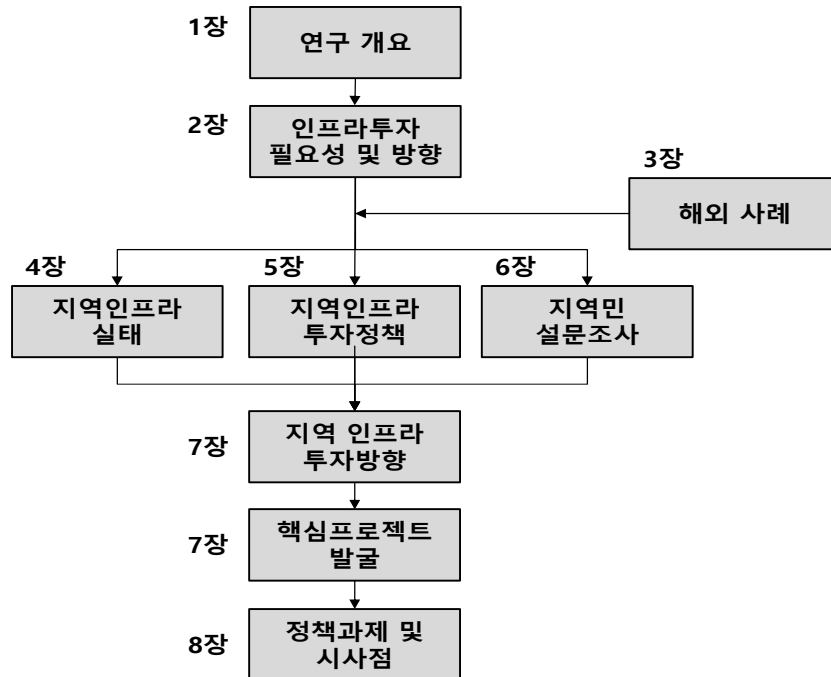
강원도

9. 강원도

강원도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 투자 수요, 핵심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및 방향(2장), 해외사례(3장), 지역 인프라 실태(4장),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5장), 지역민 설문조사(6장),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과 핵심사업(7장), 정책제언 및 시사점(8장)으로 구성됨.

그림 9-1
연구보고서의
체계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 강원도의 인구성장률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0.61%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38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강원도의 고령화지수는 2017년 기준 145.9로 전국 평균인 104.8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 2016년 기준 강원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1조 7,091억원이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이 21.7%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9.2%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보다 건설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실질

적인 생산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임.

-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비롯해 산업 및 경제 시설 등이 있으며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산업 및 경제시설 유치의 근간이 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유인함.
 - 지역내총생산(GRDP)의 증가는 인구증가와 맞물려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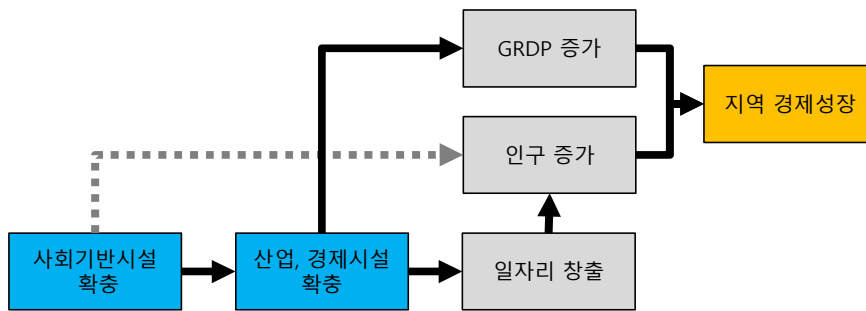


그림 9-2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 개인의 삶의 질은 기본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요구 만족 등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인프라 시설 확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 교통, 상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등은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인프라 시설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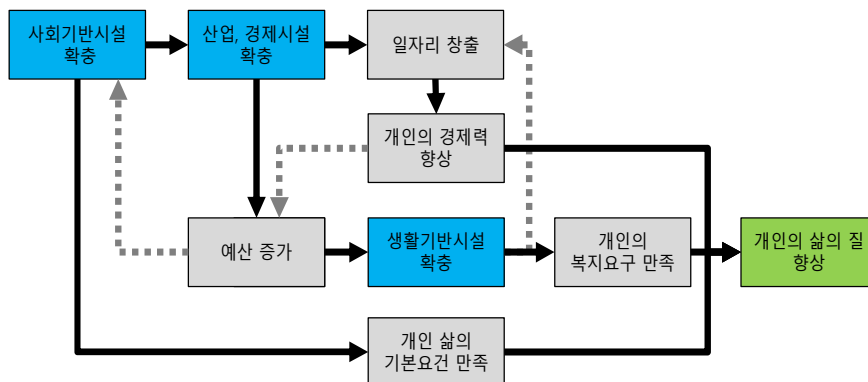


그림 9-3
인프라와 삶의
질과의 관계

9. 강원도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증가 및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됨. 또한 문화, 체육, 의료 시설 등은 개인의 복지 요구를 만족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됨.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교통시설

- 강원지역 내 총 도로연장은 9,863.3km로 전국 5위 수준이지만 강원도 지역 내 시군별 도로연장의 격차가 큼. 중추도시권인 원주, 강릉, 춘천 등에 도로연장 중 45.7%가 집중되어 있어 기타 지역의 주민들은 양질의 교통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도로의 총연장 1,946 km 중 67.3%(1,309km)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으로 노후도는 전국 최고 수준임. 지역적 특성에 따른 도로 파손이 빈번해 향후 사용 가능 연한이 초과하는 도로 증가가 예상됨.
- 2016년 기준 강원지역에는 각각 3,360개와 295개의 교량과 터널이 설치되어 있어 비율로는 10.4%와 13.5%를 차지해 전국 4위와 3위임. 그런데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노후 터널 및 교량은 각각 238개소, 7개소에서 2025년에는 각각 883개소와 34개소로 증가할 전망이다.

○ 물관리시설

- 강원도 지역의 총 상수관로 연장은 10,183.9km이며 전체 상수관로 대비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관로는 35.8% 수준으로, 전국 32.3%보다 더 높은 수준임.
- 특히, 20년 이상의 노후 상수관로는 연평균 274km씩 증가해 2025년에는 총 연장의 63%에 이르는 상수관로가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됨.
- 노후화로 인해 상수도 누수율은 전국 평균인 10.9%을 크게 상회하는 20.0%에

달해 전국 5위 수준을 기록함으로써 누수로 인한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강원도 지역의 2015년 기준 하수관 보급률은 74.4%로서 전국 평균인 79.9%에도 미치지 못한 전국 13위 수준임(서울 100%, 대전과 대구는 각각 96%와 90%).
- 강원 지역 내 시군별 하수관 보급률은 강릉시가 51.7%로 가장 낮으며, 강원 평균 하수관로 보급률인 74.4%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이 9개임.
- 전체 하수관로 중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관로는 28.7%이며, 향후 매년 약 225km/년씩 증가해 2025년에는 약 55.9%(4,323.2km)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될 전망이다.

○ 주거 및 교육시설

- 강원도 주거시설은 2016년 기준 총 575,967호로 아파트가 300,788호, 단독주택 232,164호, 연립 및 다세대 32,333호 순임.
-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은 총 133,285호로 전체 주택 수 대비 23.1%를 차지하고 있음. 2010년 14.8%였던 노후(30년 이상) 주거시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 단독주택 79.5%, 아파트 10.3%, 연립 및 다세대 주택 8.2%
- 폐광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태백시의 경우 40.1%이며, 정선군 39.0%, 영월군과 삼척시가 각각 38.8%와 31.8%를 기록
- 접경지역인 고성군, 화천군, 철원군도 30% 이상의 노후 비중 기록

○ 산업 및 경제시설

- 2016년 기준 강원도 전통시장은 총 70개소로 동해시에 9개소, 춘천시에 8개

소, 원주시에 8개소, 강릉시에 7개소 등이 분포되어 있음.

-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곳은 전체의 85.7%에 이르는 60개소임.
- 원주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등의 전통시장 사용연수는 모두 20년 이상

- 2017년 기준 산업단지 총 74개소로,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25개소, 도시첨단 4개소, 농공단지 43개소 등임.
- 사용연수가 20년 이상인 노후 산업단지는 총 27개소로 44.3% 수준

○ 기타시설

- 강원도 지역 내의 문화시설은 총 211개소로 전국 3위 수준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준공 이후 20년 이상의 시설이 전체의 36% 차지
- 체육시설의 경우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홍천군 등은 100개소 이상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성군 및 인제군 등은 50개소 미만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임.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시설별 투자 계획

○ 교통시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50개, 사업비는 1.36조원이며 既투자 금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약 2.23조원임.
- 2018년 1,384억원, 2019년과 2020년에 1,498억원과 1,251억원, 2021년에 1,038억원의 투자가 계획됨. 향후 민간투자 도로사업을 위해 6,000억원 투자 예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총사업비	기 투자금액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향후
50개 사업	2,230,975	862,829	1,368,146	250,251	138,411	149,861	125,165	103,822	600,636

표 9-1
교통시설 연도별 투자계획

○ 물관리시설

- 상수관로 사업은 총 10개, 사업비는 4,362억원이며 既투자 금액을 포함한 총 사업비 규모는 약 8,770억원임. 하수관로 사업은 총 6개, 5,848억원이며 既투자 금액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29조원임.
 - 상수관로 부문 주요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5,400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1,516억원) 등임.
 - 하수관로 부문 주요 사업은 하수관거 정비사업(1.4조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1.26조원) 등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총사업비	기 투자금액	연도별 투자계획						
			소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향후
상수 10개 사업	877,076	440,782	436,294	74,761	80,071	74,978	66,117	52,793	87,574
하수 6개 사업	3,292,677	2,707,785	584,892	111,446	119,396	101,573	141,756	110,721	-

표 9-2
물관리시설 연도별 투자계획

○ 주거 및 교육시설

- 강원도 주거시설 관련 투자는 총 4개 사업에 사업비가 약 1,433억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인 재정비촉진사업이 있음.
-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시설 관련 전체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학교 신증설 사업을 제외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증가함.

9.
강원도

강원도

표 9-3

교육시설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학생배치시설 (학교 신증설)	131,452	128,036	98,064	91,154	74,720	-12.8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 증개축)	22,494	50,639	76,392	89,830	117,189	56.0
교육환경개선시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220,821	251,565	307,649	379,524	407,359	16.7
합계	374,767	430,240	482,105	560,508	599,268	12.5

○ 산업 및 경제시설

- 강원도 지역 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투자는 2017년 75.6 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매년 75억원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 강원도 지역 내 산업단지 투자는 2021년까지 총 6개 사업, 662억원 규모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과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등임.

2) 인프라 투자정책

- 주요 인프라 시설물의 투자 및 노후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성 증가
 - 교통시설 :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련 조례 필요
 - 물관리시설 : 상하수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확대 필요
 - 주거 및 교육시설 : 시군별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주택 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시설 관련 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 제정 필요
 - 산업 및 경제시설 : 전통시장 관련 구조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지원 관련 조례, 산업단지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필요
 - 기타시설 : 노후 문화시설 유지관리 및 평가기준 마련, 체육시설 안전점검 가이드라인 및 예산 확보 필요

5. 설문조사

- 강원도민이 체감하는 주요 생활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성능 수준, 중요도,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 수준을 분석하기 위함.

구분	1	2	3	4	5
성능 수준	전혀 우수하지 않다	우수하지 않다	보통이다	우수하다	매우 우수하다
중요도	전혀 밀접하지 않다	밀접하지 않다	보통이다	밀접하다	매우 밀접하다
노후도 및 안전도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보통이다	안전하다	매우 안전하다
투자 수준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표 9-4

설문조사 질문과
응답방식

- 강원도 내 12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중요도,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성능수준이 떨어지고 노후화가 심하며 이에 따른 안전도 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과 문화 및 체육 시설, 교육시설로 평가됨.
 - 성능수준이 높은 시설물은 전통시장, 상하수도였으며, 가장 낮은 시설물은 산업단지, 도시침수저감시설 등임.
 - 노후도 및 안전도에서는 도시침수저감시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음.

구분	도로	터널	교량	상수도
중요도	4.03	3.53	3.58	3.86
성능수준	3.19	3.21	3.15	3.25
노후도	3.20	3.19	3.15	3.25
투자수준	3.79	3.48	3.48	3.77
구분	하수도	도시침수저감시설	주거시설	교육시설
중요도	3.83	3.89	3.95	4.05
성능수준	3.25	2.77	3.20	3.20
노후도	3.22	2.97	3.16	3.31
투자수준	3.74	3.96	3.62	3.81
구분	산업단지	전통시장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중요도	3.63	3.63	4.06	4.18
성능수준	2.68	3.28	2.95	2.94
노후도	3.05	3.12	3.30	3.11
투자수준	3.59	3.57	3.96	4.10

표 9-5

시설물별 평가
결과 요약

9.

강원도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 인프라 실태 조사와 정책 진단,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프라 투자자의 기본방향 도출
 - 강원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인프라의 체계적 확충
 - 노후 인프라 중심의 유지 및 보수 사업 활성화
 -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 시설,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
 - 인프라 사각 지역 해소를 위한 인프라 보급 취약 지역 개선사업 강화

그림 9-4

강원도 인프라 투자 방향



- 인프라 투자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부문별로 제시
 - 교통, 물관리, 주거 및 교육, 산업 및 경제 시설 등의 분야에서 50개, 20조 6,000억원 규모 사업 제시

단위: 억원

구분	사업 개소	총사업비
합계	50	20조 6,441.5
교통시설	9	13조 7,367.0
물관리시설	14	1조 6,911.5
주거 및 교육시설	8	1조 1,235.2
산업 및 경제시설	7	2조 7,089.0
기타 시설	12	1조 3,838.8

표 9-6
강원도 시설물
핵심 사업 현황

- 교통시설 분야는 9개 사업, 약 13조 7,000억원 규모
 - 주요 신규 사업은 제천·삼척 및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은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지방도 기능강화 사업, 노후위험교량 성능개선 사업 등

- 물관리(환경)시설 분야는 14개 사업, 약 1조 7,000억원 규모
 - 주요 신규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항구적 물 부족 해결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산불방지 방화선 구축사업 등
 -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으로는 노후 상수관로·하수관거 정비 및 신설, 사방 시설 유지관리, 노후 저수지 및 지방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 주거 및 교육시설 분야는 8개 사업, 1조 1,200억원 규모
 - 주요 신규 사업은 강원도 브랜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
 -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 사업 등

- 산업 및 경제시설 분야는 7개 사업, 2조 7,000억원 규모
 - 주요 신규 사업은 신소재 및 비철산업 클러스터 조성,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으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 기타 시설 분야는 12개 사업, 1조 4,000억원 규모
 - 주요 신규 사업은 드림마운틴 관광지 조성사업,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등

9.
강원도

- 주요 노후 인프라 사업으로는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 주권 확보 노력 필요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및 주민요구 대응능력 제고도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이한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 발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간투자 추진 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꾸준한 규모로 적정 수준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대상 발굴과 추진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리 조직 확보
 - 강원도와 도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인프라 투자대상 발굴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함(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는 보호·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 공사비 정상화와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근거 없는 기초금액 삭감 금지, 부당하게 산정된 기초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
 - 강원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물량 확보를 위한 공공사업 제안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ex. 산불에 따른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방화선 구축사업 등).
 - 강원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과 같은 맞춤 지원 프로그램).

별첨 1. 시설물별 핵심사업

○ 교통시설

단위: 억원

부문	주요 사업		사업비
교통시설	신규 사업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47,102.0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27,715.0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12,491.0
		동해선(강릉-제진)철도 건설	23,490.0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20,631.0
		항만배후 융복합 물류클러스터 구축	1,045.0
	노후화 사업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지방도 기능 강화	4,368.0
		유지보수를 통한 이용자 중심 최적의 위임국도 환경 조성	460.0
		노후위험교량 성능개선 사업	65.0
	소계		137,367.0

○ 물관리시설

단위: 억원

부문	주요 사업		사업비
물관리시설	신규 사업	물절약사업(WASCO) 시행	100.0
		기후변화 대응 항구적 물 부족 해결	10,000.0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2,431.0
		빗물 인프라 구축 등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261.9
		산사태 피해 예방사업	1,140.4
		연안정비 사업	464.3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300.0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및 관로설치	424.0
	노후화 사업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30.0
		노후 상수관로 성능 및 노후화 개선	275.0
		노후 하수관거 정비·신설	1,223.0
		국가 및 지방 하천 유지·관리 추진	80.0
		사방시설 유지관리	128.0
		민북지역 산림생태 복원	53.9
		소계	16,911.5

○ 주거 및 교육시설

단위: 억원

부문	주요 사업		사업비
주거 및 교육시설	신규 사업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2,000.0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883.0
		강원도 브랜드 임대주택 공급	6,484.0
		1인가구 시대 세어하우스 주택 보급	1,305.0
	노후화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38.7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2.0
		희망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3.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정비 사업	519.5
	소계		11,235.2

○ 산업 및 경제시설

단위: 억원

부문	주요 사업		사업비
산업 및 경제시설	신규 사업	e-mobility 생산·수출 거점화 벨트 구축	13,865.0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3,000.0
		신소재·비철산업 클러스터 조성	6,450.0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	28.0
	노후화 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96.0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3,500.0
		디지털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150.0
	소계		27,089.0

○ 기타시설

단위: 억원

부문	주요 사업	사업비	
기타시설	유네스코 창조도시 거점 구축	155.0	
	유휴시설 활용한 작은 생활문화 복지 공간 조성	454.5	
	올림픽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및 복원공사	53.1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	418.0	
	지역별 맞춤형 의료시설 구축	315.0	
	드림마운틴 관광지 조성사업	5,800.0	
	화진포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사업	4,624.3	
	DMZ생태관광거점 조성사업	1,210.0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확충	158.4	
	노후화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400.0
		노인복지시설 확충	111.1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139.4
	소계		13,8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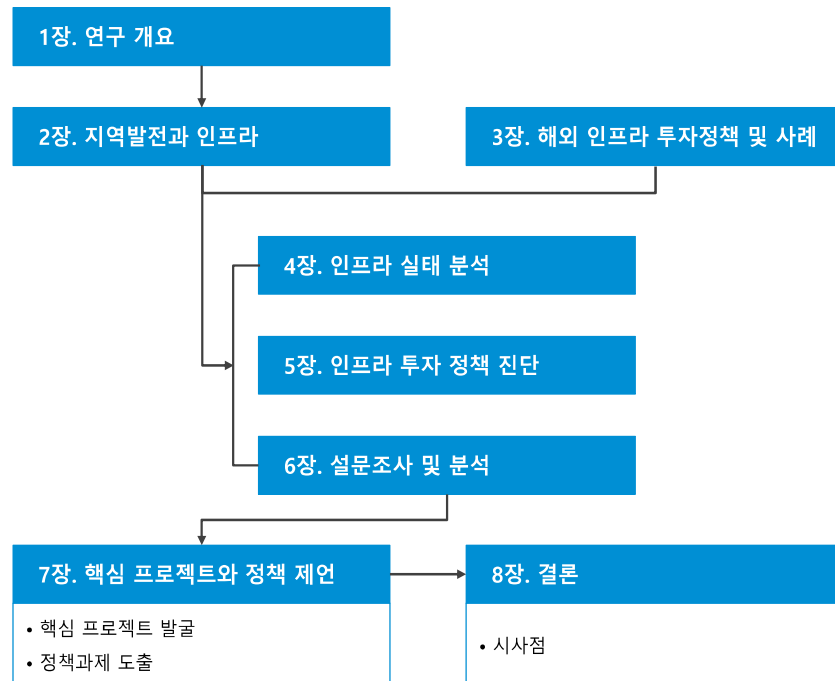
제10장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2018년 SOC 예산은 2017년의 22.1조원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 계획
 - 201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25조원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SOC 투자 축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SOC 투자의 과도한 축소는 경제성장 기반 약화,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안전 위협, 복지 수준 하락,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 등을 미칠 수 있음.
 - SOC 예산 축소와 인프라 노후화 가속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충청북도 지역도 예외일 수 없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의 인프라 실태 조사와 관련 정책 진단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 필요성 제시
 - 지역 내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 투자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함.
 - 충청북도 도민의 인프라 수요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충북 지역의 주요 인프라 사업을 분석함.
 - 충청북도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

-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은 공동으로 충북지역의 인프라 실태조사, 투자 수요에 대한 이해, 충북지역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
 - 본 연구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및 방향(2장),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3장), 지역 인프라 실태(4장),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5장), 지역민 설문조사(6장), 지역 인프라 투자방향과 주요사업(7장), 정책제언 및 시사점(8장)으로 구성함.
 - 지역 경제 및 건설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건설 인프라 성장을 유인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준비, 충북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민의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0-1
연구보고서의
구성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 충북의 인구성장률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약 0.65%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 2040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충북의 노령화지수는 2017년 기준 116.1로 전국 평균 104.8을 상회하며, 전국 9개 도 중 6번째 수준
- 2016년 기준 충청북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6조 1,217억원이며, 기초가격 기준으로 건설업은 약 6.2%(3조 2,025억원)의 비중을 차지
 - 건설업은 충북 내 세 번째로 GRDP 기여도가 높은 경제활동임(제조업 4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9.4%).
-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기반 시설과 산업 및 경제시설 등이 있으며,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산업 및 경제시설 유치의 근간이 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유인함.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증가를 촉진하며, 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지역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를 유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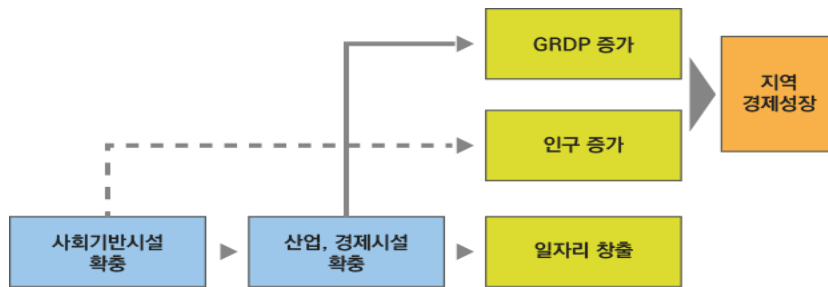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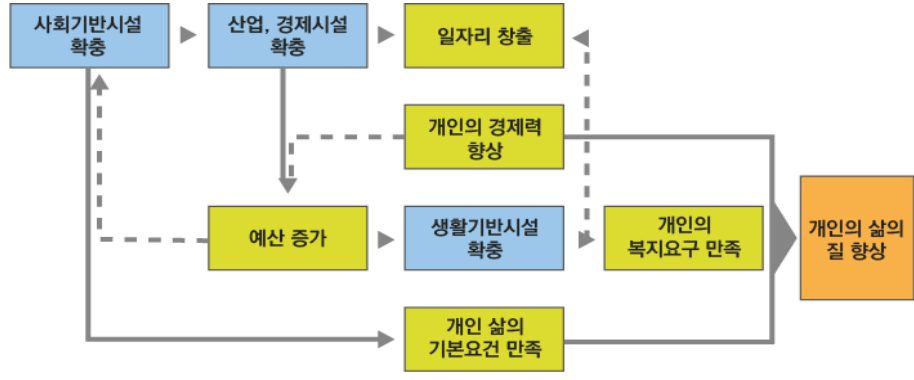
그림 10-2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 개인의 삶의 질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 요구 만족 등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인프라 시설 확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
 - 개인의 삶을 보편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기본요건과 관련한 시설물로는 교통, 상·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등의 인프라 시설이 존재함.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증가를 유도하며, 이는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함.

- 문화 및 체육 등의 시설은 개인의 복지 요구를 만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그림 10-3

인프라와 삶의 질과의 관계



3. 충청북도 인프라 실태 진단

1) 교통시설

○ 도로 및 도로교량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지역 내 총 도로 연장은 6,870km(미포장도 558km, 미개통도 519km)이며,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0.93km/km²으로 전국 1.08보다 낮음. ·포장률은 91.2%로 전국 92.4%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시·군도의 포장률은 낮고 미개통률은 높음(시도 미개통률 11.5%, 군도 포장률 67.6%, 미개통률 12.0%). ·충북 내 총 도로교량 수는 2,567개소가 존재함(고속국도 748개소, 일반국도 661개소, 지방도 428개소, 시도 376개소, 군도 354개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지역 일반도로 총 연장 988km 중 63.8%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강원, 경북 다음으로 노후도 높음(내구연한 : 아스팔트 도로 10년, 콘크리트 도로 20년). ·도로 내구연한이 초과되면 균열이나 포트홀 등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으며, 도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함. ·20년 이상 노후 교량은 1,037개소(충북 전체 교량의 40.4%), 40년 이상 노후된 교량 126개소(4.9%)가 존재하며, 10년 경과 시 충북 내 노후 도로교량은 2,068개소(약 81%)로 급증할 것임. ·(시설물안전법) 1-2종 도로 교량 810개소 중 보수(B등급) 및 보강(C등급)이 필요한 B등급이하 교량은 668개소(B등급 594개소, C등급 74개소) 존재함. ·(재난안전법)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교량 749개소 중 재난위험 시설(D, E등급) 교량은 6개소로 파악됨.

○ 철도 및 철도교량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철도는 총 5개 노선(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4개)이 통과함. 2011년 오송역이 개통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 충북지역 철도 성능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0.1%(‘만족한다’ 이상)로 낮게 나타남. ·수도권 연계, 충남 지역 연계(천안 등), 철도 고속화, 공항연계 노선 등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물안전법) 해당 1·2종 철도 교량 94개소 중 20년 경과 노후 교량이 28개소(29.8%) 있으며, 40년 경과 노후 교량이 13개소(13.8%) 차지하고 있음. ·1·2종 철도 교량 중 보수(B등급) 및 보강(C등급)이 필요한 B등급 이하 교량이 89개소(94.7%) 존재함. ·B등급 교량 74개소(1종 48개소, 2종 26개소), C등급 교량(1종 2개소, 2종 13개소)

○ 공항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공항은 청주국제공항이 있으며, 2015년 연간 이용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나, 국제선 운항 및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아직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다소 미약함.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며, 관련 사업으로는 천안~청주공항역 복선전철 사업, 세종~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 계류장 건설 등이 있음. ·현 정부는 국제공항으로의 육성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2,744m에서 3200m로 확장하는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공약을 제시하였음.

2) 물관리시설

○ 상수도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일반상수도 보급률(충북 92.6%<전국 97.3%),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충북 90.2%<전국 96.5%), 급수 보급률 (충북 97.9%<전국 98.8%)은 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충북 유수율은 83.8%로서 전국 84.3%보다 낮고, 누수율은 11.8%로 전국 10.9%보다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지역별 유수율은 보은군(56.2%), 영동군(57.4%), 괴산군(58%), 옥천군(62.5%)이 낮았으며, 누수율은 괴산군(39.2%), 보은군(39.1%), 영동군(38.1%), 옥천군(28.7%), 증평군(20.9%), 음성군(19.6%), 충주시(19.5%) 등의 순이었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내 상수관로 총연장은 8,766km이며, 사용연수 20년이 경과된 관로는 2,301km(도수관 56km, 송수관 111km, 배수관 965km, 급수관 1,170km)로 26.2%를 차지하고 있음. 10년 후 5,140km(총연장의 58.6%)로 급증할 예정임. ·지역별 노후 연장은 충주시(888km), 충주시(520km), 제천시(208km)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충북 경년관 연장은 약 1,546km로 총연장의 약 17.6%를 차지함(충주시 562km, 충주시 341km, 단양군 163km, 영동군 155km 등). ·(시설물안전법) 1·2종에 해당하는 시설물 53개소 중 보수가 필요한 B등급 상수도 시설물은 39개소(73.6%, 1종 7개소, 2종 32개소) 존재함.

○ 하수도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p>·충북 공공하수처리인구 보급률은 86.2%로 전국 92.9%보다 낮고, 하수관로 보급률은 83.6%로 전국 79.9%보다 높음. 하수도 설치율은 72%로 전국 74.2%보다 낮음.</p> <p>*하수도설치율=공공하수처리인구보급률(%)×하수관로보급률(%)÷100</p> <p>·지역별 공공하수처리인구 보급률은 괴산군(47.9%), 음성군(51.9%), 영동군(67.1%), 보은군(70.9%) 순으로 낮았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진천군(66.8%), 단양군(72.9%), 제천시(75.1%) 순으로 낮게 집계됨.</p> <p>·하수도 설치율은 괴산군(21.8%), 음성군(26.9%), 보은군(36.2%), 진천군(44.8%), 영동군(45.0%), 단양군(51%) 순으로 낮음.</p>
노후도 및 안전 수준	<p>·충북 하수관로 총연장은 5,868km 중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연장은 1,582km로 27%를 차지함. 10년 후 3,232km(총연장의 55.1%)로 급증할 예정임.</p> <p>·지역별 노후 연장은 청주시(821km, 청주시 연장의 46.8%), 제천시(331km, 53.0%), 영동군(183km, 48.8%) 순으로 높게 나타남.</p> <p>·(시설물안전법) 1·2종으로 분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7개소 존재하며, 9개소(24.3%)가 20년 이상 노후화됨.</p> <p>·공공하수처리시설은 37개소(2종) 중 보수가 필요한 B등급 시설물은 27개소(73.0%) 존재함.</p>

○ 하천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p>·충북은 5개 국가하천, 169개 지방하천, 그 외 소하천이 존재하며, 국가 및 지방하천 총 연장 2339.8km에 대한 개수율은 60.3%로 미개수 구간이 814.4km(국가하천 40.9km, 지방하천 773.5km) 존재함.</p> <p>·지역별 개수율은 진천군(미개수 301.3km, 49.5%), 충주시(미개수 427.9km, 58.8%)가 낮게 집계됨.</p>
노후도 및 안전 수준	<p>·(시설물안전법) 1·2종에 해당하는 충북 하천 관련 시설물은 2종 배수펌프장 30개소, 수문 및 통문 113개소, 제방 48개소로 총 191개소임.</p> <p>·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68개소(배수펌프장 15개소, 수문 및 통문 46개소, 제방 7개소)로 35.6%를 차지함.</p> <p>·시설물안전법 해당 시설물 중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B등급 이하 시설물은 135개소(B등급 118개소, C등급 17개소) 존재함.</p>

○ 댐

구분	주요 내용
현황	<p>·충북 내 댐은 다목적댐 2개소(충주댐, 대청댐), 발전용댐 1개소(괴산댐), 용수전용댐 34개소가 존재함(시설물안전법상 1종 6개소, 2종 31개소).</p>
노후도 및 안전 수준	<p>·(다목적댐 및 발전용댐) 충주댐(1985년 준공 33년 경과, C등급 보강 필요), 대청댐(1980년 준공 38년 경과, B등급 보수 필요), 괴산댐(1957 준공 61년 경과, B등급 보수 필요)</p> <p>·1·2종 용수전용댐 34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댐이 28개소(82.4%) 있으며, 40년 이상 경과한 댐도 12개소(35.3%) 존재함.</p> <p>·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B등급 이하 시설물은 35개소(94.6%) 존재함(B등급 20개소-1종 5개소, 2종 15개소/C등급 15개소-1종 1개소, 2종 14개소).</p>

○ 수리시설(저수지 등)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2015년 기준 충북 수리시설은 저수지 771개소, 양배수장 454개소, 집수암거 154개소, 취입보 1,891개소로 조사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수리시설 중 20년 이상된 저수지는 167개소(90.8%), 양배수장 153개소(63.8%), 집수암거 27개소(96.4%), 취입보 518개소(97.2%)로서 노후도가 높음. ·건설한 지 40년 이상된 수리시설도 저수지 129개소(70.1%), 양배수장 52개소(21.7%), 집수암거 19개소(67.9%), 취입보 385개소(72.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2017.7.16. 홍수 피해 현황) 국가재난정보 관리시스템(NDMS) 기준 총 공공시설 415억원, 사유시설 131억 6천만 원 등 모두 546억 6천만원으로 집계됨(도로 106개소·하천 257개소·상하수도 73개소·철도 13개소 등 피해 발생). ·시·군별 복구액 현황은 1,754억 4천만원 수준으로 집계됨(청주 1,051억원, 괴산 354억원, 보은 118억원 등). 시설별 복구액은 2,004억 9천여만원에 달함. ·홍수로 인한 복구금액은 피해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임.

3) 주거 및 교육시설

○ 주거시설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2016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충북 내 주거시설은 568,567호로 단독주택 206,993호(36.4%), 아파트 316,851호(55.7%), 연립주택 16,004호(2.8%), 다세대주택 19,329호(3.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9,390호(1.7%)로 구성됨. ·충북 주택보급률은 100%를 상회하나(2016 국토부 기준 110.7%), 주택 소유율은 56.9%에 불과함(옥천군 주택 소유율이 65.6%로 가장 높으며, 음성군은 49.0%로 가장 낮음).
노후도 및 안전 수준	·충북 내 3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은 116,847호로 약 20.5%(20년 이상 노후 주거시설 50.7%)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 노후 주거시설 비율 약 16.8%를 상회함. ·주거시설 종류별로는 단독주택 45.3%(93,797호), 연립주택 40.7%(6,512호)로 노후 비율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보은군(48.0%), 옥천군(39.4%), 단양군(38.8%), 괴산군(38.3%), 영동군(36.6%)이 높게 나타남.

○ 도시재생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충북 내 주요 도시재생사업은 선도지역 1곳(청주시, 도시경제기반형), 일반지역 2곳(충주시, 제천시,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 뉴딜사업 4곳(청주시_중심시가지형, 제천시_우리동네 살리기, 충주시_주거지 지원형, 청주시_일반근린형)이 선정됨. ·지난 2017년 12월 선정된 뉴딜사업 4곳은 2018년부터 2020~22년 사이 수행 계획임.

○ 교육시설

구분	주요 내용
주요현황	·충북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총 837개(유치원 345개소, 초등학교 272개소, 중학교 127개소, 고등학교 84개소, 특수학교 9개소) 존재함. ·지역별로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청주시(322개소, 38.5%), 충주시(115개소, 13.7%), 제천시(80개소, 9.6%) 순으로 나타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충북 내 2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물은 674개소(81%)를 차지하며, 4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은 390개소(46.6%)로 높은 수준임. ·충북 내 폐교는 총 238개소(2017년 235개소)있으며, 미활용 상태로서 향후 활용 방안이 필요한 폐교가 37개소를 포함함.

4) 산업 및 경제시설

○ 산업단지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현황	·충북 산업단지는 총 122개소(국가산업단지 2개소, 일반산업단지 75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2개소, 농공산업단지 43개소)로 완료 산업단지 87개소, 조성중 23개소, 미개발(보상 중 또는 준비 중) 12개로 구성됨. ·지역별로는 음성군(22개소), 진천군(20개소), 청주시(18개소), 충주시(18개소) 순으로 나타남. ·완료 산업단지 87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 단지는 37개소(일반산업단지 4개소, 농공산업단지 33개소)로 약 42.5% 차지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분	주요 내용
주요현황	·충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총 78개소(인정 62개소, 미인정 16개소)이며, 청주시(19개), 충주시(16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중평균 1개소로 가장 적음). ·시장경영진흥원(2012)의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56.3)이나, D등급(비교적 경쟁력이 낮은 수준) 시장이 10개소 존재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20년 이상 노후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74개소(94.9%)이며, 충주시 내 1개소, 제천시 내 2개소, 진천군 내 1개소를 제외한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노후화되어 있음.

○ 문화시설

구분	주요 내용
과부족	·충북 문화시설은 총 126개소이며, 인구 백만 명당은 78.58개소로 9개 도 중 제주, 강원, 전남, 전북 다음으로 낮음. ·미술관은 충북 내 총 8개소 중 청주시에 7개소가 위치하여 타 시·군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노후도 및 안전 수준	·126개 문화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 시설은 56개소(44.4%)이며, 10년 경과 시 노후 문화시설은 98개소(77.8%)로 급증함. ·40년 이상 노후 문화시설도 18개소(지방문화원 10개소, 도서관 4개소, 박물관 4개)로 약 14.3%를 차지함.

○ 체육시설

구분	주요 내용
주요현황	·충북 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684개소 있으며, 인구 백만 명당은 1050.3개소로 9개 도 중 강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간이체육시설(마을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288개소이며, 청주시(40개소, 13.9%), 충주시 및 제천시(각각 33개소, 11.5%), 옥천군 30개소(10.4%)로 분포됨.
노후도 및 안전 수준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체육시설 중 20년 이상된 체육시설은 총 38개소(13.2%)가 존재함.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3개소로 가장 많으며, 제천시와 증평군 각각 5개소, 음성군 4개소 등이 있음. 30년 이상 노후화된 체육시설도 8개소 존재함.

4.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정책 진단

1) 충북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 충북의 최근 5년 간(2013~17년) 세출은 전국 지방재정의 약 3.9~4.1% 수준으로 파악
- 지난 5년 간 전국 지방재정 평균 증가율은 약 5.48%수준이며, 충북은 5.08%로 다소 낮은 수준임. 특히, 2015~17년 충북의 평균 지방재정 증가율은 3.50%로 전국 5.63%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17년 충북의 1인당 SOC 예산은 71.8만원으로 16개 시·도 평균 72.5만원을 하회함.

10.

충청북도

표 10-1

지방자치단체 및
충북지역 세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국 세출	전국 증가율	충북 세출	충북 비율	충북 증가율
2017	259,432,432	3.8	10,030,985	3.9	2.3
2016	250,014,905	6.9	9,808,174	3.9	3.3
2015	233,951,652	6.2	9,496,813	4.1	4.9
2014	220,335,925	5.5	9,051,661	4.1	8.0
2013	208,888,572	5.0	8,383,027	4.0	6.9

- 충북 SOC 관련 세출과 사회복지 세출을 비교해보면, SOC 관련 세출의 경우 2008년 16.7%에서 2017년 11.5%로 지속적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사회복지 세출은 2008년 21.1%에서 2017년 28.7%로 지속적 증가세
- 충북의 SOC 관련(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 개발)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적으로는 2008년 약 1조 239억원에서 2017년 1조 1,518억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함.

(단위 : 백만원, %)

표 10-2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현황

구분	충북 세출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SOC		사회복지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7	10,030,985	504,284	647,515	1,151,799	11.5	2,879,698	28.7
2016	9,808,174	505,920	614,650	1,120,570	11.4	2,690,141	27.4
2015	9,496,813	520,745	587,985	1,108,730	11.7	2,635,635	27.8
2014	9,051,661	539,399	513,740	1,053,139	11.6	2,449,680	27.1
2013	8,383,027	618,687	545,060	1,163,747	13.9	2,075,943	24.8
2012	7,840,029	639,207	587,666	1,226,873	15.6	1,874,760	23.9
2011	7,604,636	618,472	519,488	1,137,960	15.0	1,713,386	22.5
2010	7,254,585	596,931	572,175	1,169,106	16.1	1,621,718	22.4
2009	6,726,664	608,670	519,356	1,128,026	16.8	1,496,944	22.3
2008	6,141,093	538,584	485,311	1,023,895	16.7	1,292,994	21.1

- 그러나 전체 세출 대비 SOC 관련 세출 비율은 2008년 약 16.7%에서 2017년 11.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함(연평균 약 0.6% 감소).
 - 수송 및 교통 : 2008년 5,386억원(8.8%) -> 2017년 5,043억원(5.0%)
 - 국토 및 지역개발 : 2008년 4,853억원(7.9%) -> 2017년 6,475억원(6.5%)
- 한편, 사회복지 세출은 금액적으로 2008년 1조 2,930억원에서 2017년 2조 8,797억원으로 연평균 약 9.5%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 전체 세출 대비 사회복지 세출 비율은 2008년 21.1%에서 2017년 28.7% 수

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연평균 약 0.8% 증가).

- 충북의 2013~16년 사이 SOC 관련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결산) 현황을 보면, 2013~15년 SOC 집행률은 연평균 약 9.2% 감소
 - 사회복지 예산의 집행률은 2013~2015년 연평균 약 7.4% 증가함.
 - 2016년의 경우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였으나, 최근 SOC 감소 기조를 고려할 때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음.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계획	사회복지	1,030,717	1,081,030	1,122,452	1,153,667	
	SOC	합계	347,616	337,262	342,308	355,005
		수송 및 교통	238,148	229,726	231,528	240,637
		국토 및 지역개발	109,468	107,536	110,780	114,368
결산	사회복지	852,916	964,472	1,095,746	1,156,619	
	SOC	합계	343,863	290,636	275,640	355,133
		수송 및 교통	234,657	209,341	175,476	208,368
		국토 및 지역개발	109,206	81,295	100,164	146,765
집행률	사회복지	82.7	89.2	97.6	100.3	
	SOC	98.9	86.2	80.5	100.0	

표 10-3

충북 SOC 및 사회복지 예산 및 결산 비교

- 충북(본청 기준)은 향후 5년 간 25조 6,288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으로 8조 7,839억원(34.3%)을 계획하고 있으며, SOC 예산으로는 1조 9,711억원(7.7%)을 계획함(2018~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2)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 현 정부는 충북의 도로, 철도, 공항, 산업단지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도로	•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 - 4차선 미 확장으로 지정체가 상존하고 있는 호법~남이 구간을 확장
철도	•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조기 추진 • 충북선 철도 고속화 연계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공항	• 청주공항 증부권 거점공항 육성 - 활주로 길이를 현재 2,744m에서 3,200m로 확장, 계류장 건설
산업단지	•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표 10-4

충북 인프라 관련 정부 공약

10.

충청북도

- 충북의 향후 주요 업무 계획 중 인프라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정부의 공약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존재

구분	세부 내용
신성장 교통축 도로망 확충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4축(세종~청주), 동서5축(옥산~오창), 동서6축(제천~영월),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경부(동이~옥천) 확장 •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 및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내수~미원~보은~옥천.영동) 추진 * 미계획 구간 미원우회도로(미원리~쌍이리) 본격 추진 • 세종시 연결도로 건설 : 오송~청주, 오송~청주국제공항, 오송~조치원, 오송역~ 청주공항 BRT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중북부 수계 광역화 사업(청주, 충주, 증평, 진천, 괴산, 음성) • 소규모 다목적 저수지 건설(충주, 영동, 단양)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5) 반영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철도 및 중앙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 - 충북선 고속화사업(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대전~옥천간 광역철도연장
고부가가치 충북 힐링 관광 조성	
공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중부권 거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경제권 선도공항 지정, 글로벌 항공전문인력양성센터 설립(국토부 협의) - 주기장 확장(14개소), 계류장 신설(1개소), 청주공항~세종간 간선도로망 확충
스포츠 기반 조성 및 체육행사 성공개최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스포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센터 건립(3개소), 청주 실내빙상장 및 인공암벽장 • 지역 거점 체육 인프라 조성(청주, 증평, 진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난 예방	
재난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6재해복구사업 추진(1,306개소) • 라이프라인(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최우선 응급복구 •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2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15지구,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5. 충청북도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설문조사)

- 충청도민 509명을 대상으로 13개 주요 시설물의 지역 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 수준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
 - 설문 분석 결과 현재 충북 내 인프라 시설물은 중요도에 비해 성능 수준이 낮으며, 노후도가 높고, 안전 수준은 낮게 평가됨.
 - (지역 경쟁력) 중요도 : 13개 주요 시설물 중 교육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4.02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복지/체육시설(3.98), 도로(3.94), 주거시설(3.91), 재해방지시설(3.82), 상수도(3.81), 하수도시설(3.78) 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됨. 댐 및 저수지에 대한 중요도는 3.33으로 가장 낮았음.
 - 성능 수준 : 상수도 성능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3.31로 가장 높았으며, 재해방지시설이 2.68로 가장 낮게 평가됨. 철도(2.79), 문화/복지/체육시설(2.79), 산업시설(2.96)은 성능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하로 조사됨.
 - 노후도 및 안전도 : 교육시설(3.29), 공항(3.26), 상수도(3.26) 등에 대한 노후도 및 안전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재해방지시설의 경우 2.96으로 주요 시설물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투자 수준 : 시설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문화/복지/체육시설(3.90), 재해방지시설(3.88), 도로(3.72) 등이 높았으며, 댐 및 저수지에 대한 투자(3.29)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구분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투자 수준
도로	3.94	3.12	3.16	3.72
교량	3.42	3.06	3.12	3.44
철도	3.72	2.79	3.20	3.64
공항	3.74	3.06	3.26	3.43
상수도	3.81	3.31	3.26	3.67
하수도	3.78	3.25	3.21	3.64
재해방지시설	3.82	2.68	2.96	3.88
댐 및 저수지	3.33	3.16	3.08	3.29
주거시설	3.91	3.23	3.20	3.65
교육시설	4.02	3.28	3.29	3.75
산업시설	3.55	2.96	3.11	3.46
전통시장	3.50	3.09	3.10	3.50
문화/복지/체육시설	3.98	2.79	3.22	3.90

표 10-5

충북 주요 시설물
설문결과 비교

10.

충청북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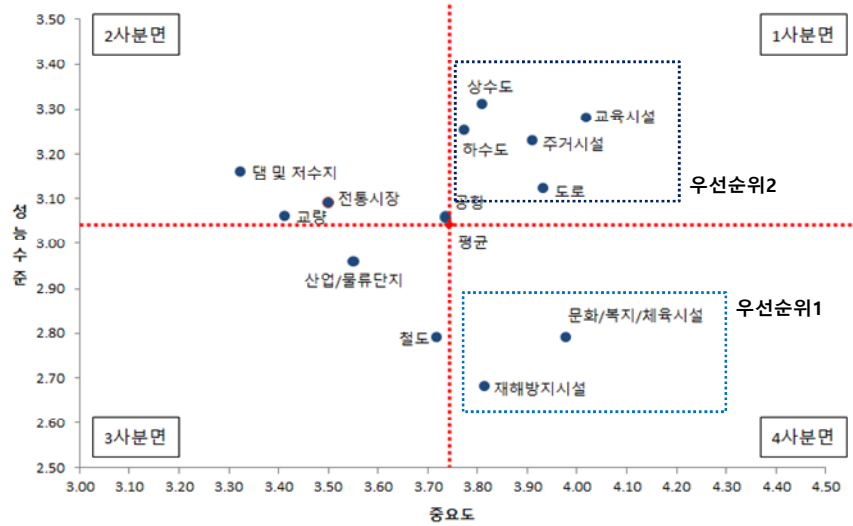
충청북도

- 인프라 시설물 투자 방향

- (신규 인프라) 수요가 가장 높은 그룹은 문화/복지/체육시설, 재해방지시설 (4사분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수도, 하수도, 교육시설, 주거시설, 도로, 그룹(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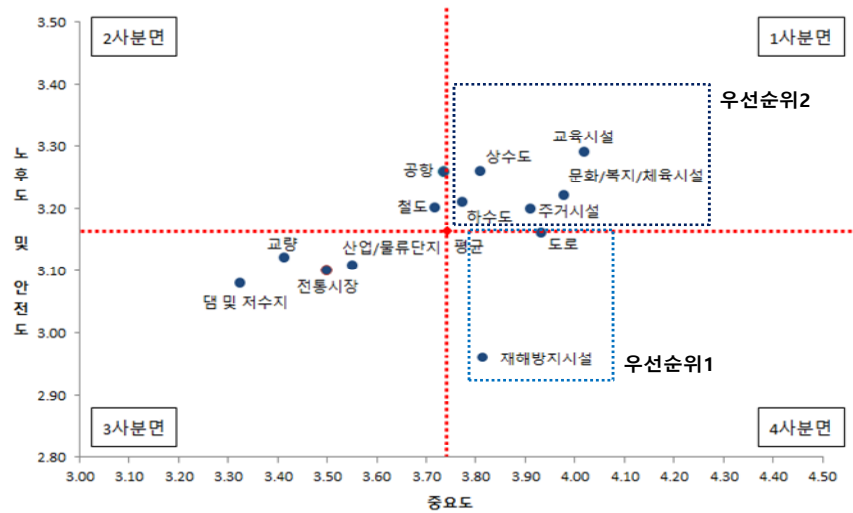
주요 시설물의
성능수준-중요도



- (노후 인프라) 수요가 가장 높은 그룹은 재해방지시설, 도로(4사분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수도, 하수도, 교육시설, 주거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그룹(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10-5

주요 시설물의
노후도 및
안전도-중요도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주요 사업

- 충북 인프라 실태조사, 투자 정책 진단,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등을 종합해 향후 충북 지역의 인프라 투자 기본 방향을 도출
 - 충북 인프라 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신규 공급
 - 충북 노후 인프라에 대한 정비, 개선, 활성화 사업 추진
 -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시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인프라 구축
 -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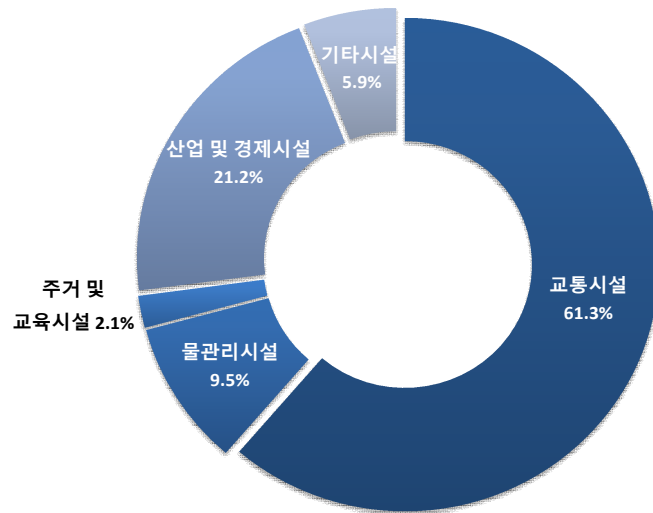


그림 10-6

충북 시설물별
투자규모 비율

- 인프라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도출한 충청북도 주요 프로젝트는 총 263개 사업, 22조 6,624억원 규모
 - 사업 유형별로는 신규 사업 121개, 20조 1,911억원이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 142개 사업, 2조 4,713억원 규모임.
 - 시설물별로는 교통시설 13조 8,982억원(61.3%), 물관리시설 2조 1,459억원 (9.5%), 주거 및 교육시설 4,643억원(2.1%), 산업 및 경제시설 4조 8,162억원(21.2%), (문화 및 체육 관련) 기타시설 1조 3,378억원(5.9%)으로 집계됨.

(단위 : 개, 억원, %)

10.

충청북도

10.

충청북도

표 10-6

충북 신규 및
노후 인프라 사업
총괄 집계

시설 유형			사업 개수		총 소요 예산		
			시설별	소계	시설별	소계	
합계			263		226,624		
신규			121		201,911		
노후			142		24,713		
교통 시설	도로	신규	38	46	63,879	67,931	30.0
		노후	8		4,052		
	교량	신규	1	3	257	309	0.1
		노후	2		52		
	철도	신규	7	7	70,652	70,652	31.2
	공항	신규	1	1	90	90	0.04
	소계		57		138,982		61.3
물관리 시설	상수도	신규	12	33	2,470	7,413	3.3
		노후	21		4,943		
	하수도	신규	13	30	632	3,780	1.7
		노후	17		3,148		
	침수저감	신규	2	13	219	1,446	0.6
		노후	11		1,227		
	하천	노후	58	58	7,742	7,742	3.4
	댐수리시설	신규	1	12	81	1,078	0.5
노후		11	997				
소계		146		21,459		9.5	
주거 및 교육시설	도시재생	노후	4	4	1,762	1,762	0.8
	교육시설	신규	10	10	2,881	2,881	1.3
	소계		14		4,643		2.1
산업 및 경제시설	산업단지	신규	6	6	47,372	47,372	20.9
	전통시장	노후	10	10	790	790	0.3
	소계		16		48,162		21.2
기타시설	문화시설	신규	17	17	5,318	5,318	2.3
	체육시설	신규	13	13	8,060	8,060	3.6
	소계		30		13,378		5.9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함.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 노력 필요(충북 재정자립도 31.8%로 9개 도 가운데 5번째)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및 주민요구 대응 능력 제고도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 발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간투자 추진대상 사업을 현행 특정 사업 기반의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대단위 프로그램 사업 위주의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꾸준한 규모로 적정 수준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 대상 발굴과 추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관리 조직 확보
 -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인프라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주무부처를 기술적으로

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함(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과 같은 맞춤 지원 프로그램)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보호 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별첨 1. 시설물별 주요 사업(신규/노후)

- 신규 주요 사업 : 121개, 20조 1,911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교통시설	(47건, 134,878억원)	도로	
		고속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부(남이~호법) 확장(10,002) • 동서 4축(공주~청주) 신설(8,262) • 동서 5축(오창~증평) 신설(3,934) • 동서 6축(제천~영월) 신설(11,649) • (추가) 중부내륙 고속도로(여주~충주) 확장(2,335) • (추가) 괴산~제천 고속도로 신설(15,140) • (추가) 세종~청주권 BRT 도로건설(4,166)
		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 충청내륙고속화도로(4공구 잔여 633) • 제2 충청내륙고속화도로(6, 7공구 잔여 704)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국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춘-황간 국지도 건설(706) • 제천-평창 국지도 건설(419)
		지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가흥 지방도확포장공사(760) • 소매~길선 지방도확포장공사(360) • 무성~이목 지방도확포장공사(490) • 음성~신니IC 지방도확포장공사(840) • 맹동~대소 지방도확포장공사(620) • 내송~내곡 지방도확포장공사(181) • 대사~내송 지방도확포장공사(994) • 하시~상괴간 지방도확포장공사(177) • 평산~세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115) • 지동~부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197) • 초정~증평 지방도확포장공사(190) • 진천 합목도로 확포장공사(50)
		시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양군 군도건설사업(163) • 하이패스IC~갈동교차로간 도로개설(80) • 사곡~도당간 도로개설공사(25) •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148) • 삼산~덕암간 도로확포장공사(97) • 석화~대길간 도로확포장공사(62) • 시목~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54) • 중앙탑가흥(군도11호선) 도로확포장(23) • 살미향산(군도5호선) 도로확포장(30) • 수정~금굴간 군도확포장사업(60) • 월전리 군도확포장공사(40) • 영동군 군도확포장(90) • 궁골~논실간 군도확포장(35) • 영춘면 의풍리 군도확포장사업(28) • 의풍리(군도14호선) 도로확포장사업(20)
교량	가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현천대교가설사업(257)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7,102)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8,216) • 충청권 광역철도(4,107, 전체 13,708) • (추가)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복선전철(39,000) • (추가) 대전~옥천 복선전철(227) • (추가) 옥천~영동 광역철도(2,000) • (추가)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10,000)

10.
충청북도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물관리시설 (28건, 3,402억원)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1,615) • 충주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공급사업(50) • 충주시 지방상수도(급·배수관) 시설 확충(53) • 충주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66) • 제천시 급수 신설공사(77) • 보은군 지방상수도 공급사업(33) • 옥천군 상수도보급(59) • 옥천군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142) • 옥천군 농어촌 광역상수도 확장사업(134) • 음성군 상수도 신규급수공사(51) • 단양군 마을상수도 시설확충(81) • 단양군 소백산권 3도접경 상수도 설치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109)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시내일원 하수도 긴급공사(22) • 청주시 산성동 성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25) • 청주시 하수처리장확충(강내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64)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중앙탐하가흥하수처리 시설 증설(6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가정하수처리장증설(20) • 충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별묘하수처리장증설 (20) • 옥천군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설치사업(54) • 옥천군 금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차)(71) • 옥천군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7) • 옥천군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22) • 옥천군 원남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45) • 옥천군 음성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증설사업(142) • 영동군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공촌, 매금)(60)
	침수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150) • 청주시 울랑 배수지 신설공사(2단계)(69)
	댐 및 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다목적 소규모 저수지 건설사업(잔여 130)
주거 및 교육시설 (10건, 2,881억원)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충주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22) • 두촌유치원신설(76) • 동남1초등학교 신설(262)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암초등학교 신설(272) • 대소원2초등학교 신설(302) • 솔밭2초등학교 신설(600) • 청원2초등학교 신설(381) • 오송2초등학교 신설(303) • 충북예술고등학교 이전(407) • 부윤2초등학교 신설(256)
산업 및 경제시설 (6건, 47,372억원)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북부산업단지 개발(1,840) •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대통령 공약사업)(37,704) • 청주 화장품산업단지 조성사업(2,321) •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조성사업(2,690) •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1,700) •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추진(1,117)
기타시설 (30건, 13,378억원)			
		문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82) • 가경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126) •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1,203) •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1,905) • 가경지구 도서관건립(133) • 서충주 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131) • 충주 예술의전당 건립(450) • 충주 시립미술관 건립(20) •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조성사업 (보조)(56) • 법주사성보박물관 건립 사업(180) • 군립공공도서관 건립(160) • 어린이 생태문학체험관 조성사업(96) • 생태문화복합센터 조성사업(256) • 문예회관 건립(400) • 복합문화시설 조성(18) • 우탁생가재현 및 우탁시조 문학관 건립(44) • 감성메모리얼 뮤지엄 조성사업(58)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스포츠 콤플렉스 조성(6,900) • 영운정수장 내 수영장 건립(200) • 가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110) • 내수야구장 조성사업(91) • 오창야구장 조성사업(70) •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55) •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53)

10.

충청북도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150) • 증평종합운동장 건립(300) • 단양골프연습장조성사업(이전)(40) • 단양국궁장조성사업(이전)(60) • 상진배드민턴장건립사업(19) • 단양 생태체육공원 내 축구장 건립사업(12)

- 노후 주요 사업 : 142개, 2조 4,713억원

(단위 : 억원)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교통시설 (10건, 4,104억원)			
도로			
		국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1호선 신대리~진암리(700) • 509호선 탑평리~가흥리(176) • 329호선 대사리~내송리(995) • 532호선 하시리~상괴리(177)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45) • 노후 포장도 보수(1,327) • 지방도 유지보수(274) • 비포장도 정비사업(158)
교량			
		가설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현교 재가설공사(32) • 범암교 재가설공사(22)
물관리시설 (118건, 18,057억원)			
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004) • 도본청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지원사업(49) • 청주시 수도시설 정비사업(70) • 충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보조사업)(55) • 충주시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42) • 제천시 상수도 시설공사 및 개량사업(462) • 제천시 마을상수도 개량(65) • 제천시 유수율 제고사업 (노후관교체)(보조)(26) • 보은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보은노후정수장정비사업)(354)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천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보조)(236) • 옥천군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86) • 옥천군 유수율 제고사업(보조)(24) • 영동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121) • 진천군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50) • 괴산군 마을상수도 정비(216) • 괴산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28) • 괴산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309) • 음성군 소규모시설 개선사업(28) • 음성군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27) • 단양군 단양정수장 현대화사업(426) • 단양군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265)
	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오창산업단지 하수관로 개선공사(25) • 청주시 구도심 도심침수대응 하수관로 정비사업(260) • 청주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575) •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사업(329) • 청주시 하수관로 정비(내수음 구성리 하수관로정비 사업)(5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가덕면 상대리 하수관로정비 사업)(66) • 청주시 하수관로정비(정봉동~평동 하수관로정비 사업)(230) • 청주시 읍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 (1,029)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금가하수관로정비(25) • 충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엄정하수관로정비(24) • 제천시 하수도 정비사업(185) • 보은군 공공하수도 유지보수(31) • 보은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은하수관거정비)(40) • 보은군 하수관로 정비(9) • 옥천군 하수관로 정비사업(보조)(76) • 옥천군 대소 하수관로 정비사업(154) • 영동군 영동읍(오정, 회동, 양정, 부용), 하수관로정비사업(34)
	침수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배수개선사업(325)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27) • 청주시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25) • 충주시 양성 단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02) • 옥천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보조)(260) • 보은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오덕지구)(150) • 영동군 재해위험지역 정비(각계지구)(보조)(60)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신천)(160) • 단양군 재난위험지역 정비사업(12) • 단양군 재해위험지구 정비(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84) • 단양군 소규모위험시설 개선사업(도비)(22)
	하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109) • 충주시 국가하천 유지관리(30) • 영동군 국가하천 유지보수(56) • 단양군 국가하천 유지관리(8)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하천 정비사업(25건)(3,965) • 청주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77) • 증평군 지방하천 유지관리(4) • 제천시 지방하천유지관리(55) • 단양군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11) • 보은군 보청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52)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본청 소하천 정비사업(1,138) •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128) • 청주시 소하천 정비사업(64) • 제천시 소하천 정비사업(20) • 보은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27) • 옥천군 소하천 자체정비사업(89) • 옥천군 소하천 정비사업(191) • 영동군 소하천 정비(111) • 영동군 소하천 정비(60)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오정천)(8)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수리냄이천)(30)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어서실천)(24) • 영동군 소하천 정비사업(생활)(소계천)(26) • 영동군 소하천 유지관리(25) • 제천시 소하천 유지관리(55) • 제천시 소하천 보수사업(32) • 음성군 소하천 정비사업(285) • 진천군 소하천 정비사업(자체)(92) • 단양군 소하천 관리(17) •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35) • 단양군 소하천 정비사업(3) • 보은군 소하천 정비사업(131) • 괴산군 소하천 정비(자체)(106) • 괴산군 밀재 소하천 정비(68)

구분	시설물	세부 분류	주요 프로젝트(계획 또는 잔여사업비)
	댐 및 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댐주변 정비사업(27) • 도분청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386) • 도분청 소규모수리시설 정비사업(192) • 청주시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67) • 청주시 소규모수리시설 정비(30) • 옥천군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보조)(111) • 옥천군 봉황보 개보수사업(보조)(36) • 영동군 수리시설 정비사업(107) • 증평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18) • 단양군 소규모수리시설 정비(도비)(13) • 단양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지특)(10)
주거 및 교육시설 (4건, 1,762억원)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시 젊음을 공유하는 길, 경제를 공유하는 길 우암동(849) • 청주시 기록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운천·신봉동(661) • 충주시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168) • 제천시 제천역 사람들의 상생이야기(84)
산업 및 경제시설 (10건, 790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분청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208) • 청주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23) • 제천시 전통시장시설현대화(보조)(54) • 보은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27) • 옥천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95) • 영동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40) • 단양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26) • 도분청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269) • 제천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28) • 보은군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20)

제11장 충청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의 22.1조 원보다 20% 감소한 17.7조 원으로 계획함. 이후 국회에서는 동 예산을 19.0조 원(전년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히 축소
- 충남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제시
 - 지역의 노후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과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핵심 인프라 투자 발굴 및 개선방향 도출
 - 최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및 노후 인프라 대응 움직임에 발맞추어 충남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개선 유도
 - 인프라 투자 및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진
- 본 연구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충남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통해 인프라 실태 파악, 투자수요 진단, 투자 방향,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
 - 충남의 사회, 경제 현황과 인프라 수요 분석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인프라 수요 분석
 - 부문별 인프라 실태 진단 : 주요 인프라 시설별(도로 및 철도, 상·하수도, 주택, 산업단지

- 충남지역 인프라 정책에 대한 진단 : 인프라 투자정책 현황 및 부문별 인프라 사업 현황 진단, 중장기 인프라 투자전망
- 충남도민의 인프라 수요 진단 : 인프라의 지역경쟁력 및 삶의 질에 대한 영향도, 인프라의 노후화 및 성능 평가, 향후 인프라 공급의 우선순위 등
- 향후 인프라의 투자방향 및 부문별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정책) : 산업·경제, 교통·물류, 환경·안전, 주거·지역, 문화·관광 등
- 인프라 투자정책방향 및 재원조달 방안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 충남은 최근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생활과 지역경제 성장과 직결된 인프라 수요 증대 예상
 - 충남지역 인구는 2012년 세종시 분리 이후 축소. 그러나,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³⁸⁾로 2016년 세종시 분리 이전 수준 회복
 -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속 증가해 지난 5년 간 전국 평균을 상회함.³⁹⁾ 그러나, 최근 증감률은 다소 축소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⁴⁰⁾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 그러나, 첨단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⁴¹⁾은 문제
 -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률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음.⁴²⁾ 사업체 수 증가로 일자리 여건도 개선⁴³⁾

- 인구 증가 및 지역 성장에 따른 교통 및 물류, 생활 인프라 수요 증대 예상
- 제조업 중심의 지역적 특성상, 산업 인프라 수요 증대 및 첨단 산업의 육성 필요성 증대에 따른 산업시설의 집적화 수요 증대

- 충남의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등에 의한 지역 안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
 - 강풍 및 호우/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 피해는 건수로는 많지 않으나, 피해

38) 2003년 이후 지난 14년 동안 충남 순증가인구 18만 4,169명.

39) 최근 5년 간(2011~2016년) 충남 GRDP 5.0%. 전국 평균은 4.2%.

40) 2016년 기준 제조업 비중 44.9%, 전국 평균은 26.5%.

41) 첨단 제조업(전자부품, 영상 및 음향, 통신장비제조업 등) 비중 : 2010년 43.6% → 2016년 39.5%.

42) 최근 10년 간 경제활동참가율 63.5%(전국 평균 62.0%), 고용률 61.5%(전국 평균 60.4%).

43) 충남 구인배수(신규 구인인원/신규 구직건수) 변화 : 2007~11년 연평균 0.79 → 2012~16년 0.86.

금액 규모는 타 광역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사회적 재난(화재⁴⁴⁾, 교통사고⁴⁵⁾, 범죄, 안전사고⁴⁶⁾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지속
- 서산시, 보령시의 종합 안전등급 9등급, 청양군 등 안전등급 10등급
- 최근 5년 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모두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2017년 39.3%).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매우 높은 상황

- 지속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피해를 감안 시, 방재시설 및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 필요
- 기업 및 개인의 세 부담 증가는 경제 및 생활 부문의 인프라에 대한 질적인 수요 증대 예상

-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생활기반 시설, 충분한 문화·여가활동의 지원,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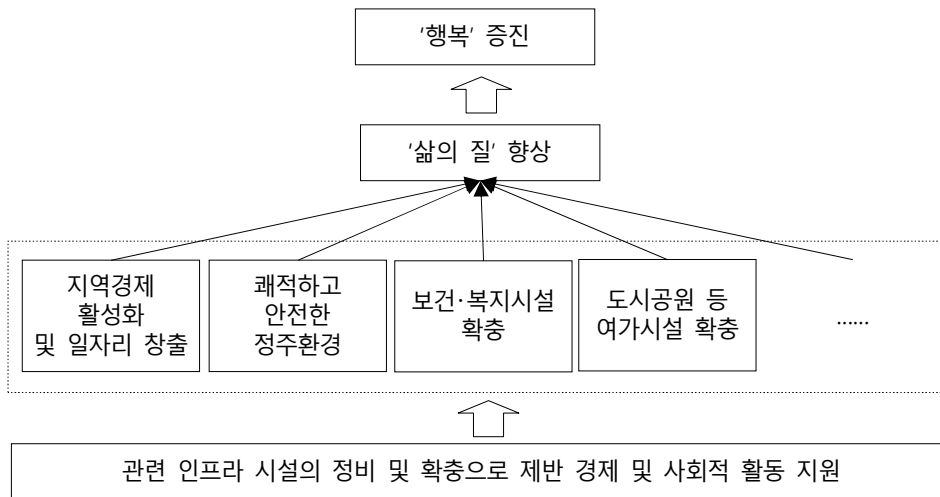


그림 11-1
인프라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 충남도민들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지역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

44) 충남지역 5년 간 연평균 화재발생 건수는 2,900여 건, 인명 피해는 연평균 102명.
 45) 충남지역 교통안전등급 중하위 등급. 특히,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에 있어 청양군(45.0명), 부여군(42.0명), 태안군(36.8명)은 매우 높은 수준.
 46) 충남지역 안전사고 안전등급은 4등급으로 낮은 수준. 특히, 공주, 보령, 당진은 5등급.

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529명 응답)

- 인프라 투자가 충남 지역민의 삶의 질에 영향에 대한 설문결과, 충남도민들은 3.82점(5점만점)으로 평가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
- 또한,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쟁력 향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3.56점으로 평가해 지역경쟁력 향상에 있어 인프라 투자 수준이 깊은 관련이 있다고 인식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1) 도로 및 교통

- 충남의 전체 도로 포장률은 타 광역도보다 높은 반면, 시·군도의 포장률은 낮고, 폭원도 좁은 상황. 또한,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의 노후화 진전 ⇒ 도로 유지관리비 급속히 증대
 - 도로포장률에서 충남 전체 도로연장의 52.5%를 차지하는 시·군도의 경우, 시도는 76.9%, 군도는 80.5%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음.
 - 폭원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폭원이 12m 미만 소로가 전체의 48.0%이고, 중로(12~25m)를 포함할 경우, 전체의 80.4% 차지
 - 전체 교량 중 30년 이상 교량이 전체의 27.6%를 차지함(※ 20년 이상은 64.5%를 차지).
 - 충남도내 소재 29개 터널 중 20년 이상된 터널은 17.2%로 조사됨.
 - 이에 따라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련 유지관리비 비용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⁴⁷⁾되고 있음.
- 충남을 통과하는 철도는 고속철 2개, 광역철 3개, 기타 2개 노선이 있으나, 시·군간 철도 연계성이 낮아 확충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장항선이 유일한 주요도시 연결 철도이나, 단선이며, 저속철도로서 현저히 기능이 떨어짐.
 - 이에 따라 철도 이용자가 계룡, 천안, 보령 및 예산군 등 일부 지역에 집중적임.

47) 2016년 기준으로 도로 유지보수비용은 1,025억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준.

- 문화 및 관광 등과 연계한 철도의 이용도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원한 상황
 - 항만의 경우, 당진항 등의 가파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만 확충은 늦어지고 있으며, 노후화된 국가어항의 정비 미흡
 - 당진항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빠른 물동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 배후단지 개발계획이 확정, 빠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홍원항, 외연도항 등 국가어항의 노후화가 심한 상황이나, 정비사업이 실행되고 있지 못함.⁴⁸⁾
-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
 - 충남지역 내 철도의 이용도 제고를 위한 시군간 및 거점지역 연계 노선 확충이 조속히 필요
 - 충남 항만에 대한 종합적인 확충 및 노후 항만 재정비 이행 필요

2) 산업·경제

- 충남의 산업단지는 총 150개로서 지정면적은 109,068천m², 고용인원만 13만 8,000여 명에 달함. 그러나, 농공단지의 55.8%가 개소된 지 20년이 지나는 등 노후 산업단지가 큰 비중 차지
 - 기 조성된 126개 산업단지 가운데 52개소가 20년 이상된 노후 산업단지(41.3%). 농공단지가 48개소이며, 일반산단도 4개소임.
 - 충남의 경우 최근 5년 간 새롭게 조성이 완료된 산단이 42개소이며, 현재 조성 중인 산단도 24개소임. ⇒ 현 산업단지 정책이 신규 조성에만 초점
 - 2017년 현재, 휴폐업 업체 수는 38개 업체이고, 이 중 4년 이상 장기 휴폐업 업체도 34.2%를 차지
- 충남도 전통시장 및 상가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지속. 그러나, 시설 노후화는 지속
 - 충남지역 58개 전통시장 중 C등급이 21개소, D등급 8개소, E등급도 2개소로 조사됨.⁴⁹⁾
 -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평균적으로 5년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

48) 외연도항의 경우, 1994년 조성되어 20년 이상 경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

49) 전국적으로 E등급 전통시장은 61개소. 이 중 2개가 충남에 소재.

려할 때, 현재 D등급인 8개소 등에 대한 우선적인 현대화 사업이 시급

- 충청남도내 공사 중단 중 방치 건축물은 56개 현장으로 전국의 14.5% 차지. 예산군, 천안시, 당진시 등에 집중
 -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중 안전등급상 B등급, C등급, D등급이 가장 많이 소재한 곳이 충남⁵⁰⁾
 - 현재 정비계획도 전무한 상황. 특히, 명확한 실태 파악도 되고 있지 못해 실질적 관리가 되고 있지 못함.

→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필요. 특히,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대응책 시급
 → 전통시장 중 안전등급 D등급과 E등급 시설물에 대한 우선 정비
 →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이 가장 많은 충남의 특성상 대응책 마련 필요

3) 환경·안전

- 충남의 상수도보급률은 전국 최저이며, 일부 시·군 지역은 50%에도 미달하는 상황. 또한, 노후화도 급속히 진전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5년 기준 84.4%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⁵¹⁾을 나타내고 있음. 시·군별로도 큰 차이⁵²⁾를 보이고 있음.
 - 충남의 우수율은 2015년 기준 80.0%로 전국 평균 84.0%에 미달
 - 경년별로는 전체 상수도관 중 19.5%가 20년을 초과한 상태로서 노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 충남의 하수도보급률도 전국 최저. 이는 계획연장 대비 73.1%에 불과한 하수관로 시설 보급률 때문
 - 2015년 기준으로 하수도보급률은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74.3%임. 특히, 전국 평균 92.9%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
 - 하수도 재이용률도 14.7%에 불과. 제주, 대전보다 낮은 수준.
- 충남지역 내 하천(국가+지방)은 500개소의 제방정비 필요 구간 중 31.5%가 아직 미정비 상태

50)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등급은 C등급이 46.4%(26개), B등급이 21.4%(12개), D등급이 17.9%(10개)임.

51) 2015년 상수도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96.5%, 광역도 평균 92.0%.

52) 계룡시는 96.4%인 반면, 청양군은 44.1%. 충남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시·군이 10개임.

- 국가 및 지방하천 중 제방정비가 필요한 총구간 3,625km 중 2017년 말까지 1,684km 완료, 제방 보강 및 신설 필요 구간이 1,141km임.
 - 소하천 중 미정비 상태인 소하천은 1,176개소, 연장 1,633km임.
- 충남 우수지는 우수시설 43개, 저류시설 93개로 총면적은 1,321,895㎡임. 시설 수로로는 전국 4번째, 그러나 시설 대비 면적으로는 하위권임.
- 공원·녹지에 있어서 충남지역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
- 2016년 기준으로 충남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18.57천㎡로서 전국 평균인 18.23천㎡에 비해 약간 높은 편
 - 그러나 9개의 광역도 중에서는 제주, 경기 다음으로 낮은 수준
- 상·하수도 시설 확충과 노후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
- 지방하천 및 도내 소하천 정비 구간이 아직까지 많이 남은 상황으로 조속한 정비 필요

4) 문화·관광

- 충남도내 체육시설은 2,977개가 있으나, 이 중 공공시설은 29.9%에 불과.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시군간 차이도 큼.
-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체육시설 수는 107.9개소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9대 도단위 광역지자체 중 경남 다음으로 낮음.
 - 체육시설도 시·군별로 양적 차이가 커, 천안시, 아산시에 집중된 반면, 청양, 태안, 서천군은 상대적으로 부족
- 관광시설에 있어서도 2014~2017년까지 4년 동안 숙박시설, 휴양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이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
- 숙박시설의 경우,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41개소로 늘어나는 데 그침. 관광식당업, 시내 순환관광, 도지정 외국인이용식당 등 편의시설업종은 187개에서 164개소로 오히려 줄어든 상황
-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의 지역간 편중이 심하고, 공공 시설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

5) 주거·생활

- 충남도 내 유, 초, 중·고교 가운데 3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은 1,411개동. 이중 보강 및 개축이 시급한 C등급 건물은 25개동임.
 - 또한, 충남도내 폐교는 44개교이며, 이 중 63.6%인 28개교가 미활용 중에 있는바,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필요
 - 2017년 현재, 내진보강 대상 학교 건물 2,113동 가운데, 534동만 내진보강이 적용. 내진화율은 25%에 불과
- 충남도 내 20년 이상된 주택은 전체 주택 대비 42.1%로서 전국 평균 43.8% 대비 낮은 편. 그러나, 30년 이상의 주택 비중은 21.4%로서 전국 평균인 16.3% 대비 5%p 이상 많이 보유
 - 특히, 단독주택 비중이 33.5%로서 전국 평균 24.3% 대비 크게 상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충남도 내 빈집은 7만 4,000호로서 전체 주택의 9.8%를 차지. 전국 평균 6.5%를 크게 상회

- 학교시설물의 노후화가 큰 상황. 특히, 보강 및 개축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한 우선 조치 필요
- 주택의 노후화도 심한 상황으로 30년 이상 주택에 대한 대응 필요

6) 시설물 노후화

- 충남도 내에 위축한 건축물 중 54.1%에 해당하는 총 27만 2,945동이 20년 이상된 건축물임.
 -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중 73.1%인 20만 4,049동이 주거용 건축물
 - 시·군별로는 건축물의 노후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군지역에서 노후도가 심함.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중이 부여군 47.8%, 청양군 43.7%, 금산군 33.1% 등으로 매우 높음.
- 1·2종 시설물 중 30년 이상된 시설물은 130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4.4%로 전국 평균 4.0% 상회. 특히, 2030년 기준으로 추정된 30년 이상 1·2종 시설물은 908개소로 전체의 30.4%에 이를 전망

- 또한, 충남 지역 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41.4%가 미흡 혹은 불량 판정 ⇒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반면, 후속조치 대상 시설 중 2016. 9월 기준으로 91.0%가 미 조치된 상황

→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건축물 노후화에 대한 대응 필요
 → 특히, 1,2층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 향후 늘어나는 노후시설물에 대한 단계적 대응책 마련 필요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총괄 현황

- 충남의 인프라 예산 편성은 지속적으로 축소. 지난 7년 동안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연평균 2.0%p씩 증가하는 데 그침.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연평균 5.6%p씩 감소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충남 특성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예산⁵³⁾의 급감과 지역 및 도시 관련 예산⁵⁴⁾의 축소 편성은 노후 건축물 증대 등을 감안할 시 지역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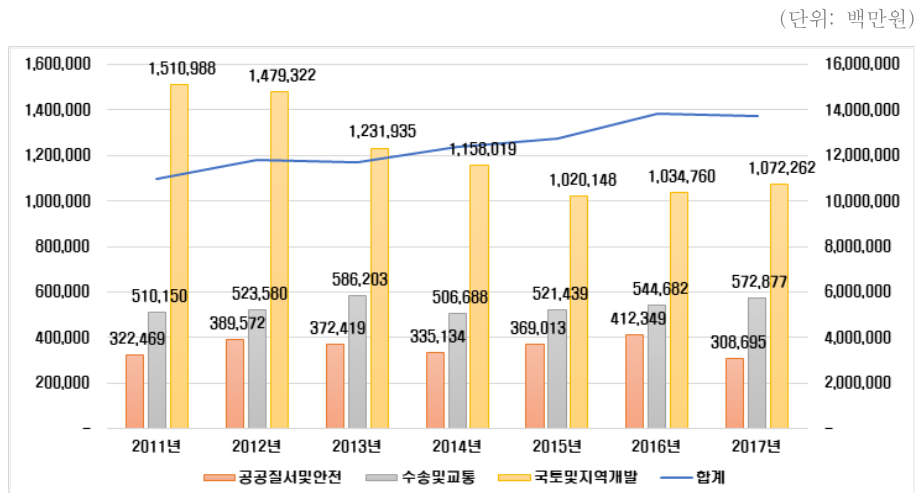


그림 11-2
충남 인프라 예산
편성 추이

자료 : 지방재정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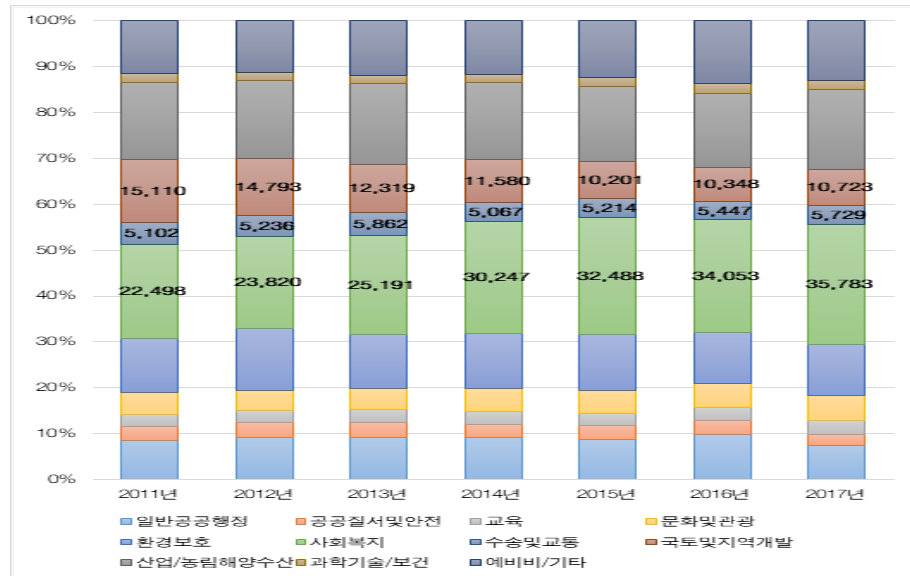
53) 산업단지 예산은 최근 7년 간(2011~2017년) 연평균 5.5%p씩 감소.
 54) 지역 및 도시예산은 최근 7년 간(2011~2017년) 연평균 17.0%p씩 감소.

그림 11-3

충남 예산 편성 추이

- 이러한 인프라 예산의 축소 편성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단위 : 억원)



자료 : 지방재정 365

2) 부문별 인프라 투자 현황

- 주요 도로 및 교통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 정비 예산 규모도 크지 않아 도로 안전도 제고에 대응 늦어질 우려
 - 지방도 건설 등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⁵⁵⁾은 2014년 1,147억원에서 2017년에는 1,007억원으로 축소. 유지관리 및 정비 예산은 증가⁵⁶⁾
 - 노후 포장구간 337km에 대한 예산 396억원에 대해 매년 50억원 투입 시 8년 이상 소요 예상
 - 교량 등 도로시설물 내진보강 대상이 540개소 남은 상황 하에서 현행 100억원 규모의 예산은 많은 시간 소요 예상
- 연안정비와 항만 및 해양레저 기반 구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연안정비 62억원, 해양레저 기반 구축 32억원에 불과(2018년)

55) 지방도 건설 예산 : 2014년 604억원 → 2017년 346억원 / 도로안전시설 확충 예산 : 2014년 182억원 → 2017년 72억원 등.

56)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 2014년 40억원 → 2017년 102억원 /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 302억원 → 2017년 420억원.

- 산업단지 관련 예산의 축소는 제조업 중심의 충남 특성과 최근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24개소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할 시, 조속한 마무리에 어려움 예상
 - 산업단지 예산은 2014년 342억원에서 2018년 196억원으로 크게 축소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2014년 75억원에서 2018년 31억원으로 축소. 시장 현대화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D등급 시장 등 대응 미흡
- 도시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예산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그 수요가 많은 점(도시재생 신청건수 102건)에서 예산 확대 시급
 - 도시 생활환경 개선, 취약지역 개조,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 중이나, 규모가 작음.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	-	-	2	2
취약지역 개조사업	-	-	7	22	24
도시생활환경 개선	9	7	12	11	22
기초생활기반 확충	-	-	-	-	20
도시재생사업(선도/일반)	-	44	50	17	3
농촌생활환경 정비	46	43	39	41	39
계	55	94	108	93	110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 노후 상수도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 예산을 투입 중이나, 현행 예산으로는 조속한 정비가 어려운 상황
 - 최근 노후 상·하수도에 대한 우선 정비 필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 편성 확대는 없는 상황. 오히려 전체 예산은 축소

(단위: 억원)

사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노후상수도 정비	-	-	-	73	139
하수관거 정비	748	508	634	665	664
공공하수처리시설	470	393	341	251	246
도시침수대응	316	592	377	209	94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335	336	396	314	314
계	1,869	1,829	1,748	1,512	1,457

주 : 각년도 본예산 기준.
 자료 : 충청남도 재정공시.

표 11-1

도시 및 주택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표 11-2

환경 관련 인프라
 항목별 예산 편성
 추이

11.

충청남도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우수 저류시설 설치,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주요 시설 안전예산도 지속적으로 축소⁵⁷⁾되고 있는 상황

3) 중기 인프라 투자 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투자는 전체 예산 대비 각각 4.7%, 4.2%에 불과 전망
 - 수송 및 교통 예산은 연평균 16.0%의 증가율을 기록할 예정이나, 예정 철도 및 도로사업 착수가 불투명하여 실제 투자계획 실행 의문시
 -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연평균 1.5% 증가율에 불과

(단위 : 십억원, %)

표 11-3

중기지방재정
계획 상 SOC
세부항목별 투자
계획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송 및 교통	284	310	403	233	513	1,742	4.7
도로	242	224	334	163	442	1,405	3.8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41	86	69	69	71	337	0.9
국토 및 지역개발	293	308	296	321	311	1,530	4.2
수자원	119	120	121	122	124	606	1.6
지역 및 도시	152	159	145	169	157	782	2.1
산업단지	21	30	30	30	30	142	0.4

- 산업·경제, 안전, 문화·관광 등 대부분의 부문별 인프라 투자 확대는 기대키 어려운 상황
 -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우수저류시설 확충 등 안전 분야,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등에 대한 예산 규모는 여전히 현행 수준

(단위 : 십억원)

표 11-4

중기지방재정
계획 상 분야별
인프라 투자 계획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촌생활환경 정비	872	1,075	1,205	1,195	1,077	5,425
우수저류시설 설치	33	33	34	36	37	173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30	30	30	30	30	150

57) 우수저류시설 설치 : 2014년 251억원 → 2018년 33억원 / 재해위험지역 정비(시·군·도) : 2014년 486억원 → 2018년 395억원.

4) 인프라 투자 정책의 문제점

- 사회복지 투자 확대를 위해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어 지역 발전 저해 우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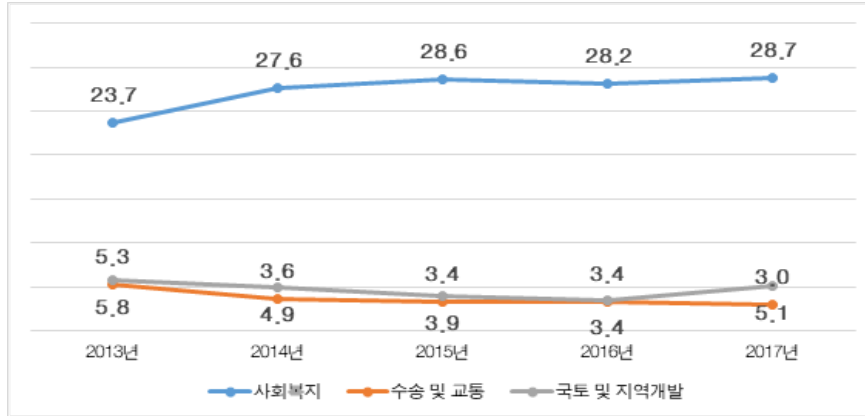


그림 11-4

사회복지 및 SOC 예산의 전체 세출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충남도청 재정공시(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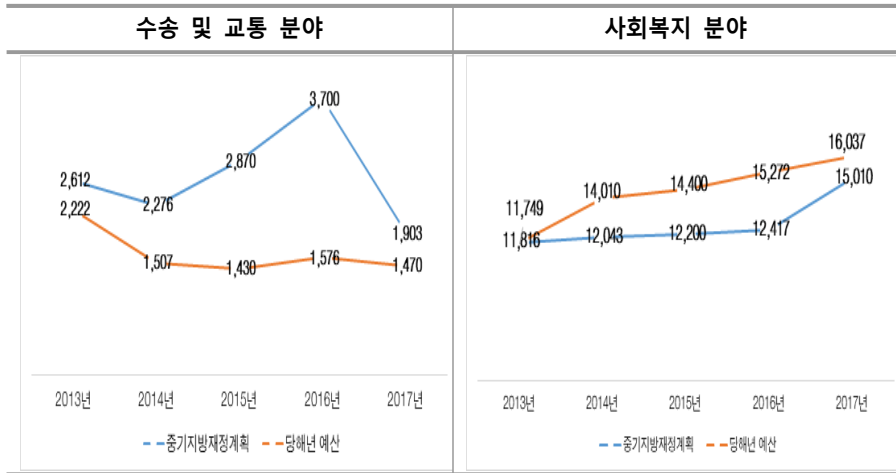
- 지역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도로 등 인프라 공급을 더디게 함에 따라 지역 경제의 성장 저해 우려
 - 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에 있어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직결되는바, 지역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 우려
- 인프라 정책 부재로 당초 인프라 투자 예산도 실행력이 부재하여 의도한 인프라 투자 목표 달성 미흡
 - 20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입된 수송 및 교통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투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축소 실행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확대 편성

11.

충청남도

표 11-5

20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수송 및
교통 분야,
사회복지 분야
실제 투자액 현황



자료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각년도 예산서.

- 인프라 분야 투자의 일관성 저하로 인프라 사업들의 공기 지연⁵⁸⁾ 및 사업 지연⁵⁹⁾ 발생. 이로 인해 조기 안전 확보도 미흡⁶⁰⁾

5. 지역민 설문조사 결과

-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529명),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만족도와 안전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프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
- 인프라 성능에 관해서는 보통 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의 평가를 하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프라 성능 : 5점 만점에 2.95점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
 - 인프라 안전 수준 : 5점 만점에 3.07점으로 보통 평가
 - 그러나, 지역별로 차이가 큼. 계룡시 4.00점, 아산시 3.06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평가했으나, 청양군 2.50점, 공주시 2.68점 등으로 낮은 상황

58)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선장~염치 지방도 건설사업'(당초 2010~17년), 대술~정안 지방도 도로개설사업(2014~17년)' 등 다수의 공사가 지연 중.

59) 지방도 615(당진~석문), 지방도 618호(내포신도시~세종시), 지방도 645호(계룡~논산) 등 다수의 지방도 사업들도 열악한 충남의 재정 여건으로 제때 착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

60) 노후 상·하수도 시설(상수관로, 하수관거 등)에 대한 개선사업도 높은 누수율과 안전 저해에도 불구하고, 조기 시설 개선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

- 발전소, 재해방지시설, 항만시설, 전통시장, 산업/물류단지 등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도를 낮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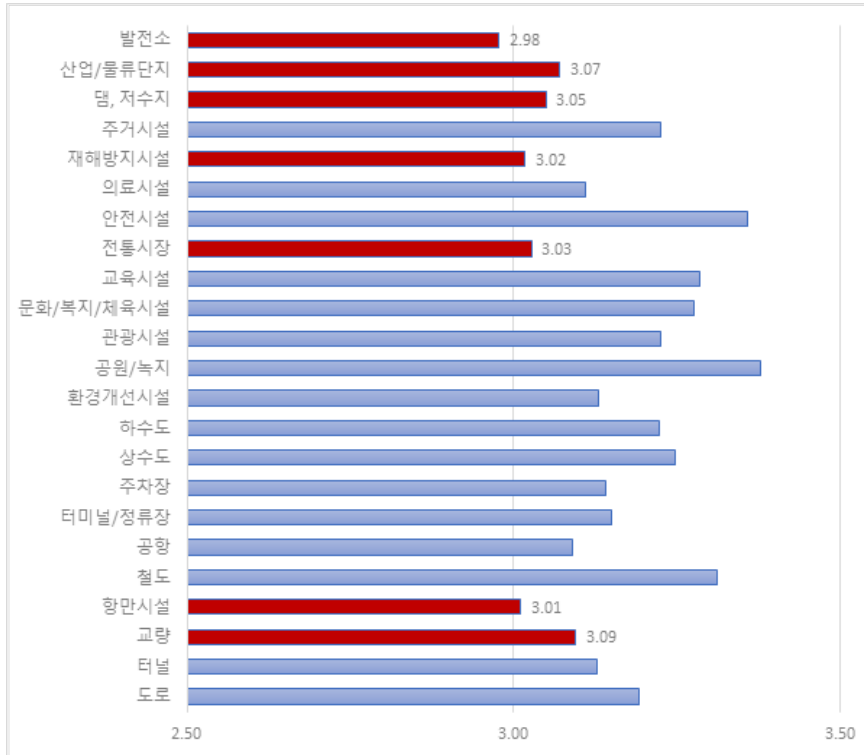


그림 11-5
충남 인프라
시설별 노후도와
안전수준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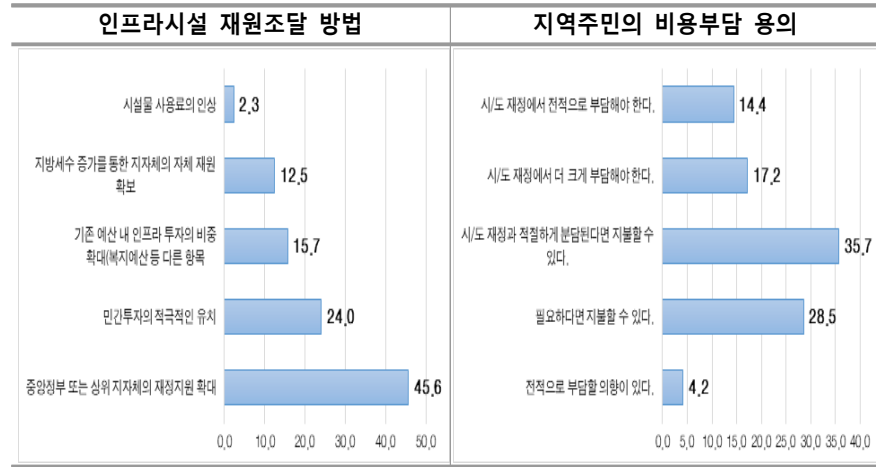
- 충남지역의 인프라 투자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 인프라 투자 수준 : 5점 만점 기준으로 2.72점에 불과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도
 -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 사고 등)에 대한 안전도는 5점 만점에 3.03점,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에 대한 안전도는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보통으로 평가
-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 시/도 재정과 개인 부담이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5.7%로 가장 높음.

표 11-6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5.6%로 가장 높음.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2순위인 2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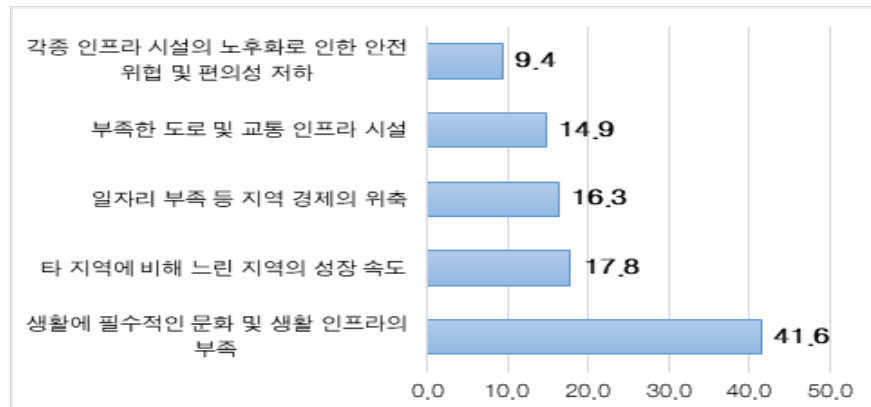
(단위 : %)



- 타 지역에 비해 충남지역의 인프라 시설 충족도 조사 결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38.1%로 나타남(충분하다는 의견은 13.3%에 불과). 부족하다는 인식은 문화 및 생활 인프라 부족에 기인함.
-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 및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 41.6%로 가장 많았고, ‘타 지역에 비해 느린 지역의 성장 속도’ 17.8%, ‘일자리 부족 등 지역경제의 위축’ 16.3%의 순이었음.

그림 11-6

충남 인프라 시설의 충족도가
부족하다는
인식의 사유



- 충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인프라 투자 분야에 대해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이 40.3%로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음.

- 다음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인프라’ 39.1%, ‘문화 및 관광시설’ 36.5%, ‘산업 및 물류단지’ 17.8%,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 15.5%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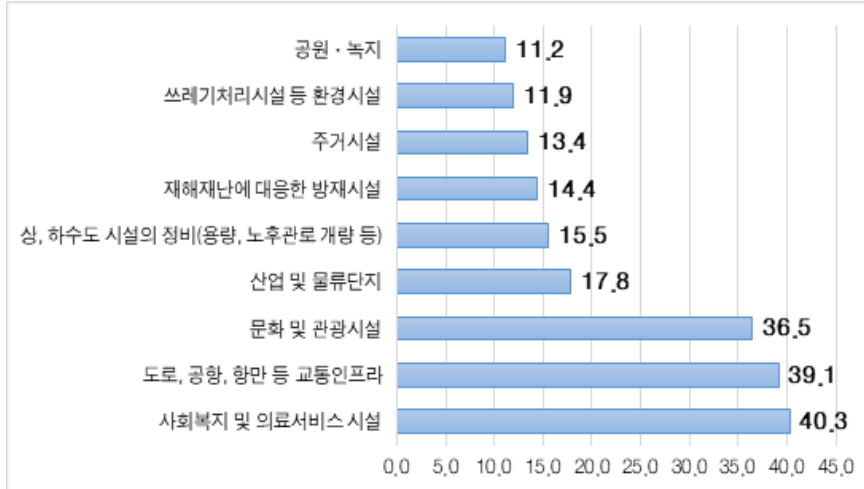


그림 11-7
충남의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분야

6.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 충남지역에서 인프라 투자 축소는 단기적으로 지역민 불편 및 부담 증가, 지역생산 및 고용에의 악영향 등을 유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민의 삶의 질 저하와 지역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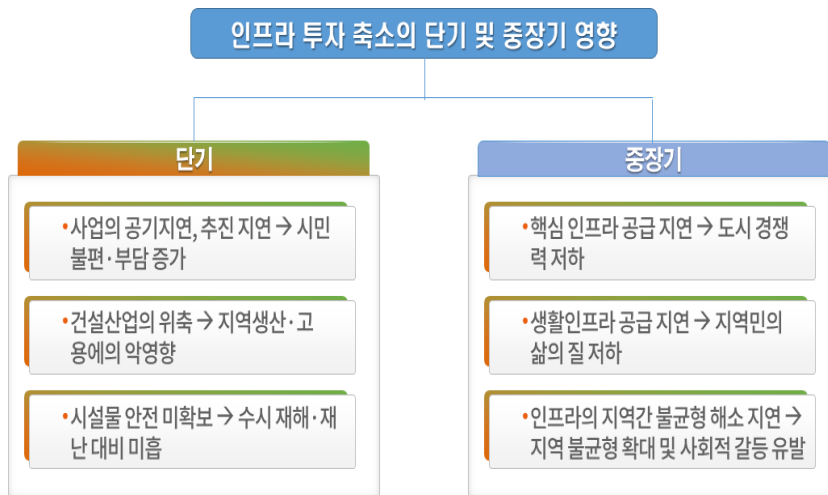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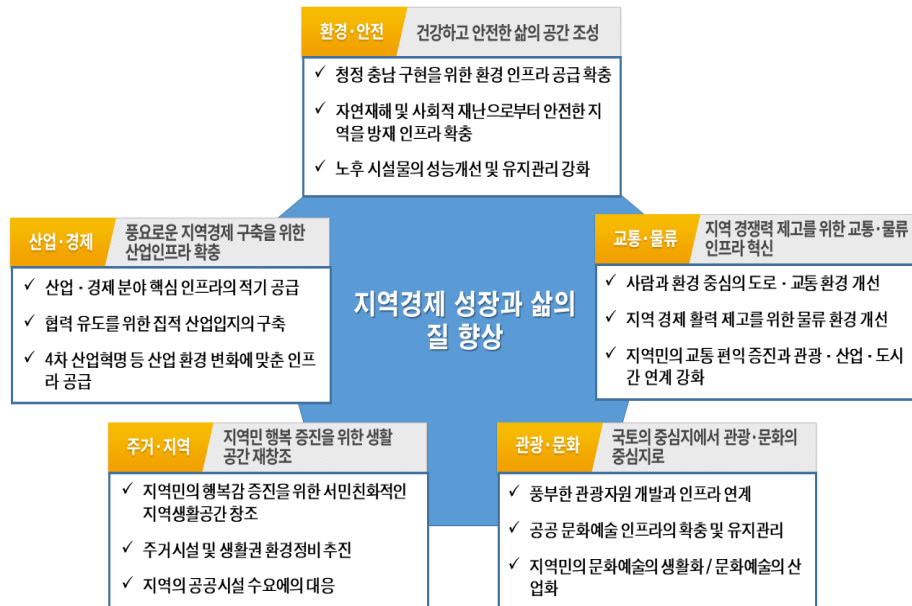


그림 11-8
인프라 투자
축소의 문제점

- 충남의 인프라 실태 진단, 인프라 투자정책,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출된 인프라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분야의 혁신적인 인프라 전략 필요
 - 둘째, 충청남도가 향후 발전 모델로 지향하고 있는 행복하고 새로운 충남 실현을 위한 인프라의 투자가 필요
 - 셋째,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
 - 넷째, 지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
 - 다섯째, 다시 찾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한 제반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

그림 11-9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음. 총 프로젝트 수는 35개 프로젝트이며, 총금액은 14조 5,972억원 규모임.
 - 산업 및 경제분야,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8개, 2조 479억원
 - 교통 및 물류분야,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추진’ 등 10개, 9조 3,162억원
 - 문화 및 관광분야,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개발’ 등 6개, 1조 8,759억원
 - 환경 및 안전분야, ‘안흥항 내진보강’ 등 6개, 9,180억원
 - 주거 및 도시분야,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등 5개, 4,392억원

(단위 : 억원)

분야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산업 · 경제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2018~22	3,000	
	미래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2018~22	500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2018~22	1,684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	2017~22	2,000	
	서해 해수담수화사업 집적단지	2018~27	9,600	
	국방산업단지 개발	2016~20	806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2018~23	2,500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2017~22	389	
	소계		20,479	
교통 · 물류	장항선 복선전철화 조기 추진	2018~22	6,765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추진	2019~24	18,76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2019~미정	42,700	
	천안역 개선사업	2018~21	170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결	2018~미정	3,300	
	당진~아산 고속도로	2018~미정	10,702	
	국도 38호노선 연장 및 교량 건설	미정	2,000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2018~23	2,235	
	해삼산업 복합단지	2018~20	5,210	
	당진 복합물류단지	2016~20	1,320	
	소계		93,162	
환경 · 안전	안흥항 내진보강	2018~20	120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시설 확충	2018~	655	
	금강 생태복원 클러스터 조성	2018~미정	6,800	
	외연도항 재정비	2019~24	327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2018~21	830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2018~21	448	
소계		9,180		
문화 · 관광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2017~38	10,37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	2017~26	2,129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2018~	3,300	
	해양 라이프케어단지 조성사업	2020~25	1,000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2018~22	400	
	태안 해상관광테마특구 조성사업	2018~21	1,560	
	소계		18,759	
주거 · 도시	AI 구제역 체험형 교육홍보센터 건립	2018~20	140	
	4차산업 대응인력양성센터 건립	미정	1,500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2018~	2,000	
	국립 해양수산대학교 건립	2018~25	552	
	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설치	2019~20	200	
	소계		4,392	

7. 정책 과제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특히 조건부 보조금(Matching Fund)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반납 사례 최소화 필요

- 지자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과 주민요구의 대응 능력 제고 필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지속 추진 필요
 -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효율화 필요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하고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검토
 - 도시재생사업 추진 활성화와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운용 필요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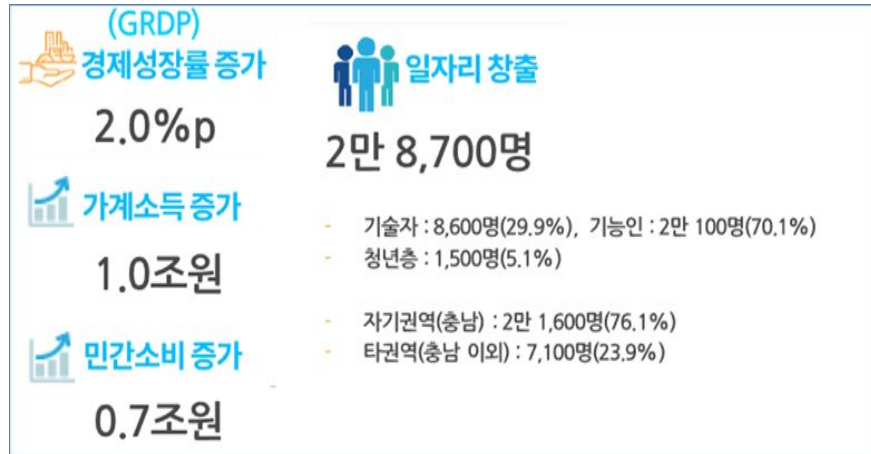
-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신뢰 구축을 통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자 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필요
 - 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 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 필요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유형의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

61)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도시재생법」에 의거 특별회계(기금)를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노후인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가능.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필요 (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충남의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약 20.2%를 차지하며,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는 약 7만 8,000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6.3%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임.
 - 최근 충남 건설기업의 경우 수주 물량 감소와 더불어 역내 발주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이중고(二重苦) 현상 만연
 - 도내 건설기업은 역내 발주공사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52%)이나, 최근 7년 평균 역내 공사 수주 비중은 21.2%에 불과
 - 수주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지역 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조차 지역 건설기업이 해당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 등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공사 분할발주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운영 필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 필요,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행 체계 및 안정적 자원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등 조례 내용의 실효성 제고

- 충남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경제적 파급효과
 - 현 인프라 프로젝트 중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들의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1년 2만 8,700명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 1년에 2.0%p 증대 효과 발생 예상



주 : 취업유발계수는 한국은행(2017), 2014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추정.

별첨 1. 사업조사 샘플

1) 교통·물류 : 천안역 개선사업

○ 사업 추진 배경

- 전국 주요 철도역사 중 천안역은 일반철도 기준 이용객 규모 7위, 유일한 선상임시 역사이며, KTX 개통 이전보다 이용객 1.8배 증가(37,589인/1일, 2015년 기준)
- 현재 천안역은 대합실 용량과 휴게편의시설 부족, 보행 연결통로 협소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크고, 철도·전철과 기타 대중교통 간 복합연계 환승 기능이 미비
- 또한, 선로 등 철도 관련 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어 선로로 인한 동·서 지역 간 단절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의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한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사업 내용

- 비좁고 불편한 임시 천안역사를 증·개축하는 사업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바, 조속한 사업 착수가 필요한 상황

- 위치상으로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기존 천안역으로서 면적으로는 5,274.4 m² 규모의 부지
- 추정 사업비는 170억원으로서 천안역사(임시역사)의 증·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임.

(단위 : 억원)

재원별	총사업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비고
합 계	170	10		50	110		
국 비	170	10		50	110		

- 국토교통부는 천안역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천안역 증·개축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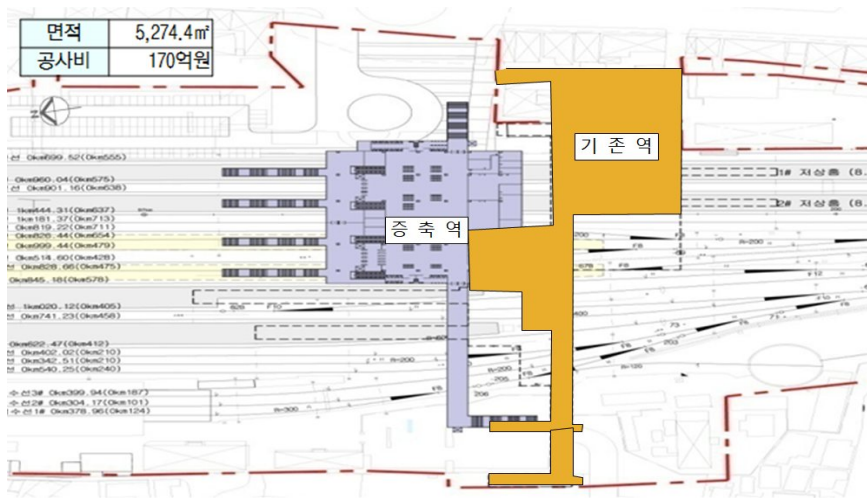


그림 11-11

천안역 개선사업
사업비 투입 계획

자료 : 충청남도.

-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18년에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하고, 2019년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

○ 기대 효과

- 천안역사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천안역의 철도시설 재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시너지효과 기대

- 천안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균형적 발전 기대

2) 환경·안전 : 충남지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 사업 추진 배경

- 생활하수를 모아 고도의 위생과정을 거친 하수처리수는 물고기가 살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화됨. 문제는 정화된 물이 하천으로 방류돼 그대로 바다로 흘러드는 것임.
- 이에 따라 충남도는 시·군마다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농업 또는 공업 용수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충남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음.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전국 대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다각적인 용수 공급방안 대책이 필요해 수자원의 재처리는 더욱 시급함.

○ 사업 내용

- 장기적인 가뭄 등을 고려해 재이용사업이 시급한 시·군을 우선 선별하였음.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등 도내 5개 시·군에 추진됨.
- 총사업비는 국비 314억원과 지방비 134억원을 매칭 모두 448억원이 소요될 예정임. 하수처리수의 하천 방류에는 문제가 없지만, 식용 작물 재배와 직접 사람 및 동물이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재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

(단위 : m³, 억원)

구분	총사업비			2018년			향후 계획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448	314	134	107	74	33	341	240	101
천안시 성환 하수처리수 재이용 (19,500/30,000)	59	41	18	33	23	10	26	18	8
아산시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20,000/72,000)	155	109	46	6	4	2	149	105	44
논산시 연무하수처리수 재이용 (6,200/8,400)	37	25	11	2	1	1	135	25	10
홍성군 홍성 하수처리수 재이용 (4,000/17,000)	42	29	13	15	10	5	27	19	8
예산군 예산 하수처리수 재이용 (15,000/22,000)	155	109	46	51	36	15	104	73	31

자료 : 충청남도

- 지역별로 천안에서 성환 하수처리수를 하루 1만 9,500t씩 재이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59억원(국비 41억원 포함)이 필요.
- 아산도 아산하수처리수 2만t(사업비 155억원), 논산은 연무하수처리수 6,200t(사업비 37억원), 홍성은 홍성하수처리수 4,000t(42억원), 예산은 예산 하수처리수 1만 5,000t(사업비 155억원)씩을 각각 재이용한다는 내용임.
- 이와는 별도로 추진 중인 보령시 대천동 하수처리수 방류수 재처리시설(하루 1만t) 설치사업도 조속히 추진 필요(국비 90억, 지방비 39억 등 129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추진 중)
 - 하수재처리시설에서 보령시 주교면 보령·신보령 화력발전소까지 8km에 관로를 설치해 보령과 신보령 화력의 탈황 용수로 공급됨.

○ 기대 효과

- 충남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사업은 상시적인 물 부족 대응 대책으로서 효과가 클 것임.
- 타 지역이 민자사업 등을 이용하여 추진 중인 데 반해, 충남은 국비와 지방비를 이용하여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안정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이 기대됨.

제12장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을 전년(22.1조원) 대비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계획, 국회 논의·조정 결과 19.0조원(전년 대비 14.0% 減)으로 최종 확정하며 급격한 축소 기조⁶²⁾를 보임.
- 인프라 예산의 지속적 삭감에 따른 투자재원 미확보는 결국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함.
 - 부족한 인프라 실태 정밀 점검과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인프라 투자수요 분석을 통한 합리적 투자 필요 사업 발굴·제안 필요
- 본 연구에서는 전북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조사 대상은 전라북도의 인프라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 별 신규 건설 또는 성능 개선 소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함.

62) 2010년 중반까지 연간 약 25조원 SOC 예산 규모 유지 → 과거 14년 간 최저 수준.

- 분석 대상 인프라의 범위는 전통적 인프라 시설인 도로, 철도, 수자원, 항만 외에도 생활형 인프라 및 노후 인프라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함.
 - 지역 간 필수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주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 대상을 시설물 별로 파악함.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하되, 2017년 기준 통계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한 가장 최근년도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또한 미래 투자계획 및 정책은 연구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10년(주로 5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현황 진단) 2~6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인프라 실태 진단을 통해 인프라 시설물별 신규 건설 또는 성능 개선 소요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함.
 - (투자 필요 사업 제시) 7장 및 부록에서는 지역 간 필수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주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 대상 시설물별 구체적 사업을 제시함.
 - (관련 제도 개선) 8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촉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 촉진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주로 제시함.
- 본 연구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북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현안 발굴을 꾀하였음.
- 이 외에도 관·산·학·연의 인프라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북도 인프라 정책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음.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 2장에서는 전라북도의 일반현황 분석 → 전라북도 경제 및 재정 현황 → 전라북도의 국가 및 지역단위 인프라 투자계획 검토 → 인프라 투자와 지역경제 연관성 →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의 연관성 순으로 분석·제시함.

-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지역 현황의 경우 전국 지역낙후도 지수(KDI)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14위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수준이기에 지역 내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임.
 - 최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진단결과(2016)’ 또한 도내 241개 읍면동 중 171개 지역(71%)에서 도시쇠퇴 현상이 발생 중으로 조사되어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시쇠퇴 현상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 내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는 필수적임.
- 2017년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2.3%로 17개 광역시·도 중 16위, 재정자주도 또한 16위 수준이기에 자체 재원을 활용한 투자 한계에 봉착함.
 - 재정자주도 : 세입 중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원
- 국가재정 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살펴보면, 2018년 예산안 감소분(1,300억원)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산 결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인 0.332%p 감소가 예상됨.
 - 약 1,851명 일자리 감소(실업률 0.207% 증가), 가계소득 648억원 감소, 민간 소비 459억원 위축 추정 → 소득이 취약한 서민 계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
- 반면, 최근 전북 도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프라 시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학교시설 및 설비’, ‘주택시설 만족도’, ‘주거 환경’, ‘교통 환경’, ‘주거 교통’ 항목의 경우 대부분 불만족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남⁶³⁾.
 - 도민 대다수가 지속적 인프라 투자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요구

3. 해외 인프라 투자정책 및 사례

-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최근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임.
 - 기존 SOC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대체와 신규 인프라 구축을

63) 전북연구원(2017), 전라북도 행복지표 조사 및 정책연계방안 등

- 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의 부침이 상대적으로 컸으나, 2015년 이후 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의 비중이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는 실정임.
 - 독일은 2014년 SOC 투자 비중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충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2016년의 경우 SOC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 또한 SOC 예산 비중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주요 선진국의 경우 도시쇠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 쇠퇴를 멈추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역의 현실 및 잠재력에 부합하는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정책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임.
- 단순히 양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지역의 역량을 보완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이 제대로 된 투자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인프라 투자시기의 적절성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임. 이미 지역 내 회복 잠재력이 대부분 소실된 상황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임. 반면, 도시쇠퇴가 지나치게 진행되기 이전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쇠퇴의 흐름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다음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인프라 사업 발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시와 포트머스(Portsmouth)시 터널 프로젝트
 - 미국 워싱턴 D.C. 퍼플 라인(Purple Line) 프로젝트
 - 프랑스 파리 마세나(Zac Massena) 재개발 사업
 - 프랑스 파리 바티뇰(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사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

4.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전라북도 지역의 인프라 실태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으로 대분류 시설군(群)에 따른 세부 주요 시설물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진단함.
 - 인프라 시설의 현황은 세부 시설물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 시 인프라 시설물별 관련 현황, 노후도 및 안전 수준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함.

대분류	중분류
교통·물류 시설	도로(교량 포함), 철도, 항만, 공항
산업·경제 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신재생에너지
도시 및 생활환경 시설	주택, 도시재생, 전통시장, 교육시설
환경 및 수자원 시설	상·하수도, 상·하수도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하천시설
문화·관광·체육 시설	관광시설, 문화체육시설, 공원 및 녹지시설
안전 및 기타 공공시설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방재시설

1) 교통·물류 시설

○ 도로시설

- 도내 위치한 도로 시설물의 연계성, 안전성 측면 분석 결과 계속적 투자가 필요. 특히 도민 안전성 측면 시설 개선이 시급함.
 - 현행 높은 시·군간 도로 우회율(30%) 고려 시 연계 도로망 구축 및 도로 선형 개선사업 추진 필요
 - 새만금 사업과 각종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각종 도내 14개 시군별 개발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의 계속적 추진 필요
 - 전라북도의 도로연장 중 46.8%가 중추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로 사업 추진 필요⁶⁴⁾
 - 현재 전라북도 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3명으로 전국 평균(8.4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 → 도로 선형 개량, 주행속도 일관성 유지 등 사고 심각도 감소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절실⁶⁵⁾

64) 전주시 등 혼잡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교통혼잡도 완화를 위한 전주광역권 외곽순환도로 및 전주 시 내부순환도로 신설 추진 필요

65)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이유는 지방도로의 노후화, 선형 불량, 중앙분리대 및 속도·보도 미확보, 시커게 불량 등 설계기준 미달 구간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임.

- 도내 위치한 도로시설물의 64.7%가 준공 이후 20년 이상된 시설이며, 30년 이상된 시설도 24.2%에 달하고 있는 실정

○ 철도시설

- 남북방향 철도망 인프라 구축(호남고속선, 호남선, 전라선 등)은 양호한 데 반해, 동서방향 철도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임.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새 정부 공약사항으로 명시한 동서방향 철도 사업(달빛내륙철도, 동서내륙철도 등)이 실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 요구 필요
 - 도내 생활권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광역철도 신설(전주↔익산↔군산↔새만금) 적극 고려 필요(기존선 활용 포함)
 - 높은 도로물류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입철도 구축 필요

○ 항만시설

- 평택항 등 인근 국가항만 대비 항로 및 항차 부족 등에 따른 물동량 감소 악순환 지속 발생 중 → 도내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선제적 항만시설 투자가 필요함.
 - 새만금신항만 2단계 사업의 적기 시행이 필요하며, 어항의 정비·신설 또한 사업 소요를 고려하여 투자 확대 필요
 -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항만 인프라 및 해양 관광 콘텐츠 확보 필요(마리나 항만 개발, 크루즈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련 인프라 등)

○ 공항시설

- 군산공항은 제한적 활주로 시설 한계, 제한적 운항 편수 등으로 인해 항공수요 확대에 한계 내포(탑승률 86%) → 도내 국제공항(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이 필수적인 상황임.
 - 항공사 재정손실 보전 및 감편 운항 방지를 위해 기초지자체 예산(26.8억 원)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민 대다수는 인근 공항(청주공항) 및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으로 불필요한 이동
 -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을 통해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한 대응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필요

2) 산업·경제 시설

- 전북 지역에 위치한 85개의 산업단지는 그간 도내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 매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
- 다만, 중소 규모 단지별로 산발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성장 한계에 봉착함. → 산업집적지 형태의 핵심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 새만금 및 탄소산단 개발 등 새만금~혁신도시 지역으로의 집적화 개발 전략(중대형 산업단지화)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방지 노력 필요
 -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을 기존 2개 사업의 확대 추진하여 노후 산업단지 가속화에 따른 슬럼화 예방 필요⁶⁶⁾
- 물류시설의 경우 기존 도로화물 중심의 물류시설 외 새만금사업 확대에 따른 항공 및 항만물류 시설 건립 추진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사업화의 최적 조건을 갖춘 지리적 이점 극대화를 위해 공공재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와 더불어 민간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건립비용 저리 지원 등) 부여 필요

3) 도시 및 생활환경시설

○ 주거 환경

- 전북 지역의 주거환경은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낮은 자가 주택 및 노후 주택 비율, 빈집 발생 증가 등을 종합 고려할 시 근본적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도내 위치한 약 70만호 주택 중 절반 이상(54.2%)이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이며, 지속적 인구 감소에 따라 빈집 발생 또한 전국 최고 수준 →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근본적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함.
 -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주택은 절반 수준(57.3%)에 그치고 있어 주거비용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 → 사회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보급 확대가 필요함.

66) 전주제1산단(2012. 6월 재생사업지구 지정), 익산국가산단(2015. 7월 재생사업지구 선정).

○ 전통시장

- 도내 위치한 81개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종합적 추진체계 결여에 따른 효율성 저하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종합적 개발전략 마련이 필요함.

○ 학교시설

- 지속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발생 증가 현상 심화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5위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 투입 확대 시급

4) 환경 및 수자원 시설

○ 상수도시설

- 전국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상수도 연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색에 따라 상수도 보급률(95.9%)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17개 광역시·도 중 13위)⁶⁷⁾.
 - 정수장 평균 이용률과 최대 가동률이 시설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상수도 관련 시설 신규 건립·용량 증설 시급
 - 노후 경관관이 전체 관로의 30%에 달하고 있어 높은 누수율에 대한 개선 필요
 - 상수도 인프라 시설 효율 저하에 따른 운영비를 도민에게 일방 전가(전국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 부과 중)

○ 하수도시설

- 전국 14위에 그친 낮은 하수도 보급률(85.9%) 고려 시 하수도시설 확대가 필요함.
 - 전주시의 경우 하수도 노후화율이 84.8%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투자계획이 미 수립된 상황이기에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새만금 산업단지 신규 개발에 따라 기존 광역 하수처리시설 및 각종 환경 기초시설 부족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67) 산간 지형이 많고 인구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 급수인구 1인당 설치해야 하는 관로 길이가 전국 최고 수준.

○ 폐기물 처리시설

- 도내 위치한 매립장, 소각장의 경우 대부분 기존 시설용량 한계에 육박한 실정으로, 폐기물 자원화시설 건립 및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지정이 시급함.

○ 노후 저수지

- 도내 위치한 저수지 중 C, D등급이 전체 시설물의 64%에 육박 → 노후시설 개량 및 보수·보강 사업 시급 추진이 필요함.

5) 문화·관광·체육 시설

○ 문화시설

- 도내 문화시설 공급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군(郡)지역 배치가 저조하여 문화 격차가 발생함.
 - 고령자 수요가 가장 높은 문화시설인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무주, 장수, 부안군의 경우 해당 시설이 없어 해당 시설 건립 필요

○ 체육시설

- 마을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기존 체육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기에 선제적 성능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공원·녹지시설

- 도내 도시공원 지정 면적 중 약 75%가 미집행 상태로 장기 방치되어 있어, 도시공원 신설 적극 추진이 필요함.⁶⁸⁾

○ 관광시설

-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지역이나, 관광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민간 관광시설 유치 확대가 필요함.
 - 국제회의장 또한 군산시 1개소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아, 전주시 또는 새만금 지역 내 종합전시·회의시설을 갖춘 컨벤션센터(국제회의장) 건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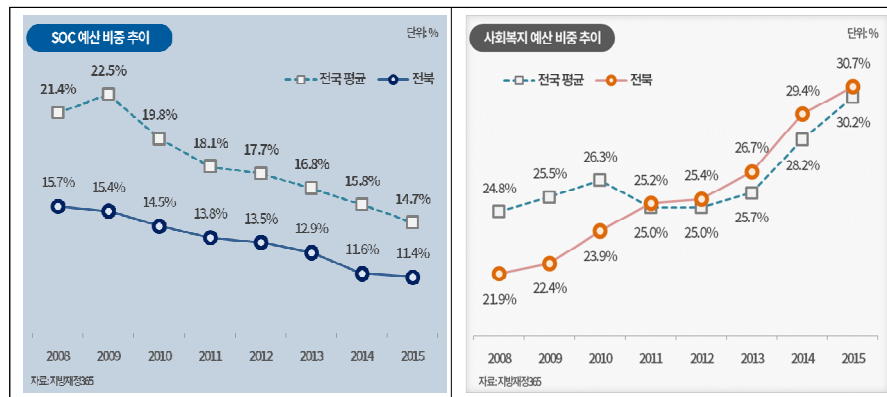
68)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해당 면적 도시공원지구지정 해제 예정.

5.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 5장에서는 ①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예산 추이 분석, ② 중기 인프라 투자 정책 전망, ③ 주요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파악, ④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분석 등을 수행함.
-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결과, 인프라 투자 예산(도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5년 간(2012~16년) 전체 예산은 연평균 5.8%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 수송 및 교통 분야 6.4%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 감소
 - 새만금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예산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신규 인프라 투자 급감, 계속사업 지연 현상 발생

그림 12-1

전북 SOC 관련 예산과 사회복지 예산 비중 추이 (2008~15년, 세출 기준)



- 또한, 인프라 투자정책의 정책 목표의 불확실성·불투명성으로 인해 단기적 정책 현안 및 이슈(인프라 시설 수요 등)에 대응하는 데 급급한 실정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수립한 인프라 투자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실제 투자 시행 → 당초 목표 미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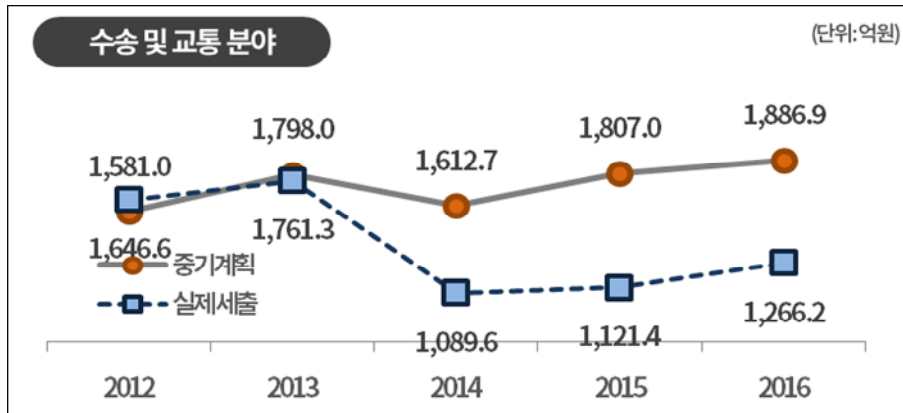


그림 12-2

5년 전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
현황(2012~16년)

- 이러한 인프라 투자 축소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공기 및 추진지연에 따른 도민 불편과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 건설산업의 위축에 따른 지역생산과 고용에의 악영향이 불가피함.
 - 이 외에도 단기적으로 시설물 안전 미확보에 따른 수시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음.
- 중장기적 영향으로는 우선 핵심인프라 공급 지연에 따른 도시 경쟁력 저하 현상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 공급 지연에 따른 도민 삶의 질 저하, 인프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연에 따른 지역 불균형 확대 및 사회적 갈등 유발 또한 불가피함.

6. 전북 도민 설문조사를 통한 투자수요 분석

- 6장에서는 전북 도민이 체감하는 인프라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향후 인프라 투자 방향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도민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전북도민의 경우 도내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수준에 대해 보통(58.6점/100점)이라고 평가함.
- 전북도민 대다수는 현행 도내 인프라 투자 수준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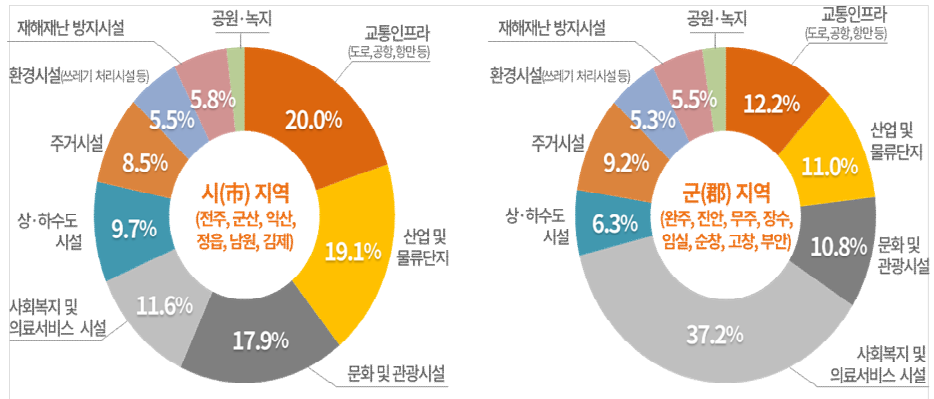
12.

전라북도

있으며, 교통 인프라(21.2%), 산업 물류단지(15.8%), 문화관광시설(14.4%),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12.9%) 순으로 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응답함⁶⁹⁾.

그림 12-3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설 유형
설문결과



-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도정의 만족도 조사 결과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 도민 대다수가 현재 도청의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56점/100점)으로 응답함.
 - 향후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가장 우선적으로 '노후 인프라 개선', 2순위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물류단지 확충, 3순위로 '지역 간 불균형한 생활 인프라 개선'을 요구
- 전북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도민 대다수는 인프라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부족한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신설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69) 시(市) 지역 거주민은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군(郡)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시설' 확충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7. 지역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비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도민 삶의 질 향상
투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 미래 지향적인 지역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투자 ■ 환경 친화적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조성 ■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민친화적 정주공간 조성

투자방향	세부 투자방향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① 도민 체감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시설 구축
	② 교통물류 분야 인프라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③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 지향적인 지역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투자	④ 전통적 중공업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산업 환경으로의 변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시설 구축
	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세계적 롤 모델 구축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
환경 친화적이며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조성	⑥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지속가능한 환경 인프라 확충
	⑦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행복하게 거주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재 인프라 확충과 시설물 안전 제고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민 친화적 정주공간 조성	⑧ 서민 친화적인 도시공간 마련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시설 및 생활권 환경 정비
	⑨ 도민들이 지역생활 영유 시에 필요로 하는 공공복지, 의료시설 확충 및 정비
	⑩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행복한 교육 인프라 구축

○ 핵심 프로젝트 도출 과정

프로젝트 Pool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국가상위계획 및 지역단위 개발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국정계획, 새 정부 공약,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기 도출된 프로젝트 발췌 ·국책사업 발굴포럼 제시 26건 사업(4조 6,695억원) 포함 ·도내 14개 시·군 및 교육청 사업 소요 조사 실시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 발굴(도청 기획조정실 협조)
↓	
1차 프로젝트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출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인프라 투자 방향에 부합치 않거나, 기 추진 중인 사업, 향후 국비 지원이 확실한 사업 등 제외 ·단, 기 추진 중인 사업인 경우에도 실제 예산이 미확보되어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매년 신규 발주가 이루어지는 계속사업인 경우 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포함 ※ 222개 사업 38조 4,145.7억원 발굴(☞ Part 9 참조)
↓	
핵심프로젝트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선정 사업을 바탕으로 인프라 과부족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방향 반영, 인프라 시설별 노후화 및 안전도 조사 결과를 종합 고려하여 지역 핵심프로젝트 도출 ※ 50개 사업 22조 8,124.4억원 발굴

※ 경제적 파급효과 추산

○ 핵심프로젝트 기준(A) - 1차 선정사업 기준(B)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규모 : 총 3만 694명(A) ~ 총 5만 1,977명 기술자 9,177명(A), 기능인(노무인력) 2만 1,517명(A) 청년층 1,565명(A) ~ 2,651명(B) 전라북도 지역 내 2만 3,343명(A) ~ 3만 9,529명(B) 전라북도 외 타 지역 7,351명(A) ~ 1만 2,449명(B)
GRDP 증가율	5.7%p(A) ~ 9.67%p(B) 증가
가계소득 증가	1.07조원(A) ~ 1.82조원(B) 증가
민간소비 증가	0.76조원(A) ~ 1.29조원(B) 증가

1)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핵심사업 19건, 투자 규모 4조 6,215억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 누구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여행환경 조성
-----------	--

분야	추진방향	핵심사업	사업비 (억원)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15,518
		전기 상용자동차 글로벌 플랫폼 조성	3,000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 (2차 산업단지 조성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	4,960
		국가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 (연구시설 생산 시설 건립)	2,000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1,240
		국가관리 연안항 상왕등도항 건설	2,065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유치 인프라 구축 	전북 금융타운 조성	1,600
		전북테크노비즈센터 건립	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 인프라 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사업	2,470
		새만금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	2,000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탈관광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확충 	아시아 근대기억공원(Memorial Park) 조성	3,750
		새만금 박물관 건립	306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사업	800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2,724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	1,530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827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	85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	450
		세계스카우트센터 건립	500

2)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교통·물류 인프라(투자 규모 15조 4,658억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 체감형 지역균형 발전 교통인프라 시설 구축 ■ 전북지역 발전 견인을 위한 물류 인프라 시설 구축
-----------	---

분야	추진방향	핵심사업	사업비 (억원)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1시간, 전국 2시간대 네트워크 구축 ■ 교통 편의 증진 서비스 확대 ■ 글로벌 교통 인프라 구축 ■ 노후·위험 도로 개량을 통한 안전 제고 	복합환승 터미널 건설 + 전북권 광역철도 완전 운영	5,000
		혁신도시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	40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7,600
		호남고속도로 확장	2,322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28,882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5,452
		부안~흥덕 국도 건설	1,497
		임실~장수 국도 건설 ⁷	1,624
		무주~설천(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 건설	1,380
		완주 소양~진안(소태정) 국도 개량	490
		인계~쌍치(밤재터널) 국도(21호) 개량	488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19,241
		새만금 남북도로 조기 건설	9,095
		새만금 보조간선 4번 도로 건설	2,436
새만금 보조간선 2번 도로 건설	1,067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성장 기반 시설 확충 ■ 지역개발 지원 철도 인프라 구축 	새만금 신항만 건설	25,482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490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48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6,160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32,970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2,894

3)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조성(투자 규모 2조 4,550억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을 위한 인프라 신설·정비 ■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 전복 구현
-----------	--

분야	추진방향	핵심사업	사업비 (억원)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 인프라 확충 ■ 생태환경 지원 관리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계속)	18,699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093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안전관리·감독 ■ 안전 위험 사전 방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계속)	1,330
		서부권 국가방재활동거점 조성사업	3,428

4) 지역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투자 규모 2,701.4억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지원 ■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행복한 교육 인프라 구축 ■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도민 행복 제고
-----------	---

분야	추진방향	핵심사업	사업비 (억원)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환경정비 ■ 도시재생사업 확대 	고창고수 마을연계형 공공주택 건설	157.8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건설	110
		완주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96.4
		정읍, 완주 공공실버주택 건설	133.2
교육 ·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쾌적한 전복 교육 환경 조성 ■ 도농간 복지시설 격차 최소화 	교육환경 개선사업(계속)	1,650 (매년)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	554

8. 정책과제 및 시사점

- 8장에서는 ① 전라북도 인프라 투자 역량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정부/지자체) → ②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과제 순으로 제시함.

1) 투자 자원 마련

- 정부 및 전북도(예하 시·군 포함)의 연간 SOC 총 투자 가능 예산은 2.65조원 규모로 추정되기에 제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이 필요함.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위해 2018년 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마련⁷⁰⁾
- 지자체의 경우,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 주권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과 주민요구의 대응능력 제고가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 등에 대해 헌법 개정 시 반영 필요
 -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총량 규모 확대 필요⁷¹⁾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의·조정하고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 필요
 - 도시재생사업 추진 활성화와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운용 필요⁷²⁾

70) 특히 조건부 보조금(Matching Fund)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반납 사례 최소화 필요.

71) 전북의 경우 2016년 기준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2,271억원에 불과한 실정.

72)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도시재생법에 의거 특별회계(기금)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노후인

- 정부·지자체의 의지와 신뢰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또한 추진되어야 함.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필요
 - 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 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를 통한 민간 참여 유도
 - 부족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한 재개발 유형의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

2) 인프라 투자관리 거버넌스 개선

- 전북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굴하고 기술적으로 지원(계획단계~사후관리단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추진되어야 함.⁷³⁾
 - 초기 전북연구원 산하 센터로 설립하여 경상비 최소화 유도, 조직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별도 전북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추진⁷⁴⁾
- 인프라 투자 사업 효율화 및 지속적 사업 발굴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상시 협조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현재와 같은 임시조직(TF) 형태 운영 지양 → 정례적인 인프라 투자 사업 협력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구성 운영 필요

3)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 전라북도의 건설산업은 지역경제(GRDP)의 약 18.9%를 차지하며,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는 약 6만 4,000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 중 7.1%를 차지하는 지역경제의 중추 산업임.
- 하지만 최근 전북 건설기업의 경우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역내 발주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이중고(二重苦) 현상이 만연한 실정임.
 - 도내 건설기업은 역내 발주공사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70%)이나, 최

프라 성능개선을 위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가능.

73)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광역지자체에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중.

74) 필요 시 경남과 대구가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전남/충남과 함께 관련 센터 설립 추진 가능.

근 7년 평균 역내 공사 수주 비중은 42.8%에 불과

☞ 안정적 지역 건설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곧 지역경제 성장 극대화임을 고려 시 보다 적극적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제도 발굴 필요

4) 제언

- 실질적 시공 참여 유도 등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공사 분할 발주 등을 통해 지역 중소 건설업 보호·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의 정기적 시행 및 행정 피드백 체계 구축이 추진되어야 함.
-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구체적 지역우대기준 제정 확대가 필요함⁷⁵⁾.
- 전북도청 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담팀(건설지원팀) 신설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업무 활동 확대가 필요함⁷⁶⁾.
- 지역 중소 건설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강소기업인증제’ 도입
-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마련 필요⁷⁷⁾
- 건설업은 그 특성상 타 산업과 달리 정부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활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기에 전북신용보증재단 활용을 통한 신용보증심사 완화, 금리 인하, 대출보증액 상향 등 지역 건설산업 보호·육성책이 필요함.

75) 최근 조달청 PQ기준 마련 외 타 기관(새만금사업과 직관접적으로 연결된 공사를 발주하는 4대 공사 등)까지 해당 기준 확대 운영 필요.

76) 민간 발주공사 대상 지역 건설업체 우대 발주 유도, MOU 체결, One-Stop 인·허가 지원, 관내 업체 홍보 등.

77) 지역 건설업체의 도시정비사업 참여 시 용적률 상향 조정 등.

별첨 1. 1차 선정사업 리스트

1) 총괄표(사업리스트): 38조 4,145.7억원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괄 합계				384,145.7
산업·경제·관광 분야 합계				80,893
산업 소계				53,147
산업	1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업	2018~22	15,518
	2	전기 상용자동차 글로벌 플랫폼 조성	2018~22	3,000
	3	완주 수소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2018~25	15,000
	4	낙후지역 개발사업(舊 개발촉진지구) 계속 시행	'97~2020	458
	5	국립 새만금 바이오식품(회장품 포함) 글로벌 시험 인증센터 건립	2018~20	270
	6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	2018~20	360
	7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건립	2018~22	180
	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2018~22	500
	9	신재생에너지 국제연수센터 조성사업	2018~20	320
	10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2018~22	196
	11	ICT융합형 건설기계부품 시험시설 구축사업	2018~22	198
	12	(2023 스마트챔버리를 통한 VR/AR기술의 세계화)스마트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	2018~21	300
	13	스마트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2018~20	300
	14	섬진 및 대야수계 용수확보 대책 사업	2018~19	1,300
	15	임실앤치즈 6차산업 지구조성	2018~20	30
	16	수출전문 ICT 스마트팜 단지 조성	2018	90
	17	고려 인삼 홍보·판매관 건립	2018~23	120
	18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2018~20	123
	19	유기농·축산자재 생산단지 조성	2018~19	200
	20	전통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	2018~20	100
	21	전통기술창조기업센터 건립	2018~20	120
	22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사업 (2차 산업단지 조성 및 비즈니스 센터 건립)	2020~25	4,960
	23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2018	20
	24	곤충종자보급센터 구축	2018~19	50
	25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2018~21	868
	26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2018~21	360

12.

전라북도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산업 (계속)	27	군산 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2018~19	70
	28	위도 바다목장 조성사업	2018~22	50
	29	고창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2018~22	50
	30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2018~21	400
	31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2018~19	60
	32	간척지 첨단 농업연구소 건립	2018~21	400
	33	해상풍력 연구센터 설립	2018~22	450
	34	국가동물케어 클러스터 구축(연구시설·생산시설 건립)	2019~25	2,000
	35	식물자원소재 연구센터 건립	2019~21	200
	36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구축	2018~21	300
	37	탄소산업진흥원 건립	2019~22	1,240
	38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	2019~22	300
	39	섬 6차 산업화 조성	2019~22	321
	40	새만금 외해 김양식 소파제 시설 건립	2019~22	300
41	국가관리연안항 상왕등도항 건설	2019~23	2,065	
경제 소계				6,700
경제	42	전북 금융타운 조성	2015~27	1,600
	43	전북테크노비즈센터 건립	2017~'20	390
	44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사업	2019~27	2,470
	45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2018~20	240
	46	새만금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	2019~24	2,000
관광 소계				21,046
관광	47	아시아 근대기억공원(Memorial Park) 조성	2019~23	3,750
	48	부안 세계잼버리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2019~21	200
	49	새만금 박물관 건립	2018~20	306
	50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사업	2018~22	800
	51	부안읍 야한구경 관광로드 개발	2017~19	30
	52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2017~26	2,724
	53	새만금 전망타워 조성	2018~22	300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관광 (계속)	54	아리울 플라워 힐링단지 조성	2018~21	470
	55	유휴저수지 자원화(관광) 사업	2018~20	32
	56	국립 낚시연수센터 건립	2018~20	300
	57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2018~20	120
	58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	2018~27	1,530
	59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2018~22	827
	60	국립 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	2018~21	85
	61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사업	2018~22	450
	62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2018~22	84.1
	63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2018~22	173.7
	64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	2018~24	83.5
	65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조성사업	2018~22	76
	66	무주 태권마을 조성사업	2018~20	95
	67	섬진강 스포츠파크 조성	2018~20	106.5
	68	국립 농악 복합문화단지 조성	2018~21	200
	69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2017~21	316
	70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2017~20	212.1
	71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	2017~20	139
	72	고창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2016~19	200
	73	김제 농악전수교육관 건립	2018~20	30
	74	김제 벽골제 문화재발굴유구보호관 설치	2018~19	50
	75	완주 위봉산성 내 행궁지 복원	2018~20	30
	76	장수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2018~19	70
	77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2018~21	280
	78	문화재 유적공원 조성사업	2017~21	200
	79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	2013~25	3,418.5
	80	호남권 효문화 진흥원(전통문화 체험형) 건립	2018~20	100
	81	무주 생태모험 공원 조성	2019~23	196
	82	세계스카우트센터 건립	2018~22	500

12.

전라북도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관광 (계속)	83	삼락행복(三樂幸福) 곰소만 조성	2019~24	642
	84	격포항 레저어업단지 개발	2019~24	920
	85	농생명 컨벤션센터 건립	2019~23	1,000
교통·물류 분야 합계				241,002
교통 소계				170,660
교통	86	복합환승 터미널 건설 + 전북권 광역철도 완전 운영	2019~35	5,000
	87	혁신도시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	2019~20	40
	88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2016~22	7,600
	89	호남고속도로 확장	2018~23	2,322
	90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2018~25	28,882
	91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2018~25	5,452
	92	부안~흥덕 국도 건설	2018~25	1,497
	93	임실~장수 국도 건설	2018~25	1,624
	94	무주~설천(태권도원 진입도로) 국도 건설	2018~23	1,380
	95	완주 소양~진안(소태정) 국도 개량	2018~22	490
	96	인계~쌍치(밤재터널) 국도(21호) 개량	2018~20	488
	97	대흥교차로 국도(21호) 개선사업	2018~20	75
	98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2018~20	50
	99	화산~운주 국도 개량사업	2018~22	181
	100	장수 조신마을 앞 국도(26호) 선형 개량사업	2018~19	40
	101	부안 곰소다용도 부지앞 국도(30호) 선형 개량	2018	20
	102	순창읍 국도(27호) 확장사업(구 88고속도로 밑)	2018	10
	103	완주 운주우회교차로 국도(20호)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5
	104	장수 명덕교차로(국도26)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7
	105	남원 풍산교차로(국도24)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7
	106	임실 후천교차로(국도13)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4
	107	고창 용덕삼거리(국도22)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8
	108	무주 상오정삼거리(국도37)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7
	109	고창 용대교차로(국도22)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10
	110	순창 장동삼거리(국도13)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9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교통 (계속)	111	고창 지로사거리(국도22)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14
	112	임실 덕계삼거리(국도13) 병목지점 개선사업	2018	19
	113	장수 압곡마을앞(국도19) 입체횡단시설 설치사업	2018	13
	114	남원 태평삼거리(국도19) 입체횡단시설 설치사업	2018	15
	115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2010~24	19,241
	116	새만금 남북도로 조기 건설	2016~22	9,095
	117	새만금~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2030~37	11,571
	118	새만금연계 서남권 국도 건설(부창대교)	미정	3,933
	119	새만금 보조간선 4번 도로 건설	2019~23	2,436
	120	새만금 보조간선 2번 도로 건설	2019~23	1,067
	121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2018~20	450
	122	주요국도(13개) 건설사업 적기 준공	2004~24	12,703
	123	국가지원 지방도(3개) 건설사업 적기 준공	2009~21	1,273
	124	완주IC~전주 호성동(국도17호) 확장	2021~	690
	125	동상~주천(국지도55호) 개량	미정	669
	126	전주~새만금 BRT 전용도로 구축	2020~25	1,247
	127	새만금 하이퍼루프 실증단지 구축	2020~26	1,500 ~2,000
	128	서해안고속도로(동서천~부안IC) 확장	2021~27	4,516
	129	호남정맥 동부권 연결 고속도로 건설	2030~36	19,000
	130	서해안 고속화철도(새만금~목포) 건설	2019~26	25,500
물류 소계				70,342
물류	131	새만금 신항만 건설	2011~30	25,482
	132	전주 탄소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018~22	490
	133	군산물류단지 진입도로	2018~20	48
	134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	2018~25	6,160
	135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2018~25	32,970
	136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2016~22	2,894
	137	중소형 선박 전 주기 생태계지원 공동물류센터	2018~22	600
	138	동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건립 지원사업(3개 지역)	2018	86

12. 전라북도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물류 (계속)	139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	2018~20	60
	140	군산항 냉동·냉창고 신축	2018~20	150
	141	군산항 다목적관리부두 축조	2017~19	489
	142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 터미널 조성사업	2018~20	40
	143	완주 조경수 유통단지 조성	2017~18	20
	144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2019~26	853
주거·교육·공공시설 분야 합계				3,752.7
주거 소계				597.4
주거	145	고창고수 마을연계형 공공주택건설	2016~19	157.8
	146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건설	2016~18	110
	147	완주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18~20	96.4
	148	정읍, 완주 공공실버주택 건설	2018~20	133.2
	149	고창 만들권역 종합거점개발	2018~21	100
교육 소계				1,734
교육	150	교육환경 개선사업(계속)	매년	1,650
	15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기상인체험교육관 시설확충	2018~20	84
복지 소계				1,421.3
복지	152	옹포보건지소 신축	2018	6.3
	153	명덕보건진료소 리모델링	2018	2
	154	흥덕면 보건진료소 신설	2018	2.9
	155	제내리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2018	3.7
	156	임실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2018	9.3
	157	장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2018	2.1
	158	국립 희망치유센터 건립	2018~20	400
	159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2018~20	342
	16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매년	60
	161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매년	39
	162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	2018~26	554
환경·안전 분야				58,498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환경	환경 소계			48,617
	163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개선사업(계속)	2011~20	18,699
	164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2014~20	1,093
	165	도솔댐 재개발 사업	2018~23	350
	166	다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018~20	46
	167	신기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018~26	351
	168	원당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018~21	90
	169	감곡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018~21	281
	170	구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018~23	136
	171	용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	2018~24	188
	172	지방하천 정비사업(122개)	2017~24	21,865
	173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018~22	839
	174	새만금 하수도시설 건설사업	2018~22	1,405
	175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017~19	72
	176	정읍 제3공구 매립시설 조성사업	2017~19	89.5
	177	쌍암농공단지 오폐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 처리 사업	2018~20	39
	178	남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2018~20	119
	179	지평선산단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	2018~20	320
	180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임실)	2018	4.15
	18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무주)	2018~19	25.1
	18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진안)	2018~21	280.9
18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3개 지구)	2018~20	27.2	
184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15개 지구)	2018~20	723	
185	하수관로 정비사업(8개 지구)	2018~21	736	
186	인공습지(비점오염저감시설) 조성사업	2018~20	136	
187	장수 순환형매립장 조성	2017~19	86.2	
188	남원 대산매립장 증설	2017~19	140	
189	고창 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	2018~19	129	
190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 사업	매년	220	
191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2018	127	

12. 전라북도

(단위: 억원)

구분	No.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안전 소계		9,881
안전	19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계속)	2014~23	1,330
	193	서부권 국가방재활동거점 조성사업	2019~24	3,428
	194	임실 모래재(국도30) 위험도로 개선사업	2018	20
	195	장수 원촌(국도19) 위험도로 개선사업	2018	23
	196	순창 대산(국도21) 위험도로 개선사업	2018	14
	197	진안 삼락(국도13) 위험도로 개선사업	2018~19	97
	198	동화지구(동화천) 하천재해 예방	2018~24	218
	199	고속도로 유지관리 보수사업(계속)	매년	650
	200	국도 유지관리 보수사업(계속)	매년	1,200
	201	위임국도 유지관리 보수사업(계속)	매년	200
	202	철도시설 유지관리(계속)	매년	390
	203	상습침수 농경지(6개 지역) 배수개선사업	2018~22	546
	204	어청도항 정비공사	2018~25	635
	205	국유림 사방사업	2015~20	240
	206	장명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8	10
	207	용산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19	35
	208	계곡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20	60
	209	소태정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20	18
	210	우화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018~20	30
	211	도룡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20	33.4
	212	원가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20	50
	213	양삼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20	20
214	치도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18~20	36	
215	호동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018~19	16	
216	인풍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2018~19	20	
217	인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18~20	230	
218	순창 구룡 위험도로 개선사업	2018	8	
219	전주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8~19	15	
220	전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16~18	170	
221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확충사업	2018~19	64	
222	국도1호선 교량(삼례교) 보수보강	2019~21	75	

별첨 2. 사업조사 샘플

85 복합환승 터미널 건설

교통

○ 필요성 및 목적

- 대중교통과 보행중심의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 환승, 상업, 업무, 문화, 쇼핑이 어우러지는 대중교통 핵심 인프라 시설인 복합 환승센터 건설

국토교통부(2016) 토지이용 용어사전의 복합환승 터미널 정의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함

○ 사업개요

- 위치 : 익산역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26년
- 사업비 : 500억원(국비, 총사업비의 경우 2,160억원 추산)
- 사업내용 : 비즈니스 시설, 철도-차량단 환승 인프라, 대중교통-개인교통 간 교통환승 인프라, 쇼핑시설 등 다양한 복합 인프라 구축
- 비고 : 2010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 추진 담보 상태



12.
전라북도

○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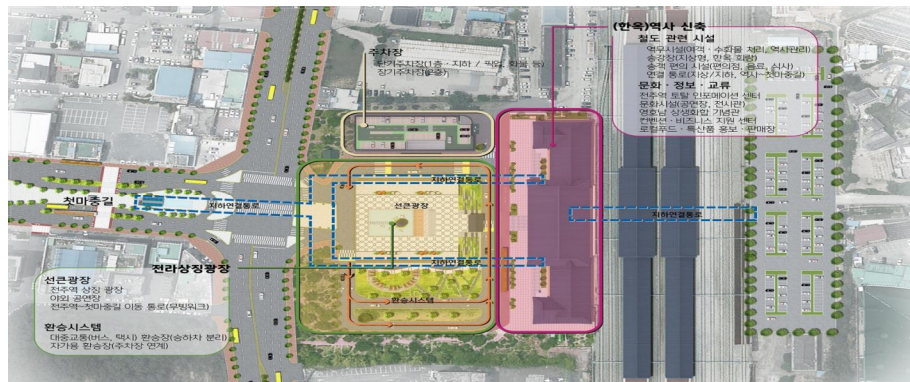
- 전주역은 건축된 지 35년이 경과되어 역사 건축물 및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용객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
 - KTX 주요 정차역의 서비스면적 평균이 1.53m²/인이나 전주역은 0.23에 불과하며, 경부선 평균(2.16)의 1/10 수준으로 협소(편의시설 부족)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전통문화도시인 전주시의 위상과 날로 증가하는 철도여행 수요를 고려할 때 역사시설의 전면 개선은 불가피
- 대선 지역공약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걸맞고 전북의 관문이라는 전주역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이용자 중심의 기능보강과 아울러 전통문화도시의 품격 있는 역사(驛舍) 정비사업 추진 필요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

▷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특별법 제정(지역공약)

○ 사업 개요

-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전주역 일원)
- 사업기간 : 2018~2020년
- 사 업 비 : 450억원(국비)
- 사업내용 : 역사 및 부대시설 정비(철도역사 건축 : 한옥형 역사 건축물 조성, 부대시설 정비 : 전면 광장(선큰광장), 주차장, 연결통로(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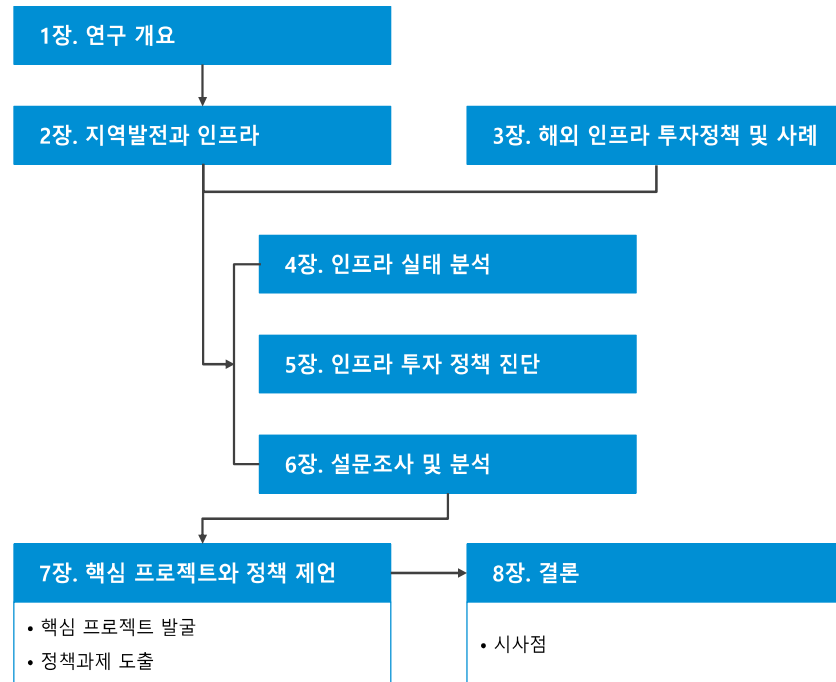


제13장 전라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개요

-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을 2017년의 22.1조원보다 20% 감소한 17.7조원으로 계획함. 이후 국회는 19.0조원(전년 대비 14.0% 감소)으로 최종 확정하였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전남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제시
 - ① 지역의 노후 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과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
 - ②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핵심 인프라 투자 발굴 및 개선 방향 도출
 - ③ 최근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 및 노후 인프라 대응 움직임에 발맞추어 전남 지역의 인프라 투자 및 개선 유도
 - ④ 인프라 투자 및 지역 건설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촉진
- 본 연구의 실효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광주전남연구원과 협력 연구를 통해 인프라 실태 파악, 투자수요 진단, 투자 방향, 정책 과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함.

그림 13-1
연구 진행
프로세스



2. 지역발전 및 주민행복과 인프라 시설

- 전남은 1인당 개인소득이 1,47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1,722만원)이며, 1인당 민간소비도 1,31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전국 평균 1,516만원) 수준임.

- 2010년 이후 전국이 연평균 3.5% 성장할 때, 전남은 2.8% 성장해 지역의 소득 수준이 정체되어 타 지역과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
- 2017년 기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6.2%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임(전국 평균 53.7%). 재정자주도 역시 35.4%로 타 광역도에 비해 열악함(9개 광역도 평균 49.1%).

※ 재정자주도란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재원의 비중임. 재정자주도가 클수록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넓음. 산식은 (자체수입+자주재원)/지자체 예산 규모×100%.

-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이며, 이는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생활기반 시설, 충분한 문화·여가활동의 지원,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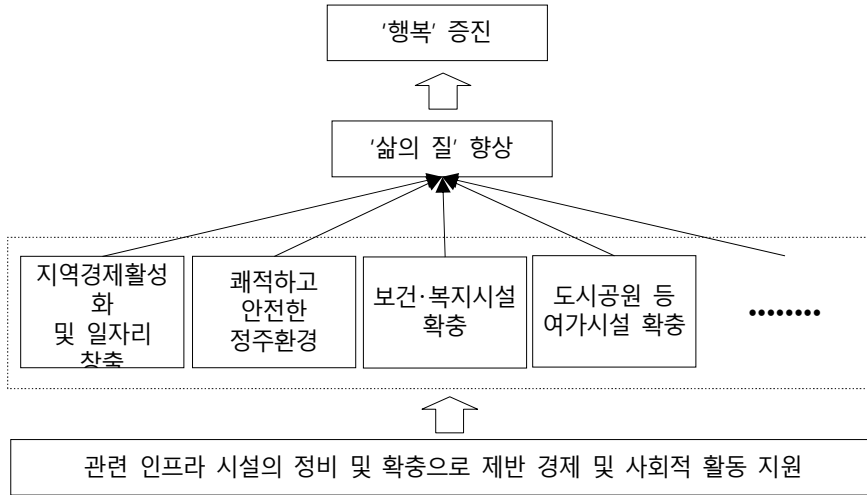


그림 13-2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 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프라 투자와 삶의 질, 지역 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조사(551명 응답)
 - 68.3%(47.2% 밀접, 21.1% 매우 밀접)는 인프라 투자가 전남 지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밀접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불과함.
 - 52.5%(42.5% 밀접, 10.0% 매우 밀접)는 인프라 투자가 전남의 지역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응답. 밀접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 불과

3. 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시설물 안전등급

- 「시특법」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실태⁷⁸⁾

78)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로 분류됨. 1종 시설물은 2종에 비해 규모가 큰 시설물임(1종 시설물 예시: (연장 기준) 교량 및 터널 500미터 이상, 방파제 1천미터 이상, (면적 기준) 건축물 5만 제곱미터 이상). 3종 시설물 중 대부분류로 시설물은 도로시설, 식도, 궤도, 유원시설, 대형토목공사장으로 분류되며, 건축물은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축공사장으로 분류됨. 3종 시설물은

- C등급 : 조속한 보수·보강이 이행 필요, D등급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 판단이 요구됨.
-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 시설물이 총 576개소에 달함.
 - 1종 17개소(13.1%)
 - 2종 75개소(4.7%)
 - 3종(특정관리대상 시설물) 484개소(9.0%)(C등급 444개소, D등급 40개소)

- 2017년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등급⁷⁹⁾ 현황에 따르면, 교통 및 자연재해 방지시설 확충이 요구됨.
 - 교통, 감염병 부문이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함. 또한 자연재해 부문이 4등급, 안전사고 부문도 3등급으로 좋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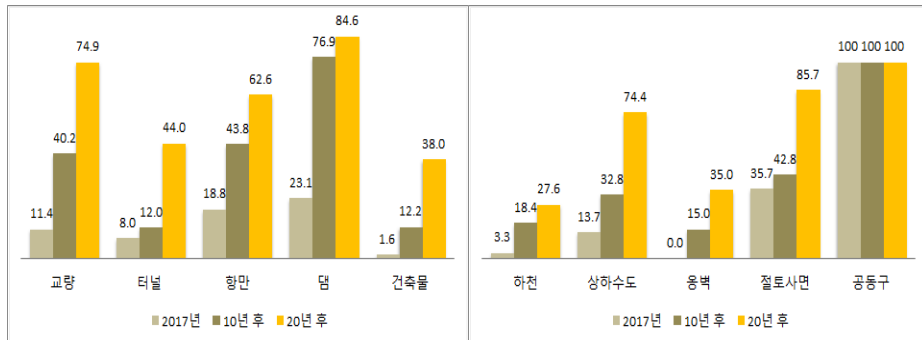
○ 시설물의 급격한 노후화

- 모든 시설물에서 노후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위 : %)

그림 13-3

전남의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의 노후화 전망



- 「시특법」상 1, 2종 시설물 : 30년 이상 노후화 시설물의 비중이 10년 후인 2027년에는 교량 40.2%, 항만 43.8%, 댐 76.9%, 건축물 12.2%, 하천 18.4%, 상하수도 32.8%, 절토사면 42.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⁷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었으나 2018년 1월 「시특법」 체계로 편입됨. 지역안전등급은 1등급이 가장 안전한 수준임. 행정안전부에서 상대등급(1~5등급)으로 부여함. 1등급(10%), 2등급(25%), 3등급(30%), 4등급(25%), 5등급(1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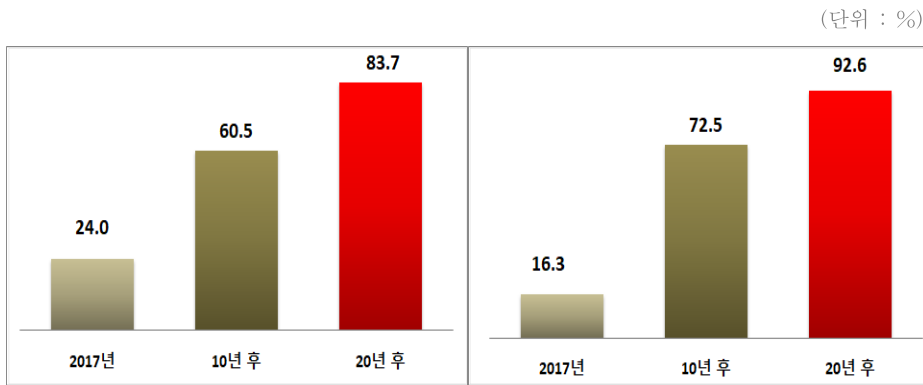


그림 13-4
전남의 시특법
대상 3종
시설물(左) 및
건축물(右)의
노후화 전망

- 특정관리대상시설(3종) : 3종 시설물은 향후 10년 후에 60% 이상, 20년 후에는 약 80% 이상, 3종 건축물은 향후 10년 후에 70% 이상, 20년 후에는 약 90% 이상의 건축물이 노후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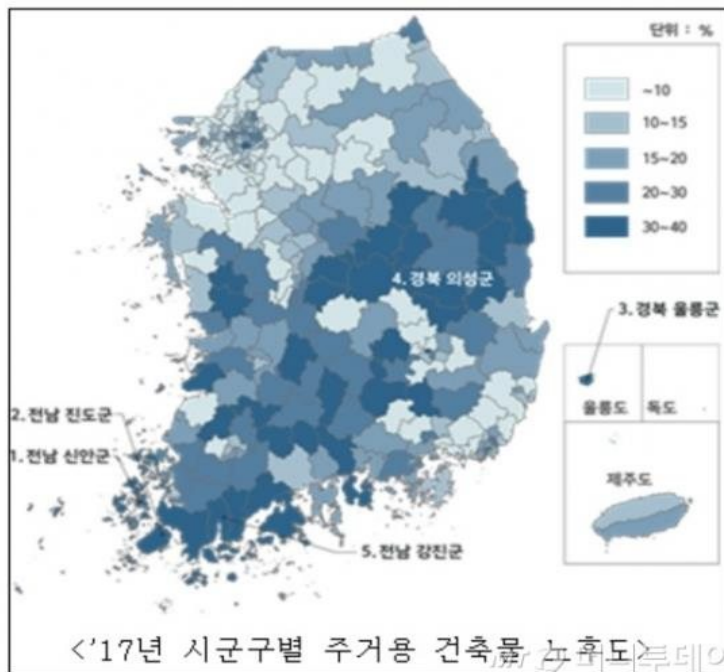


그림 13-5
전국 주거용
건축물 노후도

자료 : 머니투데이, 2018.2.7.

13. 전라남도

13.

전라남도

그림 13-6

폭우로 인한 담양 도로 침수 현장



자료 : 연합뉴스, 2016.9.17.

○ 교통 인프라

- 최근 관광객 증가 및 고속철도의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역간선 도로의 부족과 전남 지역 내 권역간 연계망 미흡 및 물류 기능의 핵심인 철도의 절대적인 시설 부족 문제 지속
 - 전남 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타 지역 대비 낮은 수준(76.5%, 전국 평균 85.3%)을 보이고 있음. 특히, 지방도, 군도 등의 포장률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도로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도로가 1,026km로서 전국에서 3번째로 노후 도로가 많은 상황
 - 전남 지역의 철도 인프라 시설은 도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선로의 노후화 및 선형 불량 등이 심화

○ 정주 환경

- 전남 지역의 주거환경은 매우 취약함. 연립주택 비중이 가장 높고, 전국에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임.
 - 노후주택 비중은 전체의 33.5%(2016년 인구주택 총조사)로서 전국 최고
 - 전남 지역 공개(빈집)는 10만 2,000호로서 경기(168천호), 경북(108천호) 다음으로 높음. 인구 감소로 공·폐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생활 인프라

- 전남 지역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국 최저(81.4%)이며, 누수율은 26.1%로

전국 평균(11.1%)을 크게 상회 →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급수난 및 누수 피해 지속

- 질 좋은 수돗물을 도서·낙후 지역을 포함한 각 가정에 전달하기 위해 노후 관 교체가 필요
- 공연장 및 기타 문화시설은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생활편의시설도 열악한 실정임.

○ 산업단지

- 전남 지역은 96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나, 광양(1984년), 대불(1989년) 등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화 산업단지가 다수 있음. 이로 인해 안전사고, 환경 피해 등은 물론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
- 지난 10년 간(2003~2013년),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903개사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입주업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5.6%, 전국 평균 9.2%).

○ 방재 인프라

- 전남 지역의 공공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 2,531개소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33.2%에 불과함.
- 지역 특성상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고, 항시 지진 피해도 우려
- 전남지역 내에서 2012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집중호우 및 태풍, 가뭄 등으로 인하여 약 6,000억원의 복구비용 발생
- 2018년 행정안전부의 등급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가'등급(재해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 106개소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음.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전남 인프라 예산분석

- 세출 규모 6조 7,508억원 중 사회복지가 34.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농림해양수산 16.2%, 수송 및 교통 13.1%, 일반 공공행정 7.5%, 공공질서 및 안전 6.5%, 환경보호 6.3%, 국토 및 지역개발 5.2% 차지
 - 전체 예산은 최근 5년 동안(2012~16년) 연평균 4.1%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 사회복지 예산은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7%로 오히려 감소
 - 전남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인당 2,197원으로 전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음.

그림 13-7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 전남은 타 광역시에 비해 인프라 예산 비중도 절대적으로 작고, 상대적으로도 미약
 - 중앙정부로부터의 사회 인프라 및 SOC 투자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으며, 따라서 도로, 철도, 하천, 생활 시설물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 감소

2) 전남 인프라 정책방향

- 전남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16~20년 간 중기 지방재정 규모 39조원 중에 인프라 투자액은 6조원 규모로 전망됨(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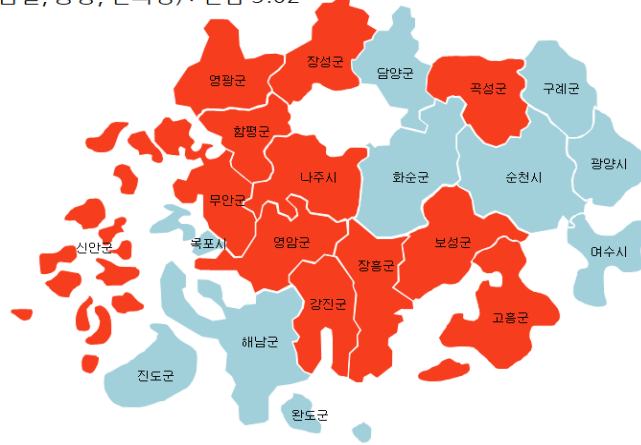
- 인프라 투자액 중 환경보호(상하수도 및 수질) 분야 비중이 25.9%, 수송 및 교통(도로) 분야 18.4%, 공공질서 및 안전(지방하천 정비사업) 9.6% 순으로 높음.
- 핵심 교통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였거나 지연 또는 표류 중, 또한 비도시(도서·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정비사업도 미미한 실정
 - 대표적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전선 전철화 사업,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계속 지연 중
- 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증대 필요
 - 산업기반 확충으로 세수기반을 확보하고, 중앙에 의존하는 이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 특히,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노후 농공·산업단지의 개선, 전통시장 개선 및 활성화, 도서·낙후 지역 교통망 정비,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산업 인프라 확대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 필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 전남의 생활 인프라(상·하수도, 전통시장, 주차장 등)는 타 지역 대비 매우 열악하며,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생활 인프라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와 보급률 향상 방안이 시급
- 지역 연계 교통·물류 인프라 확대 및 안전 인프라 예산 확보 필요
 - 친환경 교통 인프라(철도, 공항 등)와 도서·낙후 지역 연계망 투자를 바탕으로 전남 내 광역생활권·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필요
 - 노후화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 확충 필요
 - 교통 체계 확충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유도
 -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설계 및 보강에 대한 투자 재원 마련 필요

5. 지역민 설문조사 및 인프라 투자 추진 방향 설정

- 전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551명),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나, 체감하는 만족도와 안전도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인프라 투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함.
- 인프라 성능(3.02) : 100점 만점으로 50.5점

그림 13-8
지역 주민의
인프라 성능 평가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 전남 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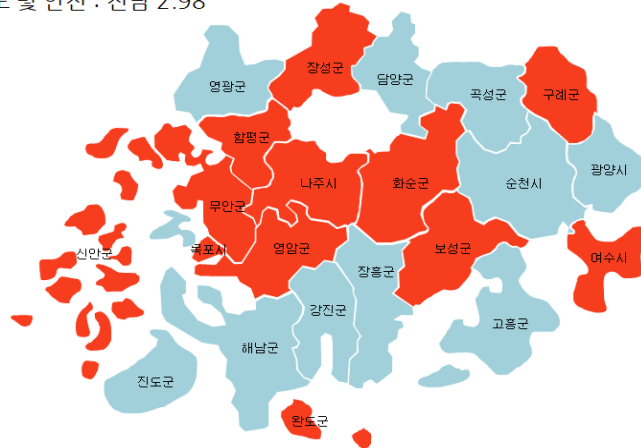


주 : 진한 부분이 인프라 성능이 낮은 지역임. 전남 전체 3.02점(50.5점/100점 만점).

- 인프라 안전 수준(2.98) : 100점 만점으로 49.5점

그림 13-9
지역 주민의
인프라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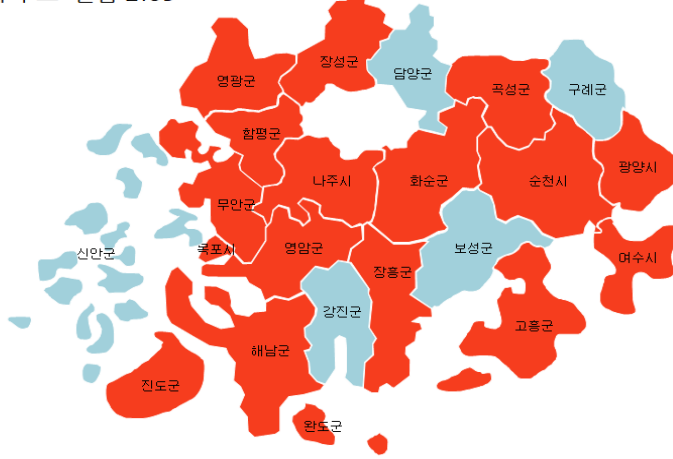
노후도 및 안전 : 전남 2.98



주 : 진한 부분이 인프라 안전 수준이 낮은 지역임. 전남 전체 2.98점(49.5점/100점 만점).

- 인프라 투자 수준(2.69) : 100점 만점으로 42.3점에 불과해 인프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

인프라 수요: 전남 2.69



주 : 진한 부분이 인프라 수요가 큰 지역임. 점수가 높을수록 인프라가 충분, 전남 전체 2.69점(42.25 점/100점 만점).

그림 13-10
지역 주민의
인프라
수요(필요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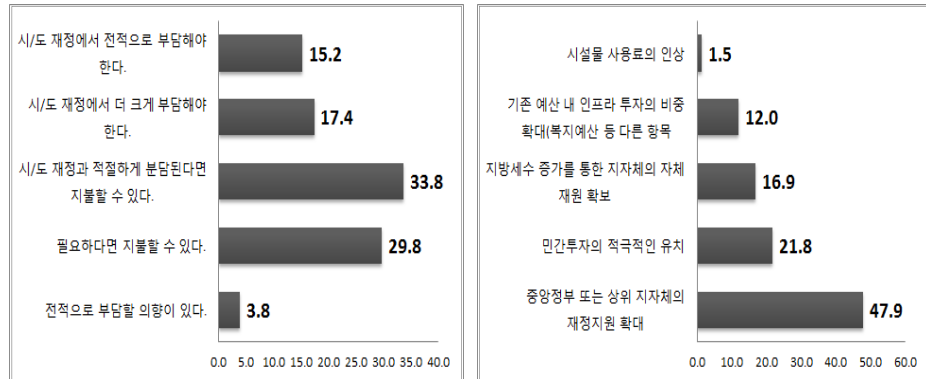
- 사회적 재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도
 -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 사고 등)에 대한 안전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48.5점에 불과함.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에 대한 안전도 역시 47.3점에 불과
-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 시/도 재정과 개인 부담이 적절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3.8%로 가장 높음.
 -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 지원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가장 높음. 이어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가 2순위인 21.8%로 나타남.

13.

전라남도

그림 1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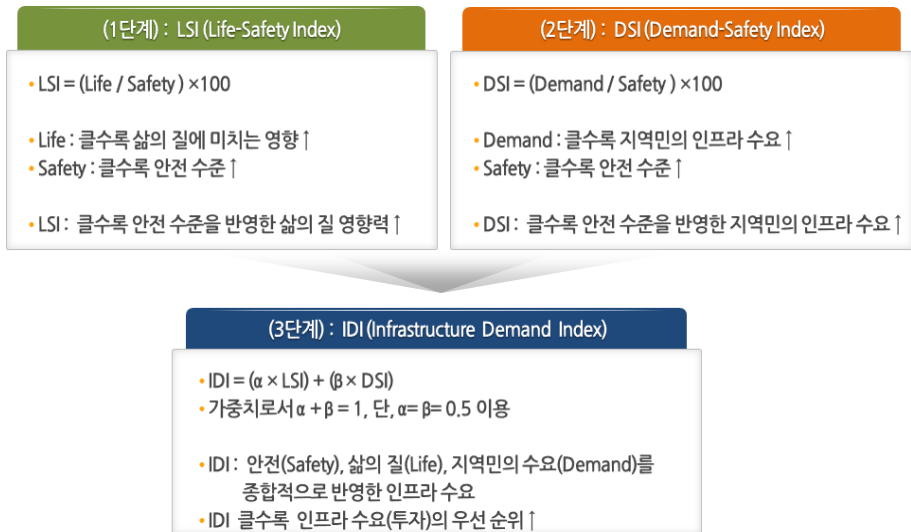
지역 주민의 비용 부담용의 및
재원조달 방법
평가



- 노후 인프라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노후 인프라 조례 제정과 지역경제 성장 간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될 것이다(도움+매우 도움)’라는 인식이 59.0%로 나타남.
 - 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4.9%에 불과함.
-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IDI : Infrastructure Demand Index) 산정 결과
 - 인프라 수요 종합지수(IDI)가 큰 시설물은 안전 수준(‘Safety’), 삶의 질(‘Life’), 지역민의 수요(‘Demand’)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상대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 시설물로 해석됨.

그림 13-12

인프라 수요 종합
지수(IDI)를
이용한 우선순위
산정 과정



-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 시설물은 의료시설, 재해방지시설, 터미널 /정류장, 환경개선시설, 주차장, 주거시설, 도로, 교육시설, 문화시설, 산업 /물류단지, 관광시설, 상·하수도 순으로 도출됨.
- 상대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인프라 시설물은 발전소, 터널, 항만 시설, 교량, 공항, 댐 및 저수지 순으로 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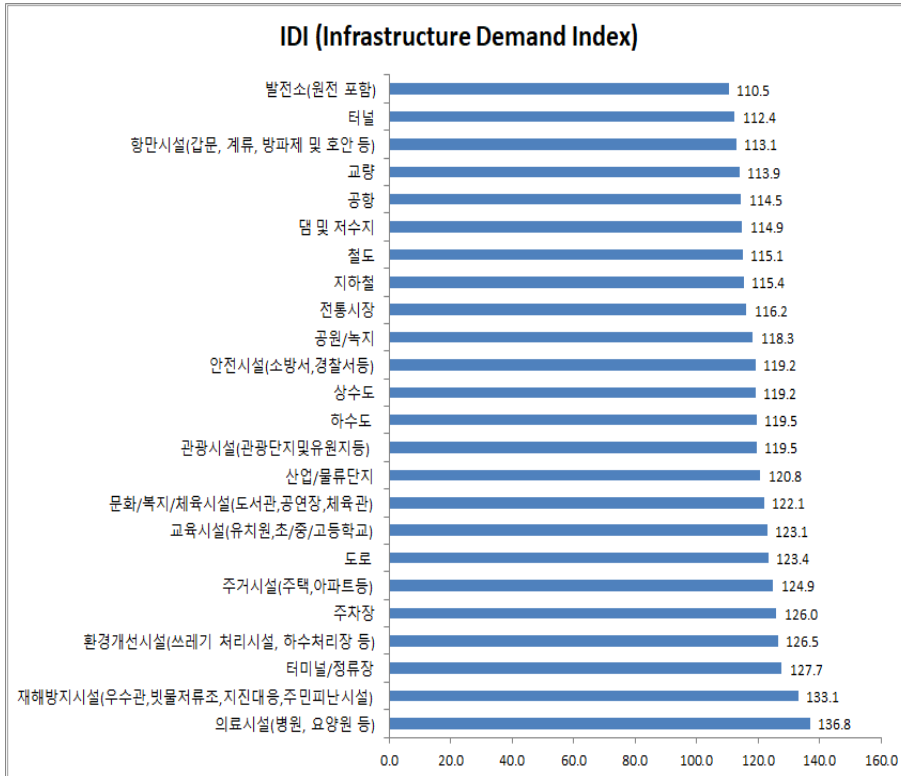


그림 1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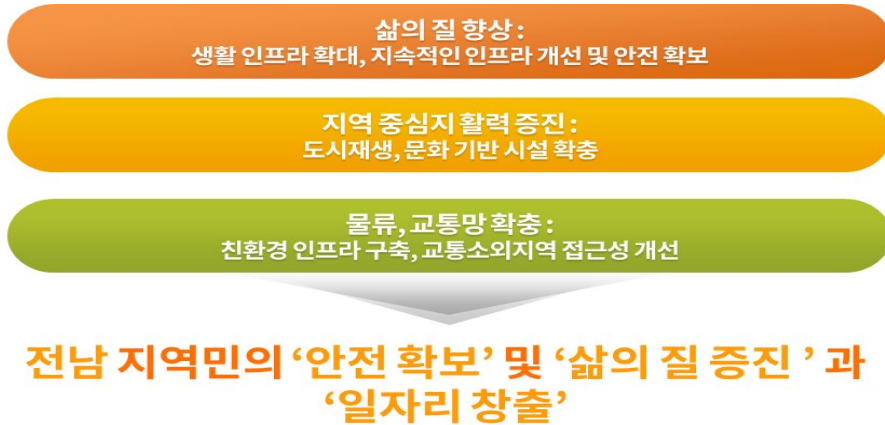
IDI(Infrastructure Demand Index)를 이용한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

주 : 지수가 클수록 안전 수준, 삶의 질,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때, 상대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 시설물로 해석됨.

6. 지역 인프라 투자 방향 및 핵심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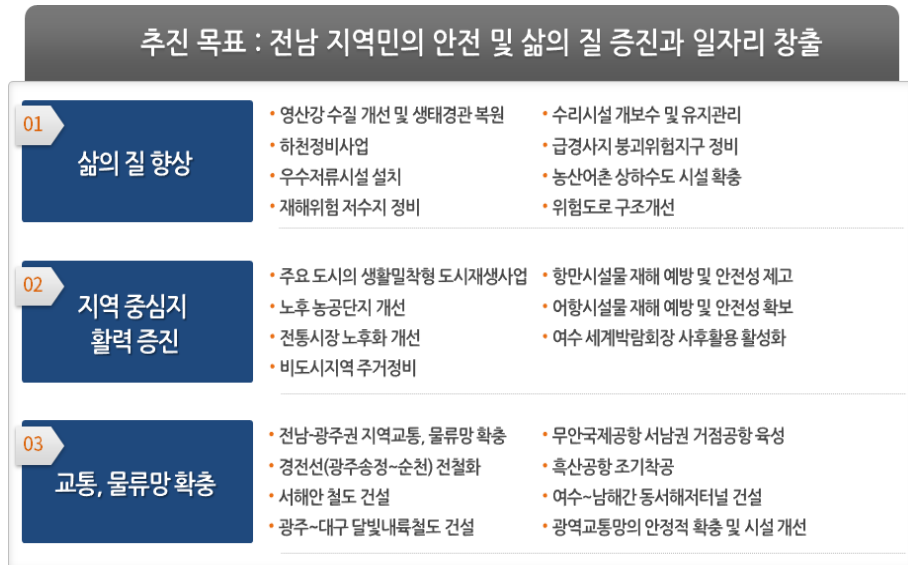
- 전라남도 인프라 실태 진단, 인프라 투자정책,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출된 인프라 투자 관련 추진 목표 및 투자 방향은 다음과 같음.

그림 13-14
전남 인프라 투자
방향



- 전라남도 인프라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중에서 부문별 핵심 사업 발굴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3-15
전남 핵심 사업
요약



1) 주요 핵심 사업 총 24건, 총 31조 7,600억원 규모

- 사업 구상 단계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비 규모에서 제외 산정

○ 삶의 질 향상

- 주요 핵심 사업 8건, 투자 규모 9,400억원

No.	주요 핵심 사업	주요 내용
1	영산강 수질개선 및 생태경관 복원	영산강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영산강 경관테마숲 조성
2	하천정비사업 내실화	지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국가하천유지관리
3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5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7	전남 농산어촌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지역 내 상·하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농산어촌 취약지역 상·하수도시설 개선 및 확충
		상·하수도 시설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
8	위험도로 구조개선	(목포시) 보도육교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육교정비 (순천시) 교량철거 및 재시공, 도로구조 개선, 노면표시 (보성군) 도로선형 개선 및 확장 (영암군) 선형 개량 및 도로 확포장 (진도군) 위험도로 선형 개량

○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 주요 핵심 사업 8건, 투자 규모 1,400억원

No.	주요 핵심 사업	주요 내용
1	전라남도 주요도시의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기반 조성
		주민참여 및 민간 제안형으로 사업 추진
2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활성화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여수 유치
		국립 여수해양기상과학관 건립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3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극 추진
		도시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생활 안정화 추진
4	전남 노후 농공단지 개선사업	차별화된 신개념의 농공단지 특화단지 조성 추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
		농공단지 특화발전방안 마련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
5	전통시장 노후화 개선 및 활성화	안전 및 편의시설의 확충
		시장 이동여건 개선, 청결도 제고
		방문객 쇼핑 편의성 향상
		차별화된 시장 현대화 추진
6	전남 비도시지역 주거정비사업	맞춤형 소규모 고령자 공공 임대주택 공급사업
		맞춤형 친환경 융복합타운 조성사업
		농산어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특성화마을 조성 사업
		空家 및 공간축물 활용 제도정비사업
7	항만시설물 재해예방과 안전성 제고	노후항만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노후항만 시설물 보강
8	어항시설물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노후어항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어항시설물 보강

○ 사회적 혼잡비용 절감

- 주요 핵심 사업 8건, 투자 규모 30조 6,800억원

No.	주요 핵심 사업	주요 내용
1	광주-전남권 지역교통·물류망 확충사업	광역교통망 확충 및 정비 지역생활권의 동반성장과 균형발전
2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3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체구간 건설 달빛 내륙철도 구간별 건설
4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서해안 거점도시 간 철도물류시설 확충
5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항 기반시설 확충
6	여수~남해간 도로 (동서해저터널) 건설	남해안권 영·호남 상생발전 관광교류 증대를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7	흑산공항 조기 착공	
8	광역 교통망의 안정적인 확충 및 시설 개선	광역철도망 구축 국도 정비사업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7. 정책과제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의 도입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검토 필요

- 지자체 스스로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을 높이고, 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 운영과 주민요구의 대응 능력 제고 필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지속 추진 필요
 -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효율화 필요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하고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검토

-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와 신뢰 구축을 통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자 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
 - 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 필요
 - 부족한 인프라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과 개량·재투자 실행 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필요(안정적 재원조달 부문 포함)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실질적인 시공 참여 유도 등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공사 분할발주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 보호·육성 정책 운영 필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

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 필요,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행체계 및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등 조례 내용의 실효성 제고

- 전남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경제적 파급효과
 - 인프라 투자 규모 추정 : 31조 7,600억원(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3.1조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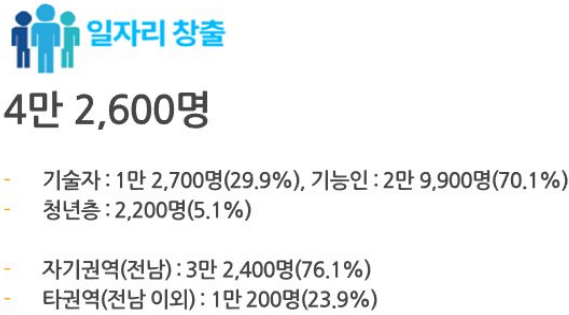


그림 13-16

전남 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집행 시
경제적 파급효과
(연평균)

별첨 1. 주요 핵심사업 예시

1) 전남 농산어촌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① 현황 및 실태

- 전남의 상수도 보급률은 86.6%이며, 특히 구례군, 보성군, 강진군은 60% 미만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여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8.8%).
- 전남의 하수도 보급률은 75.1%로 전국 92.9% 대비 현저하게 낮으며, 고흥군, 해남군, 완도군, 신안군은 50% 미만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임.

(단위 : 명, %, m³/일, ℓ)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시설용량 (m ³ /일)	급수량 (m ³ /일)	1일 1인당 급수량(ℓ)
	2015년	1,939,562	1,680,268	86.6	726,670	599,909
2014년	1,934,034	1,637,506	84.7	726,670	586,865	358
2013년	1,931,716	1,601,942	82.9	710,150	590,899	369
목포시	241,213	240,629	99.8	120,000	83,679	348
여수시	294,073	268,084	91.2	157,720	101,210	378
순천시	280,594	265,951	94.8	158,000	92,333	347
나주시	100,250	80,518	80.3	1,600	22,791	283
광양시	155,117	132,615	85.5	75,100	44,281	334
담양군	48,024	37,092	77.2	5,650	13,121	354
곡성군	31,046	24,306	78.3	4,500	9,217	379
구례군	27,536	16,048	58.3	9,100	9,411	586
고흥군	69,391	47,558	68.5	14,600	23,568	496
보성군	45,781	25,621	56	7,760	9,077	354
화순군	66,727	58,680	87.9	13,000	20,182	344
장흥군	44,043	34,316	77.9	1,900	11,212	327
강진군	39,168	22,974	58.7	6,460	8,244	359
해남군	77,517	51,505	66.4	12,500	17,589	342
영암군	63,605	51,860	81.5	62,000	31,635	600
무안군	83,753	77,388	92.4	-	24,146	312
함평군	35,484	27,270	76.9	10,000	8,491	311
영광군	57,017	52,196	91.5	21,150	19,268	369
장성군	47,456	40,916	86.2	5,000	7,867	192
완도군	54,378	52,411	96.4	19,990	17,601	336
진도군	33,369	33,151	99.3	9,890	12,270	370
신안군	44,020	39,179	89	10,750	12,716	325

자료 : 전라남도 통계연보(2018).

(단위 : 명, km², %)

구분	총면적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 보급률
		하수 종말처리 인구	폐수 종말처리 인구	면적	인구	면적	
2014년	12,257.28	1,429,914	2,1785	1,199.00	482,335	11,058.27	75.06
2013년	11,891.60	1,402,881	2,1740	1,093.90	507,095	10,797.80	72.90
2012년	12,934.03	1,388,367	2,0776	1,778.18	524,077	11,155.85	72.90
목포시	52.00	236,770	-	25.80	4,974	26.20	97.94
여수시	503.86	246,682	-	105.36	47,777	398.50	83.77
순천시	907.00	253,798	-	69.20	25,101	837.81	91.00
나주시	608.62	56,207	-	15.05	36,464	593.57	60.65
광양시	460.10	139,427	2,362	65.60	11,881	394.50	92.27
담양군	454.97	34,245	-	11.80	13,946	443.17	71.06
곡성군	546.78	20,994	-	191.95	10,090	354.83	67.54
구례군	443.18	23,963	383	284.93	3,045	158.25	88.88
고흥군	776.12	35,157	-	22.76	35,235	753.36	49.94
보성군	663.32	26,583	-	9.88	19,701	653.44	57.43
화순군	786.74	51,504	518	25.78	15,656	760.96	76.87
장흥군	618.22	26,325	-	7.24	17,358	610.98	60.26
강진군	499.78	22,850	-	9.00	17,406	490.78	56.76
해남군	1,005.80	39,013	64	24.05	39,107	981.75	49.98
영암군	603.50	30,224	16,201	34.00	17,177	569.50	72.99
무안군	449.76	49,912	187	15.28	33,008	434.48	60.28
함평군	392.90	19,027	345	4.90	16,352	388.00	54.23
영광군	474.91	30,502	157	30.05	26,861	444.86	53.30
장성군	518.50	26,746	-	40.54	20,612	477.96	56.48
완도군	396.24	25,224	1,568	16.98	27,531	379.26	49.32
진도군	440.15	20,026	-	182.16	13,410	257.99	59.89
신안군	654.85	14,735	-	6.71	29,643	648.14	33.20

주 : 2015년 자료는 2017년 통계연보에 수록.
자료 : 전라남도 통계연보.

13. 전라남도

그림 13-17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추진
절차

- 전남 남서부권 3개 지자체(장흥·완도·진도)-한국수자원공사 간 지방 상수도 통합운영 실시협약 체결(2012. 12)



②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 농산어촌 및 도서의 급수 취약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 취약지역을 정비하여 환경복지 실현
- 재정적 지원 통한 지방 상수도 및 하수도 통합운영으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주민 만족도 향상
- 국비지원 비율 획기적 상향 조정으로 복지 격차 해소(현행 70% → 90%)

③ 추진 체계

- 사업주체: 국토교통부(수량), 환경부(수질), 기획재정부(재정), 행정안전부(경영), 자치단체(집행, 관리), 수자원공사(위탁관리)
- 2010년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지방하수도 통합 운영' 발표
- 「수도법」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한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환경부, 2018년 상반기)

④ 주요 사업 내용

- 지역 내 상·하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 지방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시설 투자 유도 및 서비스 향상
 - 급수체계 조정, 시설물 중복투자 방지, 단일 원가 등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 농산어촌 취약지역 상·하수도시설 개선 및 확충
 - 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중요 구조물

등에 대한 보수·보강

-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관리 강화 추진
- 연륙·연도사업과 연계하여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
- 농산어촌 취약지역 상·하수도관망 구축
- 농산어촌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및 수질관리 지원
- 식수전용 저수지, 해수담수화시설 등 식수원 개발 지원

- 상·하수도 시설 연계 태양광 발전 사업
 -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에너지가 많이 드는 상·하수도 시설 가동에 신재생에너지 전력 활용
 - 저에너지, 고효율 상·하수도 기자재 및 처리공법 개발 병행
 - 법제도 정비 및 재정적 혜택 등 지자체에 각종 지원 예정(환경부)

2) 전남 노후 농공단지 개선사업

① 현황 및 실태

- 전남 농공단지는 68개소로 그 중 57개가 완료되었고, 8개소가 조성 중이며, 3개소가 미착공 중에 있음.

구분	개소	완료·조성중·미착공	지정 면적	분양·공고 면적	기업 수 (개)	고용인원 (명)
농공단지	68	57 / 8 / 3	11,431	7,119 / 7,602 (93.6%)	1,253	15,802

표 13-1

전남 농공단지
현황

자료 : 시군 산업단지 관련 부서 제출 자료(2017. 8월 말 기준, 고용인원 2016. 12월 말 기준).

- 입주기업 수는 1,253개소로 전국 10위(전국 95,094개사), 입주기업 고용인원은 15,802명으로 전국 12위(전국 215,228.5명)임.
- 주요 업종은 음식료, 기계, 석유화학, 전기전자 순임.
 - 전남 노후 농공단지(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단지)는 35개소로 전체의 61%(완료시점 기준)에 달해 노후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13.

전라남도

13.

전라남도

표 13-2

전남 농공단지
노후화 현황

구분	전남	나주	목포	순천	여수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무안
농공 단지	35	동수 봉황 오량	산정	주암	화양	마량	풍양	검면 석곡 임면	간전	금성 무정	삼향 일로 청계
		보성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미력 별교	군서	군서 신북	완도 죽청	동화 삼계	장평	고군	학교 함평	옥천	능주 도곡 동면 이양

주 : 노후 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단지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통계표(2017년 3분기).

②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 거버넌스 구축과 규제완화, 혁신역량 강화
-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
- 농촌지역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 특산물 활용

③ 추진 체계

- 농공단지 진단평가 실시
- 농공단지 종합관리지원계획 수립
- 전남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전략 수립

④ 주요사업 내용

- 차별화된 신개념의 농공단지 특화단지 조성 추진
 - 지역특화 수요맞춤형 “전남 6차 산업단지” 조성
 -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특화단지의 조성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마련
 -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마련 및 보건진료소, 우편취급소, 은행자동화점포 (ATM 등), 보육 및 탁아시설 설치
 - 공동 물류창고, 비즈니스센터 설치
 - 교통편의 제공 등

- 농공단지 특화발전방안
 - 입주기업 관리시스템 도입
 - 산학관련 협력 클러스터화
 - 농공단지협의회를 중간 지원조직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

- 산업기반 인프라 정비
 - 도로정비, 주차장 등 교통시설 정비 확충
 - 산업단지 경관 개선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3)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① 현황 및 실태

- 도시·농촌지역 내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 (법적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 저감대책의 수립 및 시설기준 제정·운영)
- 대상지 선정 기준
 - 과거 침수 피해 발생 현황,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내 저감대책 포함 여부, 피해원인 분석, 피해원인 규명의 적정성 등
 - 중앙부처의 시·군 공모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하면 전문가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강우 및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라 집중 호우 시 발생하는 도심지 침수 피해 예방
 - 하수도시설 확장 등의 사업 추진 시 통신 등 지하매설물 이전에 따른 시공 곤란, 예산과다 등 침수대책 한계가 있는 지역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량 : 11개 시·군 18개소(완료 13개소, 계속 4개소, 신규 1개소)
 - 사업비 : 159,435백만원(국비 92,210.5백만원, 시군비 67,224.5백만원)
 - 2017년도 : 2개 시·군 4개소/16,796백만원(국비 8,398백만원, 시군비 8,398백만원)

②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

-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
 - 계속사업 4개 지구와 신규 1개 지구 사업을 추진

③ 사업 추진 체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장·군수)
- 사업 대상지 제출(시·군 → 도 → 행정안전부)
- 전문가 심의 후 사업 대상지 확정(행정안전부)
-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시장·군수)

(단위 : m², 백만원)

표 13-3

전남 2018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시군	지구명	유역면적 (km ²)	저류용량 (m ³)	형식	총사업비			2018년 계획			비고
					계	국비	시군비	계	국비	시군비	
계	5지구				76,869	38,434.5	38,434.5	39,375	19,687.5	19,687.5	
순천	조곡	0.8	27,000	굴착식	21,325	10,662.5	10,662.5	4,993	2,496.5	2,496.5	2015~
순천	성동로타리	0.2	3,750	지하식	11,808	5904	5904	3,846	1,923	1,923	2016~
화순	천암1	0.5	10,000	지하식	10,960	5480	5480	6,810	3,405	3,405	2017~
순천	남정	2.6	27,000	지하식	23,726	11863	11863	22,726	11,363	11,363	2017~
순천	장천	3.1	3,400	지하식	9,050	4525	4525	1,000	500	500	2018~

주 : 2017년 대비 2018년 국고보조금 11,290백만원(134%) 증가.

④ 사업내용

- 사업 대상 : 2개 시·군 5지구(순천 조곡·성동 로타리·남정·장천, 화순 천암1)
 - 사업비 : 39,375백만원(국비 19,687.5백만원, 시군비 19,687.5백만원)
 - 계속 4개 지구는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 신규 1개 지구는 총사업비 협의 완료 후 설계용역 조기 착수
- 적기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사업지연 방지
- 우기 대비 우수저류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안전과 우기철 피해 예방

- 완료 사업장 : 구조물 상태, 수문·펌프 등 작동 상태, 저류지 내 퇴적물 준설 여부 등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추진 중 사업장 : 사업장 안전시설 및 근로자 교육 여부, 우기 전 주요공정 완료 여부, 우기철 피해 방지대책 등 점검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사전설계 검토 회의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확보

3) 광역 교통망의 안정적인 확충 및 시설 개선

① 현황 및 실태

-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고막원) 착수 및 무안국제공항 경유 확정,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선, 남해안철도 전철화 사업 반영
 -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은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노선과 정차역 위치 등은 미확정인 상태
 -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 노후화된 국도 및 연륙·연도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도 우회도로 개설 등

②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 도로, 철도, 항공 교통망 적기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제고
- 지방도는 여건 변화, 시급성 등을 감안해 사업 규모 및 구간 축소, 단계별 구분 시행으로 조기 준공 노력

③ 추진 체계

- 국가계획에 포함된 광역철도 및 도로망 구축사업의 본격 추진과 함께 신규 계획 반영 노력
- 광역철도·도로사업의 국가수정계획 반영을 타 도와 협력해 건의하고, 미착수된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계속사업 조속 완료 추진
 - 2018년 신규 지구의 조속한 설계 완료 및 향후 착공 예산 확보 노력
 - 국가계획 미반영 사업은 논리 개발 후 정부예산 반영 지속 건의

- ④ 주요 사업 내용
- 광역 철도망 구축
-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건설
 - 사업내용
 - 노선 : 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목포
 - 사업기간 : 2015~20년(광주송정~고막원 구간 공정률 30%)
 - 사업량/사업비 : L=77.6km/총 2조 4,731억원(2018년 1,152억원)
 - 광주송정~고막원 기존선 고속화 구간 2018년 준공 목표
 - 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 노선 기본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남해안철도(보성~목포) 건설
 - 사업내용
 - 노선 : 보성~장흥~강진~해남~목포
 - 사업기간 : 2002~20년(공정률 34%)
 - 사업량/사업비 : L=82.5km/총 1조 3,886억원(2018년 2,677억원)
 - 2018년 2,677억원 확보로 본격 시공(현 공정률 34%)
 -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전철화 사업(82.5km, 1,702억원)이 2020년 계획기간 내 추진되도록 노력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 사업내용
 - 노선 : 광주송정~화순~보성~순천
 - 사업량/사업비 : L=116.5km/총 2조 304억원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중(2014.1~), 경제성(B/C) 향상 노력
 -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계획기간 내 사업 완료 추진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 사업내용
 - 사업량/사업비 : L=180.3km/총 5조 7,700억원
 - 노선 : 전북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수
 - 철도 이용객 수요에 따라 KTX 증편 및 SRT 투입 건의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 2014.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중이나 2017. 9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으로 사회적 할인율이 감소(5.5% → 4.5%)됨에 따라 경제성 상승이 예측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예상

○ 도로 정비사업

- 국도 확·포장 및 우회도로 건설

- 국도 확·포장 : 23개 지구, 209.2km, 1,119억원
 - 계속 : 포산~서망 국도 18호선 등 16개 지구, 159.4Km, 1,013억원
 - 신규 : 신장~북룡 국도 77호선 등 7개 지구, 49.8km, 106억원
- 국도 우회도로 : 2개 지구, 29km, 521억원
 - 계속 : 광양 세풍~중군, 중군~진정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 11개 지구, 7.9km 963억원(국비 599억원, 도비 364억원) 공사 추진
- 계속 : 화양~나진, 나진~소라, 일로~몽탄, 북하~도계, 남평~화순, 법성~홍농, 중군~진상, 도계~장성 8개 지구, 7.8Km, 1,086억원
- 착공 : 낙안~상사, 1개 지구 0.1km, 3억원
- 신규(2건) : 북평~북일(실시설계), 고서~창평(사전조사)
- 계속사업의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한 예산 배정 및 신규 사업의 조기 착수 지속 건의

- 지방도 정비사업

- 2010년 이전 발주된 5개 지구 준공 지연 및 설계완료 20개 지구 미착공
 - 2002년 노선 조정 시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523km(지방도 전체 연장의 26.7%)가 지방도로 승격되면서 시설기준 미달 및 미포장 도로 증가
- 32개 지구, 125.9km, 949억원 공사 추진
 - 계속 : 도암~유치 등 26개 지구, 112.3Km (준공지구 : 도암~유치 등 4개 지구)
 - 설계 : 밤고개~울포 등 6개 지구, 13.6Km
- 마을 앞 보행로 및 갓길(계속 18개소, 35억원) 정비
 - 지방도 보행로 및 갓길 정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 시행
 - 보행로 정비 9개 지구, 20억원 / 갓길 정비 9개 지구, 15억원
- 지방도 및 위임국도(54개 노선, 2,898km) 유지·관리

- 위험·굴곡도로 구조개선 25개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24개소, 노후 포장도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 등 54개소
-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 보강 실시 : 281개소 중 15개소
 - 이용 빈도 등이 높고 장대(100m 이상) 교량부터 단계적 추진
-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조기 준공과 소규모 생활도로 우선 추진
 - 대규모 사업지구 집중 투자로 조기 준공(준공지구 : 도암~유치 등 3개 지구)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선보상 시범 추진(2~3개 지구)
 - 시·군에서 지방도 사업(비관리청)을 시행하는 경우 도비 50% 지원
 - 사업 추진이 어려운 섬 연결 구간 등은 국도·국지도로 승격 건의

제14장 경상북도 인프라 투자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단기적인 반등세를 보였으나,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심화, 노동시장 양분화/경직화, 수출시장에서 신흥국들과의 가격/기술경쟁력 격차 축소 등 누적된 문제로 인해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

연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7년
평균 경제성장률	10.47%	8.77%	7.13%	4.67%	3.12%

자료: 통계청 자료 가공

- 이러한 국내 현실 속에서 경북지역은 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와 같은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진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가능성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황
-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는 관점에서 ① 경북지역이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 ② 지역 주민들의 인프라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인, ③ 지역 내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핵심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모색/발굴하는 연구를 수행
 - 참고로 본 연구에서의 인프라란 사회기반시설을 넘어 “지역에서 생활/활

표 14-1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변동
추이

14.
경상북도

그림 14-1

연구의 추진 개요

동하는 주민/기업의 활동성을 규정짓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물적 시설의 총체”를 의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북도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진단(지역 인프라 투자 현황 및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포함)	① → ②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진단 결과에 대한 검토 및 피드백
인프라 현황에 대한 진단 프레임 구성 및 진단 의뢰	③ → ④ ←	지역 인프라 현황에 대한 진단 및 지역 공무원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제출
경상북도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의뢰 및 내용 검토	⑤ → ⑥ ←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부여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⑦ ↔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연구보고서의 구조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4-2

연구보고서 구조 및 주요 내용

장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연구의 배경, 목적, 범위,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론, 기대효과 설명
제2장	경북지역 역내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경제여건 일반, ② 산업구조, ③ 고용/임금/역내 고용구조, ④ 인문·사회 지표, ⑤ 지방재정 현황, ⑥ 기타의 6개 부문으로 나눠 경상북도의 역내 상황을 진단 위 일반 진단 결과를 토대로 경상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모습을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쇠퇴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상북도의 위기적 모습을 ① 높아지는 지역소멸 가능성, ②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③ 가속화되고 있는 고립·주변부화라는 3가지로 압축정리 경상북도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
제3장	해외에서 적절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역 쇠퇴 억제 또는 지역 발전을 이룬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제4장	가용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개별 시설물에 대한 인프라 투자방향을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가 처한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인프라의 유형을 ① 물류 인프라, ② 산업기반 인프라, ③ 환경·재난 대응 인프라, ④ 주민생활 인프라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인프라의 과부족 정도를 진단
제5장	경상북도 인프라 투자 현황에 대한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인프라 예산을 중심으로 투자 과부족 정도를 진단
제6장	경북도민의 역내 인프라 상황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7장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결과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물류 인프라, ② 산업기반 인프라, ③ 환경·재난 대응 인프라, ④ 도시생활 인프라의 4개 영역에서 신규사업 제시
제8장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8개 과제를 제시

2. 지역발전과 인프라

1) 경제 일반

- 경북지역의 지역총생산(GRDP)은 경기-서울-충남-경남에 이어 전국 5번째인 98.8조원
-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북의 GRDP 성장률은 급격히 둔화, 전국 광역도 중 최하위권으로 추락(1인당 GRDP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광역도 중 3번째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

구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2009-2016)
경상북도A)	6.34%	2.34%
전국(B)	5.25%	3.10%
차이(A-B)	(+) 1.09%p	(-) 0.76%p

자료: 통계청 자료 가공

표 14-3

경북 vs 전국
경제성장률 비교

지역	금융위기 이전 (2000-2007) 순위(평균경제성장률)		금융위기 이후 (2009-2016) 순위(평균경제성장률)		순위 변화
충남	1	8.3%	2	5.5%	▼1
경기	2	7.6%	3	4.5%	▼1
경북	3	6.3%	6	2.3%	▼3
경남	4	5.8%	7	2.0%	▼3
충북	5	4.6%	1	5.5%	▲4
전남	6	3.6%	5	2.5%	▲1
전북	7	3.4%	8	2.0%	▼1
강원	8	3.1%	4	2.7%	▲4

자료: 통계청 자료 가공

표 14-4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전국 도간
경제성장률 순위
변화

2) 산업구조

- 경북지역이 이처럼 최근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이유는 역내 제조업이 성장경로 상 이미 성숙/쇠퇴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기 때문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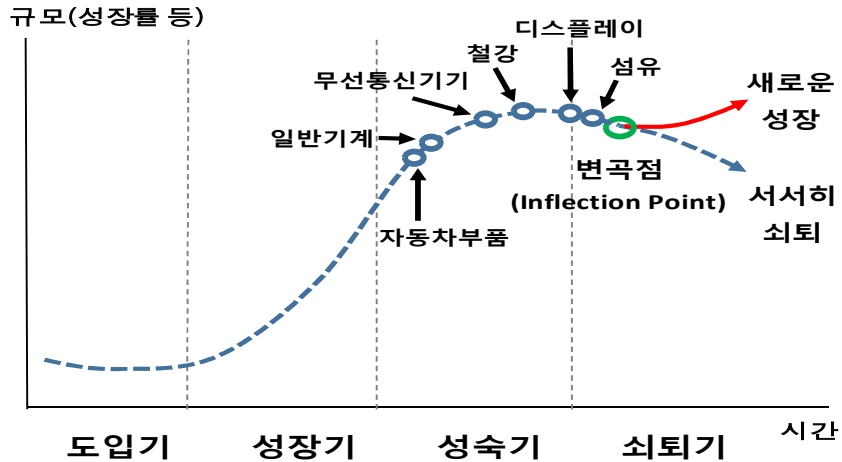
경상북도

14.

경상북도

그림 14-2

대구·경북지역
주력산업의
성장경로 내 단계



자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산업구조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조사연구자료, 2016.9. p.5에서 인용

표 14-5

구미시 주력
수출품목 수출액
변화

지역	주력품목	2011년 수출액 (백만달러)	2016년 수출액 (백만달러)	연평균 증감률 (%)
구미	모바일	7,881	4,915	(-) 9.01%
	디스플레이	6,199	4,978	(-) 4.29%

자료: 나중규·임규채, 「포항·구미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대경CEO Briefing 제510호, 2017.4.5. p.9에서 인용

표 14-6

포항시 수출입액
연도별 변화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성장률
수출 (백만달러)	11,050	10,107	9,854	10,336	7,453	6,990	-8.75%
수입 (백만달러)	14,457	11,357	9,591	9,907	6,216	5,608	-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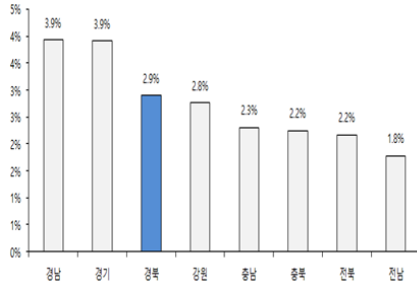
자료: 나중규·임규채, 「포항·구미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대경CEO Briefing 제510호, 2017.4.5. p.8에서 인용

3) 고용시장

- 2017년 말 기준 경북지역의 실업률은 2.9%로 전국 광역도 중에서 상위권이 며, 특히 청년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

- 특히 세계 경기불황, 중국 등 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대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으로 구미와 포항 등 역내 거점 생산도시들도 급속히 쇠퇴하는 모습

<전국 광역도 실업률 비교(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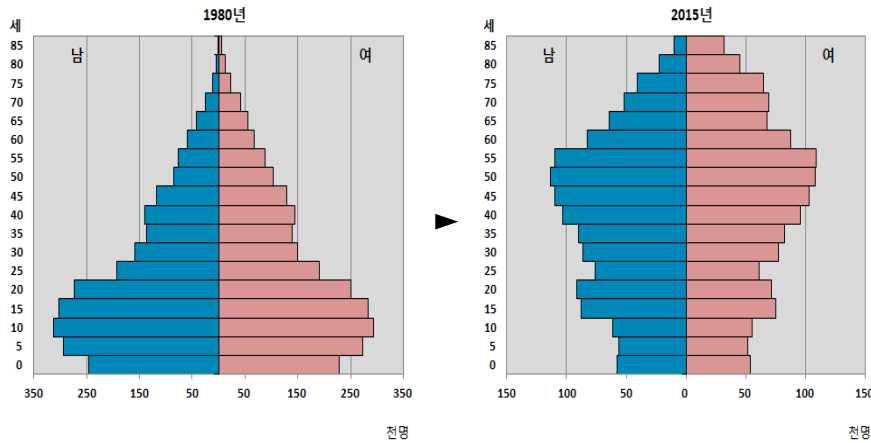
<전국 광역도 금융위기 전후 청년실업률 변화>

지역	금융위기 이전 (2000-2007) 평균 청년실업률	금융위기 이후 (2009-2016) 평균 청년실업률	상승폭	청년실업률 상승폭 순위
강원	5.40%	8.03%	2.63%p	1
경기	6.60%	8.43%	1.83%p	2
경북	7.19%	8.46%	1.27%p	3
경남	6.15%	7.14%	0.99%p	4
충남	7.08%	7.76%	0.68%p	5
전남	7.63%	8.08%	0.45%p	6
충북	7.31%	6.68%	-0.63%p	7
전북	8.61%	7.49%	-1.12%p	8

자료: 통계청

4) 인구

-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유소년(0-14세)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하는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2015년도 말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17.8%로 이미 고령사회(14%)에 진입)



자료: 동북지방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경북지역 전수집계결과 : 인구부문」, 보도자료, 2017.2.22. p.11에서 인용

그림 14-3

경북지역
인구구조 변화
모습

- 열악한 역내 고용여건(저임금/긴 근로시간 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심

14.

경상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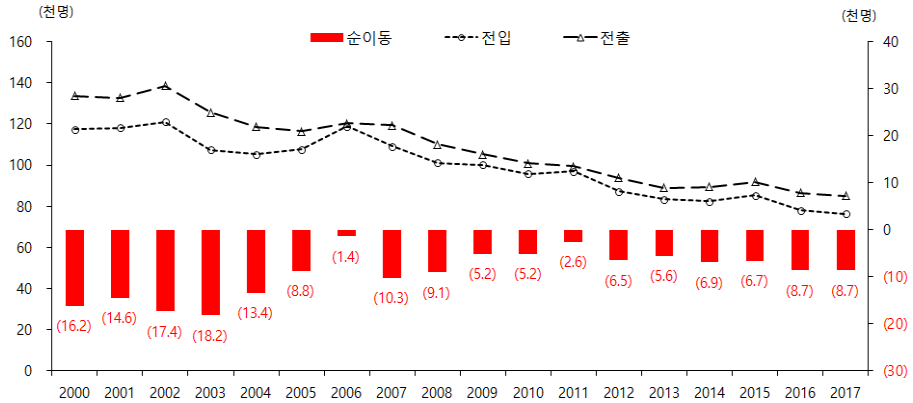
14.

경상북도

그림 14-4

경북
청년인구(15-29세)
전입-전출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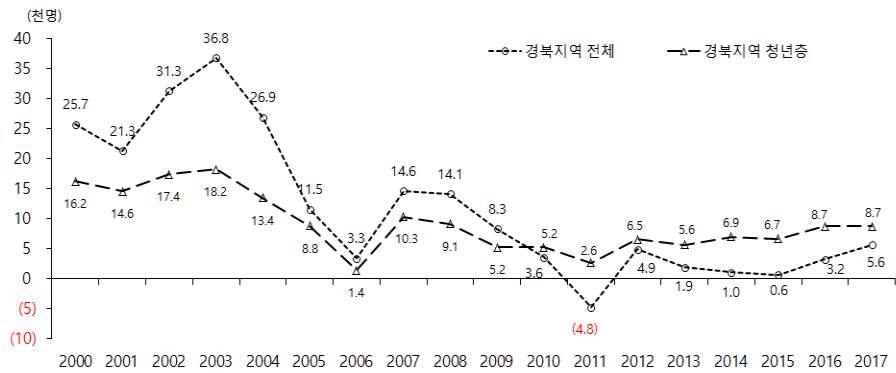
화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



자료: 통계청

그림 14-5

경북 전체 인구
vs 청년 인구
유출 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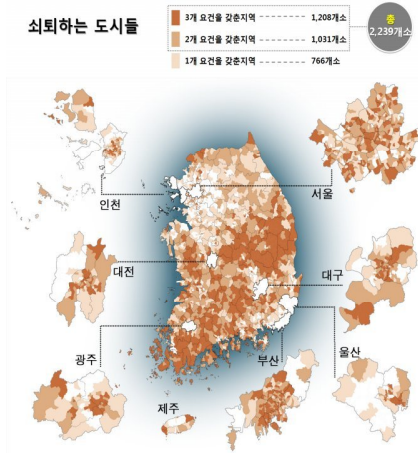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5) 지역쇠퇴

- 대구경북연구원(2016)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 재활성화가 필요한 '쇠퇴지역'은 전체 331개 읍/면/동 중 251개(75.8%)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구분 없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쇠퇴가 진행(특히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성주, 예천, 봉화, 울진 11개 지역에서 쇠퇴 정도가 심한 상태)
- 이러한 지역쇠퇴 흐름으로 인해 지역의 빈곤 정도도 점차 심화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거빈곤을 역시 전국 광역도 중 최고 수준
 - 또한 경북지역은 전국 여타 도 지역과 비교해 2016년도 기준 주거빈곤

율80)이 9.6%로 전국 최고 수준임.

<전국 쇠퇴지역 현황(2017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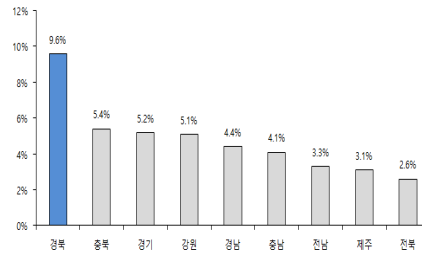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경북 vs 전국 빈곤지표 비교>

구분	경북(A)	전국(B)	차이(A-B)
국민연금가입자비율	37.7%	41.2%	-3.5%p
기초생활수급자비율	3.5%	2.6%	0.9%p

자료: 정성훈, 「대구·경북의 쇠퇴지역 재활성화 전략」, 대구경북연구원, 2016.10.26. p.39에서 수정 인용

<전국 광역도 주거빈곤율 비교>



자료: 뉴스1, “[국감브리핑] 대구 주거빈곤율 7.3%…대도시 중 최악”, 2017.10.18. 내용 참조

6) 기타

- 최근 경북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중형급 지진이 발생했으며, 향후에도 경북지역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대구와 경북은 전국 시/도 중 지진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 반면 국내에서 건물에 내진설계가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고, 적용대상 역시 3층 이상/총 면적 500m²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됨으로써, 중형급 이상 지진 발생 시 상당수의 건물에서 큰 피해가 예상

80) 최저주거기준(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가구의 비율로 정의

14.

경상북도

그림 14-6

경주/포항 지진



- 경북지역 내 내진설계 적용 대상 동수는 71,195동이나 그 중 내진성능 확보 동수는 27,223동으로서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38.2%에 불과
- 또한 경북지역은 전국 시도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의 비중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황이어서,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

표 14-7

전국 시/도 역내 주택 중 노후주택 비중 비교

순위	지역	20년 경과 주택 비중	지역	30년 경과 주택 비중
1	전남	60.5%	전남	33.5%
2	경북	55.2%	경북	26.9%
3	전북	54.3%	전북	25.5%
4	대전	52.7%	강원	23.1%
5	부산	51.3%	부산	21.9%
6	충북	50.6%	제주	21.7%
7	강원	50.5%	충남	20.7%
8	경남	49.4%	경남	20.6%
9	대구	48.9%	충북	16.3%
10	인천	46.8%	대구	16.3%
11	제주	44.9%	서울	14.7%
12	울산	44.9%	대전	14.3%
13	광주	44.6%	광주	14.3%
14	충남	44.0%	인천	12.1%
15	서울	43.1%	울산	11.1%
16	경기	35.8%	세종	9.2%
17	세종	18.4%	경기	8.1%

자료: 통계청, 「2016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17.8.31. p.68 표 가공

3.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인프라와 지역발전 사이의 관계

- 최근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 정부 그리고 지자체들도 인프라 투자 및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문제에 정책적 대응을 활발히 진행 중임.
 - 최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낙후된 도심재개발, 고속도로 등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할 방침
 - 일본도 2013년 ‘국토 강인화(強忍化) 계획’에 이어 2016년 ‘21세기 인프라 정비사업’ 등에서 노후 인프라 정비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임.
-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국내와는 반대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의 비중이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독일은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다음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인프라 사업 발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시와 포츠머스(Portsmouth)시 터널 프로젝트
 - 미국 워싱턴 D.C. 퍼플 라인(Purple Line) 프로젝트
 - 프랑스 파리 마세나(Zac Massena) 재개발 사업
 - 프랑스 파리 바티뇰(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사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

4. 경북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및 분석

1) 방법론

-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경북지역의 일반 현황 및 위기적 모습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① 경북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② 위기 원인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③ 지역 인프라 투자의 목표 도출 및 ④ 인프라 투자목표에 따른 인프라 유형 분류 그리고 ⑤ 동 분류에 기초한 인프라 현황 진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음.
- 위기원인과 대응전략, 인프라투자 목표의 내용 설정은 지역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진의 1차적 진단과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진의 피드백이라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음.
- 경북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다수의 목표와 수단이 연계된 문제에 있어, 목표와 수단의 중요성 평가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기법임.
 - AHP 방법론은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의 Saaty 교수가 1980년 자신의 논문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제안한 것으로, ① 다수의 목표, 다수의 평가기준, 다수의 의사결정주체가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계층화해, ② 상위 계층에 있는 요소들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방식에 의해 각 요소들의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측정 한 뒤, ③ 이를 토대로 모든 요소들의 종합점수를 계산해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의사결정방법론임.
 - AHP 기법은 현재 60여 개 국, 2만여 개 정부·기관에서 이용할 정도로 일반화된 의사결정방법론임.
-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① [1단계] 위기원인 ▶ [2단계] 대응전략 ▶ [3단계] 인프라 투자전략 목표라는 계층구조를 설정하고, ② 각각의 단계에서 설정된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진들 간 반복적 검토과정을 거쳤음.
 - 검토과정에서 수직적 논리일관성과 각 계층의 구성요소 간 '수평적 상호배타성', '차원적 동질성', '현상에 대한 포괄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

함으로써 경북지역의 인프라 실태 진단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인프라 실태 진단 대상

위기 원인 → 원인해소 방안 → 투자 목표 → 인프라 유형 분류 → 인프라 현황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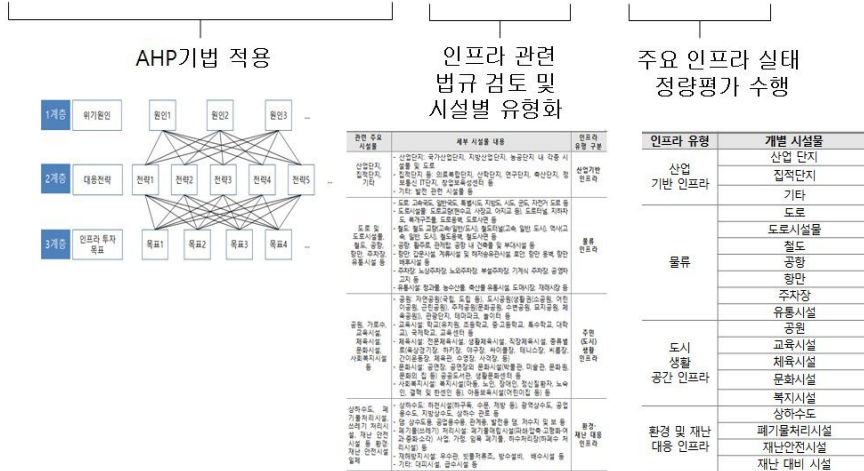


그림 14-7

인프라 실태 진단 프로세스

2) 실태 진단 결과

(매우 충분: 5점, 충분: 4점, 보통: 3점, 부족: 2점, 매우 부족: 1점)

인프라 유형	개별 시설물	평가 기준별 점수			종합 평가
		양적 충분	질적 충분	선제적 확충	
산업 기반 인프라	산업 단지	5	2	3	충분
	기타	2	4	3	보통
물류	도로	2	1	2	부족
	도로시설물	4	1	2	보통
	철도	2	3	2	충분
	공항	1	1	1	매우 부족
	항만	4	3	3	보통
	유통시설	3	2	2	보통
도시 생활 공간 인프라	주택	3	2	2	보통
	공원	3	2	3	보통
	교육시설	5	1	5	보통
	체육시설	3	3	3	보통
	문화시설	3	3	3	보통
	복지시설	3	3	2	보통
환경 및 재난 대응 인프라	댐	4	3	3	충분
	상수도	2	2	2	부족
	하수도	1	2	2	부족
	기타	2	1	2	부족

표 14-8

인프라 실태 진단 결과

- 정량적 검토 결과 총 5개 유형의 인프라가 '부족' 또는 '매우 부족'으로 판정
- 물류: 도로, 공항

- 산업기반: (해당사항 없음)
- 환경 및 재난대응: 상수도, 하수도, 기타
- 도시생활공간: (해당사항 없음)

① 타 광역도 대비 부족한 도로 인프라

- 경북의 도로 인프라는 면적과 인구를 고려 시 타 광역도에 비해 적은 편임.
 - 도로 총 연장은 12,343km, 도로포장률은 79.2%
 - 시·군도가 68.4%로서 전국평균 포장률 84.9%에 비해 다소 낮은 편
 - 재난예방측면에서, 민간시설물의 경우 시설소유자의 관심소홀, 안전불감증, 자원부족 등의 사유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다소 미흡
- 또한 경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87.0%로써 고속국도가 100%, 일반국도가 100.0%, 23개 시군의 지역생활권을 연결하는 지방도와 시·군도는 각각 86.8%, 76.2%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런데 이러한 경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전국 도로 포장률 92.4%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특히 시도와 군도의 포장률이 여타 광역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전국 1만 1,636km 중 6,998km의 도로가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북지역 내 도로는 1,149km가 내구연한을 초과, 강원지역(1,946km)에 이어 전국 광역 시·도 중 도로 노후화가 두 번째로 심각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됨.⁸¹⁾
 - 경북도 내 대부분의 도로는 1980년대 건설되어 노후 정도가 심각하여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2013년과 2014년 상반기 경북도의 포트홀 발생 현황 집계 결과 신고건수는 374건(2013년 249건, 2014년 상반기 125건)에 이룸.
 - 특히 영양 및 봉화 등 오래된 지방도가 많은 경북 북부권에서 포트홀 발생이 많으며, 북부지역에서 226곳의 포트홀이 발생, 중남부지역(148곳)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81) 건설경제신문, “[2017 국감] 김성태 ‘일반도로 60.1% 내구연한 초과’”, 2017.10.10. 내용 참조

-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2017년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를 조회해 보면, 2016년도 말 기준 현재 경북지역 교량 중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곳이 전체 역내 교량의 10%에 가까운 424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교량의 노후화를 도로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도와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순으로 노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11년 6월 일 평균 130mm의 호우로 일명 ‘호국의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북지역 내 교량 붕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북의 C등급(보통) 교량은 127건, D등급(미흡) 7건
 - D등급 판정을 받은 교량은 영덕, 울릉, 봉화군 및 영천, 영주, 김천시 교량으로 신속한 보강을 필요로 함.
- 2010년 이후 신규건설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30년 이상의 노후화 교량은 증가(2025년에는 468개로 전체교량의 44.8%)
 - 도에서는 경북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교량에 대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차적으로 재 가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울진 문곡교와 의성 중리교 등 2곳을 공사에 머무름.

② 주거 환경 개선 시급

- 경북의 주거환경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



자료: 노컷뉴스, “2016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대구·경북 전국 ‘최고’”, 2017.10.18. 내용 참조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

그림 14-8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6년도 기준)

14.

경상북도

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 2016년 전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 수준
- 경북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무려 9.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음 게다가 주택 노후도 또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

- 주택 노후도 심각

- 경산, 구미, 포항을 제외한 경북 20개 시·군의 주택노후도가 1.0이상
- 경북 332개 읍면동 중 273곳(82.2%)이 '주택노후도' 1.0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 울릉군이 8.1을 기록해 전국 3위, 의성 7.2(5위), 영덕 4.36(20위), 청송 4.19(23위), 영양 4.0(28위)

③ 유통시설 확충 필요

-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경북도 지역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시급

- 그간 상품화위생시설이 가장 큰 폭으로 확충되었음.
- 국내·외 환경변화로 농산물유통시장의 새로운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체계의 혁신적인 물류체계 구축이 요구
-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확충 시급

표 14-9

경북도 유통시설
현황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도매시장	7	7	7	7	7
공판장	21	21	21	21	21
직판장	61	61	61	61	61
간이집하장	494	494	494	494	494
산지유통센터	90	91	93	98	102
상품화, 위생시설	66	78	84	92	100
농산물종합유통센터	1	1	1	1	1

자료 : 경상북도, 도정백서 (2016)

- 지역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시급

- 한.미, 한.EU, 한.중 FTA 등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로 농산물유통시장의 새로운 유통환경 조성 및 혁신적인 물류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

- 특히 지역별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확충 시급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선별·저장·포장의 일괄 시스템을 작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주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게 규모화·현대화된 시설 건설을 통해 산지유통시설 거점 육성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

④ 상하수도 노후도

- 경북도 내 상수관로는 총 연장 21,743km으로 전체 상수관로 중 사용연수 25년 이상인 관로는 19.1%(4,147km)
- 2012년 기준으로 경북지역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5천여km, 전국에서 3번째로 노후도 높음.
- '10-'15평균 누수량 약 35,416,444톤, 전국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 (835.5 원/톤)으로 환산하면 연간 29억 5천9백만 원 손실 발생 추정
- 경상북도 총 단수건수는 1,508건으로, 이중 비공지단수가 317건을 차지. 또한 동파계량기수도 781건에 이르는 것으로 상수관 노후화에서 기인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유수율	88.7%	95.1%	92.2%	91.9%	88.8%	85.1%	91.3%	89.0%	74.2%
누수율	11.1%	2.5%	4.0%	4.7%	6.7%	10.6%	5.7%	7.8%	23.5%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유수율	88.3%	67.1%	83.5%	77.8%	68.2%	67.0%	68.5%	72.9%	43.2%
누수율	6.8%	21.1%	11.5%	16.3%	22.1%	26.1%	24.7%	20.4%	43.0%

표 14-10

전국 시·도
상수도 누수율
현황 비교
(2014년 기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 「지방노후상수도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수립」, 2016.9. p.492 표 인용

사용연수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20년 미만	20-25년 미만	25년 이상
연장(총 연장대비 비율)	4,213	3,025	2,796	2,210	4,147
	-19.40%	-13.90%	-12.90%	-10.20%	-19.10%

표 14-11

경북지역
상수관로 경년별
현황(2015년
기준)

자료: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자료 가공

- 경상북도 내 상수도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70건에서 2007년 52건으로 줄었을 뿐 2008년 69건, 2009년 78건, 2010년 104건 등 꾸준히 증가
- 그러나 지방비 부족으로 인해 노후 상수관 교체를 포기하는 지자체가 증가
- 더욱 큰 문제는 국가 산업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공업용수도 노후로 인해(포스코 260t/일 공급하는 포항공업용수도는 설치 후 40년 이상 경과) 단수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

14. 경상북도

- 경북도 하수관로는 총 12,757km 전체 하수관로 중 사용년수 20년 이상인 노후 26.1%(약 3,329km), 하수관로 노후도가 높아 도로 함몰 사고 발생
 - 토지 면적이 넓은 경북의 경우 3,329km로, 대구에 비해 노후 하수관이 4배 이상 많음. 긴급 교체·보수가 요구되는 곳은 201km에 이룸
 - 하수관로 파손 시 빗물 등으로 관로 상부 토양이 유실되어 동공 발생, 이 동공으로 인해 지반침하 초래
 - (2017.2) 안동시 풍산읍 직경 1m, 깊이1m의 싱크홀 발생, 노후 관로로 인한 것으로 추정
 - (2016.5) 경산 와촌에서 깊이 4~5m, 너비 4m 가량의 싱크홀이 발생
 - (2016.3) 경주 조양마을 길이 1.5m, 깊이 2m 싱크홀이 발생, 평상 시 차량 통행 많은 지역으로 자칫 대형사고로의 가능성 존재

④ 그 외 환경기초시설, 가스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등

- 환경기초시설 확충 시급
 - 환경오염 배출시설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의 동반 증가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1,059개소로 전년 대비 309개소가 증가
 - 게다가 불법배출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오염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
 - 실제, 하천 중 특히 낙동강 본류를 따라 오염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필요
- 원전 밀집지역 가스시설 내진설계 필요
 - 경북 도시가스배관 내진 설계 58.5%
 -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스 배관은 총 43,062 km로, 이 중 47.1%가 내진설계 되어 있지 않음.
 - 경북은 도시가스 배관 중 58.5%가 내진설계되어 타 광역도에 비해 미흡
 - 타 광역도 내진설계율: 경남 59.8%, 충남 76.1%, 충북 64.3%, 제주 100%, 강원 59.5%
 - 가스시설 중 저장탱크의 내진설계는 69.3%
- 노인 복지시설 확충 필요
 - 경상북도는 2020년에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전망
 - 경상북도 인구 중 17.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 16개 시군은 이미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
 - 2020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
-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 증가
- 경상북도 내 전체 학교 건물 6,362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은 13.9%(889동)으로 40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은 경북이 889개로 전국 최고
 - 안동 125개, 경주 120개, 포항 106개 순으로 도시에 집중
 - '전국학교 내진설계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 관내 내진적용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
- 인구감소에 따른 잉여시설의 재활용 필요(폐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폐교 시설의 재활용 필요
 - 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다수의 잉여시설이 발생
 - 특히 폐교의 경우,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폐교를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문화, 생산, 교육, 여가시설로 리모델링)
- 결과적으로 경북도의 중점 추진 분야 및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으며 인프라 부족 및 노후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유형	분야	추진 과제
도시	주택	• 노후 주택 및 낙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복지	•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응한 한계시설 재활용 및 시설확충
환경/재해	재해	• 지진 대응 인프라 확충
	재난	• 환경오염에 대한 자생정화능력 제고를 위한 위한 환경복원
	상하수도	• 노후 시설의 개선
물류	공항	• 공항 인프라 확충
	도로/철도	• 국토 동서축 및 경북 내 도시네트워크 확대를 기간망 확충
산업	첨단산업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형 산업으로의 구조개편 (원자력, 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등)

표 14-12

경북도의 중점
추진 분야 및
과제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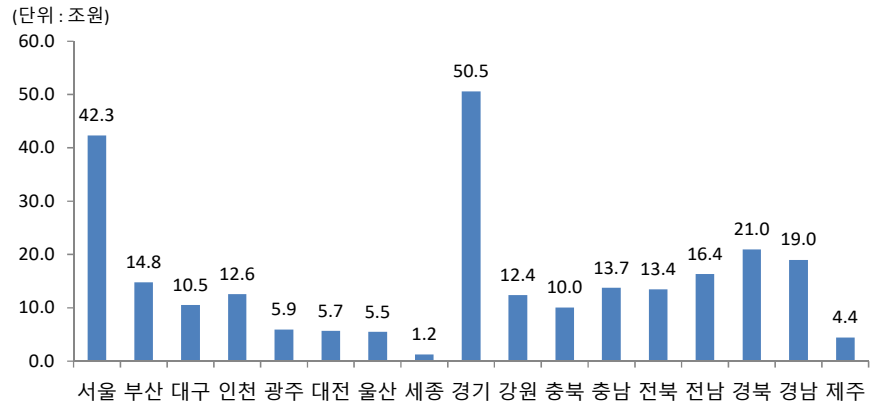
경상북도

5. 지역 인프라 투자현황 진단

- 2017년 경북의 예산 지출 규모는 21.0조원으로, 경기와 서울 다음인 세 번째로 큰 규모임.

그림 14-9

2017년 전국 시도별 세출 예산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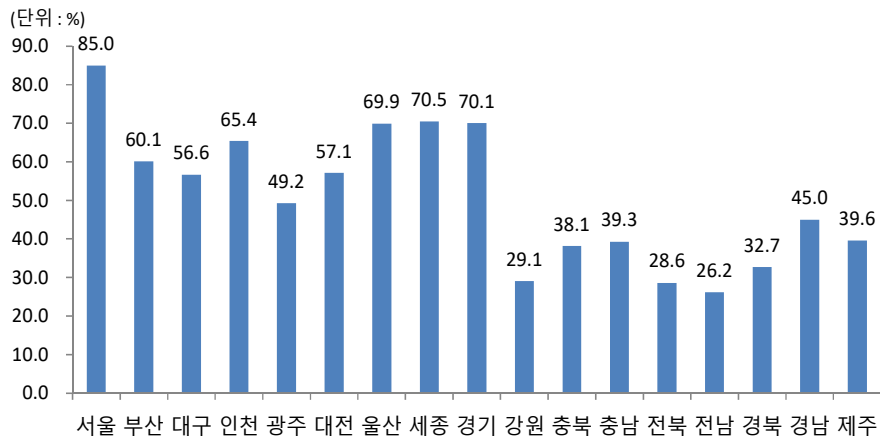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주: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 2017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경북의 경우 32.7%임.
- 같은 기준으로 지난 2015년에 30.0%였던 것이 개선되어 2017년에 32.7%를 기록함.
- 비록 예전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이 되고, 강원, 전북, 전남 보다 자립도가 높지만 다른 광역도와 비교해 볼 때 재정 여건은 좋지 않은 편임.

그림 14-10

2017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비교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주: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

- 경북의 예산을 6가지 지출 항목으로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의 증가, ② 문화 관광 및 환경 예산의 증가임.
 - 비록 2017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지난 10여년 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 예산이 과거 수준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2008년 2.6조원이었는데 금액이 매년 0.1~0.5조원 증액되어 2017년에는 5.6조원을 기록함.
 - 2013~15년 사이에는 매년 0.5조원씩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2017년 5.6조원은 2008년 수준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08년 20.4%에서 2015년 25.4%를 기록했고, 2015년 이후 부터 전체 예산의 1/4 정도 수준을 보임.

단위 : 조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12.0	13.4	14.7	15.4	16.7	17.7	18.5	19.3	20.7	21.0
행정 교육 안전 등	1.5	1.7	1.8	2.1	2.4	2.5	2.7	2.6	2.8	2.4
문화 관광 및 환경	2.1	2.4	2.7	2.9	3.2	3.4	3.3	3.5	3.9	4.0
사회복지 및 보건	2.6	3.0	3.4	3.5	3.7	4.2	4.7	5.2	5.5	5.6
농업 및 산업 등	1.9	2.2	2.5	2.5	2.7	2.8	2.9	3.0	3.2	3.3
SOC	2.1	2.3	2.5	2.5	2.6	2.7	2.6	2.6	2.9	3.0
과학 기술 및 기타	1.8	1.9	1.9	2.0	2.1	2.2	2.3	2.4	2.5	2.7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주: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 SOC 예산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증가한 정도가 크지 않음.
 - SOC 예산은 2008년 2.1조원에서 2017년 3.0조원으로 증가하였음.
 - 다른 항목들이 두배 정도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지 않음.
 - 2008~10년 매년 0.2조원씩 증가한 이후 2011-2015년 2.6조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2016년에 2.9조원, 2017년 3.0조원을 각각 기록함.
-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대략 10년간 항목별 예산 추이를 살펴본 결과 경북 지역의 지출 변화는 ①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의 증가, ② 문화 관광 및 환경 예산의 증가, ③ SOC 예산의 완만한 성장을 들 수 있음.

표 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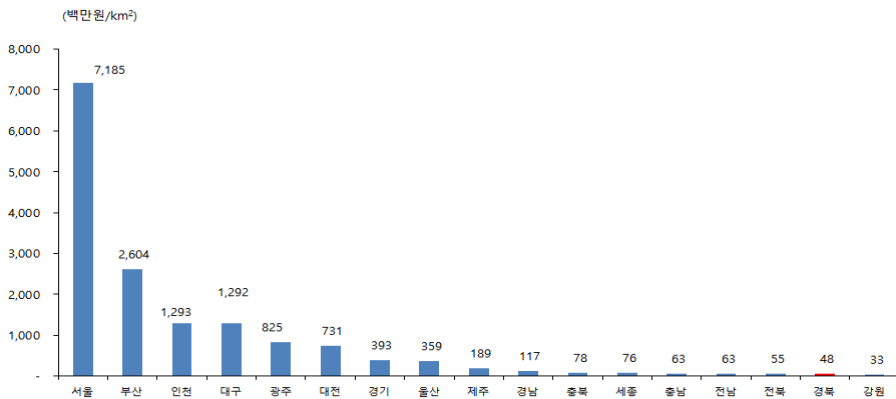
경북지역 지출
항목별 예산 변화
추이(2008~17)

14.

경상북도

- 과거 경북지역 SOC 예산은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양호
 - 과거 10년 간 인프라 예산의 증가율은 전국 시/도 중 상위권, 경북지역의 인프라 예산의 증가 이유는 신도청 이전 등 대형 사업 추진에 주로 기인
-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투자 불균형이 확인됨.
 - 물류흐름과 관련 있는 ‘수송 및 교통’ 예산을 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

그림 14-11
전국 시/도 면적 대비 ‘수송 및 교통’ 예산 비교 (최근 10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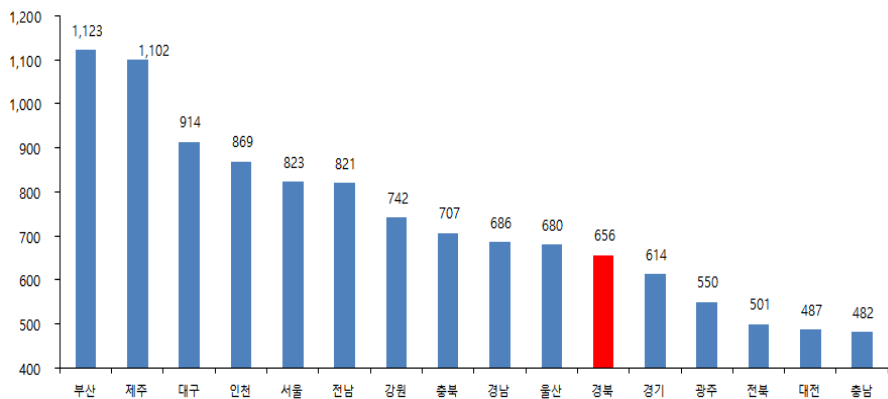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통계청 자료 통합 가공

- 경제활동인구 대비 ‘수송 및 교통’ 예산 역시 전국 여타 시/도에 비해 적은 상황

(백만원/천명)

그림 14-12
전국 시/도 경제활동 인구 대비 ‘수송 및 교통’ 예산 비교 (최근 10년 평균)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통계청 자료 통합 가공

- 인구 대비 '주택' 부문 예산 역시 전국 광역 도 중 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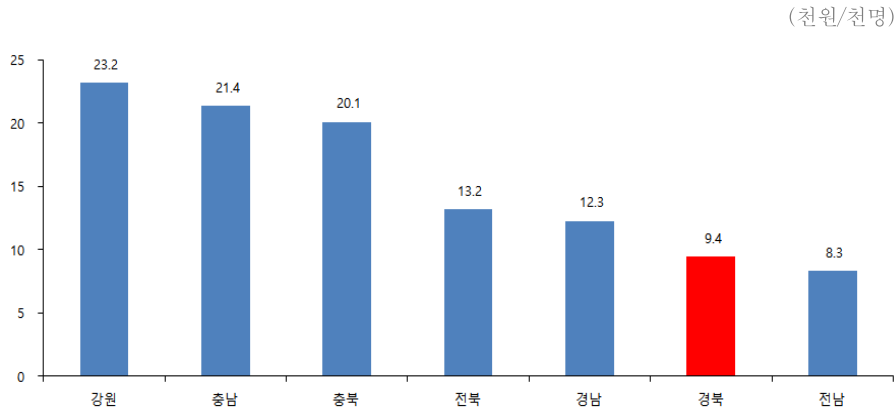


그림 14-13
전국 시/도 인구
대비 '주택' 예산
비교(최근 10년
평균)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및 통계청 자료 통합 가공

- 최근 10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SOC 예산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도청 이전 및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수요 및 지역 내 교통 및 물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 장기적으로 관광 수요 확보를 위한 환경과 관광 예산 투입으로, 2016년부터 신재생 에너지, 신사업 확보 등 경제와 관련된 사업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증가하고 있는 도내 교통 수요와 이전된 도청과 혁신도시와 연계성 및 도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SOC 자원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경북의 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투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 감소 등과 같이 자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내 산업 및 경제활동을 높여 젊은 인구 유입을 이끌 방안 또한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4.

경상북도

표 14-14

2015~17년 경북
재정운용 기본
투자 방향 및
주요 사업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 주민생활 안정 지원과 안전부문 지원 강화 - 재정운용 원칙 준수 및 재정의 건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 창조경제 확산으로 지역경제 성장기반 강화 - 예방적 안전강화와 맞춤형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 - 자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및 건전 재정원칙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개발로 성장기반 강화 -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도민 생활안정 - 재정운영의 책임성·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 확립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실현 신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투자 유치 확대 신성장 기반구축 ○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 농어촌 생활환경 기반조성 ○ 전통문화의 산업화 세계화로 문화융성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 실�크로드 문화대축전 문화관광 체육 인프라 조성 등 ○ 가가호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경복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생활 안정지원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추진 등 ○ 강산해를 활용한 경북 재창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안 발전 프로젝트 물산업 육성 산림생태자원 개발 등 ○ 신도청 시대 개막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인프라 확충 신도청 사업지원 안전분야 지원확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 실현 신성장 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등 ○ 본격적인 신도청 시대 개막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 인프라 확충, 신도청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적극 발굴 및 투자 ○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농어촌 기반조성을 통한 소득증대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가치 높은 첨단산업으로 육성 ○ 가가호호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경복'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추진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등 ·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 우선 실현을 통한 '안전경복'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재해위험시설 정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경제형 신산업신시장 창출로 성장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이타늄, 스마트기기 등 미래 창조형 과학산업 발굴육성 · 융합형 신산업 육성, 창업인프라 확충 등 창조경제 뒷받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와 균형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및 지역별 거점산업 육성 · 지속적 안정적 일자리 창출 ○ 주민소득 증대 및 안전관리 강화로 주민생활 안정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및 문화융성을 통한 소득증대 · 소방 등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수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의 안정적 정착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복지 전달체계 단순화 효율화
건설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도청 사업 -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조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기반조성 - 신도청 사업 지원 - SOC 인프라 확충 - 소방, 재해위험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형 신산업, 창업 인프라 확충 - 농어업 신성장 동력화 - 지역 거점산업 육성

자료: 경북도청 각 연도별 통합재정 개요

6. 지역 인프라 현황 및 투자수요에 대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주)리서치뱅크에 의뢰해 2018년 2월 22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
- 경북도 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거주인구수에 비례한 층화표본추출법의 형태로 표본프레임 구성 후 전화/방문조사의 형태로 응답결과를 수집(총 530명)

구분	응답자 수(명)	비중 (%)	지역	지역													인프라 유형	설문조사지 내 제시된 대표 시설물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의성	청송	포항 (남)		
전체	530	100	응답자수 (명)	53	29	34	87	22	21	21	14	56	2	10	5	물류 인프라	도로, 터널, 교량, 항만, 철도, 터미널, 주차장 등	
성별	남자	265	비중 (%)	10	55	64	164	42	40	40	26	106	04	19	09	산업 기반 인프라	산업/물류 단지, 발전소 등	
	여자	265	비중 (%)	10	55	64	164	42	40	40	26	106	04	19	09	환경, 재난 대응 인프라	환경개선시설, 안전시설, 재해 방지시설, 댐, 저수지 등	
연령별	20대	59	지역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포항 (남)	포항 (북)	주민 생활 인프라	공원/속지 관광시설, 문화/체육/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30대	170		32.1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포항 (남)			포항 (북)
	40대	184	34.7	응답자수 (명)	1	8	3	7	3	25	5	7	10	1	50	56		
	50대	86	16.2	비중 (%)	02	15	06	13	06	47	09	13	19	02	472	528		
60대	31	5.8	비중 (%)	02	15	06	13	06	47	09	13	19	02	472	528			

표 14-15

설문 샘플 구성 및 분포

설문 항목 내용 구분	조사 목적
지역여건에 대한 인식	- 경북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쇠퇴 경향 및 재난 발생가능성 등의 심각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 확인
지역발전과 관련한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지역 경쟁력 향상, 주민의 삶의 질 등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인프라가 가진 중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 확인
거주지역에 설치된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경북지역에 설치된 인프라의 성능, 용량, 편의성, 노후화 정도에 대한 인식만족도 확인
지역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인프라 투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 경북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적 징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인 - 경북지역의 위기 원인에 대한 인식 확인 -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 및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확인

표 14-16

설문 항목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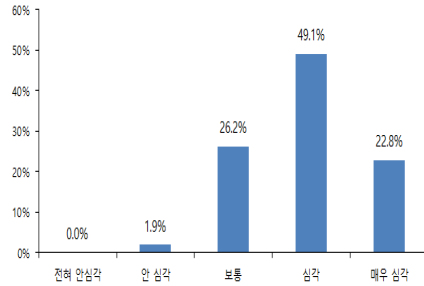
2) 지역여건에 대한 인식

- [지역 쇠퇴경향의 심각성] 응답자들 중 71.9%가 현재 경북도의 쇠퇴 경향이 심각하다고 응답
- [지역소멸 가능성의 심각성] 응답자들 중 61%의 응답자가 경북지역 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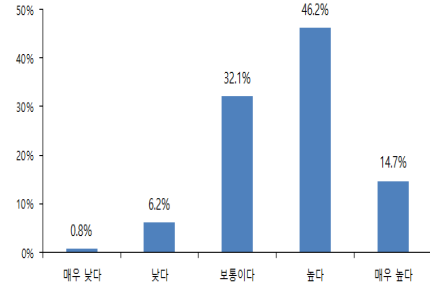
14.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쇠퇴 경향에 대한 우려 정도 -71.9%가 '심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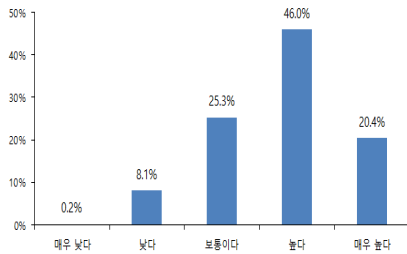


<지역소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정도 -61%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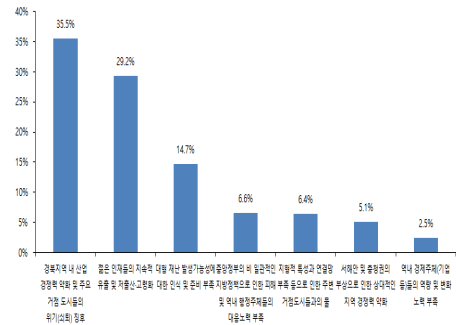


-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응답자들 중 66.4%의 응답자가 경북지역 내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경북지역의 위기 징후] 현재 경상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징후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역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주요 거점 도시들의 쇠퇴”가 가장 중요한 위기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젊은 인재유출과 인구고령화”, “대형 재난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준비부족”도 중요한 위기원인으로 지목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정도 -66.4%가 '높다'>



<경북지역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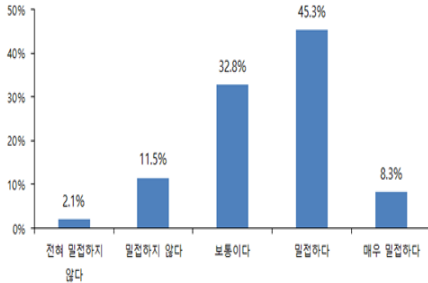


3) 인프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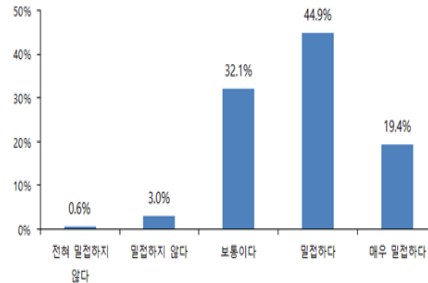
- [지역 경쟁력 향상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지역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53.6%가 역내 인프라와 지역 경쟁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주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4.3%가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지역 경쟁력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53.6%가 '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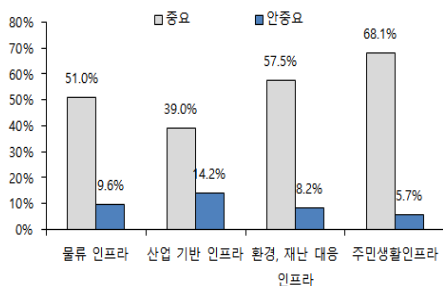
<주민 삶의 질과 인프라 사이의 관계
-64.3%가 '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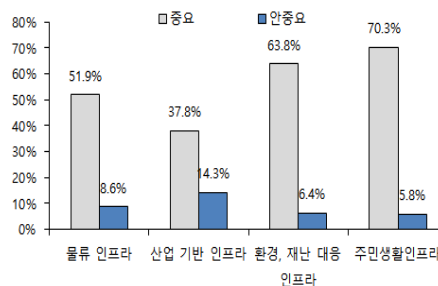
- [지역 경쟁력 측면에서 각 인프라 유형의 중요성] 앞 장에서 제시된 4개 인프라 유형(물류-산업-재해-주민생활공간)에 대응되는 경북지역 내 대표적인 시설물 들을 제시한 뒤, 이들 각 인프라 유형과 지역 경쟁력사이의 관련성을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들은 “주민생활 인프라 > 환경, 재난대응 인프라 > 물류 인프라 > 산업 기반 인프라”의 순으로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모든 인프라 유형에 대해 중요하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중이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비중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인프라 유형별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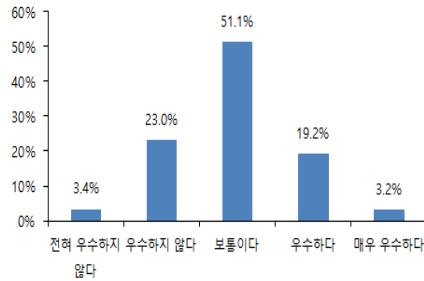
<주민 삶 향상 측면에서 인프라 유형별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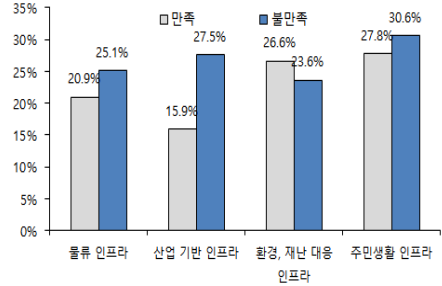
4) 역내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 [역내 인프라의 성능에 대한 인식]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역내 인프라가 가진 기능, 편의성 등 전반적인 성능에 대해 응답자들의 26.4%는 불만족
 - 인프라 유형별 성능에 대해 “만족”(“만족” 또는 “매우 만족”)의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과 “불만족”(“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환경, 재난 대응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프라 유형에서 불만족의 상대적 비중이 높음.

<인프라 성능 - 응답자의 26.4%가 '불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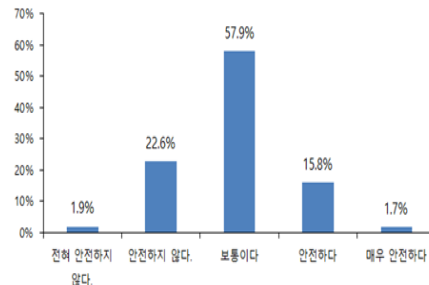


<인프라 유형별 성능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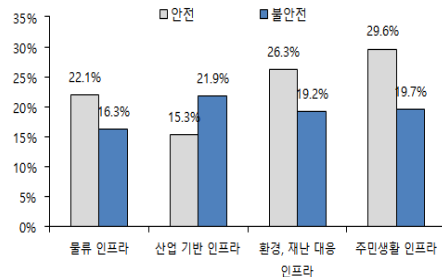


- [인프라 노후화(안전성) 정도에 대한 인식] 역내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안전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의 17.5%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반면, 24.5%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
 - 인프라 유형별로 “안전”(“안전” 또는 “매우 안전”)의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과 “불안전”(“안전하지 않음” 또는 “매우 안전하지 않음”)의 의사를 표시한 응답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 기반 인프라에 대한 상대적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인프라 안전성 - 응답자의 24.5%가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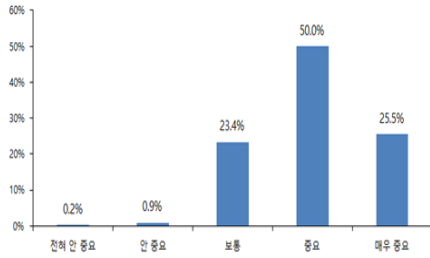
<인프라 유형별 안전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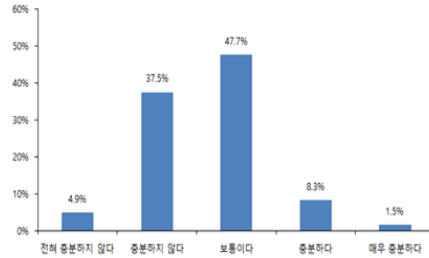
5) 역내 인프라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 [역내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응답자들의 75.5%가 현재 경북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중요하다고 응답
- [역내 인프라 투자의 충분성] 현재 경북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 수준의 충분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의 42.5%가 “불충분”, “매우 불충분”으로 응답함으로써, 현재 경북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프라 투자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

<지역 쇠퇴 억제 관련 인프라 투자 중요성 - 응답자의 75.5%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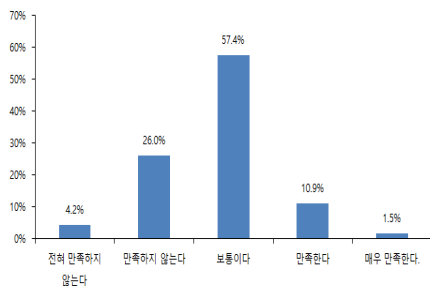


<역내 인프라 투자 충분성- 응답자의 42.5%가 '불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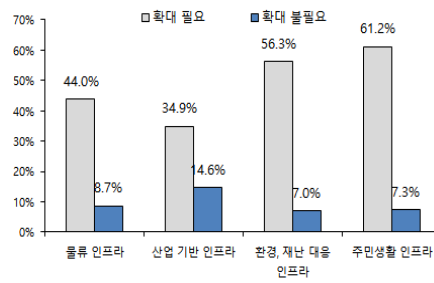


- [역내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0.2%가 “매우 불만족”, “불만족”으로 응답한 반면, “만족”,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12.5%로 나타나,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상대적 불만도가 큰 것으로 판단
- [인프라 유형별 투자 확대 필요성] 주민생활 인프라와 환경, 재난대응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 수요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판단

<역내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만족도>



<인프라 유형별 투자 확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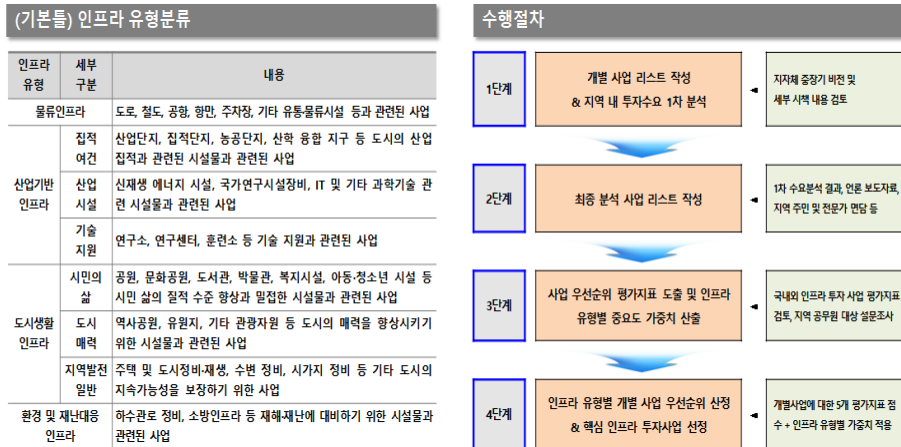
7. 경북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결과 및 정책 개선 과제

1) 개요

- 경북지역의 현실에 비춰 반드시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이 본 연구의 수행목적
 - 경북지역의 인프라 현황에 대한 진단 결과에서 지역쇠퇴를 억제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지역 내 정주환경 차원에서 기본적인 시설인 인프라의 신규 확충 뿐 만 아니라 기존 인프라에 대한 개선 필요성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산업여건 차원에서도 지역소득 창출 및 기업체 유치 등을 위해서 노후화된 인프라 시설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

그림 14-14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수행 절차



2) 지역 내 인프라 투자수요 1차 분석

- 경상북도 내 하위 지자체들의 비전 및 추진전략, 그리고 경상북도 권역별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인프라 관련 사업의 개수를 토대로 한 인프라 투자수요 1차 분석결과에서는 “산업기반 인프라(38.0%) > 주민생활 인프라(34.8%) > 물류 인프라(14.1%) >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13.0%)” 순(順)으로 나타남.

구분	인프라 투자수요(총괄)				
	물류	산업기반	환경 및 재해재난	주민생활	소계
지자체 비전 및 추진전략 (경상북도 23개 지자체)	2.2%	39.1%	8.7%	50.0%	100%
미래 대응과제 및 핵심사업 (경상북도 권역별 정책협의회)	26.1%	37.0%	17.4%	19.6%	100%
평균	14.1%	38.0%	13.0%	34.8%	100%

표 14-17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 수요 분석 결과(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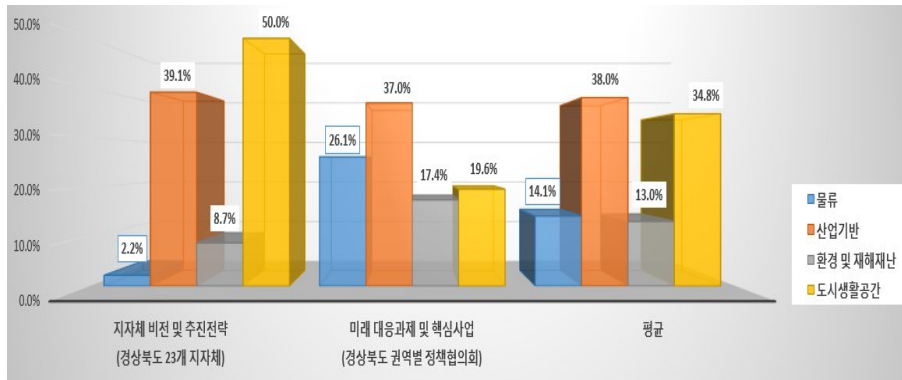


그림 14-15

경북지역 지자체 인프라 투자수요 요약

3)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 및 가중치 도출

- 경북지역 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투자수요의 발굴과 관련해 객관적이면서도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를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로 도출함.
 - 인프라 투자사업 관련 각국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평가지표 사례분석을 토대로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5개)을 도출
 - 평가지표(5개)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점(5점 척도)을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정
 - 설문조사 결과를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5개)별 가중치 부여를 통해 개별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산정

그림 14-16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지표 가중치 도출 방법

1) 우선순위 평가지표(5개) 도출

▪ 인프라 투자사업 관련 각국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평가지표 사례분석을 토대로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우선순위 평가기준(5개)을 도출

항목	평가지표 비교					평가지표(안)			
	한국	일본	영국	독일	관련성	시급성	광범위성	연계성	실현 가능성
정책성(임관성, 정합성)	○	○			●			●	
실행 가능성	○	○					●		●
경제성(ROI)	○	○	○	○			●		●
재원조달 가능성	○						●		●
환경성 (환경영향평가)	○	○	○	○	●				●
지역적 파급효과	○	○					●	●	
안전성		○	○			●			●
접근성			○			●			●
통합 연계성			○					●	
공간영향평가				○	●				●
기술적 난이도		○			●				●

2) 우선순위 평가지표(5개)별 가중치 산정(설문조사 방식 채택)

▪ 평가지표(5개)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점(5점 척도)을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가중치를 산정

순위	세부 기준	배점	평가(배점 부여)항목
1	인프라 투자 목표와의 직접적 관련성	4-5	- 해당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제4장에서 제시된 인프라 투자 목표의 달성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2	지역 현상을 고려한 시급성	4-5	- 지역 발전, 지역 간 격차 해소, 지역주민 안전 확보, 지역 사회속도 향상 등의 관점에서 시급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높은 점수 부여
3	투자효과의 광범위성	4-5	- 투자 규모에 비해 주민 복지 향상,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경제적/비경제적 효과가 큰 경우에 높은 점수 부여
4	범국가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4-5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범 국가 발전전략에 해당 인프라 투자가 부합할 경우 높은 점수 부여
5	예산제약 등을 고려한 정책적 실현가능성	4-5	- 중앙정부, 정치권, 지역주민의 니즈 등을 고려할 때 빠르게 사업수립 및 실행이 가능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배점계		5-25	

▪ 설문조사 결과를 평균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5개)별 가중치 부여를 통해 개별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산정

인프라 유형 구분	인프라 투자 목표와의 직접적 관련성	지역 현상을 고려한 시급성	투자 효과의 광범위성	범국가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예산제약 등을 고려한 정책적 실현 가능성	합계 점수	
주민생활 인프라	주민의 삶	3.45	3.30	3.32	3.29	2.91	16.27
	정주 매력	3.61	3.46	3.18	3.09	2.89	16.23
	지역 발전	3.80	3.68	3.20	3.27	3.11	17.06
물류 인프라		3.46	3.29	3.23	3.45	2.93	16.36
산업기반 인프라	일자리	3.70	3.50	3.20	3.27	2.84	16.50
	산업 시설	3.63	3.55	3.23	3.36	2.84	16.61
	기술 지원	3.64	3.45	3.30	3.16	2.84	16.39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2.83	3.63	2.96	3.36	2.96	15.86

4) 핵심인프라 투자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산출 결과

- 산정된 가중치를 토대로 68개 핵심 인프라 투자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투자사업군은 크게 주민생활 인프라, 물류인프라, 산업인프라,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로 구분가능

표 14-18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사업군 1 (주민생활 인프라, 물류인프라)

인프라 유형 구분		핵심 인프라 투자 사업
주민 생활 인프라	주민의 삶	1. 지역 문화콘텐츠 세계화 2. 신 관광! 역사문화 디지털 융합 밸리 3. 도전형 인재 양성 및 기반 조성 4. 낙동강 중부 고대문화권 광역관광개발 5. 국립 문화재 보수용 목재 전문건조장 건립 6. 고도전통문화자원화 사업 7. 경북도립역사박물관건립 8. 경북의 혼 한국 정신의 창 9. 신라 차(茶)문화 융성사업 10. 대한민국 '미래정신' 확산
	정주 매력	1. 산림문화 및 치유밸리 조성 2. 한반도 산림자원 랜드마크 조성 3. 고부가가치 문화관광 기반조성 4. ICT기반 스마트 스포츠도시 육성 5. 대도시권 레포츠산업벨트 조성 6. 낙동 리버프론트 어메니티 구축 7. 한반도 고을문화 재창조 8. 울릉 행남등대 스카이힐링로드 조성 9. 영덕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지역 발전	1. 현장형 인재양성 및 기반조성 2. 혁신도시 지능형 인프라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청년농 육성사업 4. 도청신도시 건설사업 5. 해저지열 활용 그린에너지 타운 6. 쇠퇴하는 원도심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7. 국립 동해해양생물자원관 유치
물류 인프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2. 국도28호선~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3. 지방도916호선~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4. 동서내륙철도망 전개 5. 포항~안동간 도로 4차로 확장 6. 대구광역철도 연장 7.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건설 8. 국가기간 도로망 확충

표 14-18(계속)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사업군 1
(주민생활 인프라,
물류인프라)

인프라 유형 구분		핵심 인프라 투자 사업
산업기반 인프라	집적 여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2. 국가 과수 선진화 특화단지 조성 3. 의농 특화산업 추진 4. 질병 없는 스마트 축산 기반 강화 5. ICT 농축산업 글로벌 프로젝트 6. 해양에너지 특화 융·복합단지 7. 도청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8. 고강도 알루미늄 융합 신산업 기반 확충 9. 해양바이오 수소개발 및 시범단지
	산업 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속기 신산업클러스터 조성 2. 스마트기기산업 육성 3. 사물인터넷기반 신산업 육성 4.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소재 육성 5. 세포배양산업기반 구축 6. 미래형 제조혁신 4.0 선도프로젝트 7. 원자력 안전·해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8. 환동해 해양자원 산업클러스터 9. 경북 미래농생명산업 육성
	기술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해안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2. 글로벌 백신산업의 메카 3. 경량 알루미늄산업 육성 4. 탄소 융합소재 · 부품 벨트 5. 스마트 농기계 전장부품산업 육성 6. 항공기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7. K-뷰티·휴먼라이프 산업수출 거점 구축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튼튼한 내일, 국가재난안전 클러스터 2.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3. IoT 플랫폼 기반 통합안전 테스트베드 구축 4. 국가정원 유치 5. 건강한 생태도시 구축 6. 국가 고압훈련원·기술센터 유치 7. 지진 특화 연구기관 조성 8. 생명이 숨쉬는 헬시리버 프로젝트 9. 문수지맥 트레킹길 조성

표 14-19

경북지역 인프라
투자사업군 2
(산업인프라,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 또한 이들 사업 외에 지역 현실에 비춰 추진이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아래 8가지를 발굴

부문	신규사업 목록
물류 인프라	1. 도로포장 확대사업
	2. 교량성능 보강사업
	3. 항만활성화 사업
	4. 노후도로 및 관련 구조물 유지보수 사업
환경 및 재난대응 인프라	5. 노후상수도 개선사업
	6. 노후 하수도 개선사업
산업기반 인프라	7.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
주민생활 인프라	8.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

- 이들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17개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부문	우선추진 필요사업
주민생활 부문	1. 낙동강-동해안 연계 관광·해양 레포츠 벨트 조성
	2. 백두대간 산림 관광/치유벨트 조성
	3. 주거낙후지역 도시재생(영주/김천/안동 등)
환경재난 부문	4.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유치
	5. 노후상하수 관로 정비
	6. 낙동강 주변 소하천 정비 및 낙동강 등 수변생태복원
물류 부문	7.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및 관련 인프라(도로망) 확충
	8. 대구광역철도 구미-경산 연장
	9. 도청신도시 주변도로 연결망 확충
	10. (포항↔삼척) / (청송↔영양) / (상주↔영천) / (보령↔울진) / (새만금↔포항) / (무주↔영천) 등 내부 기간도로망 확충
산업기반 부문	11.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2. 원자력 안전/해체산업 클러스터 조성
	13. 농생명산업(동식물, 화장품, 의약품 등) 클러스터
	14. 노후산단(구미/안동 등) 재생
신규 (추가발굴)	15. 노후도로 개선
	16. 노후교량 성능 보강
	17. 노후 학교시설 보강 및 타 목적으로의 리모델링

8. 경북지역 핵심 인프라 투자사업 실행을 위한 정책 과제

- 중앙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통 및 물류 부문의 투자확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지역의 핵심적 사안
 - 정부의 SOC 예산 축소 시 지자체의 SOC 사업을 위축하는 부정적 연쇄효과가 불가피
 -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서는 SOC 재정투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에 적용되는 방법론과 기본 가정들에 대한 정기적 개선 필요
 - 경제성분석 기간의 결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 설문 대상의 범위 등은 예비타당성조사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항목들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또는 검증 절차가 부재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지수를 측정하고, 성능이 미달되는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상향식 투자 의사결정 방식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투자재원 확대
 - 지역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 지원 확대
 - 지역 인프라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의 효율화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 활성화
 - 민간투자 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 민간투자 목표예산 사전배분 절차 도입 및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사전에 꾸준히 고시

-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관련 법 이행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 및 자원 조달의 실효성 확보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사업에 민자 사업 활성화 유도
 - 시설물 안전 및 성능개선 사업에 지자체 예산의 우선 배정
-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주적 투자재원 마련
-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 TIF) 도입 검토: 노후도심지와 같이 공공이 지원이 없으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역에서 재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
 - 저소득층주택 세금감면 프로그램(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도입 검토: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해 민간부문이 대량의 임대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공사비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 계약목적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적정 수준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 광역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앞 다퉈 제정·운영 중이며, 17개 광역 지자체 외에 고양시 등 기초 지자체 40여 곳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 조례 제정
 - 경기 등 일부 광역 시·도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는 반면, 대다수 시·도에선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행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음.
 - 지역 실정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며, 대표적인 지역 건설산업 보호제도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와 공공공사 분할발주 확대 등이 있음.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하는 등 조례 내용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제15장 경상남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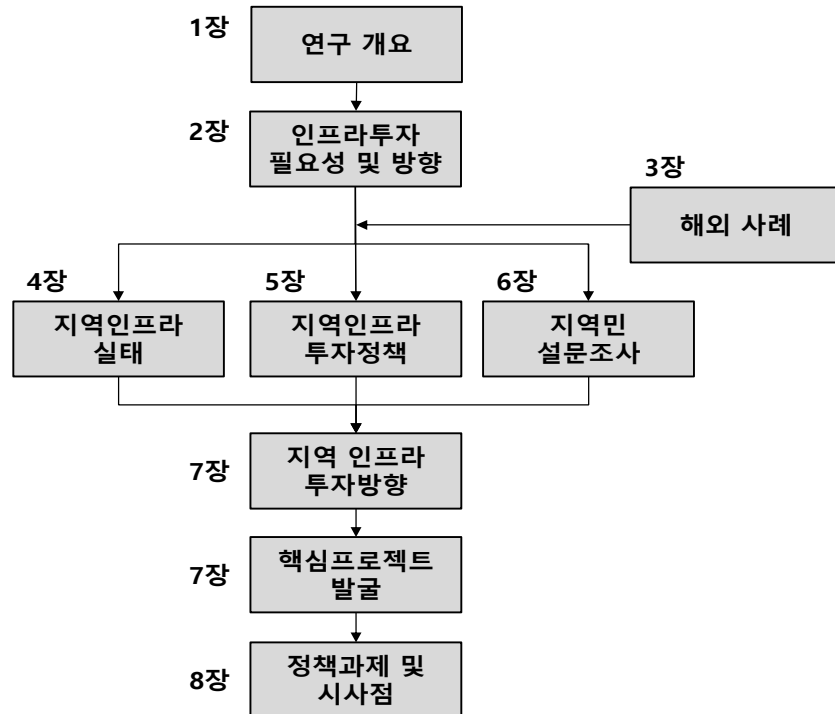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2018년 SOC 예산은 2017년 22.1조원보다 14% 감소한 19조원으로,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201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약 25조원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감안할 때 최근 SOC 투자 축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 SOC 투자의 과도한 축소는 경제성장 기반 약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국민의 생활 안전 위협과 복지 수준 하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SOC 예산 축소와 인프라 노후화의 가속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경상남도 지역도 예외일 수 없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남도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와 관련 정책 진단을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임.
 - 지역 내 인프라 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 투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도민의 인프라 수요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와 핵심 인프라 사업 분석
 - 경상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및 노후 인프라 투자 전략과 정책 방향의 제시
- 본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은 공

동으로 경상남도 지역의 인프라 실태 조사, 투자 수요 이해, 핵심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본 연구는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 및 방향(2장), 해외 사례(3장), 지역 인프라 실태(4장), 지역 인프라 투자정책(5장), 지역민 설문조사(6장), 지역 인프라 투자방향과 핵심사업(7장), 정책 제언 및 시사점(8장)으로 구성됨.

그림 15-1
연구 보고서의
체계



2. 지역발전과 인프라

- 경상남도의 인구성장률은 2015년 0.69%로 전국 평균인 0.63%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2030년 이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경상남도의 고령화지수는 2015년 기준 92.8로 전국 평균인 93.0과 유사한 수준이나,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45년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약 10.0% 높아질 전망

- 2015년 기준으로 경상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04.0조원이며, 제조업이 43.2%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5.7%로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상남도의 GRDP 성장률은 0.4%로 전국 평균 2.8%에 비해 매우 낮으며, 연도별 추이를 보아도 성장률이 감소세에 있음.
-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은 교통 인프라와 같은 사회 기반시설과 산업 및 경제시설 등이 있으며 두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음.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산업 및 경제시설 유치의 근간이 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라는 직접적인 결과를 유인함.
- 지역내총생산(GRDP)의 증가는 인구 증가와 맞물려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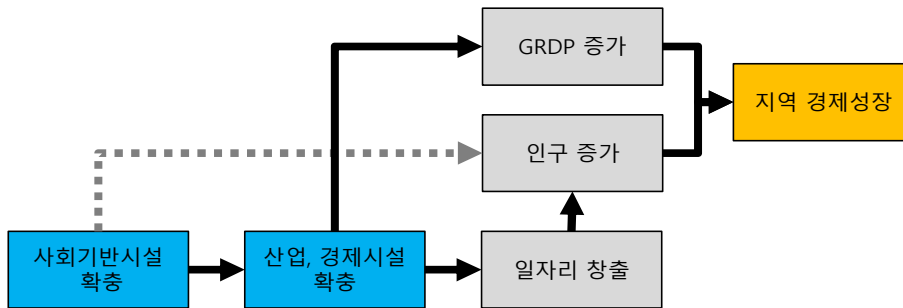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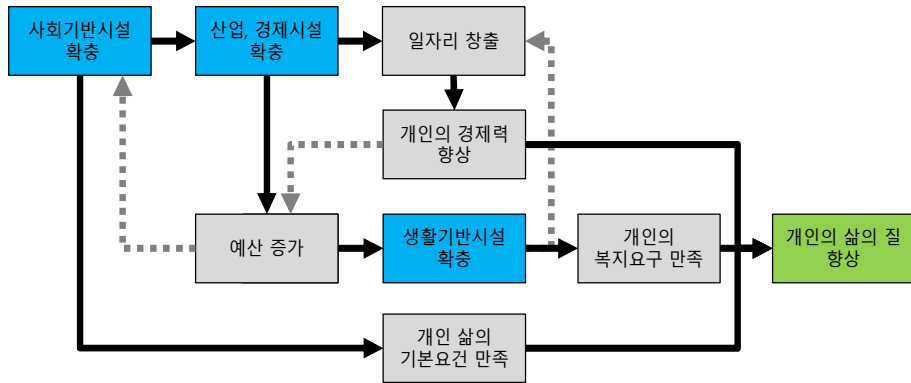
그림 15-2
경제성장과
인프라의 관계

- 개인의 삶의 질은 기본요건 만족, 경제력 향상, 복지요구 만족 등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인프라 시설 확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짐.
- 교통, 상하수도, 재해방지 시설 등은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주는 인프라 시설물임.
- 산업 및 경제시설의 확충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증가, 그리고 이로 인한 개인의 경제력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됨. 또한 문화, 체육, 의료 시설 등은 개인의 복지 요구를 만족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게 됨.

15. 경상남도

그림 15-3

인프라와 삶의 질과의 관계



3. 지역 인프라 실태분석

○ 교통시설

- 도로시설: 2016년 기준 경상남도 도로 총연장 길이는 1만 2,532km, 도로 교량 3,812개, 도로 터널 245개로 집계됨.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등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4차로 이상 도로 비율(경남 27.1%, 전국 31.0%)과 포장률(경남 89.9%, 전국 92.4%)은 미흡한 실정임.

- 철도시설: 총 8개 노선(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6개, 도시철도 1개)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타 지역에 비해 철도시설의 인프라 제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현황		노후화 정도	위험도	
	전체	1·2종	20년 이상	C등급	D·E등급
도로 교량(개)	3,812	880	208(23.6%)	50(5.7%)	-
도로 터널(개)	245	205	22(10.7%)	6(2.5%)	-

○ 물관리시설

- 상수도: 2015년 기준 경상남도 수도관 총연장은 1만 6,676km이며, 급수보급률은 99.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함. 하지만 노후화로 인한 유수율 73.6% (전국 평균 84.3%)와 누수율 19.9%(전국 평균 10.9%)는 개선이 시급함.

- 하수도: 2015년 기준 경상남도 하수관로 보급률 81.9%는 전국 평균(79.9%)과 유사하나, 공공하수처리 인구보급률(경남 88.6%, 전국 92.9%)과 하수도 설치율(경남 72.5%, 전국 74.2%)은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함.
- 하천(제방 포함): 경상남도에는 10개 국가하천과 671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총연장 길이 4,178.47km로 전국 하천의 13.83%에 해당함. 하지만 홍수로 인한 피해가 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수율이 42.82%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함.
- 댐과 저수지: 경상남도 내 댐은 총 62개, 저수지는 3,080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은 각각 83.6%, 94.0%로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구분	현황		노후화 정도	위험도	
	전체	1·2종	20년 이상	C등급	D·E등급
상수도관(km)	16,675	-	6,354(38.1%)	4개(4.2%)	-
하수도관(km)	15,323	-	4,267(34.0%)	-	-
하천시설(개)	-	1,135	664(58.5%)	24(2.1%)	-
댐(개)	62	55	46(83.6%)	38(69.1%)	-
저수지(개)	3,080	651	618(94.0%)	-	-

○ 주거 및 교육시설, 산업 및 경제시설

- 주거시설: 2016년 기준 경상남도 총 가구 수는 9만 8,899호이며 주택보급률은 100% 이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하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시설이 전체의 약 42.2%이며, 특히 단독주택의 81.8%가 30년이 넘은 노후 주거시설로 분석됨.
- 교육시설: 2017년 기준 경상남도 학교시설은 총 1,686개교로 집계됨. 이 중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약 67.8%이며, 50년 이상 된 시설물도 약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단지: 경상남도 내 산업단지는 2017년 기준으로 총 208개(일반산업단 116

개, 농공단지 81개, 국가산단 10개, 도시첨단단지 1개)로 조사됨. 노후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은 총 63개로 약 30.3% 수준으로 분석됨.

구분	현황		노후화 정도 20년 이상	위험도	
	전체	1·2종		C등급	D·E등급
주거시설(호)	98,899	-	64,917(65.6%)	-	-
교육시설(개)	1,686	-	1,143(67.8%)	161(9.5%)	-
산업단지	208	-	63(30.3%)	-	-

○ 기타 시설

- 문화시설: 2017년 기준 경상남도 내 총 문화시설은 193개로 집계되며,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57.79개로 전국 8위에 해당함.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문화시설은 약 37.8%를 차지함.
- 체육시설: 경상남도 체육시설은 2016년 기준 116개로 집계되며,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은 38개소로 약 3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현황		노후화 정도 20년 이상	위험도	
	전체	1·2종		C등급	D·E등급
문화시설(개)	193	-	73(37.8%)	-	-
체육시설(개)	116	-	38(33.0%)	-	-

4.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시설별 투자 계획

- 2018년 이후 경상남도의 주요 인프라 시설 개선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액은 7조 6,774억원임.
 - 시설물 유형별로는 교통시설 1조 3,453억원, 물관리시설 2조 6,329억원, 주거/교육시설 2조 3,060억원, 산업/경제시설 1조 3,277억원, 기타시설 655억원 규모임.

- 재원별로는 국비 2조 5,135억원, 도비 2조 2,217억원, 시군비 1조 791억원, 민자 1조 8,632억원이 필요함.
- 도비 중에서 교육청 예산 9,743억원을 제외한 경상남도 자체 투입 예산 규모는 1조 2,474억원으로 판단됨.
- 세부 시설물별로는 하천시설(1조 4,875억원), 도시재생(1조 3,317억원), 산업단지(1조 3,277억원), 도로시설(9,746억원), 교육시설(9,743억원), 하수도(8,745억원) 개선에 대한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큼.

구분	투자기간	투자비 소요(2018년 이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교통시설	도로시설	5년	9,746	1,459	2,526	5,761	-
	항만시설	5년	3,707	3,006	200	501	-
	소계		13,453	4,465	2,726	6,262	-
물관리 시설	상수도	5년	1,369	684.5	-	684.5	-
	하수도	5년	8,745	8,130	615	-	-
	하천	10년	14,875	6,856	6,240	1,779	-
	수리시설	5년	1,340	-	1,340	-	-
	소계		26,329	15,671	8,195	2,464	-
주거/교육 시설	도시재생	5년	13,317	3,926	941	-	8,450
	교육시설	5년	9,743	-	9,743	-	-
	소계		23,060	3,926	10,684	-	8,450
산업/경제 시설	산업단지	9년	13,277	803	262	2,030	10,182
	소계		13,277	803	262	2,030	10,182
기타시설	체육시설	5년	250	-	250	-	-
	의료시설	5년	405	270	100	35	-
	소계		655	270	350	35	-
합계(교육시설 포함)			76,774	25,135	22,217	10,791	18,632
합계(교육시설 제외)			67,031	25,135	12,474	10,791	18,632

표 15-1

경상남도 시설
확충 및 개선
투자비 전망

5. 설문조사 분석

- 경상남도 내 14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중요도,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중요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능 수준이 떨어지고 노후화 정도가 심하며 이에 따른 안전도 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의료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공원/녹지, 교

15.

경상남도

15.

경상남도

육시설로 평가됨.

- 성능 수준은 재해방지시설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항만시설, 철도, 댐 및 저수지,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도 보통 이하(5점 척도에 3점 미만)로 평가됨.
- 노후도 및 안전도에서는 재해방지시설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나, 중요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표 15-2

인프라 시설물
응답 결과

구분	평균	도로	터널	교량	항만시설
중요도	3.74	3.94	3.44	3.48	3.32
성능 수준	3.03	3.08	3.13	3.11	2.99
안전도	3.15	3.15	3.13	3.14	3.03
구분	철도	상수도	하수도	재해방지시설	댐 및 저수지
중요도	3.70	3.80	3.77	3.80	3.30
성능 수준	2.92	3.22	3.17	2.65	2.99
안전도	3.21	3.20	3.13	2.97	3.04
구분	교육시설	산업/물류시설	문화/복지/ 체육시설	의료시설	공원/녹지
중요도	4.04	3.62	4.04	4.07	4.04
성능 수준	3.13	3.01	2.91	2.91	3.24
안전도	3.27	3.04	3.26	3.13	3.35

- 경상남도민의 수요가 가장 높은 신규 인프라 사업(4사분면)은 의료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재해방지시설로 분석됨.
- 다음으로 공원/녹지, 교육시설, 주거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그룹(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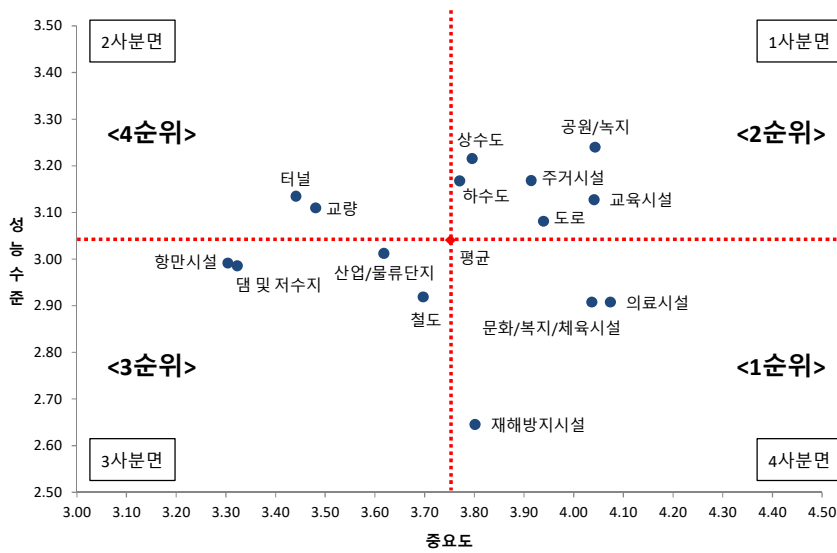


그림 15-4
중요도-성능수준
분석 결과

- 수요가 가장 높은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4사분면)은 재해방지시설, 의료시설, 주거시설, 하수도로 분석됨.
- 다음으로 공원/녹지, 교육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도로, 상수도 그룹(1사분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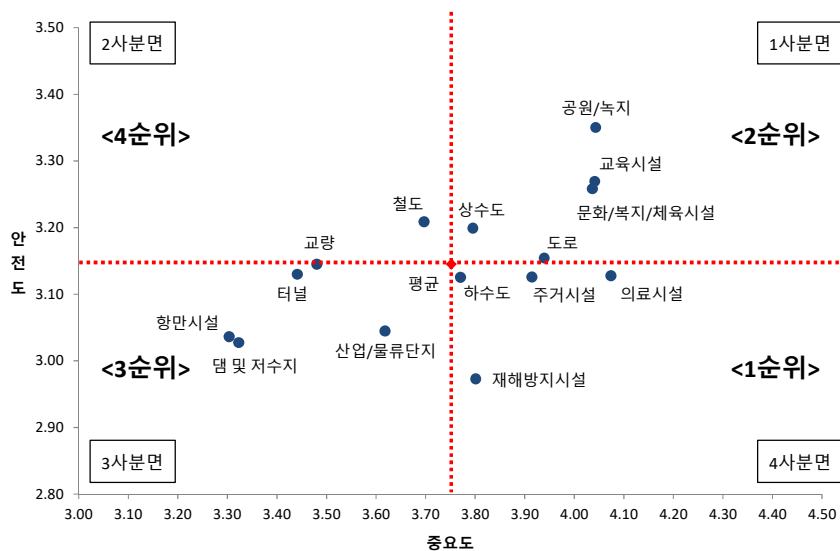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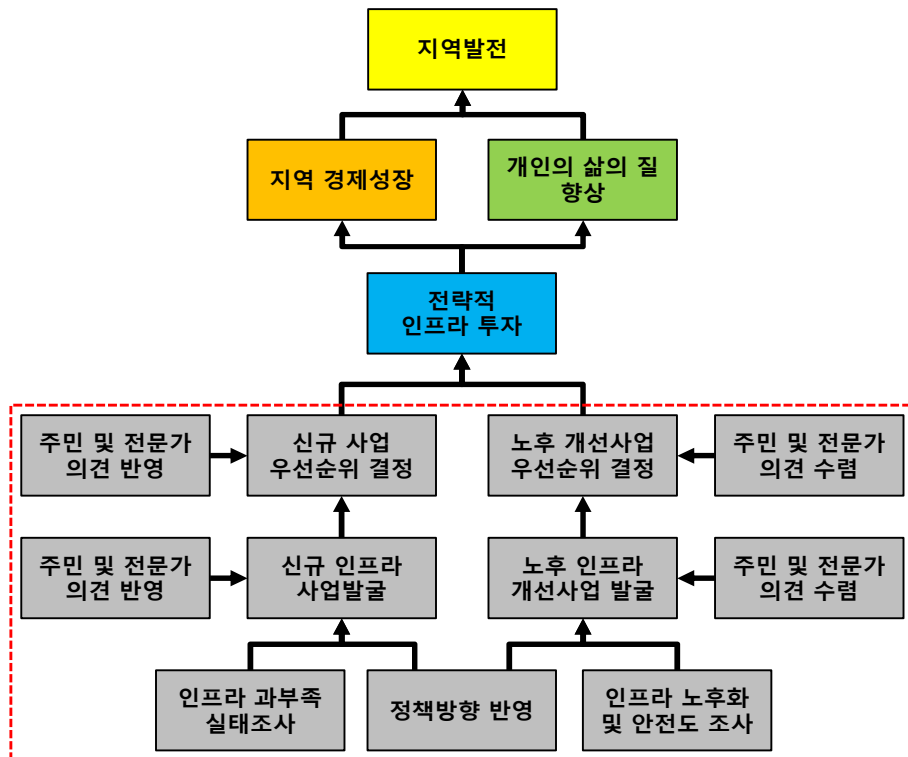
그림 15-5
중요도-안전도
분석 결과

6. 인프라 투자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1) 인프라 투자방향

-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없기에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전략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
 - 경상남도 인프라 투자는 지역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경상남도 인프라 투자 방향은 실태조사, 정책 방향,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 필요함.

그림 15-6
인프라 투자 기본
방향



2)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 교통시설

- 교통시설은 총 46개 사업, 9조 7,624억원 규모임. 신규 인프라 사업이 30개, 9조 6,06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철도사업이 6조 2,969억원, 도로사업이 3조 666억원임.
 - 단일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사업(4조 6,562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8,251억원)이 가장 큰 규모임.

(단위: 억원, 개)

구분	인프라 사업		신규 인프라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도로	30,666	32	29,214	20	2	1,452	12	2
교량	46	1	-	-	4	46	1	3
터널	1	1	-	-	4	1	1	3
철도	62,979	4	62,979	4	3	-	-	4
항만시설	3,876	6	3,876	6	3	-	-	3
주차장	56	2	-	-	-	56	2	-
계	97,624	46	96,069	30	-	1,555	16	-

표 15-3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교통시설)

○ 물관리시설

- 물관리시설은 총 34개 사업, 2,531억원 규모이며, 모두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분류됨.
 - 단일 사업으로는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489억원)이 가장 큰 규모임.

(단위: 억원, 개)

구분	인프라 사업		신규 인프라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상수도	118	6	-	-	2	118	6	2
하수도	1,186	8	-	-	2	1,186	8	1
하천시설	804	12	-	-	1	804	12	1
댐	-	-	-	-	3	-	-	3
수리시설	423	8	-	-	3	423	8	3
계	2,531	34	-	-	-	2,531	34	-

표 15-4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물관리시설)

15.

경상남도

○ 주거/교육시설

- 주거시설은 총 26개 사업, 2조 2,023억원 규모이며, 이 중 6개 뉴딜사업이 1조 3,317억원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함.

- 단일 사업으로는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사업(1조 1,041억원)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임.

(단위: 억원, 개)

표 15-5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주거/교육시설)

구분	인프라 사업		신규 인프라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주거시설	22,023	26	8,104	2	2	13,919	24	1
교육시설	-	-	-	-	2	-	-	2
계	22,023	26	8,104	2	-	13,919	24	-

○ 산업/경제시설

- 산업/경제시설은 총 16개 사업, 3조 2,339억원 규모이며, 신규 산업단지외 관련된 사업이 3조 2,14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대규모 단일 사업으로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1조 8,350억원)과 항공MRO 사업(5,689억원)이 있음.

(단위: 억원, 개)

표 15-6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산업/경제시설)

구분	인프라 사업		신규 인프라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산업단지	32,143	10	32,143	10	3	-	-	3
전통시장	196	6	-	-	-	196	6	-
계	32,339	16	32,143	10	-	196	6	-

○ 기타시설

- 기타시설은 총 40개 사업, 4,335억원 규모이며, 문화시설과 공원/녹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단일 사업으로는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980억원)과 독봉산 시민가족 공원 조성사업(977억원)이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임.

(단위: 억원, 개)

구분	인프라 사업		신규 인프라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사업비	사업수	우선순위
문화시설	1,785	21	1,505	5	1	280	16	2
체육시설	320	5	274	3	1	46	2	2
의료시설	625	1	-	-	1	625	1	1
공원/녹지	1,482	6	1,217	2	2	265	4	2
기타시설	123	7	-	-	-	123	7	-
계	4,335	40	2,996	10	-	1,339	30	-

표 15-7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기타시설)

- 조사된 경상남도 핵심 프로젝트는 총 162개 사업, 15조 8,852억원 규모임.
- 이 중 신규 사업은 52개, 13조 9,312억원이며,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은 110개 사업, 1조 9,540억원 규모임.

(단위: 억원, 개)

구분	인프라 사업		신규 인프라 사업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교통시설	97,624	46	96,069	30	1,555	16
물관리시설	2,531	34	-	-	2,531	34
주거/교육시설	22,023	26	8,104	2	13,919	24
산업/경제시설	32,339	16	32,143	10	196	6
기타시설	4,335	40	2,996	10	1,339	30
총계	158,852	162	139,312	52	19,540	110

표 15-8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체
규모

- 52개 신규 인프라 사업 중 도로 7개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계획 단계로 분석됨. 이에 사업을 조속히 구체화시키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단위: 억원, 개)

구분	진행 단계별				
	계	계획	예산 확보	설계	설계 완료
교통시설	96,069(30)	90,668(23)	-	4,395(5)	1,006(2)
물관리시설	-	-	-	-	-
주거시설	8,104(2)	8,104(2)	-	-	-
산업/경제시설	42,150(10)	45,150(10)	-	-	-
기타시설	2,996(10)	2,996(10)	-	-	-
합계	149,319(52)	142,866(45)	-	4,395(5)	1,006(2)

표 15-9

신규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15.

경상남도

- 110개 노후 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74개 사업이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계획 단계로 분석됨.

(단위: 억원, 개)

표 15-10

노후 인프라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진행 단계별				
	계	계획	예산 확보	설계	설계 완료
교통시설	1,555(16)	1,128(8)	131(3)	296(5)	-
물관리시설	2,531(34)	1,462(27)	1(1)	1,068(6)	-
주거시설	13,919(24)	434(13)	13,359(9)	126(2)	-
산업/경제시설	196(6)	94(2)	32(3)	70(1)	-
기타시설	1,339(30)	1,255(24)	28(4)	56(2)	-
합계	19,540(110)	4,373(74)	13,551(20)	1,616(16)	-

7. 정책제언 및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정비를 위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가 필요함.
 -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확보 노력 필요
 -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및 주민요구 대응능력 제고도 필요함.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 이한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채 발행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국가발전과 지역개발 공동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 후 계약 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추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와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의 협력 사업인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간투자 추진대상 사업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 꾸준한 규모로 적정 수준의 정부고시사업 추진이 필요함.
 - 부족한 SOC 투자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함.

- 인프라 투자 대상 발굴과 추진 과정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투자 관리 조직 확보
 - 경상남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인프라 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주무부처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진단에 근거한 개량·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제안(2017.11.15)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추진이 필요함(서울, 부산, 대구, 전남은 기 제정).

-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중소 건설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관리 역량 강화와 지역별 맞춤형 기술력 확보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함(ex. ‘지역강소기업인증제도’ 등과 같은 맞춤 지원 프로그램).
 - ‘공동도급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하여 지역 중소 건설업의 실질적인 시공 참여를 유도하는 내실 있는 보호·육성 정책 운영이 필요함.

별첨 1. 시·군·구·별 신규 핵심 프로젝트

○ 교통시설

- 고속국도 신규사업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사업비(억원)	사업 유형	단계
밀양~진례	남북5축 지선	18.6	7,970	신설(신공항, 신항)	계획
부산신항~김해	남북5축 지선	14.6	8,251	신설(신공항, 신항)	계획
창원~진영	남해선	7.5	744	확장(혼잡 개선)	계획
칠원~창원	남해선	12.4	2,635	확장(혼잡 개선)	계획
김해공항~대동	중앙선	8.7	1,921	확장(혼잡 개선)	계획
합계		61.8	21,521		

- 국도 신규사업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사업비(억원)	사업 유형	시군	단계
국도14호선	사등~장평	12.0	793	6차로 확장	거제	설계
국도20호선	단성~시천	2.8	385	4차로 확장	산청	설계
국도58호선	삼랑리~미전리	3.1	313	4차로 확장	밀양	설계완료
국도20호선	의령~합천	15.0	360	2차로 시설개량	의령 합천	설계
국도20호선	창녕~고암	8.2	693	2차로 시설개량	창녕	설계완료
국도59호선	산청 우회	0.9	156	2차로 시설개량	산청	계획
국도79호선	군북~가야	8.3	558	2차로 시설개량	함안	설계
합계		50.3	3,258			

- 국가지원지방도로 신규사업

노선명	구간명	연장(km)	사업비(억원)	사업 유형	시군	단계
국지도58호선	송정IC~문동	5.8	2,299	4차로 신설	거제	설계
국지도30호선	밀양무안~신법	5.9	237	2차로 시설개량	밀양	계획
국지도30호선	밀양신법~동산	7.2	340	2차로 시설개량	밀양	계획
국지도58호선	사천곤양~서포	6.1	234	2차로 시설개량	사천	계획
국지도58호선	사천곤양~곤명	7.1	284	2차로 시설개량	사천	계획
국지도60호선	양산신기~유산	0.2	359	4차로 시설개량	양산	계획
국지도60호선	함안~의령	8.1	499	2차로 시설개량	함안 의령	계획
국지도60호선	산청~금서	3.2	183	2차로 시설개량	산청	계획
합계		43.6	4,435			

- 남부 내륙철도 사업

사업명	연장(km)	사업비(억원)	주요 내용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건설	414	46,562	중부내륙권과 연결하는 산업 기간 구축, 서부 경남의 성장 축 확보

- 철도 신규사업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 내용	연장(km)	총사업비(억원)	재원 부담		비고
					국비	지방비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 ~부전마산선	단선전철 (연결선)	4.4	1,502	1,502	-	신규 추진
양산울산 광역철도	양산~울산 (신복)	복선전철 (광역철도)	41.2	12,753	8,927	3,826	추가 검토
마산신항 선	마산~마산 신항	단선철도	12.5	2,162	2,162	-	추가 검토
합계			58.1	16,417	12,591	3,826	

- 무역항 신규사업

항만	주요 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삼천포항	해양공원보도교, 연료하역부두 등 4개 사업	1,664	2017~20
통영.진해항	수산자원조사선 부두, 방파제 연장 등 6개 사업	689	2017~20
장승포·옥포항	장승포항 개발, 옥포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	172	2017~20
합계		2,525	

- 항만 신규사업

항만	주요 사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하동항	1단계: 2만톤 부두 1선석, 항로준설, 진입도로 350m 2단계: 2만톤 부두 2선석, 관리부두 1선석 등	1,351	2017~25
진촌항 (통영)	지방어항 → 지방관리 연안항 지정 노후화된 차도선부두 및 여객터미널의 시설 개선	미정	2018년부터 추진 예정
저구항 (거제)	지방어항 → 지방관리 연안항 지정 노후화된 차도선부두 및 여객터미널의 시설 개선	미정	2018년부터 추진 예정

○ 주거시설

- 도시개발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억원)	주요 내용
마산재생 프로젝트	2009~23	4,098	마산포 르네상스,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통해 마산지역 활력 회복
진주부흥 프로젝트	2007~26	4,006	초전신도심 개발, 서부청사 건립, 혁신도시 활성화로 서부경남 균형 발전
합계		8,104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억원)	주요 내용
항공산업 국가산단	2011~20	3,398	2020년 항공산업 세계 7위 달성,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허브로 도약
나노융합 국가산단	2007~20	3,209	나노융합 연구기관 유치, 생산거점 구축을 통해 국가 창조산업 선도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2013~20	18,350	조선해양 세계 1위 유지를 위한 해양플랜트 특화 생산단지 조성
항공MRO사업	2018~27	5,689	항공 MRO(항공기 정비수리)단지 조성
합계		30,646	

- 일반사업단지 신규사업

구분	산업단지명	사업 기간	사업 규모 (만㎡)	사업비 (억원)	시행자
민간	합천군 서부일반산업단지	2015~20	330	4,298	SPC설립
	창원시 평성일반산업단지	2015~23	690	2,968	SPC설립
공공	산청 한방향노화 산업단지	2014~18	16	174	경남개발공사
	함양 인산죽염 향노화 특화단지	2016~19	23	217	경남개발공사
	양산 의료중심 가산산업단지	2012~20	67	2,682	경남개발공사
	고성군 항공부품 일반산업단지	2017~20	10	1,165	공영개발
합계			1,136	11,504	

○ 기타시설

- 문화 및 공원시설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	-	980	진주	계획
김종영 미술관 및 조각공원 조성	2016~20	200	창원	계획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014~19	138	김해	계획
거제 시립해양미술관 건립	2015~20	91	거제	계획
거제 시립박물관 건립	2015~20	96	거제	계획
홍남철수 기념공원 조성	2015~21	240	거제	계획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	2014~21	977	거제	계획
합계		1,505		

- 체육시설 신규사업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복합스포츠투레저시설 조성	2006~21	-	진주	계획
진영스포츠텐터 건립	2016~19	156	창원	계획
장승포운동장 조성	2012~18	118	김해	계획
합계		274		

별첨 2. 시설물별 노후 인프라 개선 핵심 프로젝트

○ 교통시설

- 노후도로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밤밭고개로 선형개량)	30	창원	설계
남포IC연결도로 확장사업	160	창원	설계
명정동 도로 개설	40	통영	계획
항남동 도로 개설	88	통영	계획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0	사천	설계
쾌적한 도로조성으로 살고 싶은 도시건설	80	김해	예산 확보
옥포 성안로 특화거리 조성사업	30	거제	설계
산인운곡~칠서회산 도로선형 개량공사	29	함안	계획
안전한 도로시설 유지·관리	44	함안	계획
군북~가야(국도79호선)도로 확·포장	905	함안	계획
군계획시설물 관리 및 친환경정비사업	4	함양	계획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 개선	12	합천	계획
합계	1,452		

- 기타 노후 교통시설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구지터널 가야전통기와 설치사업	0.8	김해	예산 확보
교량 개선	46	밀양	설계
시외버스터미널 뒤 공영주차장	50	거제	예산 확보
여항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6	함안	계획
합계	102.8		

○ 물관리시설

- 노후상수도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1	사천	예산 확보
지방상수도 개량 및 확장사업	13	함안	계획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12	고성	계획
광역마을상수도(유림지구) 설치사업	61	함양	계획
마을상수도 운영 및 정비사업	26	함양	계획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5	함양	계획
합계	118		

- 노후 하수도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마을하수도 정비	26	사천	계획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사업	76	사천	설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27	사천	설계
분뇨전(前)처리시설 개·보수	3	사천	계획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보수	1	사천	계획
거제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299	거제	설계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89	거제	설계
장승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65	거제	계획
합계	1,186		

- 노후 하천시설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사파 소하천 정비사업	30	창원	계획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240	진주	계획
장포 방조제 개·보수사업	10	사천	계획
시례 소하천 정비사업	61	김해	계획
원당 소하천 정비사업	25	김해	계획
선무동 소하천 정비사업	14	김해	계획
둔덕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	170	거제	계획
소하천 정비사업	44	함안	계획
국가하천 유지관리	9	함안	계획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17	함안	계획
윤외 소하천 정비공사	152	함안	계획
양포 소하천 정비공사	32	함안	계획
합계	804		

- 노후 수리시설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제2정수장 배수지확장사업	176	진주	계획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145	사천	설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0	사천	계획
한바다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5	함안	계획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2	고성	설계
남음정수장	10	남해	계획
내진보강공사	3	남해	계획
사방댐, 산지사방 등 정비사업	12	남해	계획
합계	423		

○ 주거시설

- 도시재생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문화관광·해양산업 Hub조성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뉴딜사업)	11,041	통영	예산 확보
삼천포 구항 재생 프로젝트 '바다마실, 삼천포애 빠지다'(뉴딜사업)	577	사천	예산 확보
포용과 화합의 무계(뉴딜사업)	463	김해	예산 확보
밀양 원도심, 밀양의 열을 짓다(뉴딜사업)	409	밀양	예산 확보
1만4천 피란살이 장승포 휴먼다큐(뉴딜사업)	512	거제	예산 확보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뉴딜사업)	315	하동	예산 확보
블라썸 여좌사업	60	창원	계획
도심재생 창조경제권역 구축사업	91	함안	계획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7	함안	계획
가곡동 도시재생	84	밀양	계획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예구지구)	97	거제	설계
합계	13,656		

- 기타 노후 주거시설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시영 임대아파트시설 개선사업	3	통영	예산 확보
명정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24	통영	계획
2018 신규 새뜰마을사업	30	김해	계획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4	김해	예산 확보
농촌 주거환경 개선	1	함안	계획
새뜰마을(농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54	함안	계획
주거환경 개선사업	28	고성	계획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지원	4	의령	계획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35	함양	예산 확보
서민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18	밀양	계획
완월지구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 프로젝트	29	창원	설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	창녕	계획
살기 좋은 주거환경개선	32	의령	계획
합계	263		

○ 산업/경제시설

- 노후 전통시장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전통시장 환경개선 시설 현대화사업	1	통영	예산 확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3	김해	예산 확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사업	28	밀양	계획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6	고성	계획
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28	진주	예산 확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70	진주	설계
합계	196		

- 노후 문화시설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시민문화회관 등 5개 문화시설 유지관리	-	통영	계획
김해천문대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2	김해	예산 확보
김해문화원 노후시설 리모델링사업	4	김해	예산 확보
청마기념관 등 5개 문화시설 유지관리	-	거제	계획
농촌 커뮤니티 재생루트 구축사업	20	함안	계획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39	함안	계획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증축	119	함안	계획
공룡박물관 운영	3	고성	계획
남해국제탈공연예술촌 정비사업	-	남해	계획
보물섬 마늘나라 정비사업	1	남해	계획
나비생태공원 정비사업	7	남해	계획
영상테마파크 노후·위험시설 정비사업	2	합천	계획
마을회관 건립	3	김해	계획
지역복지를 선도하는 복지관 정비사업	33	거제	계획
마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46	창원	설계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 제고	1	거제	계획
합계	280		

- 노후 체육 및 의료시설 개선방안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사천 종합운동장 등 2개 체육시설 유지관리	7	사천	예산 확보
거제종합운동장 리모델링	39	거제	계획
이책보건진료소 개·보수	625	합천	계획
합계	671		

- 노후 공원/녹지시설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205	진주	계획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35	진주	계획
공원시설물 정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20	함안	계획
연화산 도립공원 유지관리	5	고성	계획
합계	265		

- 노후 기타시설 개선사업

사업명	사업비(억원)	시군	단계
사천소방서 건립부지 조성사업	10	사천	설계
동상119안전센터 이전부지 조성사업	15	김해	예산 확보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41	고성	계획
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 문화 개선	5	거제	계획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7	함양	계획
기후변화 대응 비가림재배 확대	8	함양	계획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7	김해	계획
합계	123		

제16장 제주특별자치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

1.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인프라 실태에 대한 진단과 지역의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먼저 제주지역의 인프라 실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현재까지의 인프라 투자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 인프라에 대한 올바른 투자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추어 도시재생 및 노후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 유도 전략을 세우고자 함.
- 제주지역의 인프라 실태 분석과 미래상 제시로 지역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제주지역의 핵심 인프라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2. 제주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1) 일반 현황

- 제주 지역의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현재 67만 8,772명에 이르고 있음. 이는 2010년 57만 7,187명인 것과 비교해 볼 때 10만 1,585명이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2.3%가 증가함.
 - 국적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내국인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제주 지역 관광객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현재 1,475만 3,236명을 기록하고 있음.
- 산업별 종사자를 살펴보면, 건설업 종사자는 22,335명으로 제주 지역 내 전체 근로자의 8.6%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비슷한 수준이며 운수업 보다는 높은 수치임.

2) 제주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 제주 지역민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생활환경 부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 그 결과, 공해 환경과 관련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통 관련 만족도는 3점 초반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다음으로 안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교통사고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감은 5점 만점에 2.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폭력 범죄에 대한 안전감은 5점 만점에 2.8점, 성범죄에 대한 안전감은 5점 만점에 2.8점으로 조사되어 자연 재해나 화재에 대한 안전감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환경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생활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질, 대기 및 녹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점 가까이 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제주 지역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 중에서 요금으로 징수되는 유수율이 2015년 기준 44.5%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단수 및 누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상수관 노후화 이외에 생활 인프라 중에 하나인 의료기관 수 및 도시공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아도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함.
- 국토교통부는 2015년 제주시를 생활 인프라가 극히 취약한 ‘주거 취약지역 지구’로 선정함(특히, 용담1동 일원은 심각지역으로 분류)
- 종합해 보면, 제주 지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혹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관련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3. 해외 인프라 투자 정책 및 사례

- 국가별 인프라 투자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들어 국내와는 반대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음.
 - 미국은 경기 변동에 따라 SOC 투자에 대한 증감을 반복해 왔는데 2015년부터는 기존 인프라의 재건을 위해 다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임.
 -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악화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SOC 투자의 비중을 감소하다, 2013년 이후 다시 증가하였음.
 - 독일은 2014년에 SOC의 투자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6년 SOC 예산은 크게 증가하여 전체 예산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SOC 예산 비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도시의 다음과 같은 인프라 투자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국내 인프라 사업 발굴에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Norfolk)시와 포츠머스(Portsmouth)시 터널 프로젝트
 - 미국 워싱턴 D.C. 퍼플 라인(Purple Line) 프로젝트
 - 프랑스 파리 마세나(Zac Massena) 재개발 사업
 - 프랑스 파리 바티뇰(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 사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울름(Stuttgart-ULM) 철도 프로젝트

4. 제주지역 인프라 실태 진단

○ 교통·물류

- 타 지역이 철도, 고속도로, 국도, 항공, 항만, 지하철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제주지역의 교통수단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기상악화(폭설, 태풍 등)으로 인한 관리운영의 어려움과 대체 교통수단을 보유하지 못함.
 - 특히, 중산간 지역의 경우 동절기의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통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폭설 시, 제설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가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항공시설의 경우, 2015년을 기점으로 여객터미널의 물리적 수용력 규모(연간 2,547만 명)를 초과하였으며, 운항 횟수 또한 한계치(연간 17.2만회)에 이르는 상황으로 잦은 이착륙 연착(지연율 14.22%)이 발생하는 실정임.
- 항만 인프라도 열악한 상황임. 그러나 항만법상 1종항인 ‘제주항’, ‘서귀포항’의 노후화 및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협소성과 추가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함.
- 또한, 최근 유입인구 증가로 인하여 차량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음.

○ 산업·경제

- 제주지역 내 산업단지는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상·하수관로 등 기반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상황임.
-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발전시설 23개 중, 20개가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민간소유 발전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도차원의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조성이 미비한 실정임.
 - 특히, 관용 전기차량, 전기차 렌트카의 급격히 증가로 인해 충전시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공서 및 관광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등 개방형 충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문화·관광·교육

- 제주지역 내 문화·예술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은 대부분이 사립시설로서, 국공립 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교육시설의 경우, 사용연수 30년 이상의 건물이 전체 시설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시설물 안전평가 등급 미지정 건물이 36.8%로 나타남⁸²⁾에 따라 100㎡ 미만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평가의 실시가 필요한 실정임.

○ 주거·도시·환경

- 제주지역의 주택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부동산가격 급증으로 인하여 전·월세 거주자가 증가하는 등 주거 복지 측면의 질적 저하가 발생함.
- 제주지역 상·하수관로의 경우, 사용연수 15년 이상 관로가 전체 설치 연장 대비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향후 경년관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82) 교육부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100㎡미만 시설물은 등급 미지정

예측됨에 따라 유지관리 및 개·보수 관련 예산 확보계획의 검토가 필요함.

- 또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최근의 급격한 상주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수요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제주지역 내 전통시장은 동문시장, 민속오일장 등 일부 대규모 시장으로 이용객 및 관광객이 편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소규모 시장 규모가 축소되며 시설 노후화, 이용객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제주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약 68%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제주도 도심지역의 주거환경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 안전·치안

-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저류지 및 저수지와 같은 침수저감시설이 다수 조성되어 있으나, 태풍, 해일 등의 기상악화에 대비한 해안변 지역의 방재시설은 부족한 실정임.
- 제주지역은 최근 3년 연속 범죄-생활안전 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1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율이 153.62건으로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체류인구 상승에 따른 외국인 범죄발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과 제주지역의 안전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5. 제주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1) 인프라 투자 정책의 문제점

- 제주 지역은 SOC 투자 분야 ‘수송 및 교통’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축소시켜 왔음. 이러한 SOC 예산의 감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 지역의 예산 편성 기조가 사회복지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임. 즉, SOC 예산 감축은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송 및 교통 부문의 투자계획 부문과 실제 세출 예산 부문을 비교해 보면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100%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에만 100% 집행이 되었음. 한편, 2015년에는 80% 집행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후 9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의 투자계획 부문과 실제 세출 예산 부문을 비교해 보면 계획 대비 예산 집행이 100%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인프라 사업 추진의 문제점

○ 교통 및 물류

- 제주지역의 경우 인프라 중에서 도로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확충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가 용이하지 못함.
- 제주국제공항은 외부에서 제주지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항의 어려움이 있고, 급증하는 수요로 인해 신규 공급(제2공항 건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상업지역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노면주차로 인해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가 요원하고

교통사고 발생 및 안전지수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산업·경제

- 제주지역 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건립된 지 오래됨에 따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는 완제품을 도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지만 지역 내 풍력산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 생산 및 조립 등 풍력관련 인력 육성 및 연관 산업 강화가 필요함.

- 또한, 제주지역이 전기차 선도지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프라, 제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연관 산업 지원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화·관광·교육

- 문화시설의 경우 지역별 문화격차 및 시설이용의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지역 간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임.

- 교육시설의 경우 건립된 지 오래된 경우가 많고, 자연 및 사회 재난 시에 대피소의 역할을 함에 따라 복잡·다양화 되는 재난에 대응 가능하도록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 주거·도시·환경

- 제주지역 주택은 부동산가격 급증으로 인해 주거약자인 서민들의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급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한 주거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

- 또한, 제주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원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거 인프라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제주지역 상수도 유수율을 타 지역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함. 상수도의 사용

은 도민들뿐 아니라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사업비 지원이 절실함.

- 또한, 도민들과 관광객들로 인한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시설 등에 대한 용량 검토 및 인구증가 등을 고려한 공급 방안이 사전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최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오일장이나 전통시장의 화재에 대비해 시설 확충 및 주차장 확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지역 전통시장 이용이 가능해질 것임.

○ 안전·치안

- 기후변화로 인한 강풍, 폭설, 호우 등이 증가되고 있고, 중산간의 개발로 인해 하천으로의 유달 시간이 짧아지는 등 문제들이 나타남에 따라 하천변 방재시설의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안전지수가 낮고 교통사고 및 범죄 등의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셉티드 기법의 도입 및 도시 관리 차원의 범죄예방환경 조성에서 노력해가야 할 것임.

3) 인프라 관리를 위한 조례 마련 필요

- 제주 지역의 경우 인프라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노후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 제정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주 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주 지역 노후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법규의 제정이 필요함.'

6. 제주지역 투자 수요 분석

- 제주 지역민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6-1

설문조사의 개요

구분	내용
설문 목적	제주지역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 대상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설문 기간	2018년 2월 22일 ~ 3월 12일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1) 설문 결과 요약

-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주 도민은 인프라 시설이 지역 경쟁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공감하였으며, 향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도 높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인프라가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현재 지역 내 인프라의 성능 수준 및 노후도/안전도는 ‘보통’이라고 응답함.
 - 먼저, 성능 수준은 주차장(2.5)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산업/물류단지(2.6), 재해방지시설(2.7), 터널(2.8), 환경개선시설(2.8), 댐 및 저수지(2.8), 교량(2.9), 의료시설(2.9)이 2점대의 평가를 받음.
 - 지역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로는 공항(4.3)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주차장(4.1), 환경개선시설(4.1), 교육시설(4.1), 안전시설(4.1), 의료시설(4.1), 도로(4.0), 공원/녹지(4.0), 관광시설(4.0), 문화/복지/체육시설(4.0)이 4점대의 평가를 받음.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프라 시설로는 의료시설(4.3)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 공항(4.2), 주차장(4.2) 및 안전시설(4.2)이 높게 평가되었음.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였음.
 -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인프라 시설로는 터널, 교량, 재해방지시설, 댐 및 저수지, 산업/물류단지, 발전소(2.9)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도로, 항만시설(3.0)이 뒤를 이었음.

- 마지막으로 투자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인프라 시설로는 주차장(4.2)이 꼽혔으며, 다음으로 공항(4.1), 환경개선시설(4.1), 의료시설(4.1), 재해방지시설(4.1), 문화/복지/체육시설(4.0), 안전시설(4.0)이 4점대의 평가를 받음.

2)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평가

-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는 노후도 및 안전도-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지역경쟁력, 노후도 및 안전도-투자순위 비교를 통해 도출하였음.
- 앞서 설문결과 요약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성능 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모든 시설물이 추가적으로 신규와 노후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단됨.
- 노후도 및 안전도-성능 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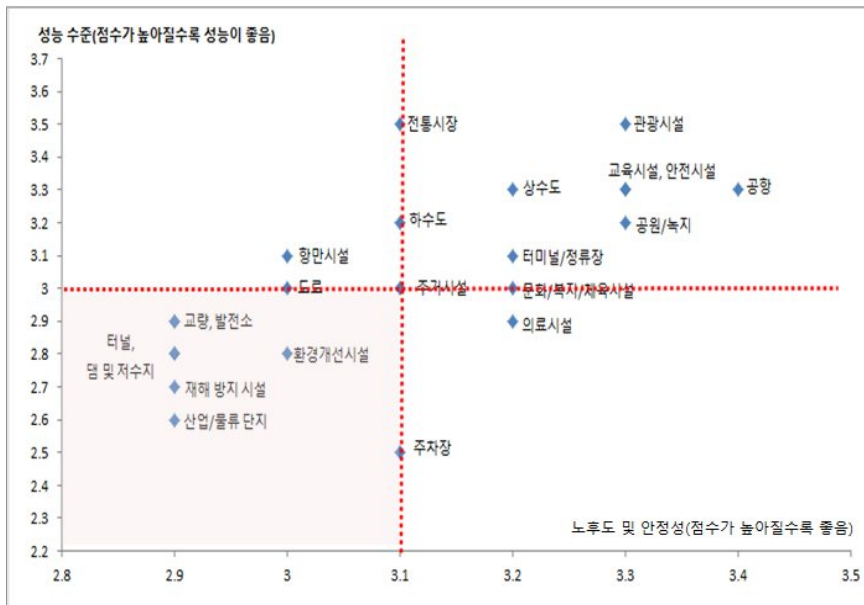


그림 16-1
주요 시설물의
노후도-성능수준

- 노후화가 덜 되고 성능 수준이 높은 시설물로는 공항, 관광시설, 교육시설, 안전시설, 상수도, 공원/녹지, 터미널/정류장이 속함.
- 노후화가 덜 되었지만 성능 수준이 낮은 시설물에는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이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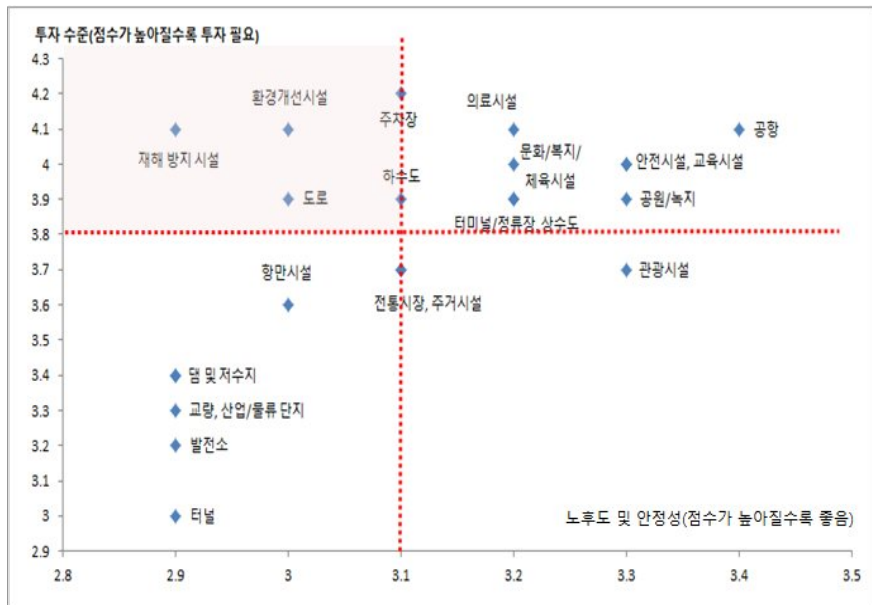
- 노후화 되었고 성능 수준도 낮은 시설물에는 교량, 발전소, 터널, 및 저수지, 재해방지시설, 산업/물류단지, 환경개선시설, 도로, 주거시설, 주차장이 속함.
- 노후화 되었지만 성능 수준이 높은 시설물에는 항만시설, 하수도, 전통시장이 속함.

- 노후화 및 안전도-투자 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후화가 덜 되었지만 투자가 필요한 시설물로는 공항, 교육시설, 안전시설, 공원/녹지, 터미널/정류장,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이 속함.
- 노후화가 덜 되었고 투자가 덜 필요한 시설물에는 관광시설이 속함.
- 노후화 되었지만 투자가 필요한 덜 시설물에는 전통시장, 주거시설, 항만시설, 댐 및 저수지, 교량, 산업/물류단지, 발전소, 터널이 속함.
- 노후화 되었고 투자가 필요한 시설물에는 주차장, 하수도, 환경개선시설, 재해방지시설, 도로가 속함.

그림 16-2

주요 시설물의 노후도-투자수준



- 노후화 및 안전도-지역 경쟁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후화가 덜 되었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시설물로는 공항, 교육시설, 안전시설, 의료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공원/녹지, 관광시설, 터미널/정류

장, 상수도가 속함.

- 노후화가 덜 되었지만 지역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화 되었고 상대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지 않는 시설물로는 항만시설, 산업/물류단지, 교량, 댐 및 저수지, 발전소, 터널, 전통시장이 속함.
- 노후화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시설물로는 재해방지시설, 도로, 환경개선시설, 하수도, 주거시설, 주차장이 속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시급이 개선되어야 할 노후 인프라로는 주차장, 하수도, 환경개선시설, 재해방지시설, 교량, 발전소, 터널, 댐 및 저수지, 산업/물류단지, 도로, 주거시설이 도출되었음. 특히, 도로, 주차장, 환경개선시설,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인프라로는 공항, 교육시설, 안전시설, 상수도, 공원/녹지, 터미널/정류장,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 관광시설이 도출되었음.

구분	세부 시설물
노후 인프라	주차장, 하수도, 환경개선시설, 재해방지시설, 교량, 발전소, 터널, 댐 및 저수지, 산업/물류단지, 도로, 주거시설
신규 인프라	공항, 교육시설, 안전시설, 상수도, 공원/녹지, 터미널/정류장, 문화/복지/체육시설, 의료시설, 관광시설

표 16-2

제주도 인프라 투자 분석 결과

7. 제주지역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와 정책 과제

1) 제주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기본방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발전 계획의 방향과 인프라 실태, 향후 지역의 경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를 위해 향후 제주 지역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

16.

제주도

- 첫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인프라 전략이 요구되어짐.
 -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 환경 개선 추진
 - 교통 분야 인프라의 전략적 투자로 지역경제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만성적인 교통체증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
 - 제주 스마트시티 조성, 제주전기차 특구 및 글로벌 플랫폼 조성 등은 문제인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함.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즉,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산업진흥 센터 등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적 롤 모델 구축 필요

- 셋째,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가 필요
 - 향후 인프라 투자에 있어 지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는 인프라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환경 인프라 확충 필요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재 인프라의 확충과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넷째, 지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
 - 지역민 특히, 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서민친화적인 도시 생활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선적으로 생활의 터전이 되는 주거시설 및 생활권 환경 정비가 필요

- 지역민들이 지역생활에 있어 필요로 하는 공공복지, 의료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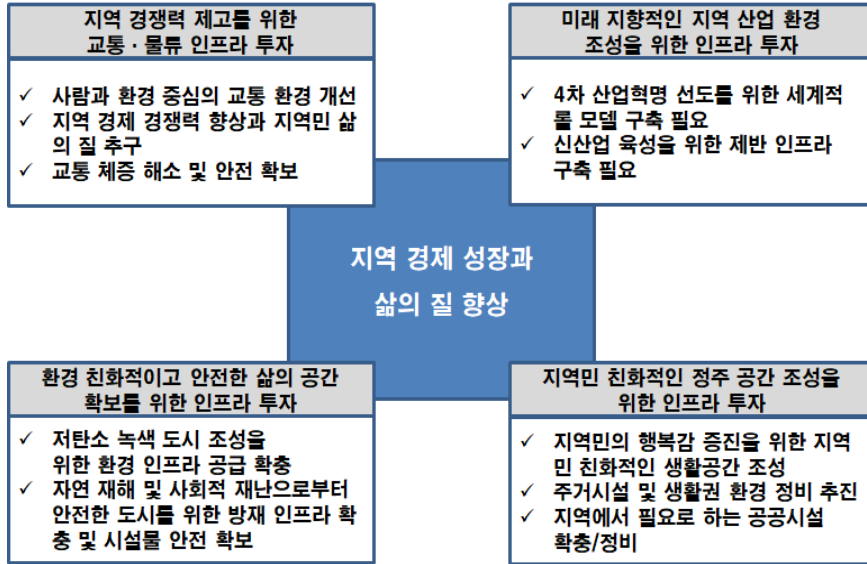


그림 16-3

인프라 투자의 방향

2) 제주 지역 핵심 프로젝트 도출

- 먼저, 노후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도출하였음.
 -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지체가 되지 않고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을 선별함.
 -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비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을 선별함.
 - 셋째, 노후화되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향후 필요한 사업을 제안함.

16.

제주도

-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도출된 노후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표 16-3

핵심 노후 인프라 사업

목표	분야	프로젝트 명		기간	총 사업비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투자	교통 및 물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		2016~19	252		
		지방도 및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	비자림로 확·포장	2014~20	207		
			서성로 개설 공사	2014~20	160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2014~20	445		
			헬스케어타운 진입 도로	2013~21	284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 도로	2013~21	200		
		연복로-삼화지구 도로 개설		2018~21	482		
		제주국제공항~오일장~평화로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 계획 중			
		도로 신설 확장 계획(단기 개선 사업 13개)		~2020	1,129		
		도로 신설 확장 계획(중기 개선 사업 10개)		2021~24	1662		
		도로 신설 확장 계획(장기 개선 사업 6개)		2025~30	1,843		
주차장시설		2018~	681				
미래지향적인 지역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경제	제주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시설 조성(색달동)	색달매립시설 정비	2017~21	816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대책 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조기 추진		2017~25	3,934	
		노후 정수장 개선 사업	취수원개발사업		2016~25	2,033	
	별동봉 정수장 개량 사업		미정	76.6			
	월산2정수장		미정	49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2017~24	1,447			
	주거·도시·환경	하수종말 처리시설 확충 사업		안정적하수처리를 위한공공하수처리 시설확충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2018~25	3,956
				도두	2016~20	956	
				월정	2016~20	452	
				판포	2016~20	390	
				보목	2015~19	306	
				색달	2017~20	62	
				대정	2017~20	247	
				남원	2018~20	159	
				성산	2015~17	157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	1996~35	25,486	
안전·치안	도심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 사업		미정	미정			
	내진 보강		2016~	미정			

제주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문화·관광·교육	노후 교육시설 정비사업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2018~22	410	
	주거·도시·환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 사업		2018~	3,715	
		화북상업지구 개발 사업		2018~21	452	
		원도심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공모중	
			역사·문화·테마가 있는제주시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시4개동 일원(일도1·이도1· 삼도2·건입동)	2016~20	182
			2017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 중 인프라 관련 사업		~2020	443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진행중	175		

- 다음으로, 신규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도출하였음.
 - 첫째,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역 내 다양한 의견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사업을 제안함.
 -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제안함.
 - 셋째, 설문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도민의 수요가 높지만 아직 사업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안함.

-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도출된 신규 인프라 사업은 다음과 같음.

16.

제주도

표 16-4

핵심 신규 인프라 사업

(단위 : 억원)

목표	분야	프로젝트 명	기간	총사업비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투자	교통 및 물류	제주 제2공항 완공 사업	2017~25	48,734
		제주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	2020~25	미정
		제주국제공항 광역 복합 환승 센터 조성	2015~20	679
		제주 신항만 개발	2017~30	24,520
		4대 핵심권역 연계 광역교통망 체계구축 사업	미정	미정
		제주시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 (제주 18개 주요 교차로 개선)	미정	2,799
미래지향적인 지역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경제	제주지역 폐기물 자원 업사이클링 클러스터사업	2018~21	1,098
		제주 농식품 클러스터 국가산업 단지 조성(안)	2018~	1,665
		전기자동차 특구 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	2017~21	1,317
	문화·관광·교육	드론 산업	2018~21	400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삶의 공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주거·도시·환경	대체 수자원 개발 사업	미정	미정
	안전·치안	범죄예방환경설계 도입 사업	미정	미정
제주 지역민 친화적인 정주 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문화·관광·교육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사업	미정	미정
	주거·도시·환경	제주신항만 배후지역 복합개발사업	미정	미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	2017~25	미정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사업	2018~21	2,537

8. 결론

- 그동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고 그 계획 하에 투자 유치, 관광객 유치와 함께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제주의 미래 비전인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가치 하에 제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제주의 발전을 위한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제주 지역의 경우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이를 각 분야별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임.
 - 이 중 노후 정수장 개선 및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도심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 내진 보강, 학교시설 보수보강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한편, 제주 지역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교통 수단의 대부분이 자동차임. 이에 따라 도로의 유지관리 및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관련 예산은 줄어 들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 확보가 필요함.
 -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함.

- 신규 인프라 관련해서는 먼저,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역 내 다양한 의견으로 사업 추진이 보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대표적인 사업은 제2공항사업으로 제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향후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지역 도민의 수요가 높지만 아직 사업으로 구체화 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예를 들어, 지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업, 교통수단 개선을 위한 교차로 사업 등은 향후 신규 사업으로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임.

부록 1. 설문지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현재 인프라 시설(도로, 교량, 지하철, 상하수도, 학교, 체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성능 개선을 위한 정책 및 투자 방향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 개요 [설문 조사지에서는 제외되는 내용입니다]

조사 주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 방식
<p>■ 조사 대행 기관 : ㈜리서치뱅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 유효 응답자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고려하여 표집] - 조사 기관 : 2018년 2월 22일 - 3월 7일 [2주간]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조사 - 조사 내용 :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관련 인식 조사

작성자 개요

성별 ()	1. 남자 2. 여자	나이 ()	1. 20대 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거주 지역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1.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전반적인 성능(품질, 용량, 편의성)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우수하다
- ② 우수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우수하지 않다
- ⑤ 전혀 우수하지 않다

1-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성능 수준(품질, 용량, 편의성)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보통	④ 불만족 한다	⑤ 매우 불만족 한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 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지역 경쟁력 향상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밀접하다
- ② 밀접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밀접하지 않다
- ⑤ 전혀 밀접하지 않다

2-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수준이 지역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수준이 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삶의 질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밀접하다
- ② 밀접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밀접하지 않다
- ⑤ 전혀 밀접하지 않다

3-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수준이 지역 주민의 생활 또는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지 않다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노후도 및 안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⑥ 매우 안전하다
- ⑦ 안전하다
- ⑧ 보통이다
- ⑨ 안전하지 않다.
- ⑩ 전혀 안전하지 않다.

4-1 그렇다면, 귀하는 다음 시설의 노후도 및 안전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안전 하지 않다	⑤ 매우 안전 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4-2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이 사회적 재난(화재, 교통사고, 오염, 붕괴, 기타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안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전하지 않다
-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3 아래 사회적 재난 유형 중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은 무엇입니까?

- ① 산업단지, 전통시장 등에서의 폭발이나 화재
- ② 교량, 터널의 붕괴
- ③ 대형 교통사고
- ④ 해양시설물 사고
- ⑤ 환경오염(폐수 유출, 화학물질 유출 등)
- ⑥ 기타()

4-4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은 자연재해(지진, 풍수해 등)로부터의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안전하다
- ② 안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안전하지 않다
- ⑤ 전혀 안전하지 않다

4-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위협이 되는 자연재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진으로 인한 건물붕괴나 화재, 지진으로 인한 해일 등
- ② 태풍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
- ③ 홍수 또는 호우로 인한 피해
- ④ 폭설로 인한 피해
- ⑤ 가뭄으로 인한 피해
- ⑥ 기타 ()

5.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인프라 시설의 현행 투자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충분하다
- ② 충분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충분하지 않다
- ⑤ 전혀 충분하지 않다

5-1 그렇다면, 귀하는 아래 시설에 대한 **향후 투자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용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 하다	③ 보통 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매우 필요하지 않다	⑥ 우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1. 도로						
2. 터널						
3. 교량						
4. 항만시설(갑문, 계류, 방파제 및 호안 등)						
5. 지하철						
6. 철도						
7. 공항						
8. 터미널/정류장						
9. 주차장						
10. 상수도						
11. 하수도						
12. 환경개선시설(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13. 공원/녹지						
14. 관광시설(관광단지및유원지등)						
15. 문화/복지/체육시설(도서관,공연장,체육관 등)						
16. 교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17. 전통시장						
18. 안전시설(소방서,경찰서등)						
19. 의료시설(병원, 요양원 등)						
20. 재해방지시설(우수관,빗물저류조,지진대응,주민피난시설)						
21. 주거시설(주택,아파트등)						
22. 댐 및 저수지						
23. 산업/물류단지						
24. 발전소(원전 포함)						

6.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과 관련한 **정책과 제반 활동**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 ② 만족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지 않는다
- 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물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방세수 증가를 통한 지자체의 자체 재원 확보
- ② 중앙정부 또는 상위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
- ③ 민간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 ④ 시설물 사용료의 인상
- ⑤ 기존 예산 내 인프라 투자의 비중 확대(복지예산 등 다른 항목 예산 비중 축소)

8.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안전 및 성능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적으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
- ② 필요하다면 지불할 수 있다.
- ③ 시/도 재정과 적절하게 분담된다면 지불할 수 있다.
- ④ 시/도 재정에서 더 크게 부담해야 한다.
- ⑤ 시/도 재정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세미나 발표자료

최종보고회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2018. 5. 25.

이영환 연구본부장(연구 PM)

CONTENTS

1. 연구 개요 및 추진 경과
2. 연구의 주요 결과
3.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연구 개요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 과업기간 : 2017.7~2018.5(11개월)
- 과업범위 : 16개 시·도별 별도 과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지역 건설산업의 중요성

-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의 18.6%, 193만 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지역경제 중추 산업
- 그러나, 지역 내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

인프라에 대한 오해

-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현황 인식 부재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존재

국민 안전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 발굴 및 정책 제언

2018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정책입안자와 대국민 인식 전환 유도

01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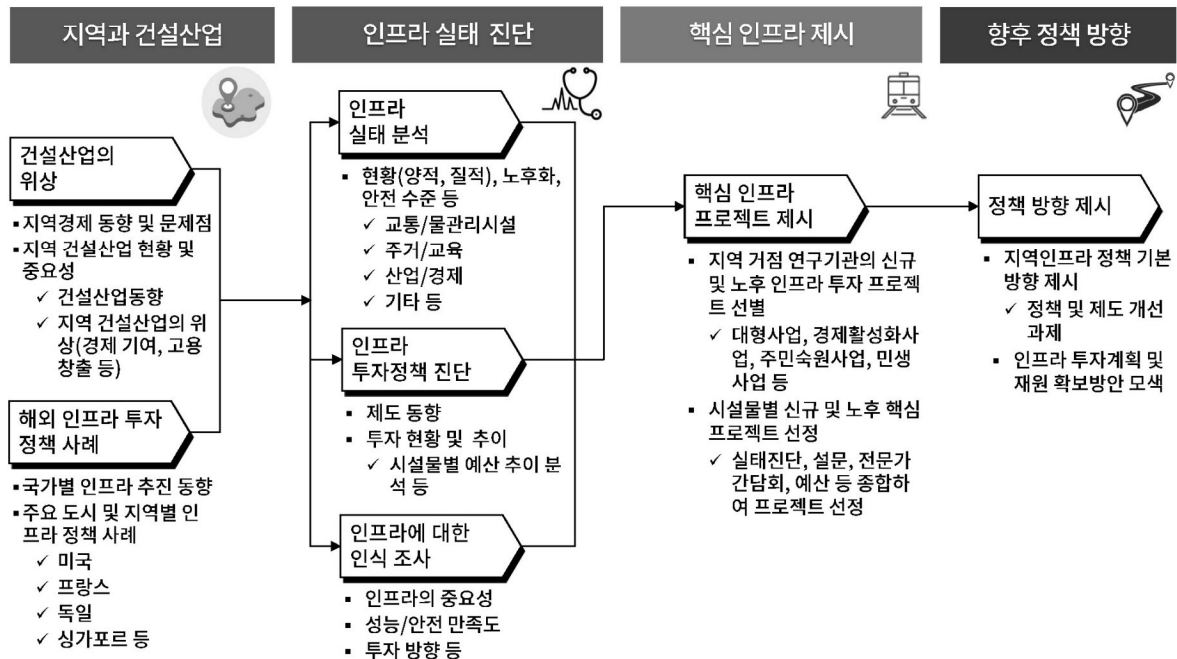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16개 시도별 연구결과 도출
-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추진 및 자문단 운영
-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사업 발굴 제시

02 | 연구결과 수용성 확보

- 실질적 정책화 유도를 위한 세미나 등 기획 활동 연계
- 제도 개선, 자원 마련 등 구체적 사업 추진전략 마련
- 지방의회,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연구결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중앙/지역 관심 유도

연구 흐름

16개 지역에 대한 인프라 실태 진단과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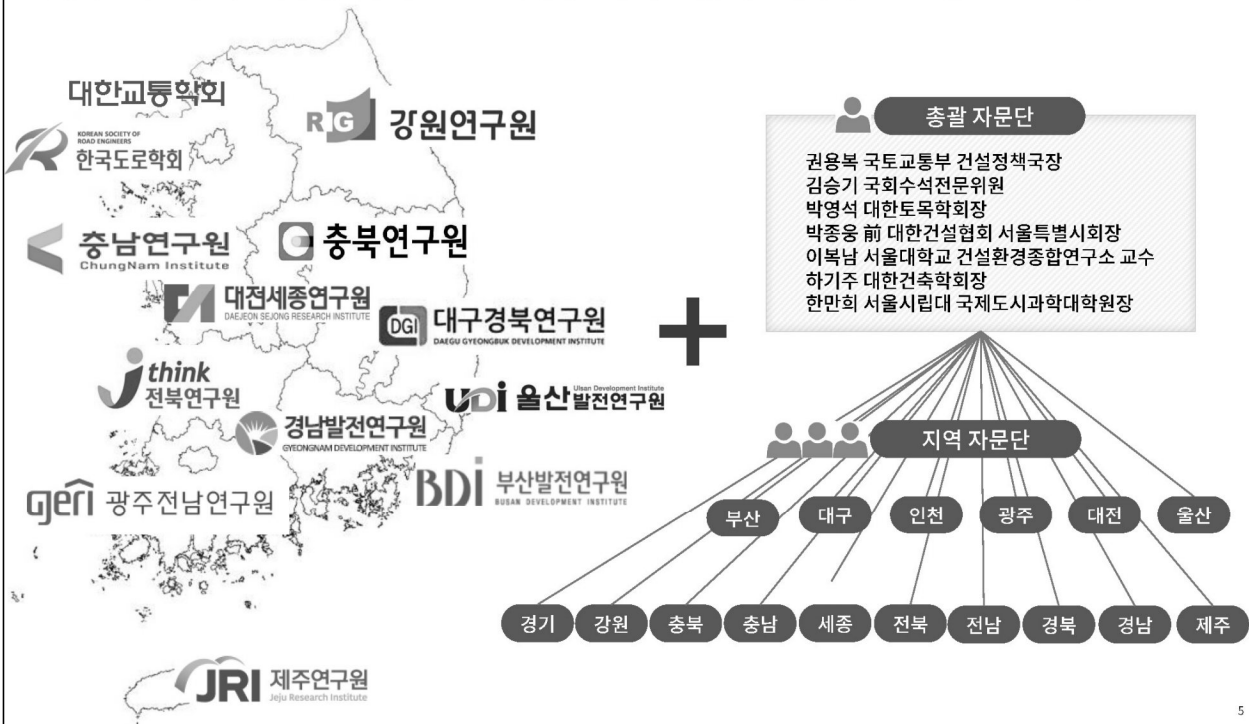
추진 경과

11개월 동안(2017. 7~2018. 5) 지역 맞춤형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개진



추진 경과

지역기반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추진으로 지역성 반영하고 총괄 및 지역 자문단 운영으로 전문성 보완



CONTENTS

1. 연구 개요 및 추진 경과

2. 연구의 주요 결과

3.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계획

2. 연구의 주요 결과

지역 경제와 SOC : 예산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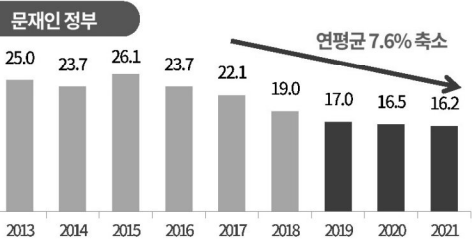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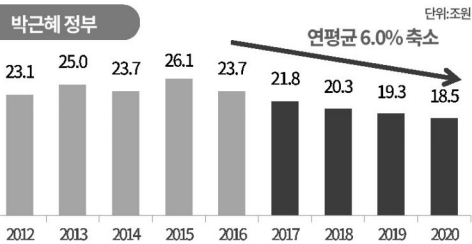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최종보고회

정부는 지속적으로 SOC 예산 축소 기조 지속

· 인프라 예산의 지속적 삭감에 따른 투자자원 미확보 → 미래 경제성장 동력 상실, 단기 산업생산액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 야기 불가피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추이와 계획

박근혜 정부 SOC 예산 축소 계획 → 문재인 정부 축소 규모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이상호(2018), 글로벌인프라투자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제인용

국토교통부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

구분	전체		도로		철도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	96	2,506	33	1,055	4	175	59	1,276
2014	82	2,072	17	153	6	345	59	1,574
2015	28	1,898	24	846	4	1,052	-	-
2016	45	1,030	22	359	2	221	21	450
2017	60	1,845	22	1,080	6	269	32	496
2018	32	383	3	6	-	-	29	377

자료: 국토교통부 각 연도별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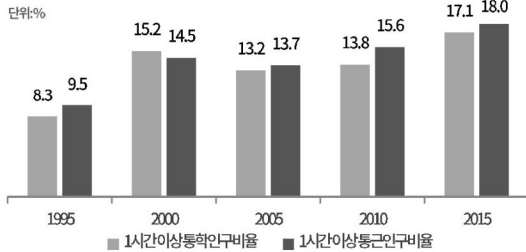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SOC 예산 중 신규사업 예산 감소,
2018년 383억원으로 급감

하지만 지역의 인프라 수준은 지역민의 삶의 질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

부족한 인프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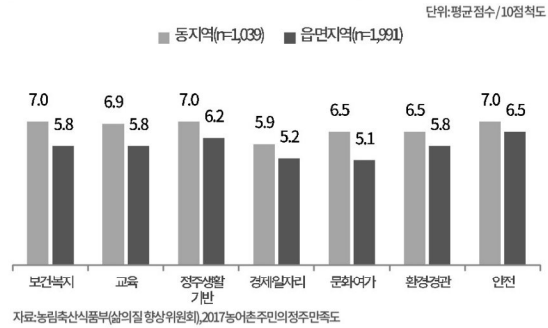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인프라 수준은 세계 20위, 물류 경쟁력 25위
 - World Bank, Global Rankings 2016
-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 33.4조원(GDP 대비 2.13%)
 - 2005년 23.5조원 → 2015년 33.4조원(현대경제연구원, 2017)
 - 美 교통혼잡비용이 GDP 대비 0.8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 심각한 수준
- 평균 통근 시간 2015년 기준 62분, OECD 중 가장 긴 시간 소요(OECD 평균 29분, 2010년 기준)

1시간 이상 통학/통근 인구비율



- 도시와 농산어촌의 삶의 질 수준 격차는 여전
 - 설문조사 결과 조사 항목 모두 농산어촌이 도시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은 수준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만족도 조사 결과



-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11.9명), 미국(10.9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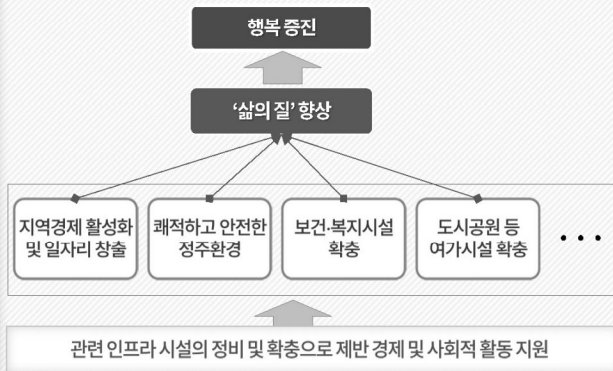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정비가 필수적

- 지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중요한 요인은 '삶의 질' 향상 → '인프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
- 인프라 투자는 경제성장률,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높은 영향력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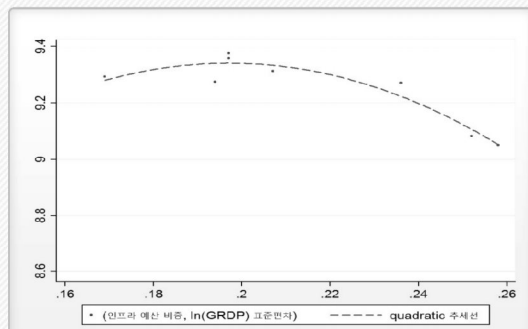
-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생활기반 시설, 충분한 문화여가 활동의 지원, 보건의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

- 인프라 투자 비중과 경제성장률은 정비례
- 인프라 투자 축소 시 소득격차 심화로 지역 균형발전 저해

인프라와 삶의 질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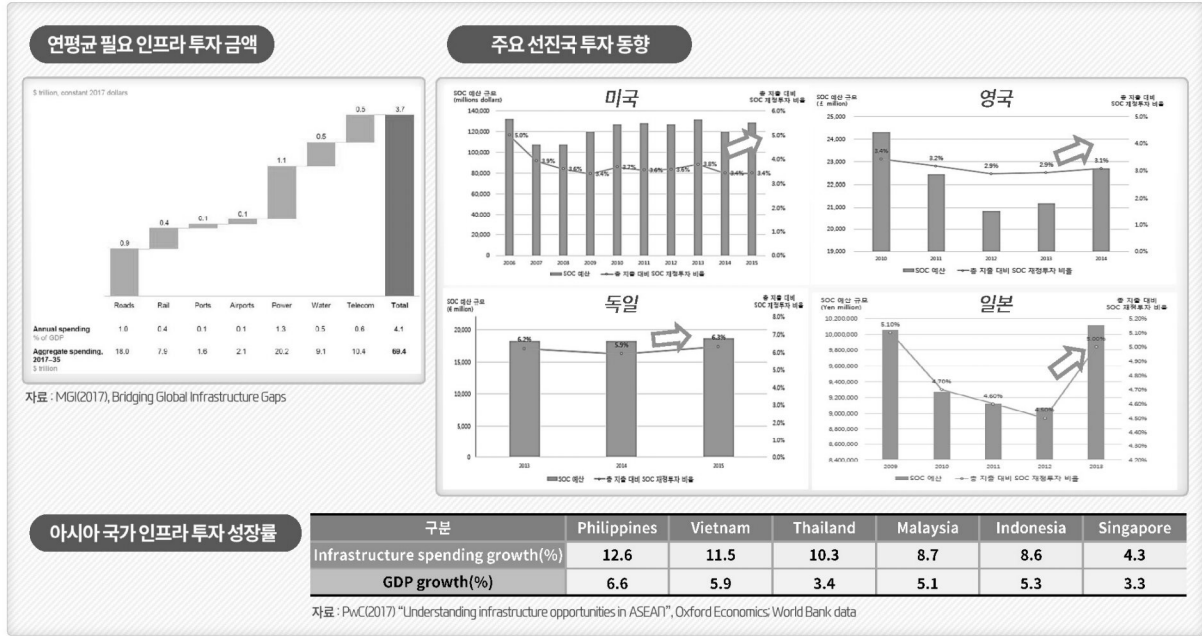
인프라 투자 비중과 지역격차



해외 사례 :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

2035년까지 목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3.7조 인프라 투자 필요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인프라 투자 확대



10

해외 사례 : 주요 도시 인프라 투자 사례

최근 주요국의 도시와 지방정부에서는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추진

주요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재생 프로젝트 개발 및 재원조달방안 다양화

01

미국
버지니아주

- 주 정부 차원에서 교통인프라 재원조달 방안 다양화: 유류세 부과 방식 변경, 'SMART SCALE' 프로그램 시행 등 추진
- P3(Public-Private-Partnership) 프로그램 활용: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활용, 재투자 분야 프로젝트로 점차 확대 추진

02

프랑스
파리

- 마세나(Massena) 재개발사업: 마세나역을 포함한 23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사업 발굴. 수익성이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수익성이 높은 시설에서 보완하는 방식
- '레앵방테((R 'einventer Paris) 파리)' 파리 도시재생사업, 방치되거나 이용률이 낮은 공유지, 공공시설의 활용방안을 공모를 통하여 진행
- Zac Clichy-Batignolles 재개발사업: 철도를 중심으로 분리된 두 지역의 연계성 강화(보행자 전용 교량) 및 공공, 민간 건축물 유치

03

독일
슈투트가르트

- 슈투트가르트-올름 프로젝트: 슈투트가르트 21과 벤들링엔-올름 선로사업으로 구성. 대지가 부족한 도심지에 기존 인프라의 재배치를 통해 대규모 공간의 확보와 개발
- 지하화와 고속철도 유치 등을 통해 주민의 이동성 제고와 일거리 창출 도모

→ 주요국의 도시 및 지방정부에서는 제한된 도시공간의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
특히,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

11

인프라 실태와 투자 문제점 : 중부권

서울특별시

- AT커니, '17년 글로벌 도시 중 38위로 하락('15 10위 → '16년 32위)
- 서울시 지하철 연장 중 35.6% 20년 이상 경과
- 전통시장 상인의 64.8% 화재 위험성 우려

인천광역시

- 자동차당 도로연장 및 국토계수당 도로연장 7대 도시 중 최하위 수준
- 상수도 누수율 6.4%로 광주, 울산 다음
- 인당 철도연장 및 정거장 수 광역시 평균 미달

경기도

- 서울 인근 지역과 외곽지역 간의 불균형 심화
- 평균 통학·통근 소요시간은 72.4분으로 전국 평균 61.8분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1인당 SOC 예산 58.7만원으로 도 지역 최하위

충청남도

- 시도 76.9%, 군도 80.5%로 포장을 낮음.
- 폭원 12m 미만 소로가 48%
- 하수도 보급률 73.2%로 전국 평균 79.9% 대비 크게 부족

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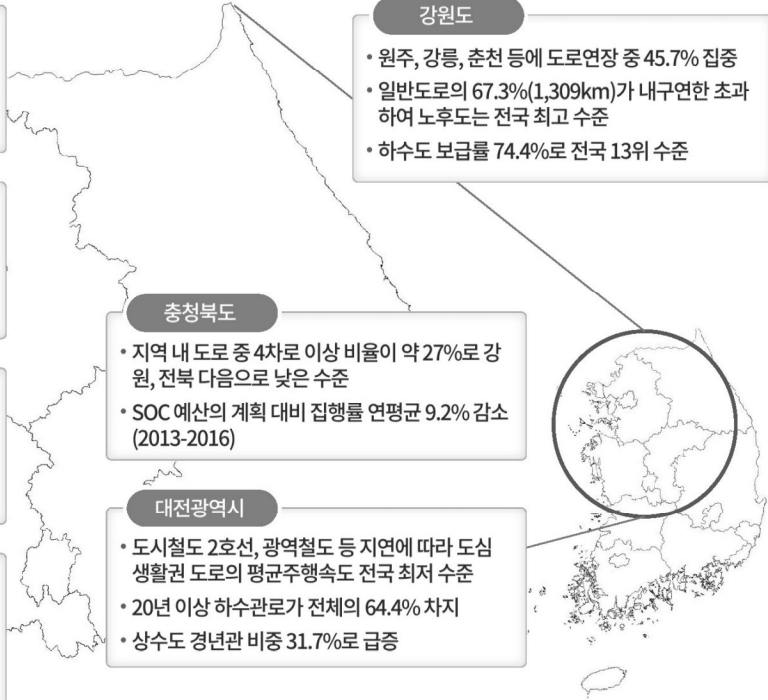
- 원주, 강릉, 춘천 등에 도로연장 중 45.7% 집중
- 일반도로의 67.3%(1,309km)가 내구연한 초과 하여 노후도는 전국 최고 수준
- 하수도 보급률 74.4%로 전국 13위 수준

충청북도

- 지역 내 도로 중 4차로 이상 비율이 약 27%로 강원, 전북 다음으로 낮은 수준
- SOC 예산의 계획 대비 집행률 연평균 9.2% 감소 (2013-2016)

대전광역시

- 도시철도 2호선, 광역철도 등 지연에 따라 도심 생활권 도로의 평균주행속도 전국 최저 수준
-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전체의 64.4% 차지
- 상수도 경년관 비중 31.7%로 급증



인프라 실태와 투자 문제점 : 호남권

전라북도

- 도로연장 중 46.8%가 중추도시권에 집중
- 자가주택 비율이 57.3%로 주거비용 부담 높음.
- 노후 경년관이 전체 관로의 30%이며, 누수율이 22.3%로 전국 최고 수준의 상수도 요금 부과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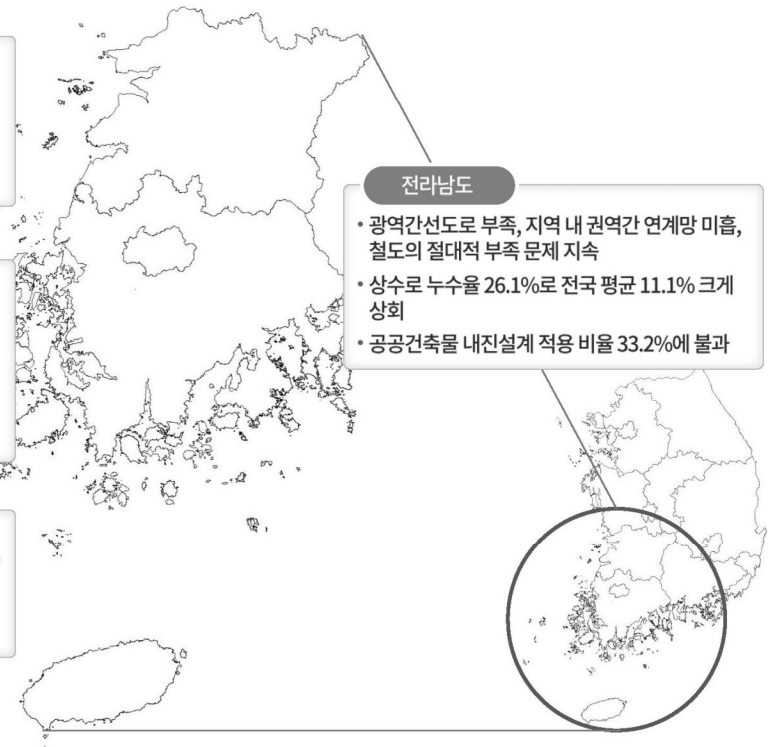
-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3.8개로 전국 평균인 5.04에 크게 미달
-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인당 1,766원으로 8개 특별·광역시 중 최고 수준
- 도시철도 2호선 계획 수립 후 15년 이상 지연

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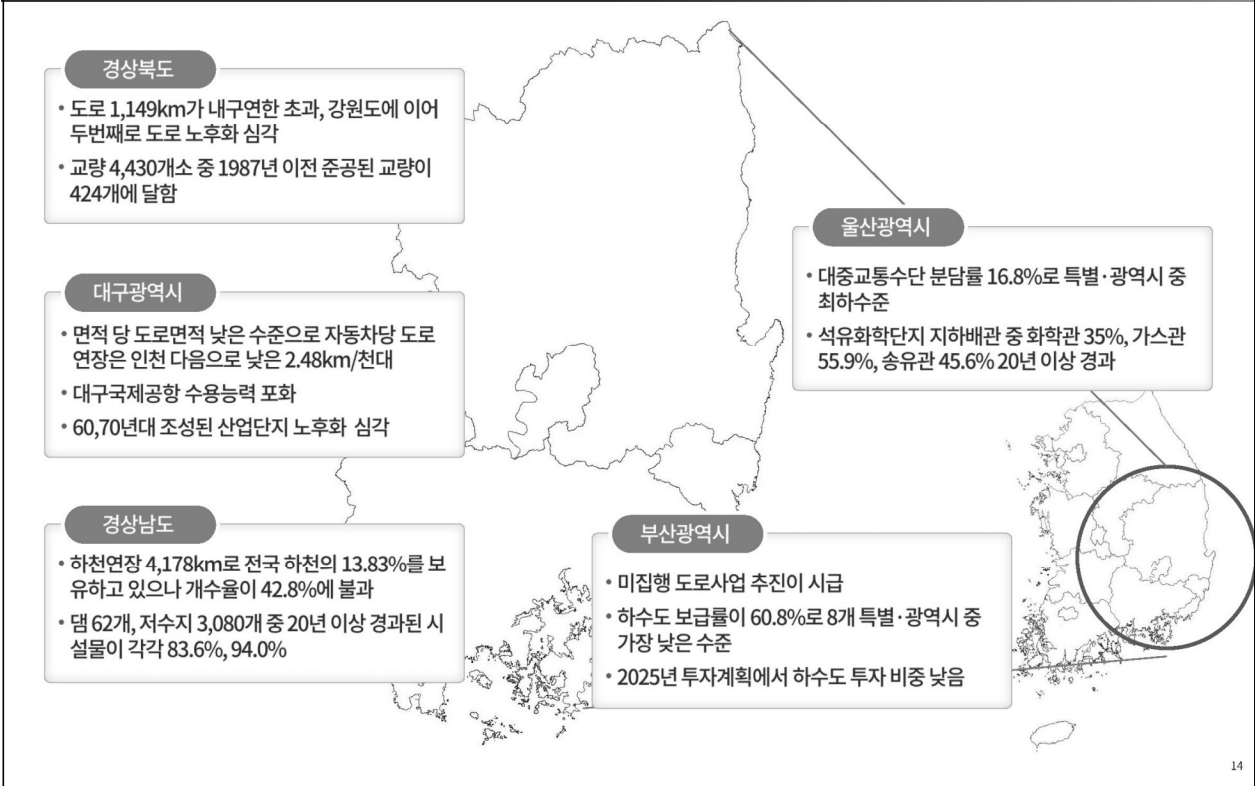
- 2030년 기점으로 30년 이상 도로가 전체의 50%
- 공항 여객터미널의 물리적 수용력 규모 초과
- 상수도 누수율 43.0%로 전국 최하위

전라남도

- 광역간선도로 부족, 지역 내 권역간 연계망 미흡, 철도의 절대적 부족 문제 지속
- 상수로 누수율 26.1%로 전국 평균 11.1% 크게 상회
-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적용 비율 33.2%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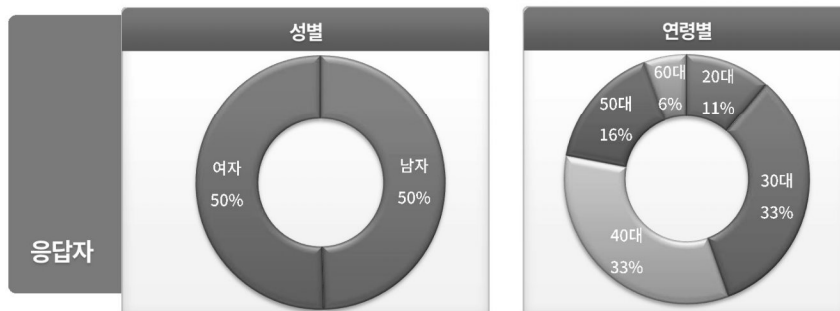
인프라 실태와 투자 문제점 : 영남권



인프라 인식 조사 : 설문 개요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에 대한 중요도, 성능수준, 노후도 및 안전도, 투자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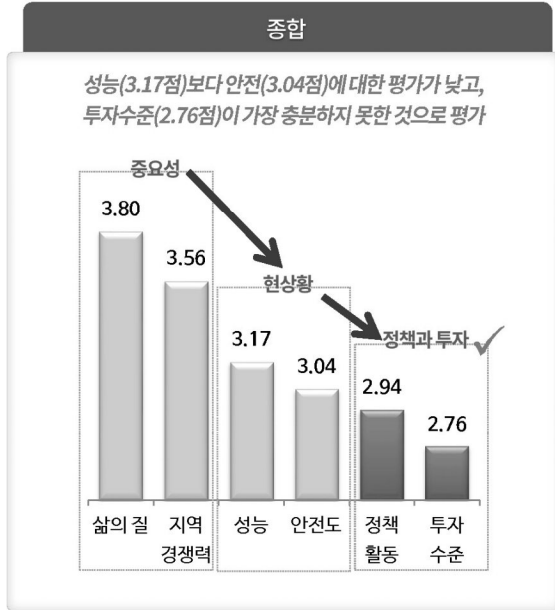
개요	목적	• 인프라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수준 조사	유효응답자수	• 8,574명(16개 시도*500명, 일부 지역 추가 조사)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기간 및 방법	• 2018년 01월 31일 ~ 2018년 03월 22일 • 온·오프라인 패널 활용한 온라인 조사



인프라 인식 조사 : 종합

인프라의 중요도 비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해

- 인프라가 지역 경쟁력(3.56점)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3.80점)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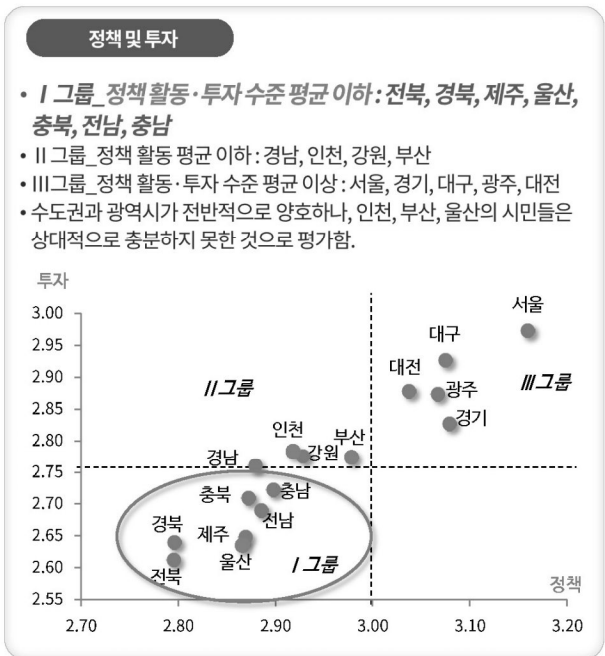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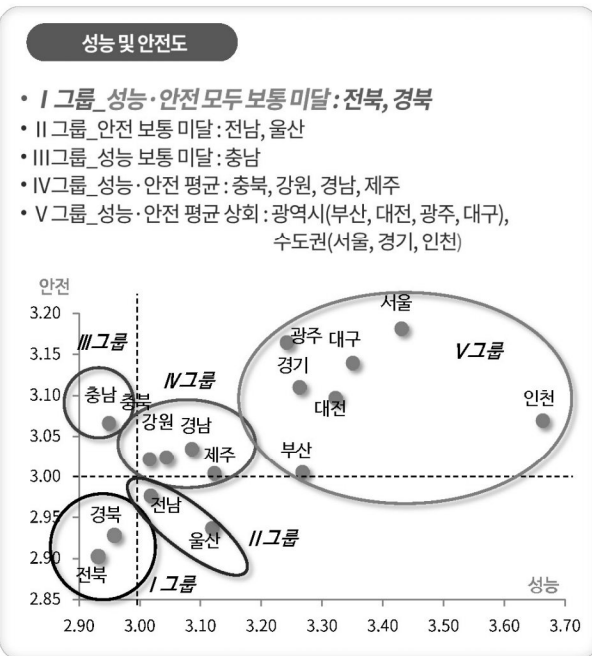


16

인프라 인식 조사 : 성과와 정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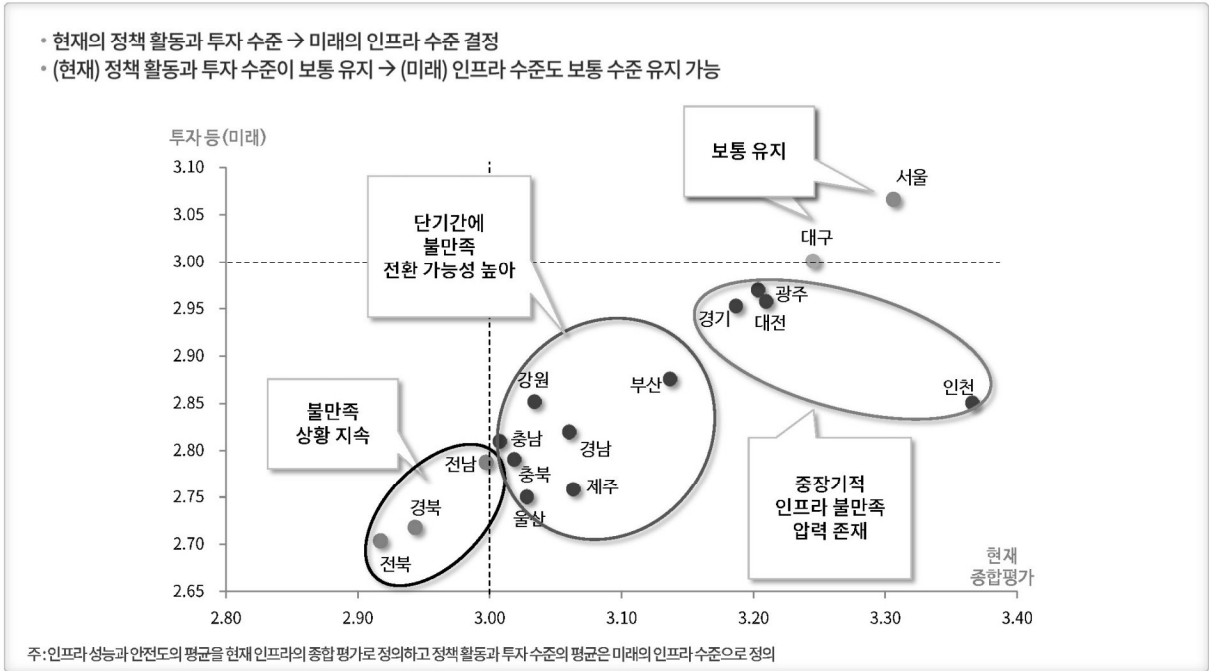
인프라 시설 투자 16개 시도 모두 보통에도 못 미쳐

- 수도권과 광역시 시민들이 현재 인프라 상태 및 정책 상황을 양호하게 평가



17

현재와 미래 인프라가 보통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과 대구에 불과



도로·철도

도로

- 전국민 60% 이상 도로의 성능과 안전 만족도 모두 '보통 이하'
- ✓ 성능, 안전 모두 기타지방의 만족도 가장 낮고 수도권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 기타지방의 69.7%가 안전 만족도 '보통 이하'로 평가
- 안전 관련 만족도는 성능에 비해 더 낮아
- ✓ 30대가 성능 및 안전 관련 불만 비율 가장 높아
- 93.5%가 투자 필요성은 '보통 이상'으로 인식

성능만족도	'보통 이하' 62.1%
안전만족도	'보통 이하' 66.2%
투자필요성	'보통 이상' 93.5%

기타지방의 도로 성능 및 안전 만족도 모두 낮아

철도

- 철도는 시설물 중 만족도는 가장 높고 투자 필요성은 낮게 인식. 안전보다 성능 만족도가 낮음.
- ✓ 도로와 달리 수도권 시민들의 만족도 낮고, 특히, 경기·인천 시민들의 만족도 낮음.
- ✓ 수도권의 성능 만족도가 가장 낮아, 보통 이하가 61.5%임.
- ✓ 다음으로 울산, 경북의 만족도 낮은 편임.
- 경기, 인천, 대전, 경북은 철도 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아
- ✓ 대부분의 시설물에서 고연령대의 인프라 투자 필요성 높아

성능만족도	'보통 이하' 56.8%
안전만족도	'보통 이하' 54.5%
투자필요성	'보통 이상' 79.4%

수도권의 철도 성능 만족도 개선 필요

상수도·하수도

- 성능에 비해 안전에 대한 만족도 요구가 큰 것으로 해석됨.
 - ✓ 성능은 57.5%가 보통 이하로 평가하나 안전은 64.9%가 보통 이하로 평가하여 격차(7%p)가 큰 편임.



- 성능과 안전도 20~30대 가장 낮고, 광역시와 기타지방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투자 필요성은 94.5%가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시설물 중 가장 높은 편임.



상수도 성능과 안전 만족도의 균형 필요



- 상수도에 비해 성능 및 안전 만족도 모두 낮아
 - ✓ 성과와 안전 만족도 격차 크다는 점은 상수도와 유사
 - ✓ 기타지방의 안전 만족도 가장 나빠('보통 이하' 69.8%)

- ✓ 성능 만족도는 20대가 가장 낮고, 안전 만족도는 3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투자 필요성은 수도권에서 높으나, 만족도에 비해 지역별 편차는 적음.
 - ✓ 보통 이상 : 수도권 95.8%, 광역시 93.0%, 기타지방 94.1%



성능 및 안전 만족도 시설물 중 가장 낮은 편 → 전반적 하수도 개선 시급

20

주거시설·교육시설

- 주택의 지속적 노후화로 교통 및 물관리시설에 비해 성능 및 안전 만족도 낮은 수준임.
 - ✓ 기타지방은 70.2%가 안전 만족도 '보통 이하'로 응답함.
 - ✓ 60대의 안전 및 성능 만족도도 낮은 편임. 노후화된 주택 거주자 다수가 고령자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추정
- 주거시설의 투자 필요성은 91.5%로 낮은 편임. 민간 영역으로 인식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성능과 안전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 필요



공공지원 통한 고령자 노후주택 개선 모색



- 안전 만족도는 철도 다음으로 높고, 성과와 안전 만족도 격차는 시설물 중 가장 적은 편임.
 - ✓ '보통 이하' 응답 비율 성능 61.7%, 안전 61.2%로 가장 유사한 수준
 - ✓ 성과와 안전이 시설물 중 가장 근접하게 공급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 기타지방의 성능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에 비해, 투자 필요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는 교육시설의 공공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높은 만족도에도 공공성에 따른 교육시설 투자 요구는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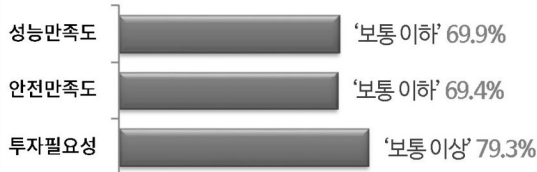
21

산업단지 · 전통시장 등

- 성능 및 안전 만족도 시설 물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 보통 이하: 성능 69.9%, 안전 69.4%로 응답
 - ✓ 안전과 관련된 만족도는 수도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낮은 만족도에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낮음. 특히, 안전 만족도 낮은 수도권의 투자 필요성 응답 가장 낮아
 - ✓ 투자 필요성 요구가 낮은 이유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것인지, 민간 영역 투자에 기인한 것인지 추가 고민은 필요
 - ✓ 다만, 절대적인 안전 만족도 낮아 시급한 개선 필요



만족도 낮음에도 투자필요성 낮아 → 산업단지 안전도 제고방안 개발



- 안전 만족도 시설물 중 가장 낮은 수준, 71.7% 안전 만족도 '보통 이하'로 인식
 - ✓ 성능에 대한 만족도도 산업단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임.
 - ✓ 성능 및 안전 만족도 수도권이 낮은 편임.

- ✓ 40대의 성능 만족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투자 필요성은 산업단지, 철도 다음으로 낮음. 전통시장에 대한 지속적 투자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한 측면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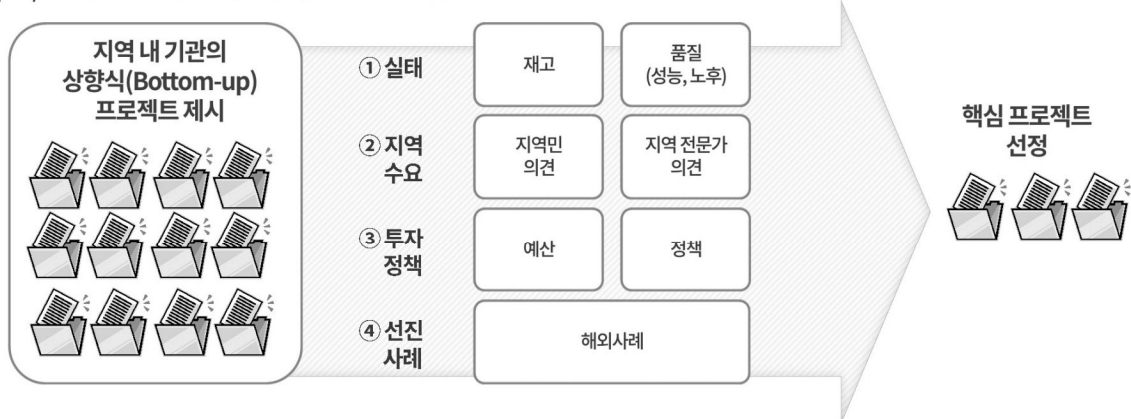


수도권 전통시장 만족도 가장 낮아

지역 기관의 프로젝트 선 제시 후 실태, 지역수요, 투자정책, 선진사례를 종합하여 선정

(1차적) 지역 의견을 선 반영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프로젝트 조사 → (2차적) 최종 선정

- (1차) 지역 전문가인 지역 거점 기관에서 경제활성화 사업, 대형 사업, 주민숙원 사업, 민생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선별
- (2차) 지역 인프라의 재고와 품질을 종합한 인프라 실태 진단 + 설문과 지역 전문가의 자문회의 + 인프라와 관련한 지역의 예산 및 전반적인 정책 상황 + 해외의 선진사례 벤치마킹
- (3차) 4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15개 시도의 핵심 프로젝트 선정



핵심 프로젝트 : 종합 집계

1,244개 사업, 사업비 규모 최소 442조원 상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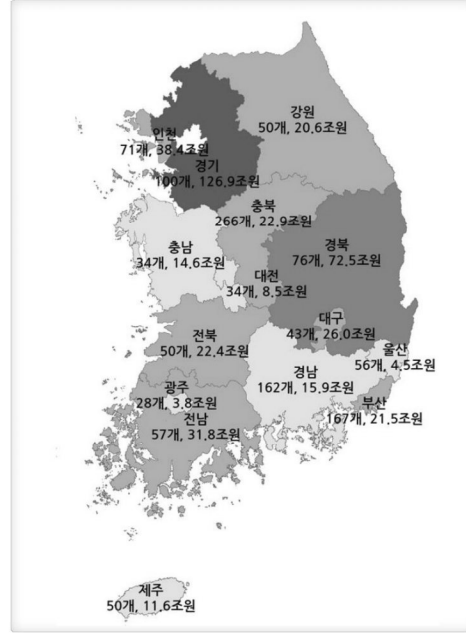
• 핵심 프로젝트 중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다수 존재 → 실질 사업비 규모 442조원 + α

신규/노후

-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 사업비 규모 422조원
-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
 - 도로확장과 같은 신규와 노후 사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분류

지역별

-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큼.
- 충북, 부산, 경남, 경기도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 다
-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지역별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 건수와 사업비 규모 다름.
 -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비중에 따라서 지역별 사업비 규모의 편차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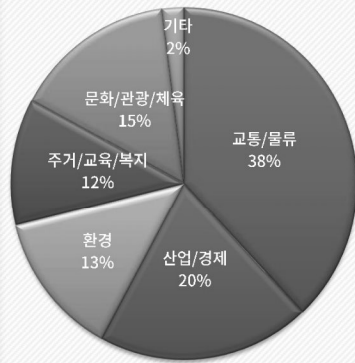
24

핵심 프로젝트 : 시설물별 집계

교통·물류 건수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큰 편

- (교통·물류) 373건, 288조원 수준이며, 신규 관련 사업이 297건, 284조원으로 절대 다수가 신규 사업임.
- (사업비)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타, 주거·교육·복지, 환경 순으로 선정됨.
- (건수) 교통·물류, 환경 관련 사업 순임.
- (노후 건수) 환경, 교통·물류, 주거·교육·복지, 문화·관광·체육, 기타 순으로 선정됨.
- (지역) 특성에 따라 경기, 부산, 울산, 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되었고 대구, 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이 다수 선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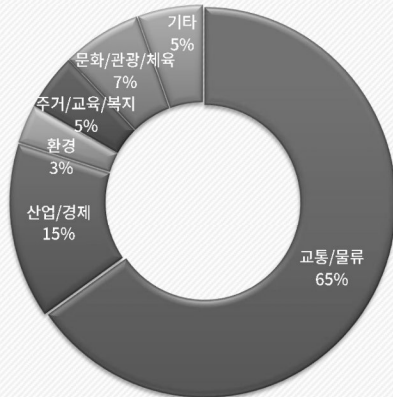
신규사업의 부문별 비중(건수)



노후 사업의 부문별 비중(건수)



전체 사업의 부문별 비중(사업비)



25

핵심 프로젝트 : 경제적 효과

GDP 0.85%p 증가, 19만 7,4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방법론

- 2025년까지 연도별로 평탄화되어(smoothing investment cycles) 제안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모두 집행된다고 가정
→ 광역지자체장의 임기 4년인 점 고려 2018~2025년(8년간), 8년 동안 연평균 인프라 투자 규모는 55.3조 원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추산한 2017년 기준 SOC 총 투자 규모는 41.1조 원(중앙정부 SOC+지방정부 SOC+민간투자 SOC+공기업 SOC).
- 연평균 14.2조 원(55.3조 원-41.1조 원=14.2조원)이 추가적으로 투자될 때의 연평균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함.

효과



CERI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TENTS

1. 연구 개요 및 추진 경과
2. 연구의 주요 결과
3. 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연구의 성과와 의의

본 연구 및 세미나·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위협하고 부족하며 불균형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래 지역개발 수요 및 지역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입안자 및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유도

01

상향식(Bottom-up)으로 SOC 예산 확대 필요성 제시

- 지역별 인프라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SOC 예산 확충이 필수적
- SOC 투자 확대에 대한 논거를 지역 실제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

02

지역별 수요에 기반하여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제시

- 지역 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지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활용성 제고
- 지자체, 지역 학계, 언론 등과 교류 협력하여 지역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03

지역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제언

- 교통·에너지·환경세 준치,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 중앙정부 부담비율 상향 조정 등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필요성 제시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활성화,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등 활성화 방안 제시

04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안정적 지역건설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곧 지역경제 성장 극대화임을 명시
- 지역중소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실효성 제고, 지역 강소기업인증제 도입,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등 개선방안 제시



28

지역에서 연구 성과 (1)

총괄 보도자료 배포... 매일경제, 건설경제 등 연구결과 중앙 전파

매일경제

강원·충남 지방道 공사 곳곳 중단... 경기는 출퇴근 3시간 교통

2018년 9월 24일 (월)
10:05 발행
(용기도민 4주)

전국 인프라 실태 8500억 파악조사해본다

부산 하수도 보급 60% 그쳐
계수-정수 공장은 포화상태
지자체는 투자여력 없고
정부는 SOC 예산 갈수록
단절 불분 유망할뿐 아니라
교통·소비·성장 약화시켜서

우리 국토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살
고 있고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한
다고 판단된다. 자신의 거주 지역 인근
의 생활에 있어 불편을 겪지 않는다면
고개였다. 전국 최대 수도 중 양천역
과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수도 보급
률로 눈여겨볼 서울수도(SOC) 재
조사 결과로는 양천역 인근 지역
에서 수도 보급률이 60%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전국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일경제

싱가포르 SOC에 GDP 6% 쏟아붓는데... 한국은 2%도 못해

국가정책에 원천적으로 삼고
공방·양반·스마트시티 키워
세계 최첨단 인프라 구축
인프라 투자 예산 2018년 2000억
투자 예산 2018년 2000억
투자 예산 2018년 2000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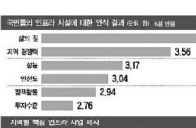
경기도는 2018년 2000억 투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017년 1500억
에서 3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수도권
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자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지역별 인프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경우 GDP의 6%를 인프라
투자에 쏟아붓는 반면, 한국은 2%도
못한다. 이는 인프라 투자 비중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인프라 투자
비중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인프라
투자 비중의 차이를 보여준다.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 좌우 16개 시도 모두 투자 낙제점”

건설업 국민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 관련 인프라 만족도
상는 낙제점은 16개 시도 모두

건설업 국민 설문조사 결과
삶의 질 관련 인프라 만족도
상는 낙제점은 16개 시도 모두



29

3.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지역에서 연구 성과 (2)

인천(5/2), 경기(4/24), 대전(4/25) 세미나 개최하여 연구결과 지역 전파 ... 건설경제, 경기일보, 인천일보, 대전일보 등 보도

지역 불균형 심각... GTX B·C 등 핵심사업 서둘러야

경기 인천을 수도권 중핵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으로의 인구 이동이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으로의 인구 이동이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이동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으로의 인구 이동이다.



넓은 인프라에 지역경쟁력 하락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확대 시급

강원 집적·패킹 등 노후주택 문제 심각...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도로, 물관리, 주거시설 등 강원지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지역경쟁력 하락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 사회적자본(SOC)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통혼잡비용 지나치게 높아... 도로·철도 확충 시급

인천 공대진 정미의 한반도 심해제 구축에서 사대진 중대 중심지로 인접한 인천의 교통혼잡비용을 낮추기 위해 도로·철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의 교통혼잡비용은 수도권 전체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인프라투자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최종보고회

건설연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세미나



인프라·구도심 낙후 심각 생활공간 재창조 시작해야

대전 8.5兆 핵심 프로젝트 일자리 10만개 창출 기대
대전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대전역로 개발' 등 인프라 투자 시급하며, 핵심 인프라 사업 추진 시 SOC(사회적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역로 개발을 비롯해 구도심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공간 재창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지역에서 연구 성과 (3)

충북(4/23), 충남·세종(5/8), 광주(4/26), 전북(5/2), 전남(5/23) 세미나 개최하여 연구결과 지역 전파 ... 건설경제,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광주매일신문, 전북일보, 무등일보 등 보도

일반도로·도로교량 등 노후 심각 체계적인 침수피해 예방책도 필요

충북 가뭄 대비 소규모 저수지 확충 등 대책 마련 260만여건
충북지역의 일반도로와 도로교량 등 노후화가 심각해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연,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세미나



한반도 핵심입지 불구, 교통·물류시설 낙후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보급 확대 나열 계획

충남 35개 프로젝트 14.6조 투입... 일자리 2만1천명 창출 기대
충남지역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핵심입지 불구, 교통·물류시설 낙후,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 보급 확대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건설연,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세미나

1인 소득·상수도 유수율 '최하위권' 삶의 질 개선 위한 인프라투자 시급

광주 핵심사업 적기 추진... 기계소득 5000억 늘 것
광주지역의 1인 소득과 상수도 유수율이 최하위권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당 개인소득·재정자립 '최하위' 핵심 인프라 투자해 일자리 늘려야

전남 노후주택 비중 '전국 최고'...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도 열악
전남지역의 인당 개인소득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핵심 인프라 투자해 일자리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핵심거점·성장 축' 부재 미래형 SOC로 극복해야

전북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논의
전북지역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핵심거점·성장 축'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SOC(사회적자본)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감사합니다.

최종보고회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2018. 5. 25.

김영덕 연구위원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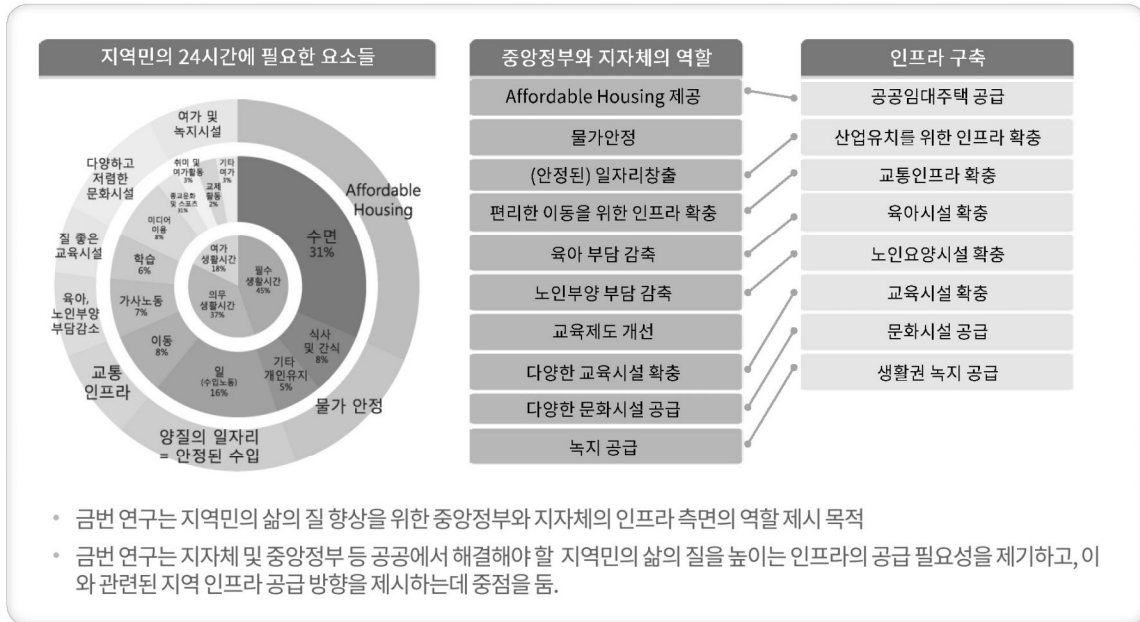
1. 연구의 구성과 핵심 연구 이슈
2.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3.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4. 지역 인프라 투자 자원 확보 방안
5.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의 구성과 핵심 연구 이슈

지역별 인프라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지역의 인프라 투자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지역민의 24시간 활용에 있어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나 시설이 필요



2

연구의 구성과 핵심 연구 이슈

지역별 인프라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지역 인프라 보고서의 구성 항목과 항목별 핵심 연구 이슈

구성 항목	핵심 연구 이슈
01 지역민의 삶의 질과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통해 본 지역의 인프라 수요는? 지역이 안고 있는 사회, 경제적 문제와 지역 인프라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02 해외 인프라 투자 정책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해외의 주요국들은 어떤 인프라 투자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가? 해외의 주요 국가와 도시들은 안고 있는 인프라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03 지역 인프라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지역 인프라 유형별 양적, 질적인 충족도 및 노후화 정도는? 지역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왜 필요한가?
04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들은 지역의 인프라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왜 지역들이 인프라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가?
05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프라가 양적으로 충족되었다는 인식이 많은데, 지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지역민들의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와 지역민이 생각하는 인프라 공급의 우선순위는?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3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모든 지역에서 인프라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와 적극적인 인프라 대응 정책 부재 문제 심각

지역 인프라 실태조사 및 투자정책 진단을 통해 본 지역 인프라 관련 핵심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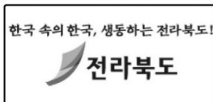

- 1 지역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의 부족 문제 심각
- 2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대두
- 3 단일 지자체, 동일 권역 내에서도 인프라 불균형이 심해 지역내, 지역간 사회/경제적 갈등 우려
- 4 도로 및 도로시설물, 상·하수도, 주거 및 공공시설 등 핵심 인프라의 노후화 급속 진행
- 5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투자 자원 부족으로 당면한 인프라 문제 장기화 우려

4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①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부족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지역별 발전전략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인프라 시설의 부족이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 발전 목표	인프라의 현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글로벌 혁신경제 생태계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GTX,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경기도 내 광역교통망 사업 공급 지연 다수 반월, 시화 등 국가산업단지 노후화 심각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자영업에서 기업까지」 행복한 성장 「도랑에서 서해까지」 행복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저 상·하수도 보급률(각각 84.4%, 74.3%) 폭원이 좁은 중·소로 전체 도로의 80.4% 저속 단선철도인 장항선만이 유일한 도시연결철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15.3명, 전국 평균 2배 동서방향 철도 인프라의 절대 부족 항만의 항로 및 항차 부족으로 물동량 급속히 감소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전국 제1의 '녹색산업' 중심지 조성 매력 있는 정주환경 선진복지여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저히 도로 포장률(76.5%), 전국 평균 85.3%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중 33.5%로서 전국 최고 자연재해위험이 가장 높은 '가' 등급 106개소 전국 최대

- ✓ 각 지역별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현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의 양적 부족 문제가 심각

5

지역 발전계획에 있어 핵심인프라인 교통 및 물류, 산업 및 경제, 관광 및 문화 분야 인프라 부족 문제 지속 제기



▮ **광역교통망 부족 문제**

- 대전, 인천, 울산 등 광역시, 강원, 전남 등 다수 지역에서 순환 도로망 및 인접 지역과의 교통수단의 연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
- 특히, 혁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혹은 인접지역간 광역도로, 철도망 수요가 많음

▮ **주요 도시들의 교통난 심화**

- 서울, 부산, 대전 등 광역시들과 전주, 김포, 군산, 천안 등 주요 기초지자체들에 있어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난 심화

▮ **복합환승센터, 물류단지 수요의 증대**

- 전북 김산, 충남 해미산업 등 지역특화 산물의 유통 시설, 지역 핵심 제조업 육성을 위한 물류단지 등 수요 증대
- 지역 내 교통수단 간 연결,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한 복합환승시설에 대한 수요도 많은 상황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 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 주력 산업 육성을 필요한 산업·경제시설에 대한 수요 급증

▮ **신성장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대응(대전, 충남/북, 경기 등), 첨단산업 육성(부산, 대구, 경북 등), 신재생에너지(경북, 제주, 강원 등)
- 특히, 연구시설-생산시설-유통시설 등 복합적인 클러스터 조성



▮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한 경제정책으로 표방
- 이에 따라 지역 내 해양, 산간지역 관광자원의 개발 및 지역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 레포츠시설 등 인프라 확충 필요성 증대
- 특히, 광역단위로 개발되는 관광개발사업(예: 서부내륙권 광역관광단지 조성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사업, 남해안 관광벨트 등)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높은 수준

▮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산업화 수요 증대**

-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재 등 지역 문화예술 관련 자원의 산업화 요구 증대
- 문화재 발굴 및 재생,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전시, 회의 공간 등 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구도심 및 역세권 개발 수요 증대**

- 각 지역들마다 신규 조성된 신도심과 기 조성된 구도심의 격차 문제 심화, 이에 따라 구도심의 활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수요 증대
- 광주, 대전, 대구, 충남 천안 등에서는 KTX가 통과하지 않는 기존 역사의 재개발 문제 지속 제기

▮ **도시재생 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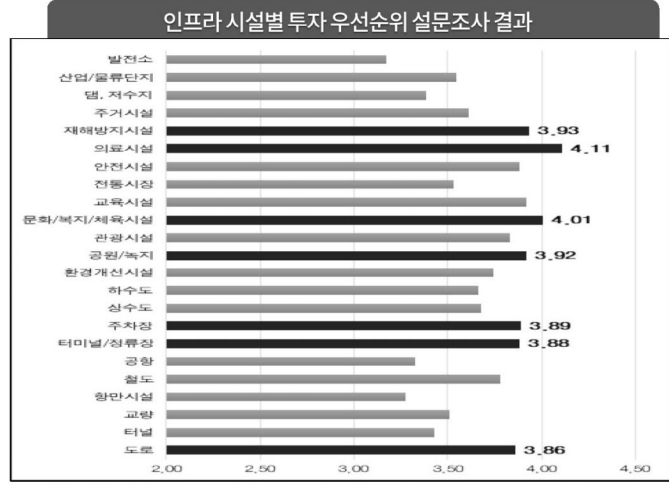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도시재생 수요조사를 시행한 바, 각 지역별로 다수의 도시재생 수요 급증(충남 102곳, 경기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②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인프라 부족

지역별인프라투자정책방향및
핵심인프라프로젝트발굴

지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인프라 문제는 생활인프라의 절대 부족 문제

- 강원도**
 - 강원도 내 전체 주택중 30년 이상 주택 비중 23.1%
- 경상남도**
 - 전체 교육시설 중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 67.8% 차지, 50년 이상도 37.6%
- 대전시**
 - 도심 생활권 도로의 평균주행속도는 19.5km/h로 전국 최저
- 전라북도**
 - 전북도 내 도시공원 지정 면적 중 75%가 미집행 상태로 장기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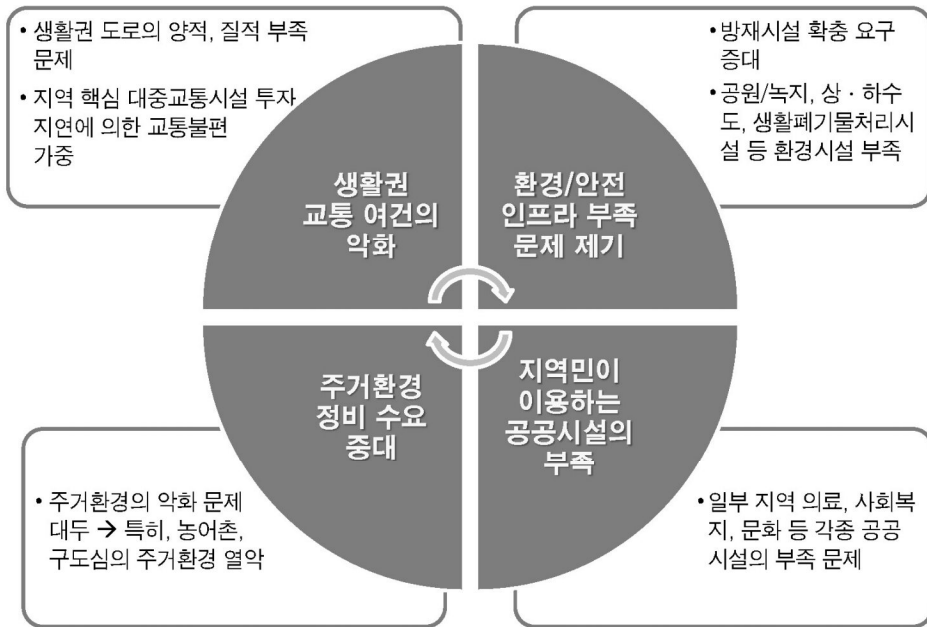
- ✓ 지역민이 실제 생활속에서 느끼는 인프라 수요는 생활인프라에 집중
-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들 마다 생활권 도로,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 생활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8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②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인프라 부족

지역별인프라투자정책방향및
핵심인프라프로젝트발굴

생활권 교통여건, 환경 및 안전, 주거환경 등 생활여건 개선과 공공편의시설 확충 수요 증대



9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③ 지역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

지역별인프라투자정책방향및
핵심인프라프로젝트발굴

지역 인프라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단일 지자체, 동일 권역내에서도 인프라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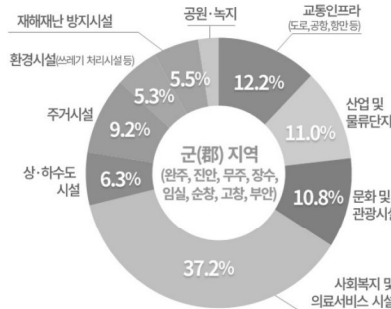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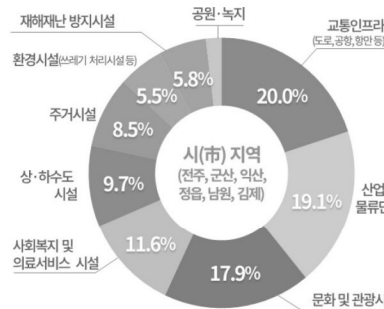
-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 산업/경제시설 수 최대 20배 차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배 차이
- 경기도내 남동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철도/지하철 접근성 매우 열악
- 교육시설 지역간 편차 심각 : 수원, 오산, 화성 등 경기남부도시들은 타 도시들에 비해 과밀 심각

대전광역시

- 우수유출저감시설 전체 26개 중 17개소가 유성구에 분포, 동구 1개소, 중구, 대덕구는 미설치
- 도시공원 조성면적도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13,19천㎡, 13,28천㎡인데 반해 중구 1,83천㎡, 동구 2,23천㎡로 10배이상 차이
- 노후 건축물 비율도 유성구에는 32.3%인데 반해 중구에는 78.1%

전라북도

- 단일 지자체 내에서도 시 지역과 군 지역간에 인프라의 공급 격차 → 지역민의 인프라 수요 상 큰 차이 유발



✓ 지역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는 지역민 간의 사회, 경제적 갈등 유발 →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

10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③ 지역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

지역별인프라투자정책방향및
핵심인프라프로젝트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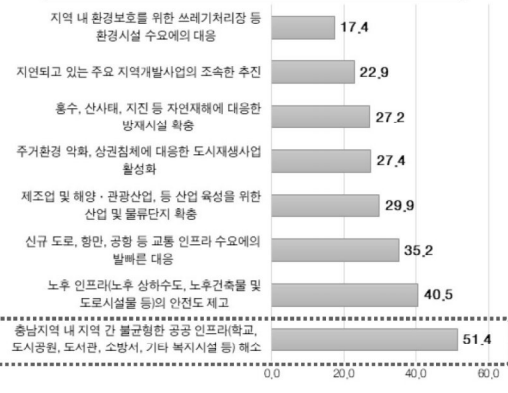
단일 광역시·도내에서도 지역 내의 시·군·구별로 인프라의 불균형

지역민들은 지역내 공공 인프라 불균형을 최우선 인프라 투자정책으로 제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우선순위(대전광역시)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의 우선순위(충청남도)



-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지역의 인프라 투자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적인 정책 → 지역내에서 있어서의 공공 인프라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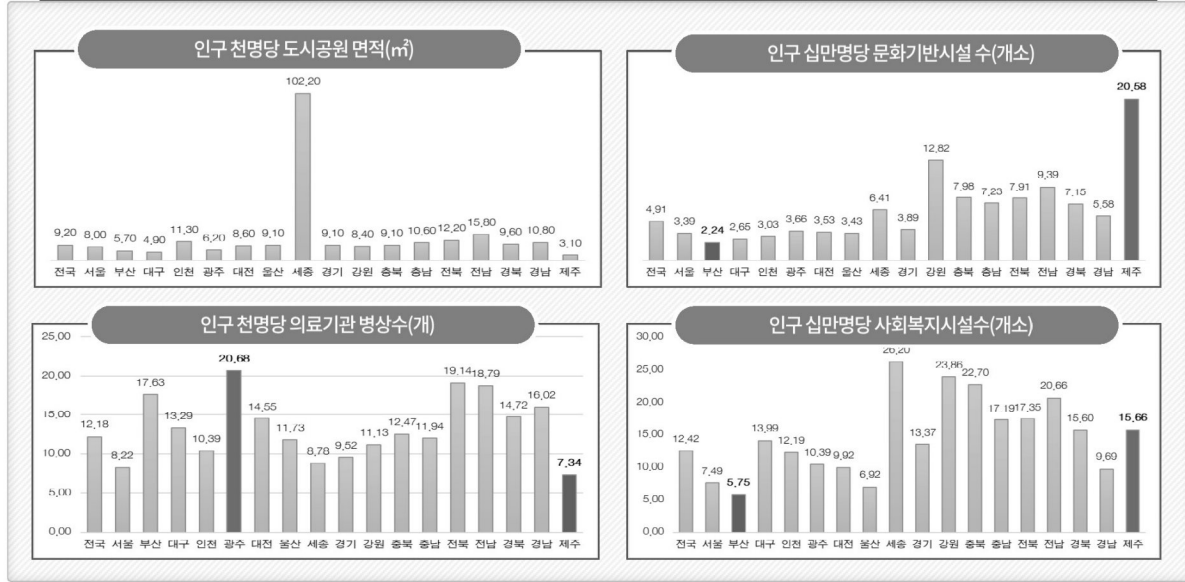
11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③ 지역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 문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광역시·도 간에도 지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한 상황

각 지자체 간에도 공공 인프라의 격차가 심한 상황



12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④ 지역 핵심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 진전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이전에 공급한 지역의 주요 인프라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 중 → 지역민 안전 위협 및 시설물 성능 저하

제주특별자치도

- 상수도 누수율이 41.7%에 달하는 상황 → 연간 6,000억원 손실 발생
- 제주지역 상, 하수관로 중 50%가 사용연수 15년을 경과한 상황
- 사용연수 30년 이상 교육시설 전체의 40% 이상

인천광역시

- 전체 하수관로 중 61.5%가 20년 이상된 경년관
- 전체 교량 중 20년 이상된 교량이 98개소로 46%를 차지
- 공공건축물의 내진율이 39.7%에 불과

전라남도

- 1, 2종 시설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시설물이 572개소에 달함.
- 내구 연한을 초과한 노후 도로가 1,000km를 넘는 상황
- 산업단지 96개소 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가 다수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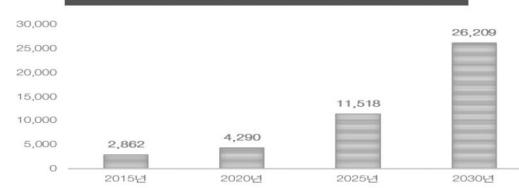
충청북도

- 전체 87개 산업단지 중 42.5%인 37개소가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 충분 전체 학교시설 중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46.6%
- 전체 도로 중 63.6%가 내구연한 초과

1, 2종 시설물의 사용연수별 현황

사용연수	개수	비율
50년 이상	617	0,9%
40년 이상 ~ 50년 미만	589	0,8%
30년 이상 ~ 40년 미만	1,656	2,3%
20년 이상 ~ 30년 미만	8,656	12,2%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18	42,2%
10년 미만	29,573	41,6%
합계	71,109	100,0%

1, 2종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전망



✓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 하수도, 도로 및 교량 등 도로시설물, 학교 등 공공시설 노후화 →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

13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④ 지역 핵심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 진전

지역별인프라투자정책방향및
핵심인프라프로젝트발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상·하수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상수관로 중 32.3%가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 차지, 전국 하수관로 중 40.0%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 차지 • 전국 평균 상수도 누수율 11.1% •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상, 하수관로의 노후화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 다수 있음(강원, 대전, 전남, 제주 등)
도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터널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 • 특히, 전북의 경우 전체 도로시설물 중 64.7%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시설. 대전은 전체 교량 중 45.5%가 20년 이상, 충남 전체 교량 중 30년 이상 27.6% 차지. 부산 전체 교량 중 20년 이상 교량 40.7% 차지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산업단지 1,189개소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는 36%를 차지 •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 심각 → 대전은 산업단지 대부분 20년 경과. 이중 대전산단은 40년 경과, 전남 지역 96개 산업단지 중 다수가 30년 이상 경과 •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 노후화가 심각 수준
주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의 노후화 문제는 더욱 심각.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주거용건축은 동수기준으로 57.8%차지, 30년 이상도 3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2016년말 기준) • 특히, 전국에서 가장 노후 주택 비중이 높은 전남 신안군, 진도군, 강진군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주택이 50%를 넘고 있음.

14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④ 지역 핵심 인프라의 급속한 노후화 진전

지역별인프라투자정책방향및
핵심인프라프로젝트발굴

시설물의 노후화 문제는 향후에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예측

시설물의 노후화는 급속히 진전 예상

1, 2종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

지역명	2015년		2030년(추정)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광주	82	3.7	1,011	45.6
서울	728	7.1	4,427	43.1
부산	165	3.2	2,218	43.0
대구	94	2.8	1,361	40.1
제주	16	8.1	79	39.9
인천	65	1.7	1,472	39.3
경북	327	8.0	1,535	37.5
대전	68	3.2	787	37.2
경기	176	0.9	7,123	35.8
강원	198	7.7	906	35.3
전북	148	5.6	890	33.9
전남	195	6.7	921	31.8
충북	172	7.9	674	30.8
충남	130	4.4	908	30.4
경남	231	5.0	1,390	29.8
울산	52	3.2	479	29.6
세종	15	3.1	28	5.7
합계	2,862	4.0	26,209	36.9

자료: 시설물안전관리평가(2017), 국회예산정책처

지역별 노후주택 비중 추이

(단위 : 전 호, %)

시 도	주택	20년 이상된 주택		30년 이상된 주택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전 국	16,692	7,629	45.7	2,805	16.8
서 울	2,831	1,219	43.1	416	14.7
부 산	1,174	602	51.2	257	21.9
대 구	761	372	48.9	124	16.3
인 천	958	448	46.7	116	12.1
광 주	495	221	44.6	71	14.4
대 전	474	250	52.7	68	14.4
울 산	361	162	44.8	40	11.0
세 종	87	16	18.5	8	8.8
경 기	3,815	1,366	35.8	309	8.1
강 원	576	291	50.5	133	23.1
충 북	569	288	50.7	117	20.6
충 남	777	342	44.0	161	20.8
전 북	693	376	54.2	177	25.5
경 남	755	457	60.5	253	33.5
경 북	1,010	558	55.2	272	26.9
경 남	1,151	599	49.4	237	20.6
제 주	207	93	45.1	45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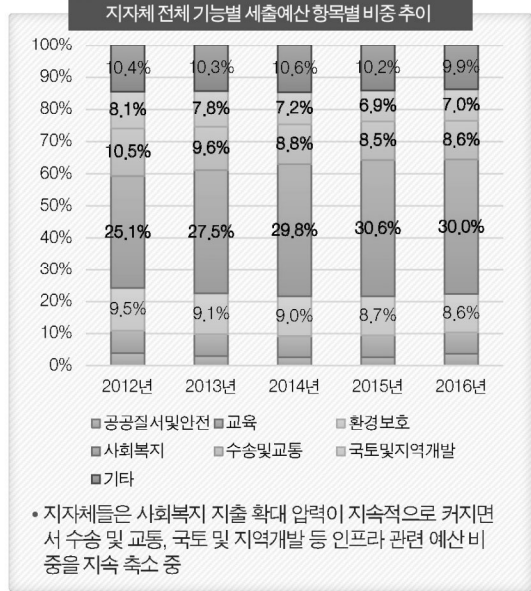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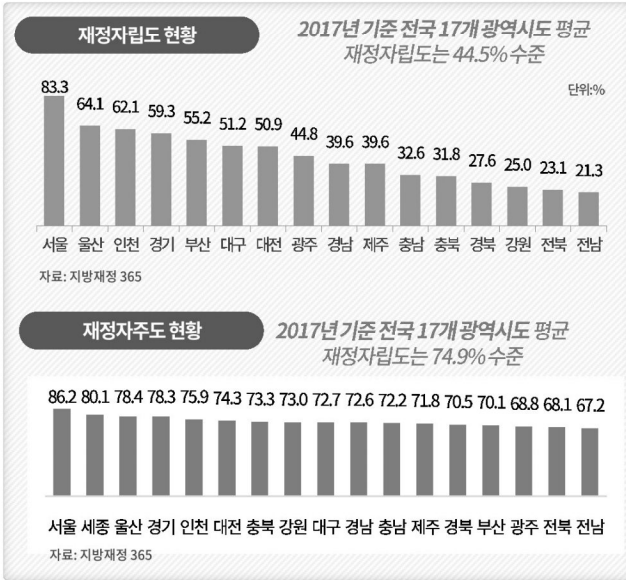
자료: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15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⑤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자체 자원 부족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지자체들의 재정여건 상 당면한 인프라 문제 해결에 한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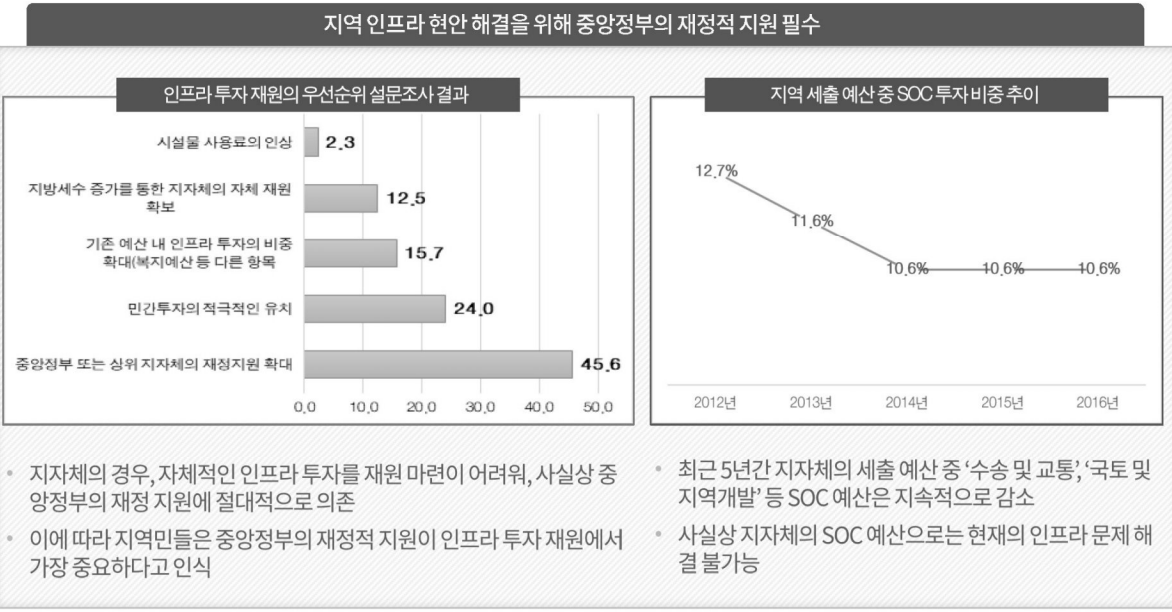
✓ 결국,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으로 당면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16

지역 인프라 관련 5대 핵심 이슈 - ⑤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자체 자원 부족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지역 인프라 관련 예산 편성은 지속 축소 → 지역민들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가장 우선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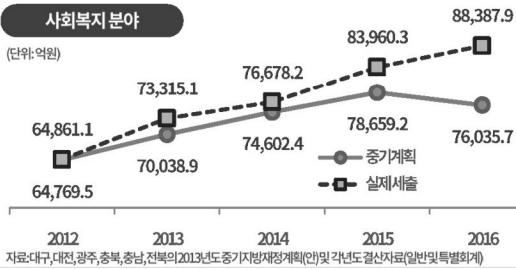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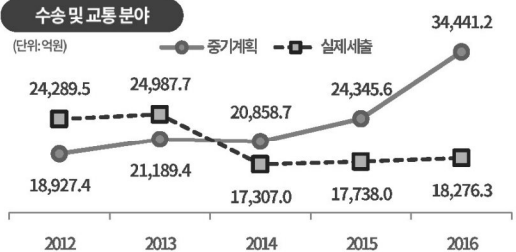
17

지역 인프라 투자 정책 진단

인프라 투자정책 목표의 불확실성·불투명성 → 인프라 투자의 정책적 목표 달성 미흡(당초 목표 미달성)

- 사회,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단기적 정책 현안 및 이슈에 우선적 대응에 따른 잦은 목표 변경, 단기 인프라시설 수요 대응으로 인해 기 수립한 인프라 투자계획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실제 투자 시행 → **인프라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연**

5년전수립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 현황(6개 광역자치체)



인프라 투자 축소의 단기 및 중장기 영향



지역 인프라 투자 자원 확보 방안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최종보고서

1,244개 사업, 사업비 규모 최소 442조원 상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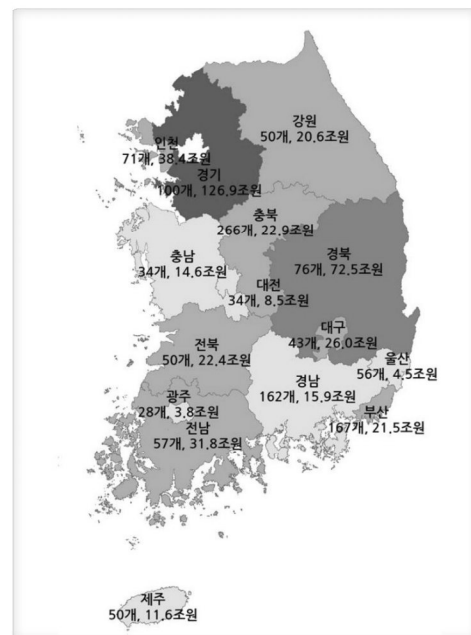
- 핵심 프로젝트 중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다수 존재 → 실질 사업비 규모 442조원 + α

신규/노후

-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1개, 사업비 규모 422조원
-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 사업비 규모 20조원
 - 도로확장과 같은 신규와 노후 사업이 동시에 발생하는 프로젝트는 신규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분류

지역별

- 수도권의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큼.
- 충북, 부산, 경남,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 다
-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임
 - 지역별 특성에 따라 프로젝트 건수와 사업비 규모 다름.
 - 사업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비중에 따라서 지역별 사업비 규모의 편차 존재



중앙정부의 지역 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방안의 다양화

-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현행 수준의 SOC 투자액으로는 제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으로는 턱없이 부족**
- →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자원 확보 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 필요

-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비를 위해 2018년 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 필요**
- 시설물 종류별 성능(효율성) 지수를 측정 → 성능 미달 분야/지역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방식 개선 필요**
-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 방안 마련**

지자체 스스로 재정수요 감당을 위해 지방세 총량과 과세자주권 상향 필요

-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부여 권한 이양 등에 대해 헌법 개정 시 반영 필요
- 지방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지방채 발행 총량 규모 확대 필요**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활성화**: 국가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조정하고 계약방식을 통해 공동 추진
- 도시재생 사업 추진 활성화와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운용 필요**

정부·지자체의 의지와 신뢰구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필요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방식을 현행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 필요**
- **정부고시사업**(민간투자사업 사전 고시) **활성화**를 통한 민간 참여 유도
- 부족한 인프라 투자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rehabilitation) 유형의 민자사업 활성화 필요**

노후 인프라 투자의 지속성 확보 및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필요

- 지역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인프라 재투자를 위한 실행체계 구축 및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필요

01

지역 인프라 확충 마스터플랜 구축

- 주요국 및 주요 도시들과 같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마스터 플랜 수립
- 지역별 핵심 인프라 공급 및 광역 단위의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02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내실화**, 공공 공사 분할 발주 등 역량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 보호 육성 정책 운영 필요
- 공사비 정상화 및 공사 품질 확보: 적정 수준의 기초금액 산정 및 예정 가격 작성 시 합리적 이유 없는 금액 삭감 금지, 기초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된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 계획을 1~2년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 필요, 정기적인 계획 수립 · 이행체계 및 안정적 자원확보 방안을 포함

03

노후 인프라의 재투자 실행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
-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 필요(안정적·정기적 재원 조달 부문 포함)
- 노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정적 투자자원 확보: 지자체 차원에서 「시설안전 특별회계」 설치 검토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감사합니다.

